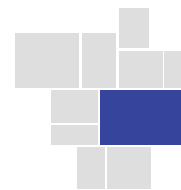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1 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을 발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불을 갓 넘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노력도 더욱 정밀해지고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부문별 변화 양상을 통계로 보여주는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 2009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국의 사회동향』은 사회경제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한국 사회 각 부문별 주요 현황 및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통계를 쉽게 풀이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증거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및 교육 분야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그리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전체 동향과 세부 이슈에 대해 집필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 인 실

목차

I.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 4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김두섭 • 14
혼인 양상의 변화	김정석 • 21

II.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 30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진미정 • 40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이혜경 • 47

III.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 56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김경근 • 68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김경근 • 75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강상진 • 83

IV. 노 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박시내 • 9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이규용 • 100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방하남 • 106

V.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 114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유경원 • 123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이현송 • 129
한국 국민 구매력의 국제비교	정규승 • 136

VI.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 144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심수진 • 154
인터넷 중독 실태	전종수 • 162

VII.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 168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최진호 • 177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이창무 • 183

VIII. 보 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 192
건강불평등	조병희 • 201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김홍수 • 208

IX.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 218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민수홍 • 227
산업재해의 변화	이경용 • 234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강성진 • 241

X.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장덕진 • 250
사회적 신뢰의 수준	장덕진 • 26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김병로 • 266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이희길 • 273

용어해설	• 280
------	-------

표 목차

- 006 <표 I-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2005
- 009 <표 I-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2010
- 010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 012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 018 <표 I-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60-2009
- 019 <표 I-6> 연령집단별 여자 유배우율: 1960-2005
- 022 <표 I-7> 재혼건수와 재혼비율: 1990-2009
- 022 <표 I-8> 남녀의 결혼경력별 구성비율: 1990-2009
- 023 <표 I-9>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구성비율: 1990-2009
- 024 <표 I-10>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2000, 2005, 2009
- 024 <표 I-11> 이혼 남녀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 2005, 2009
- 026 <표 I-12> 국제결혼건수와 유형별 국제결혼비율: 2000, 2005, 2009
- 027 <표 I-13>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과 동거기간: 2002, 2005, 2009
-
- 031 <표 II-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85-2010
- 032 <표 II-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05
- 034 <표 II-3>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 2008
- 037 <표 II-4>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 1999-2009
- 041 <표 II-5> 아버지의 가족 내 양육자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 2008
- 043 <표 II-6>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 044 <표 II-7> 가구 특성별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월평균 지출액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 2009
- 045 <표 II-8>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 2000-2009
- 045 <표 II-9>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아동수: 2000-2009
- 048 <표 II-10>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 049 <표 II-11>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 049 <표 II-12>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교육수준: 2009
- 049 <표 II-13>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2009
- 050 <표 II-14>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직업: 2009
- 050 <표 II-15>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2009
- 051 <표 II-16>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결혼유형: 2009
- 052 <표 II-17> 결혼이민여성의 특성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 052 <표 II-18>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
- 062 <표 III-1> 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9

062	〈표 III-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985-2009
063	〈표 III-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8
065	〈표 III-4〉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8-2006
065	〈표 III-5〉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7
066	〈표 III-6〉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995-2007
089	〈표 III-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국·공립학교 연평균 총 필수학습시간: 2008
090	〈표 III-8〉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정규수업 외 학습자 비율: 2006
090	〈표 III-9〉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자습자 비율: 2006
095	〈표 IV-1〉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구성비율: 2010
095	〈표 IV-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및 산업별 구성비율: 2010
095	〈표 IV-3〉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업규모별 구성비율: 2009
097	〈표 IV-4〉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2009
097	〈표 IV-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2009
097	〈표 IV-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2009
098	〈표 IV-7〉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사유별 구성비율: 2009
101	〈표 IV-8〉 부족인력수와 인력부족률: 1990-2003
102	〈표 IV-9〉 체류자격별 외국인수: 2001-2009
104	〈표 IV-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04-2009
105	〈표 IV-11〉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평가: 2008
107	〈표 IV-12〉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2000-2008
108	〈표 IV-13〉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2009
109	〈표 IV-14〉 연령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9
110	〈표 IV-15〉 학력집단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 2009
111	〈표 IV-16〉 직업군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 2009
112	〈표 IV-17〉 직업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9
112	〈표 IV-18〉 직업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9
125	〈표 V-1〉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 2000-2009
138	〈표 V-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통화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2009
147	〈표 VI-1〉 문화산업 매출액: 2000-2008
149	〈표 VI-2〉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1999-2009
150	〈표 VI-3〉 신문구독률, TV시청률 및 독서율: 1990-2009
157	〈표 VI-4〉 세부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159	〈표 VI-5〉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2009

160	〈표 VI-6〉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비율: 2009
161	〈표 VI-7〉 연령별 희망 여가활동 비율: 2009
163	〈표 VI-8〉 인터넷 중독률과 중독자수: 2004-2009
164	〈표 VI-9〉 청소년의 가족구성형태별 인터넷 중독률: 2009
164	〈표 VI-10〉 맞벌이 여부별 인터넷 중독률: 2009
165	〈표 VI-11〉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 이용목적: 2009
166	〈표 VI-12〉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서비스 이용률: 2009
169	〈표 VII-1〉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 1970-2009
170	〈표 VII-2〉 연간 주택건설 실적: 1980-2009
171	〈표 VII-3〉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8
172	〈표 VII-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6, 2008
173	〈표 VII-5〉 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 1990-2009
174	〈표 VII-6〉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174	〈표 VII-7〉 연령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174	〈표 VII-8〉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9
176	〈표 VII-9〉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1985-2008
176	〈표 VII-10〉 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 2000-2007
178	〈표 VII-11〉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주요 이유: 2006, 2008
178	〈표 VII-12〉 거주지역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79	〈표 VII-13〉 주택점유형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80	〈표 VII-14〉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81	〈표 VII-15〉 가구주의 연령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81	〈표 VII-16〉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82	〈표 VII-17〉 가구주의 결혼기간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82	〈표 VII-18〉 현재 주택으로 이사 시 주요 고려사항: 2006, 2008
184	〈표 VII-19〉 주택가격지수: 1986-2010
185	〈표 VII-20〉 전세가격지수: 1986-2010
194	〈표 VIII-1〉 2주간 유병률: 1999-2008
194	〈표 VIII-2〉 전염병 발생건수: 2005-2009
194	〈표 VIII-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결핵 유병률과 발생률: 2007
195	〈표 VIII-4〉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09
196	〈표 VIII-5〉 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8
197	〈표 VIII-6〉 비만율, 운동실천율 및 걷기실천율: 1998-2008
197	〈표 VIII-7〉 의료인율: 2000-2008

198	〈표 VIII-8〉 의료기관수: 1990-2008
199	〈표 VIII-9〉 예방서비스 이용률: 1998-2008
200	〈표 VIII-10〉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및 약제비 비율: 1990-2008
203	〈표 VIII-11〉 연령별 학력집단 간 사망비: 1998
203	〈표 VIII-12〉 연령별 소득집단 간 사망비: 1998
203	〈표 VIII-13〉 연령별 직업계층 간 사망비: 1998
204	〈표 VIII-14〉 사회경제적 지위별 주관적 건강인식: 2001-2008
204	〈표 VIII-15〉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불건강인식률비: 2005
205	〈표 VIII-16〉 사회경제적 지위별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2008
205	〈표 VIII-17〉 성별 및 소득계층별 암 발생률: 2001
206	〈표 VIII-18〉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흡연율비: 2005
207	〈표 VIII-19〉 사회경제적 지위별 외래이용률과 연간입원율: 2005, 2008
207	〈표 VIII-20〉 의료이용 형평성 지수: 1998-2005
210	〈표 VIII-21〉 성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1998, 2008
210	〈표 VIII-2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998-2008
211	〈표 VIII-2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008
212	〈표 VIII-24〉 20세 이상의 만성질환 치료 여부: 2008
214	〈표 VIII-25〉 만성질환 진료환자수와 진료비: 2002, 2005
220	〈표 I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09
223	〈표 IX-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주요 형법범죄율: 2007
225	〈표 IX-3〉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 1990-2007
226	〈표 IX-4〉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8
226	〈표 IX-5〉 환경예산 및 환경오염방지지출 비율: 1992- 2008
226	〈표 IX-6〉 환경보호 지출액과 지출비율: 2002-2007
228	〈표 IX-7〉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 2001-2009
230	〈표 IX-8〉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징: 2009
237	〈표 IX-9〉 산업재해자의 성별 구성비율: 2000-2009
237	〈표 IX-10〉 산업재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2009
238	〈표 IX-11〉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률: 2000-2009
239	〈표 IX-12〉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과 사망률: 2000-2009
239	〈표 IX-13〉 손상재해자의 사고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240	〈표 IX-14〉 질병재해자의 질병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242	〈표 IX-1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소비량: 2009
243	〈표 IX-16〉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1990-2007
244	〈표 IX-17〉 한국 정부의 27대 중점 녹색기술 투자계획

- 252 <표 X-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2009
 253 <표 X-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 2009
 255 <표 X-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9
 256 <표 X-4>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09
 257 <표 X-5> 주관적 계층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257 <표 X-6> 주관적 계층별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257 <표 X-7> 연령 및 소득수준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2009
 258 <표 X-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률: 2008
 262 <표 X-9>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 2008
 268 <표 X-10> 탈북자 국내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0
 274 <표 X-11> 개인 및 법인의 기부액: 1997-2008
 275 <표 X-12> 성별 및 학력별 기부참여율과 후원경로: 2006, 2009
 275 <표 X-13> 성별 및 학력별 기부횟수: 2006, 2009
 276 <표 X-14> 법인체의 종류별 및 상장여부별 기부액: 2005-2008
 277 <표 X-15> 성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2006, 2009

그림 목차

- 005 [그림 I-1] 한국인구의 변천: 1913-2009
 006 [그림 I-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007 [그림 I-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9
 008 [그림 I-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최근 변화 양상
 013 [그림 I-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9
 015 [그림 I-6] 한국인구의 변천: 1953-2009
 016 [그림 I-7]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1981-2009
 019 [그림 I-8] 혼인 및 이혼 건수와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1981-2009
 025 [그림 I-9] 이혼자들의 동거기간별 구성비율: 2000-2009
 026 [그림 I-10] 국제결혼유형별 부부 간 평균 연령차이: 2000-2009
- 033 [그림 II-1] 조손가구수: 1995-2010
 035 [그림 II-2]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036 [그림 II-3] 이혼 사유: 2000-2009
 036 [그림 II-4]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038 [그림 II-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9
 039 [그림 II-6]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2008
 042 [그림 II-7]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1998-2009

051	[그림 II-8] 유배우 한국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율: 2005, 2009
058	[그림 III-1] 각급 학교의 취학률: 2000-2009
058	[그림 III-2] 각급 학교의 진학률: 1970-2009
060	[그림 III-3] 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유치원수: 1970-2009
064	[그림 III-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9
069	[그림 III-5]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2006
070	[그림 III-6]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 2009
070	[그림 III-7] 중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6
071	[그림 III-8] 고등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9
072	[그림 III-9]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6
072	[그림 III-10]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9
073	[그림 III-11] 소득수준별 중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073	[그림 III-12] 소득수준별 고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9
074	[그림 III-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076	[그림 III-14] 지역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8
076	[그림 III-15] 지역별 취학전 아동 보육·교육비 지출액: 2009
077	[그림 III-16]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077	[그림 III-17]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078	[그림 III-18] 지역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2009
079	[그림 III-19] 소득수준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2009
079	[그림 III-20]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080	[그림 III-21]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080	[그림 III-22] 부모학력별 자녀의 수능등급: 2004, 2007
081	[그림 III-23] 소득수준별 수능등급: 2004, 2007
081	[그림 III-24] 한국과 주요국가들의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2007
084	[그림 III-25] 학교급별 요일평균 총 학습시간: 1999-2009
085	[그림 III-26]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학습시간: 1999-2009
086	[그림 III-27]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 1999-2009
087	[그림 III-28] 고등학생의 평일과 토요일 학습시간: 1999-2009
088	[그림 III-29] 평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088	[그림 III-30] 토요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093	[그림 IV-1]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094	[그림 IV-2] 한시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094	[그림 IV-3] 비전형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096	[그림 IV-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비율: 2001-2009
098	[그림 IV-5] 국내와 OECD 기준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2001-2008
099	[그림 IV-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 2007
103	[그림 IV-7] 불법체류자수와 불법체류율: 2000-2009
115	[그림 V-1] 월평균 가구소득: 2003-2009
116	[그림 V-2]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2003-2009
116	[그림 V-3] 소득 불평등도: 2003-2009
117	[그림 V-4]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증가율: 2003-2009
117	[그림 V-5]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증가율: 2003-2009
118	[그림 V-6]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3-2009
118	[그림 V-7] 소득분위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 2003-2009
119	[그림 V-8] 맞벌이 여부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 2003-2009
119	[그림 V-9] 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 2003-2009
120	[그림 V-10]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율: 2003-2009
120	[그림 V-11] 소득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2009
121	[그림 V-12] 연령별 소득만족도: 2009
121	[그림 V-13] 교육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122	[그림 V-14] 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124	[그림 V-15] 가계신용 잔액과 증가율: 2000-2010
125	[그림 V-16] 가계부채와 소득 증가율: 2000-2009
126	[그림 V-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 2006-2008
126	[그림 V-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개인부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990-2008
126	[그림 V-19] 부채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127	[그림 V-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127	[그림 V-21] 연령집단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액: 2006
128	[그림 V-22] 대출금리와 가계대출잔액: 1996-2010
128	[그림 V-23] 주택매매지수 및 증감률: 1986-2010
130	[그림 V-24] 중·고령자의 연령별 연가구소득: 2007
131	[그림 V-25] 중·고령자의 연령별 및 경제활동상태별 연가구소득: 2007
132	[그림 V-26] 중·고령자의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비율: 2007
132	[그림 V-27]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및 소득원천별 연가구소득: 2007
133	[그림 V-28]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소득분위 분포: 2007
134	[그림 V-29] 중·고령자의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 2007
135	[그림 V-30]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율: 2007
135	[그림 V-31]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간 가계수지: 2007

목 차

- 138 [그림 V-32]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2005-2009
- 139 [그림 V-3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비교물가수준: 2005-2009
- 140 [그림 V-34] 빅맥지수: 2010
- 140 [그림 V-3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 2009
- 141 [그림 V-36] 한국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 200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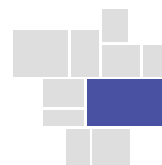
- 145 [그림 VI-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정: 2003-2009
- 146 [그림 VI-2] 극장수와 스크린수: 1998-2008
- 147 [그림 VI-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수: 1998-2009
- 148 [그림 VI-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출률: 2005
- 148 [그림 VI-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990-2009
- 150 [그림 VI-6] 필수, 의무 및 여가 생활시간: 1999-2009
- 151 [그림 VI-7] 일요일 여가활동시간: 1999-2009
- 151 [그림 VI-8]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평균 여가시간
- 152 [그림 VI-9] 도시와 농촌 가구의 연간 교양오락비 지출액: 1983-2007
- 152 [그림 VI-10] 레저시설 이용률: 1996-2009
- 152 [그림 VI-1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1990-2009
- 153 [그림 VI-12] 출입국자수: 1990-2009
- 155 [그림 VI-13] 요일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 155 [그림 VI-14] 연령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 156 [그림 VI-15] 교육수준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 156 [그림 VI-16] 직업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 157 [그림 VI-17]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 158 [그림 VI-18] 성별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 2009
- 163 [그림 VI-19]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 2000-2009
- 165 [그림 VI-20]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08

- 175 [그림 VII-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2002-2005
- 186 [그림 VII-2] 건축연도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997-2010
- 186 [그림 VII-3]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 187 [그림 VII-4] 주택규모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 187 [그림 VII-5] 서울시 생활권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 188 [그림 VII-6] 자가거주율: 1970-2005
- 188 [그림 VII-7]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1995-2005
- 189 [그림 VII-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1986-2009

193	[그림 VIII-1] 평균수명: 1970-2008
195	[그림 VIII-2]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1998-2008
202	[그림 VIII-3] 연령별 사망률 성비: 1998, 2008
209	[그림 VIII-4]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1983-2008
212	[그림 VIII-5]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율: 2008
213	[그림 VIII-6] 교육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 2008
213	[그림 VIII-7] 소득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 2008
214	[그림 VIII-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유병률: 2010
214	[그림 VIII-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환자 안저검사율: 2005
220	[그림 IX-1] 화재 발생건수: 1985-2009
221	[그림 I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09
222	[그림 IX-3] 산업재해율: 1965-2009
222	[그림 IX-4] 형법범죄율: 1983-2008
223	[그림 IX-5]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 1983-2008
229	[그림 IX-6]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유형별 구성비율: 2001-2009
230	[그림 IX-7]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관계별 구성비율: 2009
231	[그림 IX-8] 아동성폭력 신고건수: 2000-2009
232	[그림 IX-9] 연령별 여자 성폭력 피해아동수: 1999-2008
232	[그림 IX-10] 연령별 실종아동수: 2006-2009
233	[그림 IX-11] 안전사고 유형별 아동 사망자율: 1999-2008
235	[그림 IX-12]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 1990-2009
236	[그림 IX-13]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 2000-2009
236	[그림 IX-14] 비사망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 2000-2009
245	[그림 IX-15]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액: 2008-2010
246	[그림 IX-16]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예상액: 2011-2013
252	[그림 X-1] 사회단체참여자의 주 활동 단체: 1999-2009
253	[그림 X-2]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09
254	[그림 X-3]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 1997-2008
256	[그림 X-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1995-2009
259	[그림 X-5]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2008
259	[그림 X-6]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 2008
261	[그림 X-7]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2008
264	[그림 X-8] 하위 20%의 소득비율과 일반신뢰의 관계: 2005
267	[그림 X-9] 탈북 입국자수: 1990-2009

목 차

- 269 [그림 X-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0
270 [그림 X-11] 북한이탈주민과의 취업갈등 및 자유경쟁에 대한 의견: 2007-2010
271 [그림 X-1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도 평가: 2003
272 [그림 X-13] 남북의식통합지수: 2007-2009
277 [그림 X-14] 등록 및 활동 자원봉사자수: 2002-2009



알려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자들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4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김두섭	14
혼인 양상의 변화	김정석	21

I.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
-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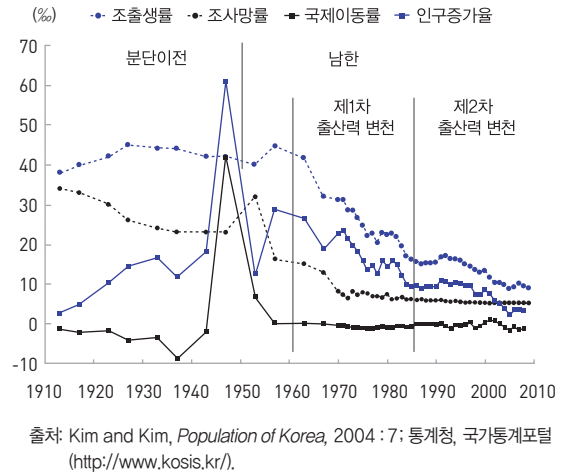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약 4,875만 명으로 세계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만 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률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률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망률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9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률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흔히 1985년까지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60년대 초 한국전쟁 후의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급상승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9년 9.0으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그림 I-1] 한국인구의 변천: 1913-2009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이동률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구의 규모가 여자인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

로 인한 출생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2005

	1995	2000	2005
성 ¹⁾			
남자	50.2	50.2	50.0
여자	49.8	49.8	50.0
연령 ¹⁾			
0-14세	23.0	21.5	19.1
15-64세	71.1	71.0	71.6
65세 이상	5.9	7.5	9.3
혼인상태 ²⁾			
미혼	30.8	30.1	30.2
유배우	60.7	60.6	59.3
사별	7.4	7.4	7.6
이혼	1.1	1.9	3.0
교육수준 ²⁾			
초등학교	14.4	12.5	11.0
중학교	15.0	12.7	11.0
고등학교	45.6	42.7	39.2
대학 이상	25.0	32.2	38.9

주: 1)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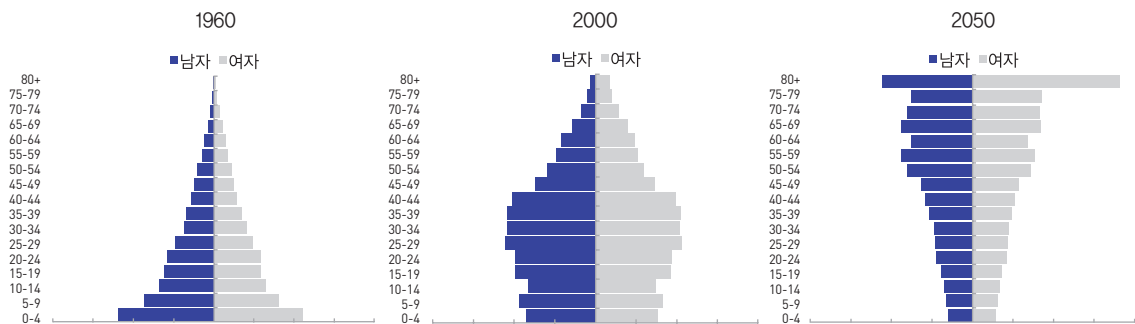
2) 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림 I-2]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5%, 2005년 19.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는 절대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0%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높아졌을 뿐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가 59.3%로 가장 낮다. 미혼자의 비중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

[그림 I-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I-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5.0%에서 38.9%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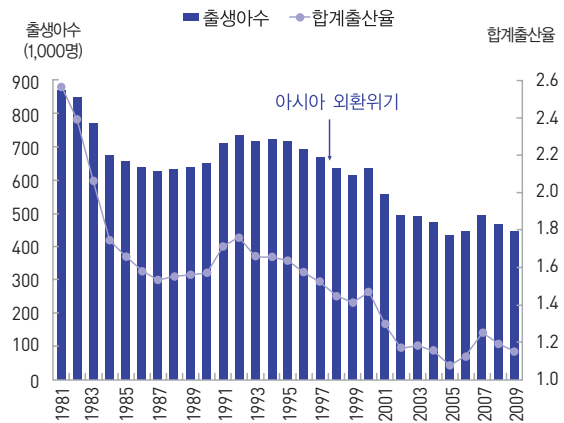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리내렸고,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산 수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 '새천년 베이비 붐'과

[그림 I-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에 힘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9년에 1.15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자료를 보면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대만, 마카오와 홍콩뿐이다.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수는 444,849명으로 2007년의 493,189명, 2008년의 465,892명에 비해 각각 9.8%와 4.5% 감소하였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31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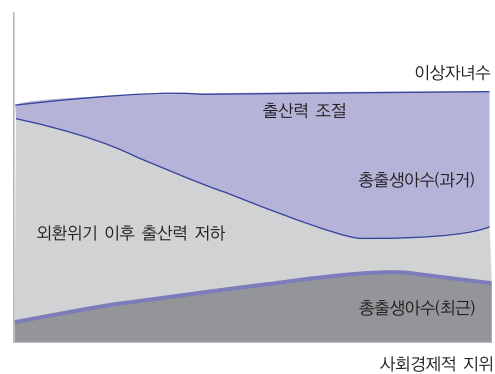
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4,911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조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자의 평균 조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28.7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조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에서 2009년 29.9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

수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최근 변화 양상
출산수준



출처: Kim, 2009.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 한 요소이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 1-1]에서 조사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사망률 저하 속도의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만 명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9년에 246,94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8년에는 76.5세와 83.3세로 늘어났다. 불과 17년의 기간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3.0%와 9.7%가 높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고 의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

력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은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사망률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9년 현재 여자 사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남녀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

<표 1-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2010

	조사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1,000명당)		기대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인구	8.5	48.4	46.1	65.4	69.8
선진국	10.1	6.7	5.9	73.6	80.5
개발도상국	8.1	53.0	50.7	63.9	67.4
아시아	7.4	40.8	42.3	67.1	70.8
한국 ¹⁾	5.0	3.5	3.3	76.5	83.3

주: 1) 2008년 통계청 자료.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운수사고, 1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2030년대 후반에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에 그 비중이 각각 11.0%와 2.0%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에는 각각 38.2%와 14.5%의 수준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다 많아진다.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인구구성비율(%)		중위 연령	노년 부양비 ¹⁾	고령화 지수 ²⁾
	65세+ 인구	80세+ 인구			
1960	2.9	0.2	19.0	5.3	6.9
1980	3.8	0.5	21.8	6.1	11.2
2000	7.2	1.0	31.8	10.1	34.3
2010	11.0	2.0	38.0	15.0	67.7
2020	15.6	3.6	43.8	21.7	125.9
2040	32.5	9.5	53.4	56.7	314.8
2050	38.2	14.5	56.7	72.0	429.3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38.0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15.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활동연령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10년과 2010-2050년의 기간에 각각 9.8배와 6.3배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먼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의령군, 합천군, 남해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상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도시화와 수도권의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인구의 지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대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울인구는 1960년 245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06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² 안에 1km²당 16,231명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구도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전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해당하는 2,277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I-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8.3%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 증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960-1970년의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의 인구는 40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 증가의 70.9%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서울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서울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서울대도시권 ¹⁾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수도권 ²⁾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권역별 5대도시 ³⁾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시(동)부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군(읍/면)부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전국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주: 1)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2) 서울,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구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와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시 및 지역 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감소 현상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I-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1990-2005년의 기간에 79만 3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만 2천 명과 418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인구가 주변지역으

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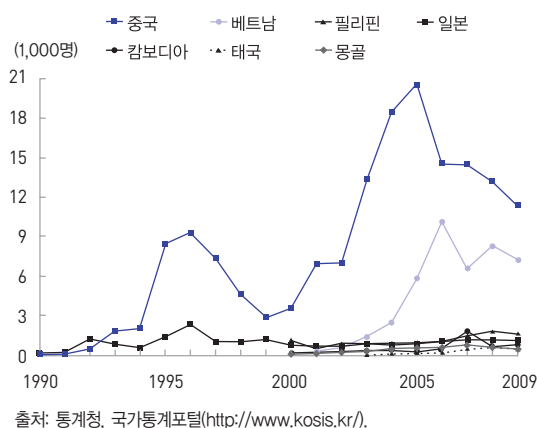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 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 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33,3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 2009년 10.8%로 높아졌다.

[그림 I-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9년의 기간 동안 160,766건이 신고 되었으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9

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11,364명) 다음으로 베트남(7,249명), 필리핀(1,643명), 일본(1,140명), 캄보디아(851명), 태국(496명), 미국(416명), 몽골(386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9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는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 UN.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rk: United Nations.

김두섭(한양대학교)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요 약

-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해 왔다.
-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남부 및 동구 유럽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 한국사회의 지난 10여 년간 출산력 저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가 크다.
- 여성차별의 감소와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역시 가족형성을 지연, 회피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보조해 주고, 육아시설의 확충과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당분간 크게 높아질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나 사회의 인구현상은 주어진 기간에 나타난 출생, 사망, 이동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국제이동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의 인구성장 추세와 앞으로의 변화양상은 주로 출산력의 변동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출산력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 수준의 차이, 그리고 출산력 변동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출산수준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출산수준의 변화과정을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제1차 및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구분하고, 두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과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논의한다. 특히 출산수준의 최근 변화양상과 그 설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들의 개괄과 장래 출산수준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다.

출산력변천의 개관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구변천기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출생률의 저하는 사망률의 저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한국의 출산력변천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출생률이 1960년대 초반 이후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괄목할만한 저하를 지속하여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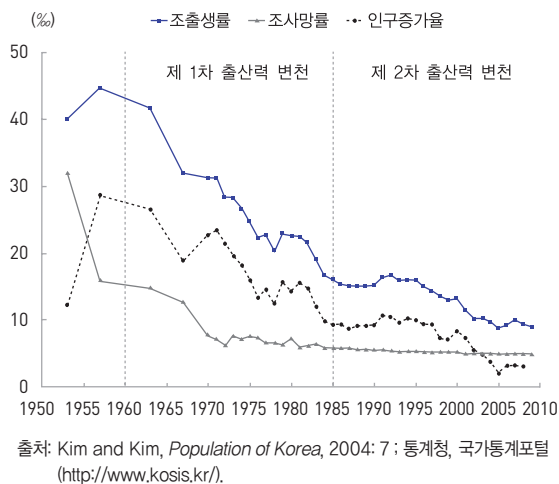
제1차 출산력변천의 기간은 근대화, 도시화 및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와 중복된다. 한국사회의 출산력변천은 서구 국가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규모의 이촌 향도 이동으로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출산력의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 점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1차 출산력변천의 특징 중의 하나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대부분의 인구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이러한 인구변천을 마치고 출산수준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괄목할만한 속도의 출산력 저하가 지속되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초기 변화(1985-1995년)가 남아선호에 의한 성선택출산으로 출생성비가 급속하게 상승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출생신고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과 합계출산율(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각각 9.0과 1.15이며, 이는 제2차 출산력변천이 시작되었던 1985년의 조출생률 16.1과 합계출산율 1.6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 및 둘째 자녀가 2009년 총출생아수의 각각 51.7%와 38.2%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혼인적령 여자인구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및 여자 1인당 출생아수의 감소는 제2차 출산력변천의 기간에도 가장 중요한 저하요인으로

[그림 1-6] 한국인구의 변천: 1953-2009



지적된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이 출산력 저하를 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두섭, 2005).

그런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이하) 시대의 도래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대체수준(2.1)보다 낮은 출산력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처럼, 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미국의 인구구조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자료를 살펴보면, 208개 지역에서 75개 사회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미만이었다. 대만(1.0), 마카오(1.0), 홍콩(1.1)에 이어 한국과 보스니아의 합계출산율이 1.2로 가장 낮고, 이어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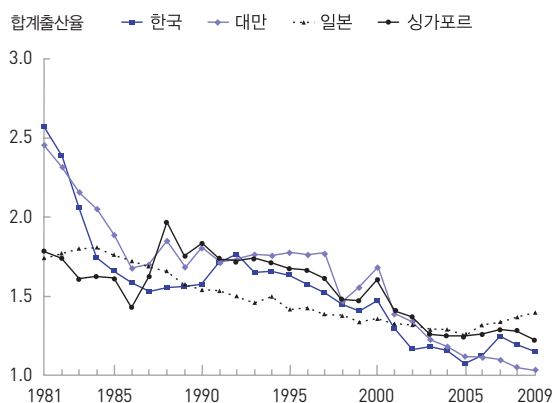
들과 싱가포르,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3으로 추정되었다. 이 자료에서 몇몇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2.1), 영국(1.9), 프랑스(2.0), 스웨덴(1.9), 이탈리아(1.4), 중국(1.6), 인도(2.7), 일본(1.4), 인도네시아(2.5), 북한(2.0), 브라질(2.0), 나이지리아(7.4), 호주(2.0).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인구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한,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인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은 혼인출산력의 통제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제1차 출산력변천을 촉발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196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방법과 도구가 널리 보급되었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지원시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출산력의 저하를 더욱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녀양육 경비의 급속한 상승으로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과 태도가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핵가족 및 서구적 가치관과 태도의 확산 역시 출산력 저하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은 제1차 출산력변천에 가장 크게 기여한 3대 결정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변화, 여성 지위와 가치체계의 변화는 제2차 출산력변천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김두섭, 2005). 여기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를 세 가지 결정요

[그림 1-7]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1981-200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Taiwan Ministry of the Interior(www.moi.gov.tw) ; Japan Statistics Bureau,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10 ; Statistics Singapore (www.singstat.gov.sg).

소, 즉 경기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업, 해고,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고 자녀 간 출산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김두섭, 2007).

결국,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가족형성의 시기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출산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결혼의 지연, 유배우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율의 감소가 출산력 저하에 미친 영향력은 제1차 출산력변천(1960-1985년)의 기간에 비해 1990년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혼의 파급효과는 제1차 출산력변천의 기간에는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출산력변천의 원인에 대한 기본 가정의 하나는 개인의 자아실현욕구, 사적 선호나 취향의 충족,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서 출산력의 저하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에 대한 설명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여성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관련되는 성 역할에 관해

서는 아직도 엄격한 차별이 존재한다. 여성이 일단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상당한 수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높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부 유럽 국가들에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가족 형성과 해체의 최근 변화 추이가 초저출산에 기여한 것은 부분적으로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이 강한 여성일수록 소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에 혼인출산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나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희망하는 자녀의 수도 적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의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여권의 확대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의 출산력이 저출산에서 초저출산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결혼과 출산의 지연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출산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은 서구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혼외출산의 비중이 매우 낮다. 혼외출산의 비중은 2009년 현재 총출생아수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혼인연령, 특히 여자의 초혼연령은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과 함께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표 I-5〉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의 평균 초혼연

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육의 급격한 팽창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각각 31.6세와 28.7세로 집계되었다. 이는 1960년에 비해 남녀 각각 6.2세와 7.2세씩 상승한 것이다. 제2차 출산력변천이 시작되었던 1985년과 2009년의 차이를 보면, 24년 기간에 남자는 3.8세, 여자는 4.0세가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이 빨라, 남녀 간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 비해 두드러지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60-2009

	남자	여자
1960	25.4	21.5
1966	26.7	22.9
1970	27.2	23.3
1975	27.4	23.7
1980	27.3	24.1
1985	27.8	24.7
1990	27.8	24.8
1995	28.4	25.3
2000	29.3	26.5
2005	30.9	27.7
2009	31.6	28.7

출처: 권태환·김두섭, 200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5, 2009.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이 1985년 24.8세로 집계되었으나, 2009년에는 29.9세로 높아졌다. 또한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여자의 1,000명당 출산율이 1997년 159.7이었으나, 1998년 152.1, 1999년에 147.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80.4로 집계되었다. IMF 외환위기의 파급효과가 가장 심했던 불과 2년 동안에 주 출산연령층에서 12.5 포인트, 그리고 2009년까지 79.3 포인트의 출산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이후에는 주 출산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2009년에 태어난 출생아의 43.2%가 30-34세 여성에게서 태어났고, 35.0%가 25-29세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주 출산연령층의 이 같은 교체현상은 결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억제의 효과는 장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 및 30대 초반에서 미혼자가 많아지고 유배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기인한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지닌 농촌거주 남자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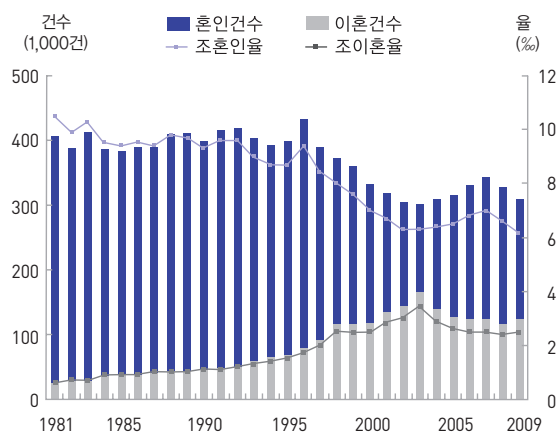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4,911건과 9.4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97년에는 혼인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6%나 감소하였으며, 조혼인율도 1.0 포인트 낮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전년도

대비 이혼건수의 증가율은 1997년 14.1%, 1998년 27.6%를 기록하였다. 조이혼율도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0.3 포인트와 0.5 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변화 역시 외환위기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 등이 가족의 해체를 급격하게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8]을 보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09년에 각각 123,999건과 2.5로 집계되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조이혼율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유배우자의 구성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I-6>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 센서스에서는 20-24세와 25-29세 여자인구의 각각 49.9%와 91.8%가 유배우자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2005년 센서스에서는 유배우자가 각각 6.2%와 40.1%로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유배우율의 감소 추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의 교육과 고용기회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도 젊은이들이 미혼자로 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유배우율은 결혼의 해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 1986년까지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조이혼율이 1990년대 진입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도 유배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8] 혼인 및 이혼 건수와 조혼인율¹⁾ 및 조이혼율²⁾: 1981-2009



주: 1)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2)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표 I-6> 연령집단별 여자 유배우율: 1960-2005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15-19세	2.4	2.8	1.7	0.5	0.8	0.4
20-24세	49.9	42.3	33.7	19.5	11.1	6.2
25-29세	91.8	88.4	84.9	77.3	59.6	40.1
30-34세	92.4	94.6	94.3	92.4	87.2	78.2
35-39세	89.1	92.0	93.4	92.8	90.9	86.8
40-44세	83.7	84.8	90.1	90.3	89.1	87.3
45-49세	76.6	76.8	83.1	86.1	86.3	84.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가족해체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유배우율의 감소가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 혼인연령의 상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력변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제1차 출산력변천의 기간, 특히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초혼연령의 상승이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크게 기

여 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혼인상태의 구성변화가 출산력 저하에 미친 기여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혼의 파급효과는 제1차 출산력변천 기간에는 미약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출산전망

한 사회의 출산수준이 변하면 인구의 구성과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생활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의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혼인 및 가족 제도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초래하고,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에 긴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출산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강화하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수준이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범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저출산의 ‘뎃’ 또는 ‘저주’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가임여성인구의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이상자녀의 수가 2명 내외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이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이상자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이러한 낙관론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 ·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0. 2009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http://www.prb.org/Datafinder/Topic/Bar.aspx?sort=v&order=d&variable=117>).

혼인 양상의 변화

요 약

- 전반적으로 혼인건수는 감소하지만, 재혼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초혼 남자와 재혼 여자 간의 결혼건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초혼 여자와 재혼 남자 간의 결합보다 더 많아졌다.
- 이혼은 2000년 중반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었어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볼 때 청·장년층의 이혼율은 하락하였으나 중·고령층의 이혼율은 급속히 상승하여 전체 이혼자 가운데 중·고령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 국제결혼과 이들 부부의 이혼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결혼과 이혼이다.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남편이 재혼인 사례가 증가하고 부부 간 평균 연령차이도 늘어났다.

혼인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실질혼과 배우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률혼으로 구분된다. 대개의 경우 실질혼과 법률혼은 일치한다. 그러나 혼외동거와 같이 법률적으로 미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혼과 법률상의 이혼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령,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이지만 부부 간에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단절이 심해져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접어든 사례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을 토대로 혼인과 이혼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과 이혼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법률상의 혼인과 이혼은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자료를 통해 파악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혼인과 이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결혼과 이들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

한국은 OECD 여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혼인율이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OECD, 2009). <표 I-7>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9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혼인건수는 399,312건에서 309,759건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 배경에는 결혼과 성에 대한 태도 변화, 여자기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의 급격한 혼인감소는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약과 경제 불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 I-7> 재혼건수와 재혼비율¹⁾: 1990-2009

		1990	1995	2000	2005	2009
혼인건수		399,312	398,484	332,090	314,304	309,759
재혼건수	남자	33,348	39,838	43,370	59,662	53,770
	여자	28,153	39,843	48,132	66,587	58,825
재혼비율(%)	남자 ²⁾	8.4	10.0	13.1	19.0	17.4
	여자 ³⁾	7.1	10.0	14.5	21.2	19.0

주: 1) 미성(결혼경력 정보가 없는 사례)은 제외함.

2) 남자 재혼비율=(남자 재혼건수÷혼인건수)×100.

3) 여자 재혼비율=(여자 재혼건수÷혼인건수)×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혼인을 초혼과 재혼 이상으로 구분해보면, 전체 혼인건수의 감소는 대체로 초혼의 감소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혼인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재혼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남자들의 재혼건수는 1990년 33,348건에서 2009년 53,770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결혼건수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

율도 8.4%에서 17.4%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에 여자들의 재혼건수는 28,153건에서 58,825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에서 19.0%로 남자들의 경우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재혼건수의 증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확산된 배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혼자들이 그 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혼의 증가와 함께, 결혼경력별 결합에도 뚜렷한 변화가 발견된다. 1990-2009년 기간 동안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9.3%에서 76.5%로 낮아졌으나,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12.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초혼 여자와 재혼 남자의 결합비율은 1990년 3.6%에서 2009년 4.5%로 완만한 증가를 보여 주나,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초혼인 남자와 재혼인 여자의 결합은 2.3%에서 6.1%로 증가하였다. 2009년 현재 이러한 부부, 즉 초혼 남자와 재혼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재혼 남자와 초혼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보다 더 많다.

<표 I-8> 남녀의 결혼경력별 구성비율¹⁾: 1990-2009 (%)

	1990	1995	2000	2005	2009
남자초혼+여자초혼	89.3	86.3	82.0	74.4	76.5
남자초혼+여자재혼	2.3	3.6	4.9	6.4	6.1
남자재혼+여자초혼	3.6	3.6	3.5	4.2	4.5
남자재혼+여자재혼	4.7	6.5	9.6	14.9	12.8
합계	100	100	100	100	100

주: 1) 미성(결혼경력 정보가 없는 사례)은 제외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전통적으로 결혼경험은 재혼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여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결혼경험이 있는 여자가 초혼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에 관찰되는 재혼 여자와 초혼 남자 간의 결혼 증가는 여치지위의 향상, 성차별적인 태도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혼인연령도 크게 변했다.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와 24.8세에서 2009년 31.6세와 28.7세로 높아졌다. 또한 동일 기간에 평균 재혼연령도 남자 38.8세에서 45.7세로, 여자 34세에서 41.1세로 높아졌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차이를 본다면 초혼이든 재혼이든 모두 남자의 평균 연령이 3세 정도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연령차이를 떠나 이들의 연령구성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표 I-9>는 초혼부부에 한정된 부부 간 연령차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9>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구성비율¹⁾: 1990-2009

	1990	1995	2000	2005	2009
남자연상	82.2	81.0	76.5	72.8	69.6
1-2세	25.4	26.2	27.5	26.3	26.4
3-5세	38.5	37.3	33.7	29.9	27.7
6-9세	16.0	14.8	12.7	11.7	10.4
10세 이상	2.3	2.7	2.6	4.9	5.2
동갑	9.0	10.3	12.8	15.1	16.1
여자연상	8.8	8.7	10.7	12.1	14.3
1-2세	6.8	6.9	8.3	9.1	10.6
3-5세	1.6	1.5	2.0	2.4	3.0
6-9세	0.3	0.3	0.4	0.5	0.6
10세 이상	0.1	0.1	0.1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미상(결혼경력 정보가 없거나 배우자 연령이 보고되지 않은 사례)은 제외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 표에서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감소하는 반면, 부부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남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10세 이상 많은 초혼부부는 1990년 2.3%에서 2009년 5.2%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나이 많은 한국인 남자와 나이 어린 외국인 여자 간의 국제결혼현상을 반영한다.

이혼

혼인이 가족형성을 의미하다면, 이혼은 가족해체를 뜻한다.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OECD, 2009).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이혼의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혼이 일어나는 빈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배우자 가운데서 이혼이 발생하는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10>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성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유배우 이혼율은 저연령층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이혼은 젊은 부부들에게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적인 추이를 보면 유배우 이혼율은 2005년까지는 각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남자 40대 초반 이하와 여자 30대 후반 이하 연령층의 유배우 이혼율은 다소 낮아졌다. 그 외 고연령층의 남녀에게서는 유배우 이혼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저연령층의 유배우 이혼율의 감소는 전체 이혼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도입된 이혼숙려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표 I-10〉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¹⁾: 2000, 2005, 2009

	남자			여자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15-24세	32.5	41.3	46.3	30.3	42.3	53.0
25-29세	17.4	20.9	19.7	16.2	19.8	17.6
30-34세	14.1	16.1	13.3	14.1	15.9	14.0
35-39세	14.1	15.3	13.5	13.9	14.6	13.6
40-44세	13.5	14.3	13.8	11.7	12.7	12.8
45-49세	11.0	11.6	12.3	7.7	9.4	10.5
50-54세	7.5	8.6	9.6	4.5	6.0	7.2
55세 이상	2.7	3.6	4.4	1.6	2.4	3.0

주: 1) 유배우 이혼율=(특정 1년간의 연령대별 이혼건수÷연령대별 유배우 연앙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부들에게서는 이혼숙려제의 실시와 무관하게 혹은 그 효과를 넘어서서 이혼이 증가하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높은 연령층에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은 이혼자들의 평균 연령과 이들의 연령구성비에도 반영된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 연령은 2000년 남편 40.1세, 아내 36.5세에서 2009년 남편 44.5세, 아내

40.7세로 상승하였다. 〈표 I-11〉에서 이혼자들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2000년에 이혼한 남자들의 대다수는 30대와 40대 초반, 그리고 여자는 5세 가량 아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에 이르면 이들 연령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상당 비율이 고령층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상위 연령층에 속하는 55세 이상 이혼자 비율은 2000년에서

〈표 I-11〉 이혼 남녀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 2005,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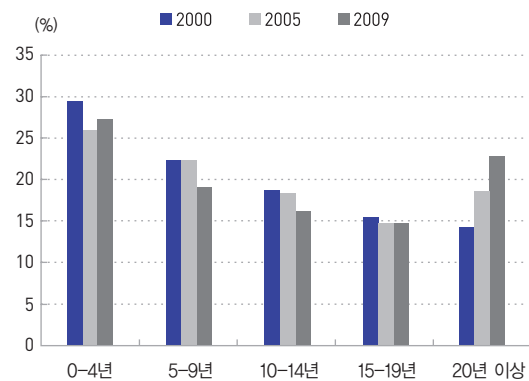
	남자			여자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15-19세	0.1	0.1	0.0	0.3	0.3	0.4
20-24세	1.6	1.3	0.8	5.4	3.9	3.3
25-29세	9.7	6.0	4.6	17.7	12.3	9.8
30-34세	19.1	16.5	11.2	22.4	21.3	15.9
35-39세	23.1	21.1	18.5	22.6	21.6	20.4
40-44세	21.1	21.2	19.8	17.3	18.4	18.9
45-49세	12.4	16.1	18.8	7.9	12.2	15.4
50-54세	6.8	8.5	12.7	3.5	5.4	8.9
55세 이상	6.2	9.3	13.5	2.8	4.5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2009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들 중에서 중·고령층(40대 중반 이후)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동거기간별 이혼자들의 구성비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림 I-9]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이혼자들은 동거기간이 짧은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동거기간이 긴 이혼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고령층에서의 이혼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이혼부부의 동거 자녀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기간이 짧은 이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직 없을 가능성이 높다.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성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두 집단의 이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 I-9] 이혼자들의 동거기간별 구성비율: 2000-200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국제결혼은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표 I-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혼인건수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

는 비율 또한 급속한 증가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9년 현재 10.8%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인 셈이다. 국제결혼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간의 결혼, 그리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간의 결혼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비율을 보면 2000년의 59.8%에서 2009년 75.5%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간의 국제결혼의 급성장과 함께, 외국인 아내의 국적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여자와의 국제결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1990년 초반까지는 배우자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통일교를 통한 일본, 필리핀의 여자들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이후로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의 여자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자는 단시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들 중에서 재혼인 비율은 최근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주된 층이 농촌의 노총각에서 도시지역의 이혼자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 중에서 재혼인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은 오히려 상응하는 한국인 남자 비율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신과 같은 국적의 남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부부 간에는 연령차이가 크다. [그림 I-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부부 간의 평균 연령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09년 11.1세로 증가하였다. 이는 재혼인 국제결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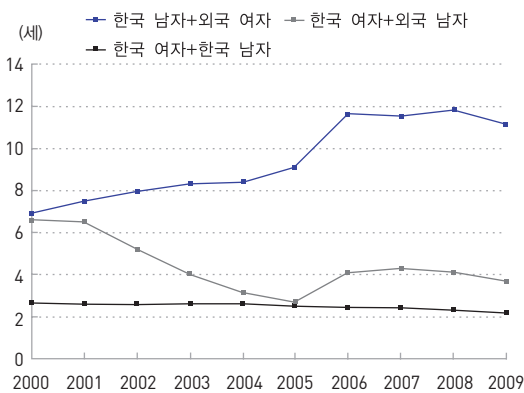
〈표 I-12〉 국제결혼건수와 유형별 국제결혼비율: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국제결혼건수	11,605	42,356	33,300
총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건수 비율(%)	3.5	13.5	10.8
국제결혼건수 중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건수 비율(%)	59.8	72.5	75.5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건수 중 한국인 남자가 재혼인 비율(%)	24.7	44.3	37.1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건수 중 한국인 여자가 재혼인 비율(%)	36.8	56.7	43.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인 남자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재혼자들이 많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남자의 결혼경력에 관계없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그림 I-10] 국제결혼유형별 부부 간 평균 연령차이: 2000-200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한편,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자들의 경우, 부부 간 평균 연령차이가 두 시점 사이에 6.6세에서 3.7세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들 내에서 재혼의 증가는 결국 여자들의 평균 연령을 끌어올림으로써 배우자와의 연

령차이를 감소시킨 셈이다.

국제결혼부부가 누적되면서 이들 부부의 이혼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표 I-13〉에 의하면 국제결혼부부 이혼이 2002년 1,744건에서 2009년 11,692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들이 한국의 총 이혼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2%에서 9.4%로 증가했다.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혼 10건 중 1건 정도는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 중에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1.8%에서 2009년 71.0%로 급속히 늘어났다. 따라서 최근 국제결혼부부 이혼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의 이혼이며,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의 평균 동거기간은 2002년 2.2년, 2009년 3.1년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짧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의 동거기간은 5.3년에서 5.7년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동거기간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평균 동거기간의 2배 정도이다.

〈표 1-13〉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과 동거기간: 2002, 2005, 2009

	2002	2005	2009
국제결혼부부 이혼건수	1,744	4,171	11,692
총 이혼건수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 비율(%)	1.2	3.3	9.4
국제결혼부부 이혼건수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부부의 이혼 비율(%)	21.8	57.1	71.0
이혼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년)	2.2	2.1	3.1
이혼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년)	5.3	5.7	5.7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참고문헌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http://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김정석(동국대학교)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한경혜 30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 진미정 40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 이혜경 47

II.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1인가구와 1세대 가족의 증가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와 조손가구 및 분거가족이 증가함으로써 가족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 만혼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이혼율 증가와 함께 이혼 사유가 다양해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노인부양 규범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국가족은 그 구조 및 관계, 그리고 가치의식 면에서 광범위하고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가족의 주요 변화와 현주소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 및 조손가구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형성 부분에서는 결혼지연 및 이혼과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와 함께 이들 변화가 야기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관계의 변화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부부관계 변화 및 자녀양육과 돌봄, 그리고 노부모 부양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변화는 의사결정 단위로서 가족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반응하고 대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행동의 변화가 모여 인구학적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변화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

행됨에 따라 가족생활에서 인구학적 요소의 변화 속도와 제도적, 규범적 측면의 변화 속도 간에 괴리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가족관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구조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족구조의 변화로는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와 조손가구, 분거가족의 증가 등으로 표출되는 구조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평균 가구원수가 1985년 4.1명에서 2009년 3.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고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현상과 관련된다. 1인가구의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10년 20.3%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II-1). 1인가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는 독거노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 2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30여 년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10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65.2%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났다. 여성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특별히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 199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로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II-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85-2010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⁴⁾
1세대 가구 ¹⁾	9.6	10.7	12.7	14.2	16.2	17.0
2세대 가구 ²⁾	67.0	66.3	63.3	60.8	55.4	54.7
3세대 이상 가구 ³⁾	14.9	12.5	10.0	8.4	7.0	6.8
비친족 가구	1.7	1.5	1.4	1.1	1.4	1.2
1인가구	6.9	9.0	12.7	15.5	20.0	2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추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이렇게 핵가족이 감소하고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는 현상에 대해 가족제도의 해체나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재구조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역기능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최근 한국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노인인구의 거주 유형 관련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 형태로 사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에는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II-2).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비교적 높았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 내의 세대관계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최근에는 거

주유형에 대한 규범 및 태도가 변화되어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핵가족화로 젊은 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 및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년기 또한 연장되어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들의 수가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주거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노인들은 아직도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세대 간 접촉 및 다양한 지원의 교환을 통하여 가구단위를 뛰어넘는 상호작용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3세대 가족 규범 및 특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의 비자발적 별거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자녀세대 또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빈곤계층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돌봄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만 65세 이상 노인독거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총 가구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2006년 약 83만 가구에 비해 22%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2030년에는 10가구 중 1가구(11.8%)가 노인독거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43.6%)인 것으로 보고되며, 전체 65세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표 II-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05 (%)

	1990	1995	2000	2005
노인단독	10.6	16.0	20.1	23.2
노인부부	12.7	17.7	21.7	24.9
자녀동거 ¹⁾	75.3	65.1	57.1	50.8
기타 ²⁾	1.4	1.2	1.1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 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친족가구, 미상을 합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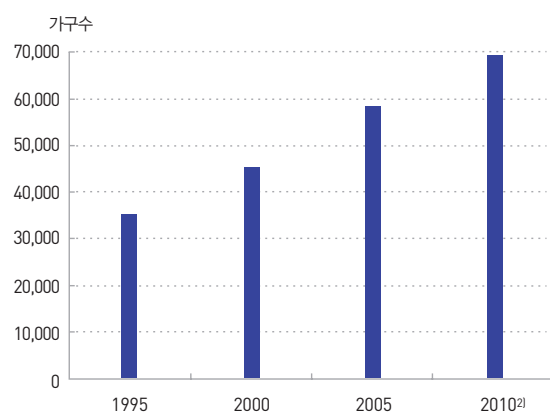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거노인 4명 중 3명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손가족 가구의 증가

노인이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 가구의 증가 또한 최근 두드러지는 한국가족 구조의 변화 양상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조손가족은 58,101가구로 10년 동안 65.1%나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6만 9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I-1).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도 되지 않으나, 아동의 수로 보았을 때는 2005년 현재 4만 명에 육박하여, 전체 아동의 5.4%에 해당된다. 조손가족 가구는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 그리고 최근 한국가족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 조손가족¹⁾수: 1995-2010



주: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추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자녀의 이혼 및 재혼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07),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조손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이 해체되어 자녀를 시골의 노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에 조손가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농촌의 조손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아동의 또래집단 부족, 부모세대와의 접근성에서의 불리함 등 때문에 도시의 조손가족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조손가족 형성 원인에는 계층차이가 있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족에서는 양육 손자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손가족은 일단 사회 문제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시설에 보내졌을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지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거가족의 증가

가족원 중의 일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의 증가 또한 최근 한국 가족구조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이농으로 대규모 분거가족이 생겨났고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으로의 노동력 해외수출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한 분거가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200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16.5%이고, 이 중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가족원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분거가족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확연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외유학을 선택하는 가족이 증가한 것은 경제발전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외거주 분거가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이 특히 높다(표 II-3).

〈표 II-3〉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 2008 (%)

	분거 가족의 가구주 ¹⁾	분거자의 거주지 ²⁾		분거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²⁾	
		국내거주	국외거주	배우자	미혼자녀
100만 원 미만	15.4	95.8	4.7	14.5	90.3
100-199만 원	18.1	94.8	6.3	20.9	86.5
200-299만 원	14.3	90.3	11.5	28.3	80.3
300-399만 원	15.1	89.0	14.3	25.4	83.6
400-599만 원	18.7	86.4	16.9	26.7	82.2
600만 원 이상	22.8	70.1	36.0	26.3	90.7
전체	16.5	90.5	11.4	22.8	85.4

주: 1)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임.

2) 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및 가족관계의 각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그런가하면, 특별히 높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소득계층에서도 기러기 가족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조기유학에 가족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현상이 고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조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가족의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한국가족이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부부 중심적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 중심적이며 계층상승을 목표로 하는 도구적 가족주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형성

최근 한국가족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결혼연령이 점차 뒤로 미루어지는 만혼화 경향, 이혼의 증가 및 국제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만혼화 경향과 결혼의 의미 변화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현상이지만,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초혼연령은 남성 31.6세, 여성 28.7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5세, 여성은 2.4세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혼화 추세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림 II-2]에 나타나듯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화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은 늘어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등도 결혼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 남녀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남성(4.9% 포인트)에 비해 여성(6.3% 포인트)이 약간 더 커서 남녀 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2008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성은 27.4%이고 여성은 20.0%이다. 여성의 경우, 5명 중 1명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혼의 경향이 평생 미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2005년에 50대 후반이면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남성 1.3%, 여성 1.1%로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9%는 결국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한다. 2002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가족모듈 조사와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9%로 33개 조사 참여국가 중

에서 60%인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 결혼 외 동거에 대한 찬성률에 있어서는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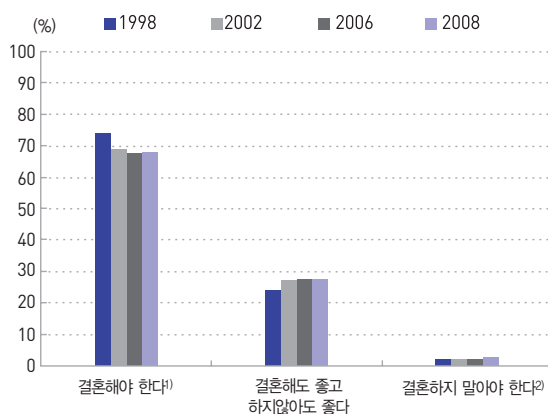
이혼의 증가와 가족의 의미 변화

위에서 살펴본 만혼화 경향이 가족형성의 지연을 의미한다면, 이혼의 증가는 형성된 가족의 해체와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의 이혼현상은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났다는 점 뿐 아니라 그 양상이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한국가족 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40대 이혼율이 급상승하였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년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이혼억제의 대표적인 요인인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 간 결속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이후의 이혼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이혼 사유가 다양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문제가 이혼사유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1990년에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중 2.0%에 불과하였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0년에는 10.7%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4년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부부 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

[그림 II-2]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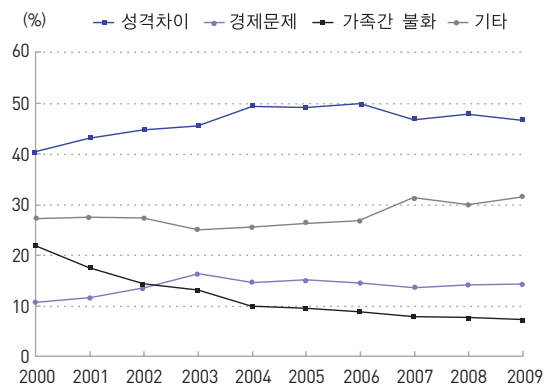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것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년 이혼사유의 40.2%에서 2009년 46.6%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족 간 불화는 2000년 21.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3). 배우자의 부정과 학대와 같이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가족문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성격차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관계에서 중시되는 요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 간 정서적 유대 등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 현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결혼'으로부터의 이혼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혼이 함께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3] 이혼 사유: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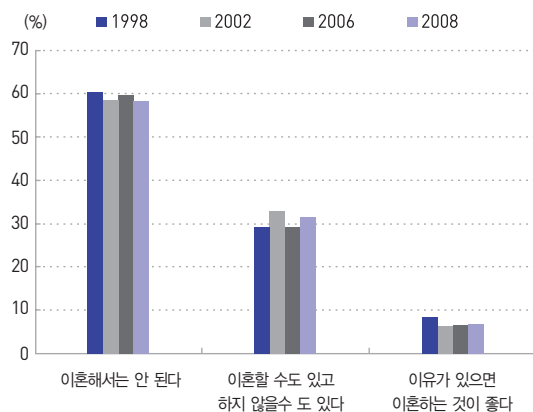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가 아니며,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는 결혼이 되었고 그러한 기대

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58.6%로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성별 및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가정의 자녀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에는 14만 명에 가까운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그 숫자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만 명에 육박하였다. 2009년에 이혼한 부부 중 55.2%가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이 정점에 도달하였던 2003년 이래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숫자를 합하여 보면 대략 15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미성년 시기

〈표 II-4〉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¹⁾: 1999-200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있음	71.4	70.6	70.4	69.8	68.5	65.6	63.4	60.8	58.7	54.0	55.2
1명	32.0	31.8	31.3	30.1	28.7	28.1	27.3	26.8	26.0	24.5	25.4
2명	35.0	34.3	34.7	35.0	35.0	32.8	31.4	29.6	28.3	25.5	25.7
3명 이상	4.3	4.4	4.5	4.7	4.8	4.7	4.7	4.4	4.4	4.0	4.1
자녀 없음	28.6	28.0	27.8	28.8	29.5	33.4	35.5	38.7	41.0	45.4	44.4
20세 미만 자녀수(1,000명)	135.8	136.3	154.0	166.3	189.3	150.3	134.0	124.0	119.3	102.7	111.3

주: 1) 미상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I-4).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이혼가족 아이들을 문제시하는 시각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여,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관계의 악화이지, 양 부모가족인가 이혼으로 인한 편부·편모가족 혹은 재혼가족인가의 여부와 같은 가족구조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 자녀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성취도 등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증가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만 9천 명을 넘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만 명을 넘는다. 2009년에는 국

제결혼이 총 혼인건수의 10.8%를 차지하였다.

최근 국제결혼이 중개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면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농촌총각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다. 2009년 혼인한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 종사자 중 35.2%가 외국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보고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현상과 농촌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로 인한 농촌지역의 극심한 성비 불균형과 농촌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려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농촌지역에서 특히 급증하게 된 것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

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계

가족구조 및 가족형성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가족 내 전반적인 관계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의 변화가 예측되고 수명연장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의 돌봄을 둘러싼 세대관계 및 규범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부부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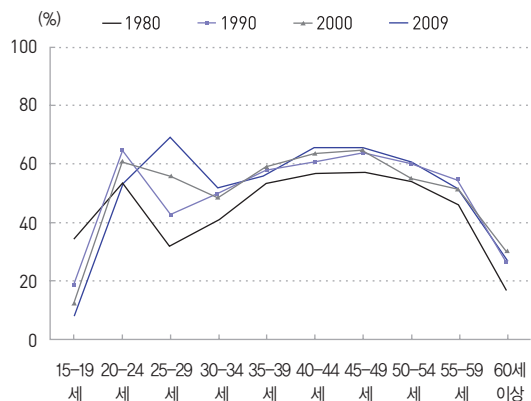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약 1/3을 차지하게 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남성이 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가족 내 성역할 분업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적 파워가 강화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에 따른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공백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직업역할과 임신·출산·양육의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 내 역할과 책임이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족 내 역할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2008)에 의하면,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 부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응답 여성의 47.6%가 육아부담을 취업 장애의 첫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형태가 임신·출산기에 경제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소위 'M자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즉 아직도 많은 여성이 가족역할과 병행이 어려워 취업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5]를 보면, 최근 들어 M자의 함몰부분이 점차 덜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가족역할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과거에 비하여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간 평등한 성역할 분담이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 실증자료가 부족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부 간 성역할 분업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

[그림 II-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¹⁾: 1980-2009



주: 1) 1980년과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 2000년과 2009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산자녀수의 감소에 기여하였고, 이는 부부중심성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부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남성의 가족역할 공유나 부부 간 정서적 유대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상도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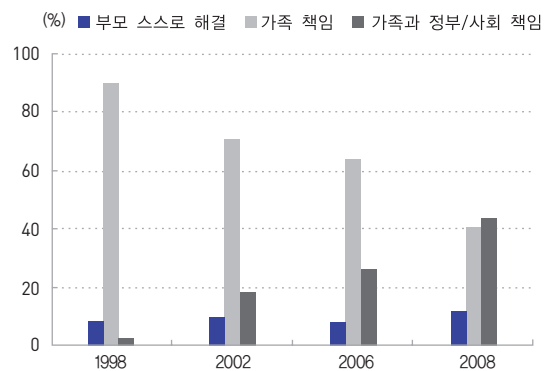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최근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특히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까지 생존하는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하여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돌보는 전통적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된 때문이다.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들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로 나타나는 구조적 핵가족화와 함께 진행된 정서적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인부양 규범 또한 급격히 약화되었다.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개인적, 사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

식 또한 확대되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타난 1998년과 200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책임이라는 태도가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II-6).

[그림 II-6]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러나 이렇게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실체는 많은 괴리가 있다. 지난 10년동안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이 사회복지 부문의 기여도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기여수준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주된 부양자인 자녀세대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노인 당사자에게도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한국노인들의 큰 바람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일 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경혜(서울대학교)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요 약

- 출산의 당위성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아동 양육의 책임이나 돌봄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의 10명 중 8명은 주 양육자가 어머니 이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대다수는 낮 시간동안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 아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돌봄 기관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돌봄서비스 이용료로 월평균 335,000 원을 지출하며 이는 가구소득 대비 14.1%에 해당한다.
-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은 35,550개소, 유치원은 8,37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62.0%가 공공 보육 및 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10명 중 7명은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다.

어린 아동을 돌보는 일은 전통적으로 가정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급속하게 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 아동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신체적 보호와 경제적 부양을 넘어 발달적, 교육적 지원을 동반하는 일이 되면서 돌봄의 방식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과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돌봄을 사회화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아동을 돌보는 일은 이제 가족 안에서 부모가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에서 미래의 인적자본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아동을 돌보는 일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지며, 주 양육자의 취업지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동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즉 초등학생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양육의 초점이 돌봄보다는 교육에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관찰의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와 가치, 돌보는 방식,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돌봄서비스의 공급 및 보육재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은 기쁨과 수고를 동반한다.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더 우선시할 만큼 자녀들의 도구적, 정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적 규모의 조사 자료들을 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와 규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5세 이상 4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과 2009년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모두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 역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 자

녀는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 규범으로 존재해왔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아동양육의 책임이나 가족 내 역할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가 발견된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남성의 78.5%와 여성의 82.3%가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5).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의 책임과 전문성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경향에서 다소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II-5〉 아버지의 가족 내 양육자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¹⁾: 2008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합계 (%)
남자	15.1	63.4	19.0	2.5	100.0
여자	21.5	60.8	15.7	2.0	100.0
전체	18.4	62.1	17.3	2.2	100.0

주: 1) 전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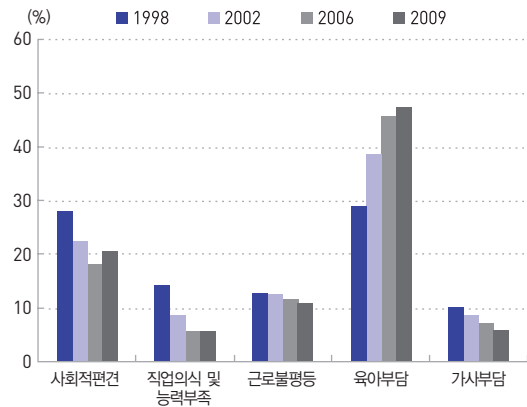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는 기대하는 자녀수의 변화에도 반영된다. 2005년과 2009년의 같은 「사회조사」 자료를 비교해볼 때,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대 자녀수가 미혼남성의 경우 2.06명에서 1.88명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2.06명에서 1.82명으로,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1.97명에서 1.75명으로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자녀수가 감소하는 데는 자녀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동조성이 낮아지는 원인 외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49.2%이며,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시기인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2%로 성인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과 2009년도에 시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비율이 38.4%에서 24.6%로 낮아져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되면서 경제활동의 사회적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그림 II-7), 과거 여성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편견이나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이나 능력 부족 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아부담을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1998년에는 29.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8.8%, 2006년에는 45.9%, 2009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취업과 관련된 환경이 개선되고, 보육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일차적 주체는 가정 내 여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돌봄 역할이 경제활동에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던 아동양육의 책임이 반드시 여성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태도와는 불일치한다. 아동양육의 책임에 대한 태도는 다소 유연해졌지만, 실제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면 지금의 저출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 내 돌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II-7]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1998-200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아동 돌봄 실태

전통적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하 아동 83.9%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낮 시간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도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68.4%,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59.4%가 어머니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의 10명 중 8명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며, 6-7명은 낮 시간동안 어머니에 의해 돌봐진다. 시간상으로 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은 하루 평균 55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14분을 사용한다.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은 하루 평균 33분을 직접적인 돌봄에 사용하고, 비취업여성은 1시간 17분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취업지위나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 대신 아동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기 아동인 경우에는 조부모, 유아기 아동은 보육시설,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생은

학원이 가장 바람직한 대리양육자라고 보고, 어머니의 취업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도 이러한 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이 대리양육되는 경우,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대리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65%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만 2세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27.2%로 증가하고, 만 4세가 되면 기관(보육시설 60.6%, 유치원 25.1%)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취학 전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이 76.3%이다.

〈표 II-6〉는 「전국보육실태조사」로부터 산출된 각종 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9년 자료를 보면, 영아의 23.6%는 조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고(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포함), 33.5%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닌다. 유아의 경우에는 19.4%가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또 49.9%는 보육시설에 다니며, 39.4%는 유치원에 다니고, 13.5%는 학원을 다닌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15.3%,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1.1%, 보습학원 등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72.0%, 방과 후 교실이나 방과 후 보육을 받는 경우가 44.1%이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후에는 할머니가 봐주는 식으로 한 가지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200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돌봄의 종류와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거의 모두 높아졌고,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 돌봄서비스가 빠르게 확충되고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통념적으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주로 대리양육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 9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고(취업모 39.7%, 비취업모 7.2%), 평균 이용시간도 취업모에 비해 1시간 11분 정도 적다.

〈표 II-6〉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

	2004			2009		
	영아 (0-2세)	유아 (3-5세)	저학년 초등학생 (6-8세)	영아 (0-2세)	유아 (3-5세)	저학년 초등학생 (6-8세)
조부모	20.6	18.1	11.9	23.6	19.4	15.3
보육시설	11.2	38.9	1.3	33.5	49.9	1.1
유치원	0.2	27.2	-	0.5	39.4	-
일반학원	0.2	14.3	76.5	0.2	13.5	72.0
방과후 교실	-	-	27.8	-	-	44.1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각 년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월평균 33만 5천 원을 돌봄서비스 이용료로 지출하는데 이는 가구소득 대비 14.1%에 해당한다. 2004년 조사에서 평균 지출이 17만 원(가구소득 대비 8.3%)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액수이다. 이 액수는 물론 자녀수나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표 II-7〉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중에서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10.1%를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으로 지출하지만 2명인 경우에는 15.6%를 지출한다. 대도시 거주 가구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월평균 145,600원을 더 지출한다. 어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495,900원을 지출하여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가구보다 247,700원을 더 지출한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돌봄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구소득과 비례하므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월평균 131,400원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300-349만 원인 가구는 336,700원을, 500-600만 원인 가구에서는 675,600원을 지출한다. 이 비용에는 공식, 비공식 돌봄서비스 및 학원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이 비용을 부모들은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들의 63.9%가 돌봄 비용은 가구소득의 10% 이하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본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의 부담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영유아기 때부터 각종 학원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비용도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국 보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미취학 아동이라도 부모들이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조부모나 친인척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의 각종 보육시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선교원, 문화센터, 예능 및 보습 학원, 방문학습 등 매우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시장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통계는 가용하지 않다. 이용 가능한 자료 가운데 공공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보육시설은 35,550개소, 유치원은 8,373개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2008년에 비해 2,051개소가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29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II-7〉 가구 특성별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월평균 지출액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 2009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비율(%)
아동수별		
1명	196,000	10.1
2명	429,500	15.6
3명	499,000	18.3
지역별		
대도시	382,500	14.9
중소도시	323,600	14.1
읍면지역	236,900	11.8
모의 취업여부별		
취업	495,900	14.8
미취업	248,200	13.6
모부재	180,000	12.0
전체	335,000	14.1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표 II-8〉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09년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89.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는 낮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다고 평가되어 부모들은 민간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도 등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 두 유형의 선호도 간에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56%였으나 2009년에는 38.9%로 감소하였다.

각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현황은 〈표 II-9〉와 같다. 아동인구가 점차 감

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17만 5천 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53만 7천 명이 유치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71만여 명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는 2009년 현재 만 0-5세 아동 276만 명의 6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만 5세 이하 아동 10명 중 6명은 전일제이든 시간제이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의 약 70%가 낮 시간 동안 주로 어머니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고 한 결과를 떠올려 보면,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에도 동시에 아동들이 돌봄 기관에서 보완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그 해결방안으로 주목된 돌봄서비스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

〈표 II-8〉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 2000-2009

	보육시설							유치원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2000	1,295	2,010	9,294	미분류	6,473	204	19,276	8,494	27,770
2005	1,473	1,495	13,748	42	11,346	263	28,367	8,275	36,642
2008	1,826	1,458	14,275	65	15,525	350	33,499	8,344	41,843
2009	1,917	1,470	14,368	66	17,359	370	35,550	8,373	43,923

출처: 보건복지부, 「2009 보육통계」,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치종등통계」, 2010.

〈표 II-9〉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아동수: 2000-2009

	보육시설							유치원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2000	99,666	157,993	352,574	미분류	67,960	7,807	686,000	545,263	1,231,263
2005	111,911	125,820	608,734	933	129,007	12,985	989,390	541,603	1,530,993
2008	123,405	113,894	669,465	1,491	210,438	16,809	1,135,502	537,822	1,673,324
2009	129,656	112,338	675,763	1,655	236,843	18,794	1,175,049	537,361	1,712,410

출처: 보건복지부, 「2009 보육통계」,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치종등통계」, 2010.

정책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예산은 284억 원이었다. 2009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예산은 약 1조 7천 억 원이며 여기에 지방정부의 보육예산까지 더하면 총 보육정책 예산은 3조 5,738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2조 9,916억 원에 비해서도 5,822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보육료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79만 5

천여 명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이용 아동의 67.7%가 보육료 혜택을 받았다. 보육료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차등보육료)과 발달단계(만 5세 아 지원), 자녀수(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자녀특성(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산 확대 속도와 보육정책의 전문화 및 세분화는 아동 돌봄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의제 중 하나라는 것을 반영한다.

진미정(서울대학교)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요 약

- 2004년 이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부부 간 연령차이가 더 커졌고, 이들의 학력은 낮아졌다.
-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 1990년대에는 농촌총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화이트칼라 등 도시의 다양한 직종 종사자로 확대되고 있다.
- 국제결혼 유형은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일본 여성에서 가장 많고,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조선족과 중국한족 여성에서 가장 많다.
- 결혼이민여성 가구는 한국인 가구에 비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시부모를 모시거나 시댁 형제·자매·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2배 이상 많다.

전 지구적인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3월 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1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약 56만 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는 약 13만 명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면, 현재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약 17만 명 정도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로 미국과 호주 등 전통 이민국가나 유럽의 이민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초청노동자를 주로 유입하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정주하고 자녀를 낳고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고 나아가 귀화를 하여 한국국민으로서 살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

고 있는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글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여성과 이들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약 13만 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56%인 7만 4천 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0년 이후에 국내로 들어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20년 미만이고,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0-64세 사이의 결혼이민여성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

연령차이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부부 간 연령차이를 살펴본 것이 <표 II-10>이다. 미국과 서유럽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그리고 일본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여성이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다. 한편 남편이 아

내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는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여성에게 많아서 이들은 3명 중 1명꼴로 연령차이가 컸다(표 II-10).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입국시기를 질문하지 않고 대신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0년 이후 한국에 들어와 국내 체류기간이 20년 미만인 결혼이민여성만 살펴보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시기는 체류기간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입국시기별 부부 간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였거나 그래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내가 연상인 경우가 11.2%나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입국할수록, 즉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남편이 2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크게 증가하여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커지고 있다(표 II-11).

특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전에 들어왔거나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표 II-10>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

	아내 연상	남편 연상			합계
		0-9세	10-19세	20세 이상	
조선족	6.9	58.6	33.1	1.4	100.0
중국어한족	4.0	48.7	44.0	3.4	100.0
베트남	0.6	8.7	59.7	31.1	100.0
필리핀	2.3	46.2	41.0	10.5	100.0
몽골	6.3	39.7	48.0	6.0	100.0
태국	8.1	59.0	30.5	2.5	100.0
캄보디아	0.4	8.8	55.0	35.8	100.0
일본	19.6	76.9	3.4	0.1	100.0
미국·서유럽	26.5	70.1	3.4	0.0	100.0
기타	6.3	46.1	40.0	7.7	100.0
전체	5.0	42.1	41.4	11.4	100.0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표 II-11〉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

	아내 연상	남편 연상			합계
		0-9세	10-19세	20세 이상	
2년 미만 (2007년 이후)	2.1	24.7	54.8	18.4	100.0
2-4년 (2004-2006년)	3.4	33.3	46.9	16.5	100.0
5-9년 (1998-2003년)	6.3	56.7	32.9	4.1	100.0
10년 이상 (1997년 이전)	11.2	65.2	22.7	0.9	100.0
전체	5.0	42.1	41.4	11.4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경우에는 부부 간 연령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가 5% 미만이었는데, 2004년 이후 입국자의 경우에는 17-18% 정도나 되었다. 2004년 이후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부부 간 연령차이가 더욱 커진 것이다.

교육수준

입국시기별 또는 국내 거주기간별로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이 역시 2004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2003년 이전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 즉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8-29%가 대학을 다녔거나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었고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도 46-51%나 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 들어와 국내 거주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에는 대학 이상인 경우가 16-18%,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38-39%로 교육수준이 낮아졌다(표 II-12).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한 2004년을 경계로 최근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의 학력이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이다.

〈표 II-12〉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교육수준: 2009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2년 미만 (2007년 이후)	11.5	33.3	37.5	17.8	100.0
2-4년 (2004-2006년)	12.4	32.4	39.4	15.8	100.0
5-9년 (1998-2003년)	5.4	20.8	46.1	27.6	100.0
10년 이상 (1997년 이전)	3.2	16.9	51.4	28.5	100.0
전체	9.1	27.4	42.4	21.1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표 II-13〉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을 여성의 입국시기(거주기간)별로 살펴본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은 2004년을 경계로 하여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1997년을 경계로 즉 결혼기간 10년을 전후로 차이가 있다. 1990-1997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와 비교할 때, 1998년 이후에 결혼한 남편들이 그리고 최근에 결혼할수록 교육수준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13〉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2009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2년 미만 (2007년 이후)	4.6	14.9	52.7	27.8	100.0
2-4년 (2004-2006년)	6.9	18.5	52.1	22.5	100.0
5-9년 (1998-2003년)	7.7	17.4	54.8	20.1	100.0
10년 이상 (1997년 이전)	10.7	21.6	52.3	15.5	100.0
전체	7.2	17.9	52.9	22.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표 II-14〉를 통해, 국제결혼 시기에 따라 한국인 남편의 직업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역시 1997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6%나 되었으나, 1998년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1~13%로 약간 줄어들고, 그 대신 기능·노무직이나 사무·전문·관리직 종사자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시기에 따라 즉 입국시기(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부부의 특성에 차이가 관찰된다. 2004년 이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부 간 연령차이가 더욱 벌어졌고, 결혼이민 여성의 학력은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들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주로 농림어업 종사자(농촌총각)가 이러한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시기가 지날수록 이는 단지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직종 종사자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화이트칼라 직종 종사자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4〉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직업: 2009 (%)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노무	사무전문 관리	기타	합계
2년 미만 (2007년 이후)	14.9	11.8	45.1	13.5	15.0	100.0
2-4년 (2004-2006년)	14.4	13.4	46.3	11.6	14.4	100.0
5-9년 (1998-2003년)	15.2	11.3	44.7	12.1	16.6	100.0
10년 이상 (1997년 이전)	15.1	16.0	42.3	10.4	16.2	100.0
전체	14.8	12.9	45.0	11.9	15.4	100.0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과 결혼유형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이 다양하므로 출신국에 따라 입국시기(거주기간)와 결혼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출신국에 따라 한국으로의 입국시기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 1997년 이전에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일본 여성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조선족과 미국·서유럽 출신 여성이었다. 1998-2003년 사이에 들어온 경우는 태국 여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이었다. 2004-2006년 사이에 들어온 경우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캄보디아 여성이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들어온 경우는 캄보디아 여성이 가장 많았다(표 II-15).

〈표 II-15〉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2009 (%)

	2년 미만 (2007년 이후)	2-4년 (2004- 2006년)	5-9년 (1998- 2003년)	10년 이상 (1997년 이전)	합계
조선족	7.6	30.4	36.5	25.5	100.0
중국한족	37.0	38.9	16.8	7.4	100.0
베트남	34.1	56.9	8.1	0.9	100.0
필리핀	22.9	25.2	40.5	11.4	100.0
몽골	22.0	40.5	28.9	8.6	100.0
태국	14.2	24.8	52.4	8.6	100.0
캄보디아	54.0	43.6	2.2	0.2	100.0
일본	8.4	17.1	22.2	52.3	100.0
미국·서유럽	13.4	26.8	36.2	23.5	100.0
기타	20.7	30.6	39.1	9.6	100.0
전체	22.3	37.9	24.9	14.9	100.0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이들의 결혼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 〈표 II-16〉이다.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일본 여성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서유럽과 필리핀 여성이었다. 그리고

〈표 II-16〉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결혼유형: 2009

	부부 모두 초혼	남편만 재혼	아내만 재혼	부부 모두 재혼 이상	합계
조선족	53.2	5.3	11.8	29.8	100.0
중국한족	60.0	7.5	9.9	22.7	100.0
베트남	80.0	17.3	1.2	1.5	100.0
필리핀	85.0	11.4	1.5	2.0	100.0
몽골	68.1	13.6	7.3	11.0	100.0
태국	77.2	8.1	5.6	9.1	100.0
캄보디아	77.5	19.2	2.0	1.4	100.0
일본	94.0	2.2	1.3	2.5	100.0
미국·서유럽	89.8	4.1	3.4	2.7	100.0
기타	74.5	12.8	4.5	8.2	100.0
전체	68.7	10.0	6.4	14.9	100.0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부부 모두가 재혼 이상인 경우는 조선족과 중국한족 여성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몽골 여성이었다.

우리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다 뭉뚱그려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특히 출신국에 따라 국제결혼을 한 시기와 결혼유형이 매우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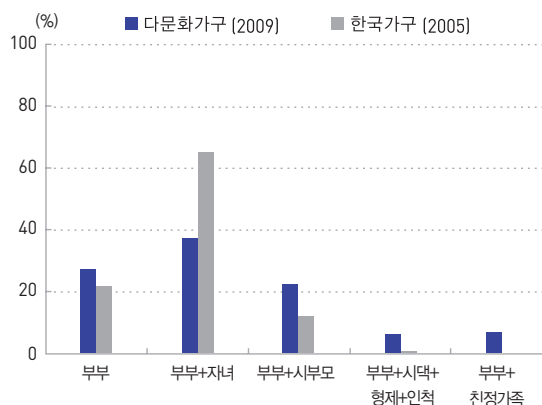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구성

한국의 가족은 그동안 핵가족이 지배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친족가구 중 부부와 미혼 자녀 중심의 핵가족의 비율은 1966년 66.6%에서 2005년 82.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부와 부모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율은 1975년 21.6%에서 2005년 10.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가구유형과 다문화가정의 가구유형을 비교하여 보자. 우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국 총 1,589만 가구 중 1인가구, 비친족가구, 조손

가구 등을 제외한 유배우가구(65.0%)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유배우 다문화가구를 비교한 것이 [그림 II-8]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만으로 구성된 한국가구와 결혼이민여성 가구는 각각 21.9%와 27.1%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한국가구는 64.9%인데 비해 결혼이민여성 가구는 37.3%로 거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시부모를 모시는 결혼이민여성 가구는 한국가구의 2배 정도이고, 시댁형제·자매·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도 결혼이민여성 가구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림 II-8] 유배우 한국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율: 2005, 2009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결혼이민여성 가구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일반 유배우 한국가구에 비해 매우 적은 이유는 이들 결혼이민여성의 상당수가 이제 막 결혼하여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인 남편의 재혼 상대로 이러한 재혼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가구유형 가운데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이 도시 거주 결혼이민여성보다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거의 2배 정도 많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12% 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유형별로는 부부 모두가 초혼이거나 한국인 남편만 재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부모 부양 비율과 유자녀 비율이 높았다.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에는 시부모와 같이 살거나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표 II-17).

〈표 II-17〉 결혼이민여성의 특성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

		시부모 모심	자녀가 있음
거주지역별	농촌(읍면동)	35.0	74.6
	도시(시도)	16.7	62.7
결혼유형별	부부 모두 초혼	27.0	79.2
	한국인 남편만 재혼	24.7	62.8
	외국인 아내만 재혼	13.1	44.8
	부부 모두 재혼 이상	9.5	18.2
부부 연령차이별	외국인 아내 연상	12.9	54.0
	남편 0-9세 연상	17.6	65.2
	남편 10-19세 연상	28.1	68.9
	남편 20세 이상 연상	29.0	70.5
남편 직업별	서비스판매	19.3	60.8
	농림어업	44.7	77.6
	기능노무직	20.4	66.7
	사무전문관리	19.2	66.3
	기타	20.1	64.6
가구소득별	100만 원 미만	25.3	67.8
	100-200만 원 미만	21.6	69.3
	200-300만 원 미만	18.5	63.2
	300만 원 이상	17.3	60.5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부부 간 연령차이별로는 연상 남편과의 차이가 10세 이상인 경우가 1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남편이 연상일 때 연령

차이에 상관없이 65% 또는 그 이상이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는 54%만이 자녀가 있어서, 남편이 연상인 경우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낮았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도 이들의 가구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이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44.7%가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서 다른 직업 종사자와 비교 시 2배 이상이나 많으며, 유자녀 비율도 77.6%로 더 높았다.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구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것이 〈표 II-18〉이다. 부부 둘 다 초혼인 경우가 가장 많은 일본 여성은 83.3%가 자녀가 있어서 유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재혼 이상의 비율이 높은 조선족, 중국한족 그리고 몽골 여성은 다른 출신국 여성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훨씬 낮았다.

〈표 II-18〉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

	시부모 모심	자녀가 있음
조선족	13.1	58.8
중국한족	18.9	50.7
베트남	35.4	76.2
필리핀	26.9	77.7
몽골	23.4	64.9
태국	24.2	74.6
캄보디아	42.2	77.1
일본	21.4	83.3
미국·서유럽	6.2	66.2
기타	21.3	71.7
전체	23.1	66.9

출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9.

일반 유배우 한국가구에 비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시부모나 시댁형제·자매·인척과 함께 살고 있음은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부터 지적되었다(설동훈 외, 2005). 2005년 조사에서는 조선족이나 중국 한족에 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시댁식구와 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에도 발견되어, 〈표 II-18〉 역시 캄보디아(42.2%)와 베트남(35.4%) 출신 여성이 다른 출신국 여성에 비해 시부모 부양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 이유는 200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조사는 한국인 남성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

서' 이거나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없어서' 때문이었다. 그러나 특히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농촌 남성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에게 더 중요하였고,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도시 남성이거나 조선족,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 더 중요하였다(설동훈 외, 2006). 그러므로 2009년 조사에서도 한국 남성이 특히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부모 모심, 즉 돌봄노동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설동훈 · 김윤택 · 김현미 · 윤홍식 · 이혜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 이혜경 ·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이혜경(배재대학교)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강상진	56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김경근	68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 김경근	75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 강상진	83

III. 교 육

Education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취학률과 진학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초·중·고의 취학률은 모두 완전취학 수준이고 대학입학 정원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수를 초과하고 있다.
- 예·체능고를 제외한 특목고 학교수는 1985년 이후로 4개 교에서 2009년 56개교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수는 31,583명으로 1985년에 비하여 약 59배 증가하였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국가 순위는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 중등학생들의 주요 교과목 학업성취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평가에서 세계 1-5위에 위치하여 최상위권에 있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성과가 삶의 질에 관련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의 발전은 어느 국가에서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육성취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연구활동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제비교평가로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있다. 전자는 참여 국가들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성취도를 비교하는 것이고, 후자는 OECD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동향의 한 부문으로서 학교 교육의 변화과정을 주요 교육지표로 서술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글에서 교육부문의 지표들은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또는 성과)로 분류하였다. 교육 기회 영역에서는 국민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이후의 대학교육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서술하며, 교육자원 영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환경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지원의 변화 내용을 서술한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한국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한다.

교육의 기회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일반 국민에게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표현한다. 국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다양하다. 첫째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학력수준별 인구분포가 있다. 둘째는 국민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과 최고수준의 대학교육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로 파악할 수 있는 진학률 지표가 있다. 셋째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사회생활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향유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표가 있다. 끝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교육내용 자료가 있다.

교육기회의 주제는 학교 취학률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국민이 받는 교육의 질, 학교교육 이후의 삶 속에서의 교육기회를 모두 망라한다. 여기서는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취학률과 진학률, 국민의 학교선택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교설립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유아교육 기회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서술한다.

취학률과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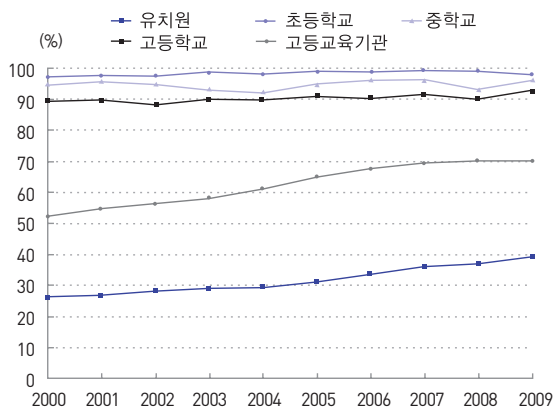
취학률은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모든 학교급에서 교육기회의 기초지표로 사용된다. 반면에 진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 대한 기회로서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교육기회 지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는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림 Ⅲ-1]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급 학교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2005년부터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취학률은 모두 90%가 넘어 완전취학률에 가까우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인다.

이 같은 취학률의 동향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부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가 열린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취학률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50%에 근접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정부는 1954년에서 1959년까지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시행하였고, 1958년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1959년에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7년에 이미

91%에 도달하여 완전취학률에 가까웠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의 축적이 196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급 학교의 취학률은 [그림 Ⅲ-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 이후에 그리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0년 이후에 90% 이상에 도달하였다. 대학교육기관 취학률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70%에 이르고 있다.

[그림 Ⅲ-1] 각급 학교의 취학률: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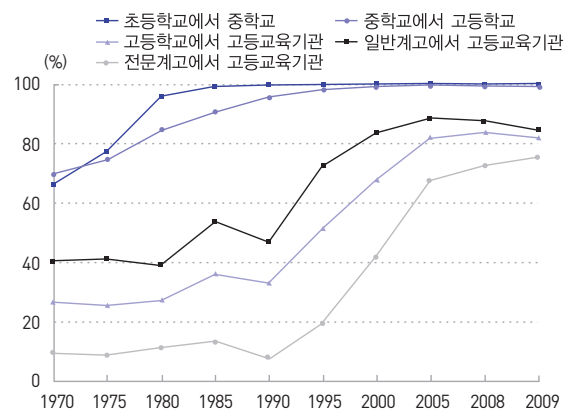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취학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육기회 지표는 진학률이다. 진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Ⅲ-2]는 1970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급 학교로의 진학률 추이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진학률의 추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순서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은 완전진학률에 도달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첫째는 국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그 같은 진학열기를 수용할 역량을 빠르게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2] 각급 학교의 진학률: 1970-200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진학률은 또한 취학률과 더불어 해방 이후 국민들이 경험한 학교교육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일찍이 완전취학률에 도달하였음에도 1970년까지 중학교 취학률은 36.6%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 진학률은 66.1%였다. 1960년대는 중학교 입시가 과열된 시기였으며, 이 당시에 드러난 교육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병리적인 교육문제들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시기였다. 즉, 이 시기부터 학교의 서열화, 상급학교 입시의 과열, 재수생, 사교육 등의 심각한 교육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UN에 등록된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머무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1960년대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시를 위하여 재수를 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과열된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정부는 1969년에 이르러 역사적인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여 중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동시에 중학교 입학정원을 늘려 전국의 어린이들을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구제하였다. [그림 Ⅲ-2]는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시작된 1969년 이후로 중학교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

중학교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3년 뒤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의 서열화, 입시경쟁, 재수생, 사교육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1974년 2월에 서울과 부산지역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전국의 광역시로 확대하였다. 평준화 정책은 모든 학생이 거주지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고교의 서열화를 파격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중학생들을 고교 입시경쟁에서 구제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3년 12월에 입안하여 1974년 2월에 법령으로 시행된 초고속정책이었으니, 이 시기의 고교 입시 문제가 어느 정도로 급박한 사회문제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Ⅲ-2]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1974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모든 중학교 졸업자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현상이 대학교육기관의 진학률에서도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고등학교 인구는 곧 대학입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학생선발과 운영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인구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늘어난 고등학교 졸업생수와 제한된 대학입학정원은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을 초래하였고, 사교육, 재수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년에 대학졸업정원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로 늘리고, 졸업은 원래의 정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이 대학의 정원만 두 배로 늘리는 결과로 귀착되어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 재학생수가 약 2배로 늘어나고, 진학률도 53.8%에 도달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은 대학진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하였다. 1997년에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설립증가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률도 90.2%를 기록하였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 간 통폐합과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해방 이후의 진학률 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문제의 해법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서 상급학교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81년의 대학입학정원제,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은 모두 대학입학정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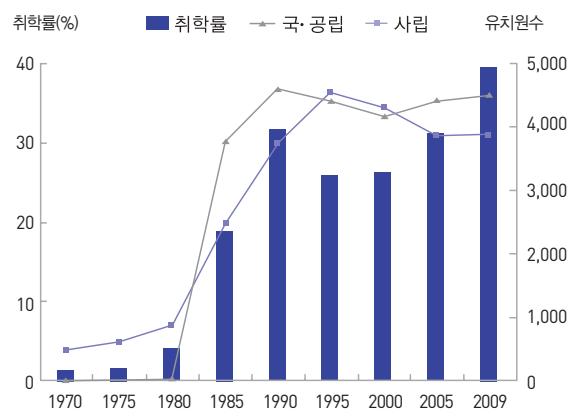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상급학교로 완전진학이 가능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중학교 입시에서 노정된 학교의 서열화, 재수생,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지금은 ‘좋은 대학가기’의 경쟁이 치열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현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열이 단순히 자녀를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며 높은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교 졸업 이후에 높은 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좋은 대학에의 진학으로만 고착된 교육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기회

2009년 현재 유아의 취학률은 39.5%로서 199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증가속도도 느리다. 유아교육의 효과는 개인의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으로서 어느 학교급보다도 그 교육효과는 크나 유아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은 낮다. 이는 유아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부족,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결여, 국민의 경제

적 생활여건과 다른 보육시설의 과잉 등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의 [그림 III-3]은 1970년 이후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III-3] 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유치원수: 1970-200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위의 그림은 유치원 취학률이 1980년까지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1985년에 이르러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1995년부터 주춤하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1982년 3월에 정부가 수립한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과 1982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과제로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기된 학령기 이전의 자녀보육 문제에 대처하고, 유아교육의 소외지역이었던 농어촌 지역에도 유아교육의 대상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공립병설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 주춤한 이

유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시·도청의 인가로 설립되는 어린이집,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증가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과 이 시기에 진행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년)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그림 Ⅲ-3]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의 수는 1990년에 1,919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19,276개소로 10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보육시설은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운영되어,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의 유아들은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겸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 유아 교육기관의 취학률이 주춤한 현상은 이후에 시행된 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결과이다. 보육시설에 등록된 유아들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유아들의 학령기 이전 실질 취학률은 [그림 Ⅲ-3]에서 보여주고 있는 취학률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설립의 다양성

[그림 Ⅲ-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완전 수준이므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교육기회는 큰 의미가 없고, 대학으로의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74년에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파괴하여 중학교 학생들을 고교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킨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교 간 서열화의 파괴는 고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어 교육기회가 획일화 되는 현상도 가져왔다. 이에 따른 고교 유형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획일화된 고교체제는 탁월한 인재들의 학습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종교계열의 고교에서 종교교육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조치인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교 선택권에 위배되고 수월성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197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유지되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이 정책에 대한 논쟁이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원하며,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반대한다. 고교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대학입학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체제는 수월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논리에 의하여 1974년에 예체능 분야의 영재육성을 위하여 예술고와 체육고가 설립되었고, 1985년에 학생선발권을 갖는 과학고가 설립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일 반계 고교 중에서도 2005년에 6개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었으나 2010년에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였다. 현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58개 공립고교와 50개 사립고교가 자율형 고교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현재 47개교가 운영 중이다. 따라서 고교는 특목고와 자율형 고교의 설립으로 다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

재 특수목적고의 전체 현황을 세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특수목적고는 고교 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한 것이므로, 학생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의 책정에서 일반고와 달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그리고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대학입시 명문교로 인식되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역으로,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을 강조한 시기에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여 특목고에서 자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목고의 내신성적을 대입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현재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표 Ⅲ-1> 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9

	학교수	(%)	학생수	(%)
과학고등학교 ¹⁾	22	[22.4]	4,446	[8.5]
외국어고등학교 ²⁾	30	[30.6]	25,778	[49.2]
예술고등학교	27	[27.6]	17,308	[33.0]
체육고등학교	15	[15.3]	3,548	[6.8]
국제고등학교	4	[4.1]	1,359	[2.6]
합계	98	[100.0]	52,439	[100.0]

주: 1) 일반계고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는 과학고등학교에 포함함.

2) 외국어고는 2010년에 3개 고교가 추가 설립되어 현재는 33개교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학교 선택권과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또 다시 대학입학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은 지난 30여 년간 추구한 고교 입시경쟁 및 사교육 해소 노력들과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교육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이다. 다음의 <표 Ⅲ-2>는 1980년대 이후의 특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Ⅲ-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985-2009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1985	학교수	4	-	-	947
	학생수	531	-	-	1,256,058
1990	학교수	6	-	-	1,071
	학생수	744	-	-	1,459,154
1995	학교수	15	14	-	1,009
	학생수	3,620	15,309	-	1,211,139
2000	학교수	16	18	-	1,125
	학생수	3,094	19,571	-	1,282,661
2005	학교수	17	25	1	1,254
	학생수	2,914	19,164	462	1,200,023
2009 ¹⁾	학교수	22	30	4	1,534
	학생수	4,446	25,778	1,359	1,484,966

주: 1) 과학영재고를 포함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Ⅲ-2>에 의하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특수목적고의 설립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9년 현재 특수목적고의 수는 56개교이다.

특목고 학생수는 1985년에 전체 고교생의 0.04%에 불과한 531명의 과학고 학생들로서 극소수였으나, 현재 특목고 학생수는 31,583명으로 전문계 고교생을 제외한 전체 고교생수의 2.1%에 이른다. 최근에 이르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2009년에 1개 과학고, 2010년에 3개 외국어고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미 1974년 이전의 비평준화 시대에 존재하였던

소위 일류고교의 숫자보다 현재는 더 많은 특목고 학교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교설립 증가와 학생수의 증가는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입시경쟁으로 연계되며, 실제로 고등 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쟁에 일찍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입학에서 유리하다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원

학교교육의 자원은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책무는 단순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양호한 학교교육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인 교원의 규모와 우수성, 교육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그리고 재정지원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 공간 및 시설은 학교설립규정에 의거하여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서술을 생략하고,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조건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호한 수준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적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양적으로 나타내며,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반영하는 학교역량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면, 비록 학급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교육과정과 학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학교의 교육역량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III-3>은 이 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표 III-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8

	한국	OECD 평균
유아교육	17.9 (26개국 중 22위)	14.4
초등교육	24.1 (27개국 중 25위)	16.4
중등교육	18.2 (29개국 중 27위)	13.7
고등교육	-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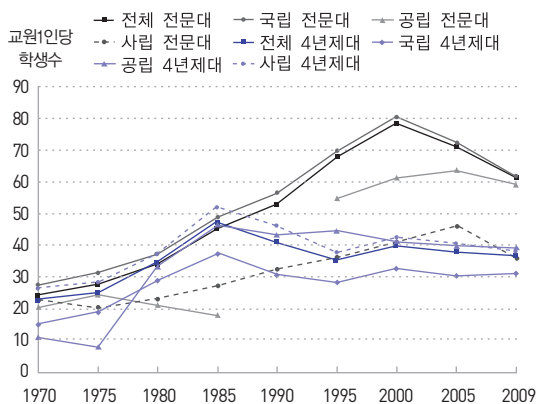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ag2010>), 2010.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그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 순위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평가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취약한 학교급은 중학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교원 수급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이후

로 정체되어, 학교교육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난 30여 년간 개선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의 [그림 Ⅲ-4]는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어느 정도로 취약한 여건에 처하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2009년 현재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61.1명이며, 4년제 대학은 36.4명이다.

[그림 Ⅲ-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명보다 전문대학은 4배 가까이 더 많고 일반대학은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대학입학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경우 1985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7명으로 가장 열악하였는데, 이 시기는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대학의 교원은 정제된 상태에서 입학생의 수만 2배로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사회 문제의 해결을 우선한 결과로 이해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00년대에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의 폭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기관에서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것을 반영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립대학보다 여건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이미 고교 졸업생수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대학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교원에 의존하여 운영한다. 대학교육은 교원의 부족과 과다한 학생수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적구성도 모두가 대학교육을 이수할 만큼 양호한 학력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확보율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교육기관 입학정원의 감소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정지원

교육비 지출통계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교육책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전체 국가 예산대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규모,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국제비교 지표들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조건으로서 가구당 교육비 부담수준도 중요한 지표

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비로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교육비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학교의 기성회비, 사립대학의 교비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교육비의 출처와 관계없이 학교가 학생 1명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여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970년에 비하여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의 1만 2천 원에 비하여 2007년에는 410만 1천 원으로 무려 342배 상승하였으며, 중학교는 178배, 고등학교는 185배, 대학교는 52배 상승하였다. 이 같은 공교육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 증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달러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의 추세를 요약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¹⁾: 1998-2006

(US \$ PPP)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1998	2,838	3,544	6,356	-
1999	2,838	3,419	5,356	-
2000	3,155	4,069	6,118	-
2001	3,714	5,159	6,618	5,035
2002	3,553	5,882	6,047	5,053
2003	4,098	6,410	7,089	5,733
2004	4,490	6,761	7,068	5,994
2005	4,691	6,645	7,606	6,212
2006	4,935	7,261	8,564	6,811

주: 1)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미국 달러 금액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이 표로부터 우리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모든 학교급에 걸쳐서 공교육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1년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를 동일한 달러 구매력 지수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표 III-5>에 제시하였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를 국제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국가 순위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아교육은 공교육비 자료를 제공한 25개 국가 중에 24위이며, 초등교육은 28개국 중에 22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에 21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에서 21위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 담당하지만 국가발전의 균형에서 교육분야는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 III-5>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¹⁾: 2007

(US \$ PPP)

	한국	OECD 평균
유아교육 (3세 이상)	3,909 (26개국 중 24위)	5,447
초등교육	5,437 (28개국 중 20위)	6,741
중등교육	7,860 (29개국 중 19위)	8,267
고등교육	8,920 (28개국 중 21위)	12,907
초·중·고등교육	7,325 (27개국 중 19위)	8,216

주: 1)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미국 달러 금액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ag2010>), 2010.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능력의 개발을 추구하므로, 학교교육의 성과는 이 같은 개인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교육은 문화의 전승과 발달,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심동적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역량 개발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

교육의 효과에서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은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도이다.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측정방법이 발달하여 있으며 표준화된 척도로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을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업성취도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수준이 단순히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서열화 작업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을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한 국가의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은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예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은 중등학교 교과에서 핵심적인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국제비교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오른편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TIMSS의 평가결과이다. TIMSS는 4년을 주기로 참여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비교하는데, 최종분석에 참여한 국가의 수는 매 주기마다 일정치

〈표 III-6〉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995-2007

	TIMSS ¹⁾						PISA ²⁾								
	수학			과학			읽기			수학			과학		
	한국 점수	국제 평균	한국 순위	한국 점수	국제 평균	국제 평균	한국 점수	국제 평균	한국 순위	한국 점수	국제 평균	한국 순위	한국 점수	국제 평균	한국 순위
1995	581	519	3	546	518	4	-	-	-	-	-	-	-	-	-
1999	587	521	2	549	521	5	-	-	-	-	-	-	-	-	-
2000	-	-	-	-	-	-	525	492	6	547	492	2	552	491	1
2003	589	485	2	558	491	3	534	492	2	542	496	3	538	497	4
2006	-	-	-	-	-	-	556	478	1	547	485	1-4	522	488	7-13
2007	597	-	2	553	-	4	-	-	-	-	-	-	-	-	-

주: 1)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약자임.

2)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9>), 2009.

않다. 예를 들어, 1999년에는 36개국이었으며, 2003년에는 46개국이었다. 또한 TIMSS는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공통문항과 각 국가의 고유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국제비교 연구에 보고된 성취도는 공통문항들의 평가결과이다.

〈표 Ⅲ-6〉의 오른쪽에 있는 평가결과들은 OECD 회원국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주로 고교 1학년생)으로 시행되는 PISA 연구의 결과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지식 또는 소양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다. PISA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30개 OECD 회원국들과 이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비회원국들로 구성된다.

〈표 Ⅲ-6〉은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6년도 PISA의 과학영역 평가결과를 제외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는 세계 1위에서 5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학업성취도 점수도 국제평균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학업성취도의 평균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수의 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PISA의 다른 통계는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 교원의 수급, 재정지원으로서 공교육비의 지출규모 등 정부의 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에도 학업성취도 결과는 매우 높은 모순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모순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지원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상진(연세대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요 약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3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의 경우 대체로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학교 만족도가 높았지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 한국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06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참가국 57개국 가운데 55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활동시간 중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감안할 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역시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단순히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생활의 직접적 주체인 학생의 만족도는 수업, 학교교육의 효과,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각각 반복 측정한 만족도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에 따라 만족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학부모가 갖고 있는 학교교육 만족도의 상대적 위치를 점검해 보았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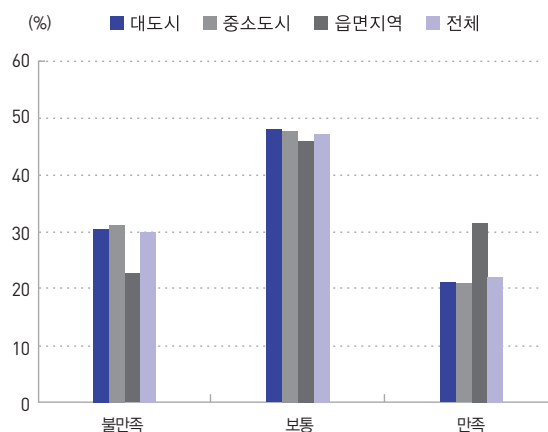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학교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만족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수업만족도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결과가 [그림 Ⅲ-5]와 [그림 Ⅲ-6]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중학생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사의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2%로 좀 더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같은 수업만족도는 도농 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보다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1.2%와

21.1%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두 지역에서 각각 30.5%와 31.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읍면지역에서는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31.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2.7%)보다 더 높게 나타나 도시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은 결과는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에 비해 질 낮은 수업이 제공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교수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교수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충족 간의 괴리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Ⅲ-5]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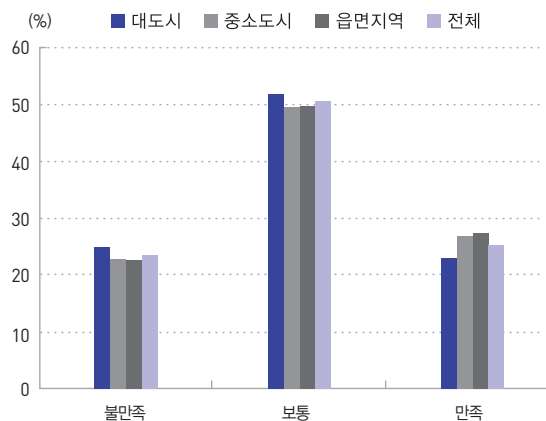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6.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교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두드러진 차이는 아니지만 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은 조금 증가하는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대도시지역에서는 여전히 만족한다는 응답(23.1%)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24.8%)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대도시지역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여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도시지역에서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미미하나마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III-6]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 200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중단연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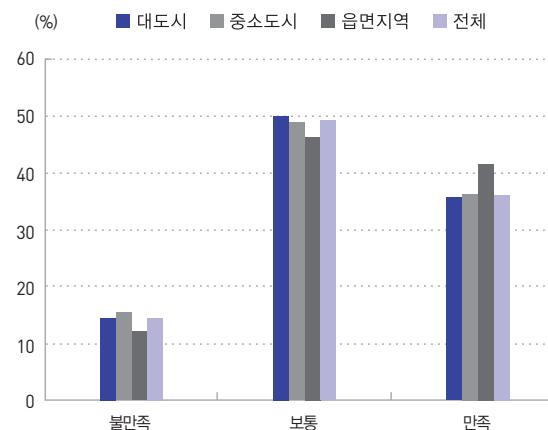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이 세분화되고 선택과목의 수도 증가하여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이 같은 교육과정의 원활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의 비율이 높고 과목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읍면지역의 수업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학교는 각 교과목의 기본이 되는 능력을 잘 길러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례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III-7]에 제시된 중학생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의 효과에 만족한다는 응답(36.3%)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1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업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도농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5.5%와 36.0%인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41.6%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중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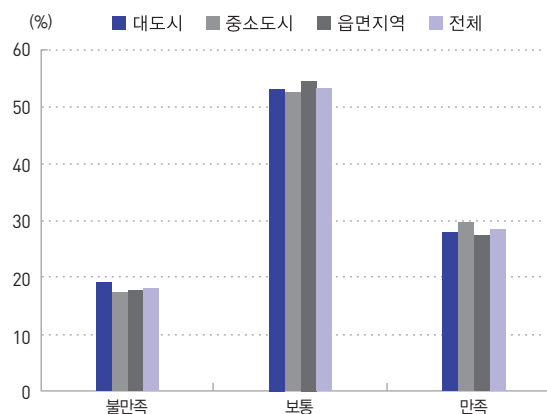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중단연구」, 2006.

이처럼 읍면지역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농

간에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만큼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형성 및 신장에 학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Ⅲ-8]에는 동일한 지표에 대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응답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시절에 36.3%이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28.6%로 약 7.7% 포인트 감소하였는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에 41.6%에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27.7%로 13.9% 포인트 가량 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다.

[그림 Ⅲ-8] 고등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9.

중학교 단계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

생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그러한 양상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읍면지역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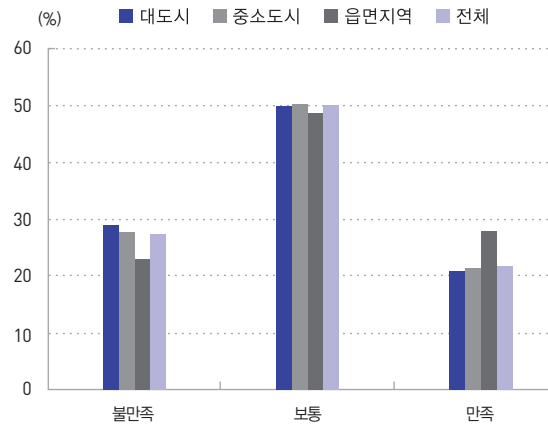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광범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여기에서는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살펴보았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선생님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신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불만족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27.9%)가 긍정적인 평가(21.9%)보다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사-학생 간 관계가 그다지 긴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도농 간 차이가 목도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27.9%)가 부정적인 평가(23.2%)보다 더 많았다(그림 Ⅲ-9). 이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학생들이 교사를 좀 더 친밀한 대상으로 느끼고 신뢰를 부여하는 이유는 읍면지역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긴밀한

[그림 III-9]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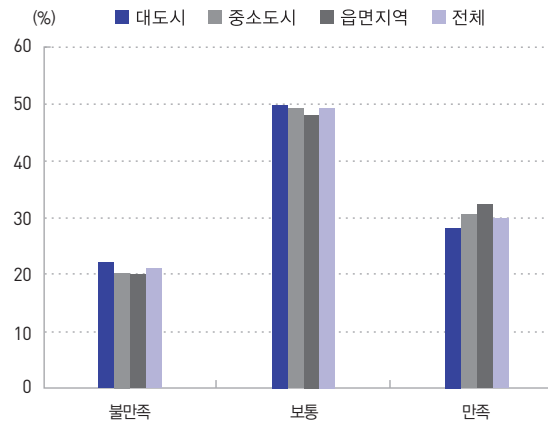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10]에는 동일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평가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중학교에서 21.9%, 고등학교에서 29.7%로 중학교가 약 8% 포인트 낮았다. 반대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중학교에서 27.9%, 고등학교에서 21.1%로 중학교가 약 7% 포인트 높았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교육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고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전반적으로 교사-학생 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학생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사에 대한 의존도나 기대수준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사춘기의 급격한 심리적·사회적 발달을

겪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있어 교사에게 거는 기대나 의존도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실망감도 그만큼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대상으로서 교사에게 거는 기대수준이 비교적 낮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림 III-10]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9.

이처럼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30% 안팎에 머물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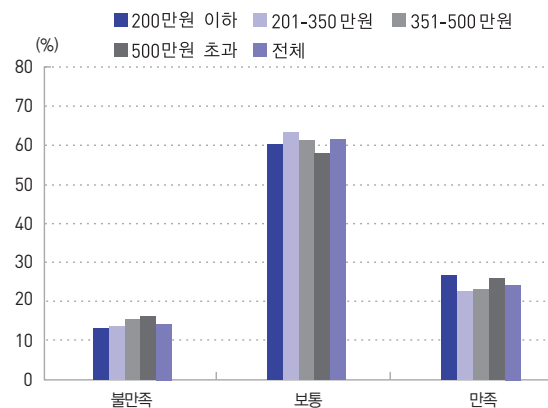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녀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전체적으로 60%를 상회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보통

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만족한다는 응답(24.2%)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14.5%)보다 약 1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1/4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자녀 학교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6.7%,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3.0%로 나타나, 미미하지만 여타 집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은 조금 높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Ⅲ-11).

[그림 Ⅲ-11] 소득수준별 중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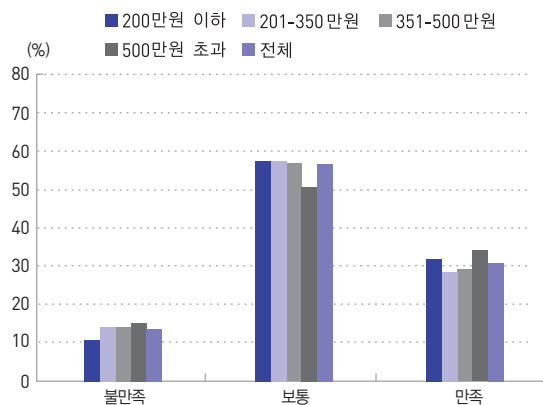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6.

이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학부모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거는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부여하는 기대가 높을 가능성이 큰데, 학교교육이 이 같은 기대수준과 교육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조사한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가 [그림 Ⅲ-1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자녀가 중학생 시절에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2] 소득수준별 고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9.

특히 월소득 500만 원 초과 고소득층에서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상승폭도 가장 크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여타 집단에서는 28.7-31.9% 수준에서 나타나는 반면, 월소득 500만 원 초과 고소득층에서는 그 비율이 34.3%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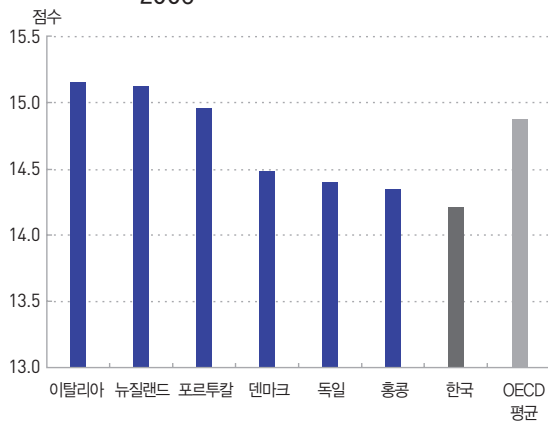
이처럼 자녀가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고소득층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상승한 이유로는 중학교에 비해 학교선택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즉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 만족도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한국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PISA 2006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Ⅲ-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출처: OECD, PISA, 2006.

이 그림에서 만족도 지표는 PISA 2006의 학부모 설문문항 가운데, 학교의 학업성취 수준,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학교 풍토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들의 능력과 열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등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은 20점 만점에 14.9이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와 뉴질랜드가 각각 15.2와 1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학부모 학교만족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르투갈이 15.0으로 그 뒤를 이었고,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14.5, 14.4로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아시아권 국가들의 학부모 학교만족도는 홍콩 14.3, 한국 14.2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한국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 중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학교교육이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수준과 뜨거운 교육열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여타 국가에 비해 사교육이 매우 발달한 한국의 교육환경 역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요 약

-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교육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누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 도농 간에 교육격차가 엄존하여, 읍면지역이 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에도 저학력·저소득층과 고학력·고소득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
- 한국사회의 계층 간 교육격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큰 편이며, 특히 부모의 고등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격차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면서 교육이 '상승이동의 사다리'에서 '계층고착화의 핵심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경근, 2005).

물론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수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정배경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한 격차는 합리화되기 어려운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교육격차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과정, 그리고

교육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단계별 접근을 통해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횡단적 관찰과 더불어, 종단적 관점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격차 실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조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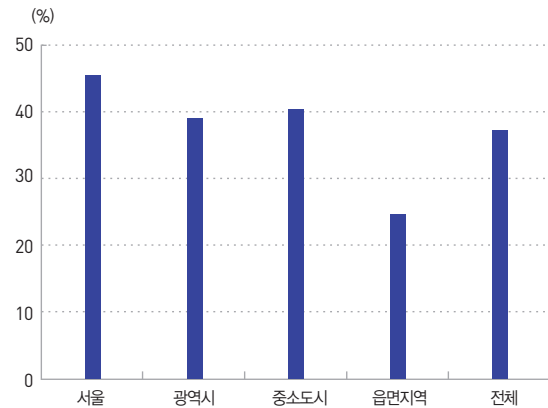
교육기회의 차이는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III-14]에는 우리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교육기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교육기회 충족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서울에서 45.5%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40.4%, 광역시 39.0%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읍면지역은 24.6%로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취학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학력자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기회의 격차는 학교교육보다 취학전 보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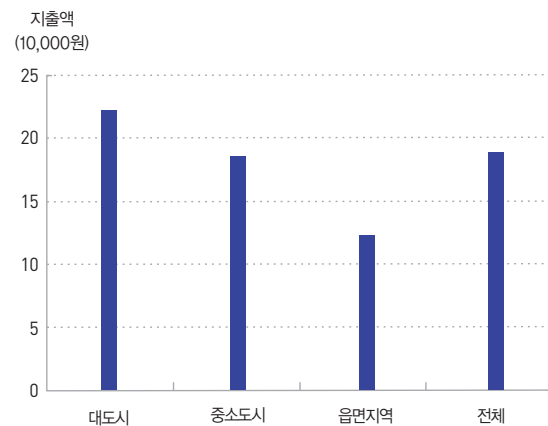
[그림 III-14] 지역별 교육기회 충족도¹⁾: 2008



주: 1)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육과 사교육에서 더 분명하게 표출된다. [그림 III-15]에 제시된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월평균 지출 비용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취학전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가 평균적으로 약 22만 2천 원 지출되었고, 중소도시에서는 그보다 낮은 18만 6천 원이 지출되었다. 이에 비해 읍면지역은 12만 2천 원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지출이 상당히 적었다.

[그림 III-15] 지역별 취학전 아동 보육·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는 고학력·고소득층이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교육서비스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이들 지역에서 참여율이 더 높고 단가도 더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술한 결과는 취학전 단계에서부터 도농 간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기회의 격차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각각 [그림 Ⅲ-16]과 [그림 Ⅲ-1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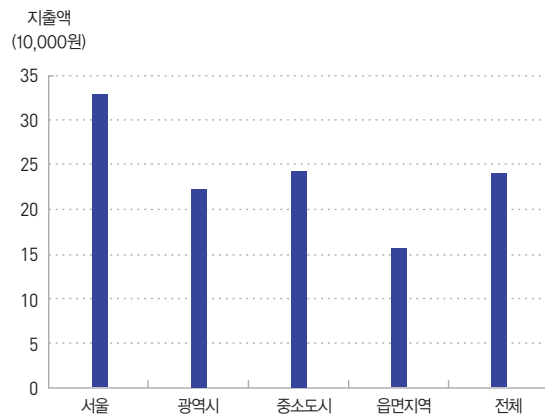
먼저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 2천 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된 가운데 서울이 33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여주었고, 중소도시 24만 5천 원, 광역시 22만 5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읍면지역은 15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사교육이 덜 발달한 읍면지역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0)이 발표한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9.6%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6.0%, 광역시 74.6%, 읍면지역 67.3%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기회의 격차에는 지역보다 소득계층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7]에 제시된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간에 정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0만 6천 원으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월소득 5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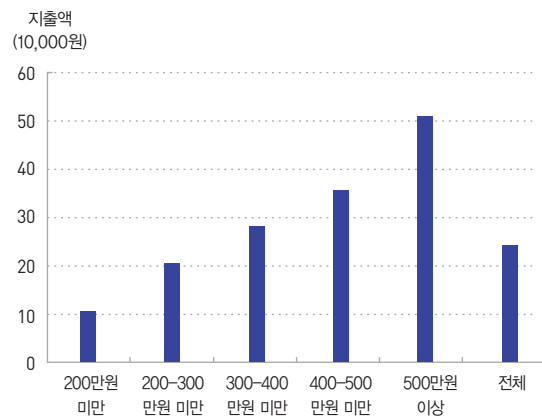
원 이상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평균 50만 7천 원을 지출하여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6]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0.

[그림 Ⅲ-17]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출처: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0.

이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비교적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고 지불능력의 우위를 토대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방증해 준다.

학교생활 및 가정 내 교육적 지원의 격차

교육기회에서 비롯된 격차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지원의 차이를 통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지원의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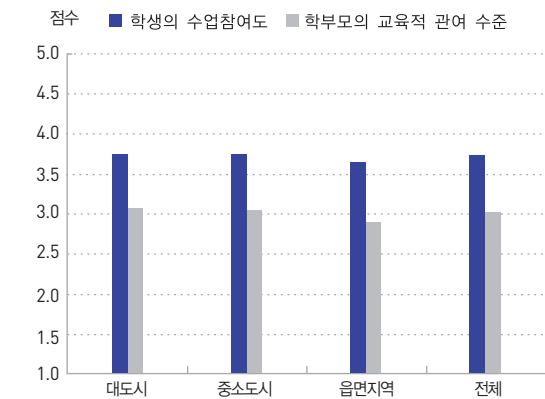
[그림 Ⅲ-18]와 [그림 Ⅲ-19]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수업시간에 산만한 행위를 보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5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안에 공부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성적을 관리하고, 과외나 학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 변수 역시 5점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Ⅲ-18]에 제시된 지역 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도 지표는 모두 도농 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참여도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모두 5점 만점에 3.74점인 반면, 읍면지역은 3.64점으로 다소 낮은 수업참여도를 보였다.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에서도 유사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5점 만점에 각각 3.08점 및 3.05점의 관여 수준이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은 2.91점에 그쳤다. 이처럼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주로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더불어 가정 내 교육적 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8] 지역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¹⁾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²⁾: 2009



주: 1) 학생이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2)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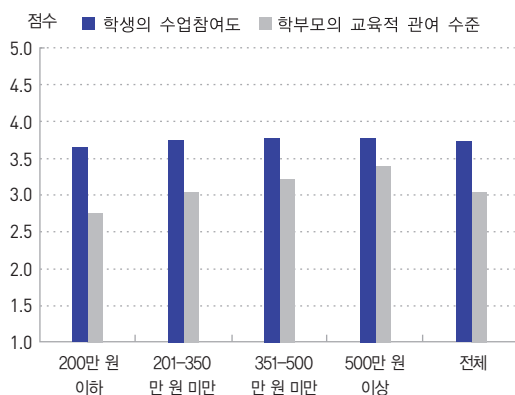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중단연구」, 2009.

[그림 Ⅲ-19]에는 동일한 지표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학생의 수업참여도의 경우 월소득이 201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모두 3.75점을 넘는 참여 수준을 보인 반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3.65점으로 상대적으로 수업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적 지원의 격차는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수준은 2.76점에 그친 반면, 201~350만 원 집

단은 3.03점, 351~500만 원 집단은 3.22점,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집단은 3.41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부모가 자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9] 소득수준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¹⁾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²⁾: 2009



주: 1) 학생이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2)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응답 평균값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9.

교육결과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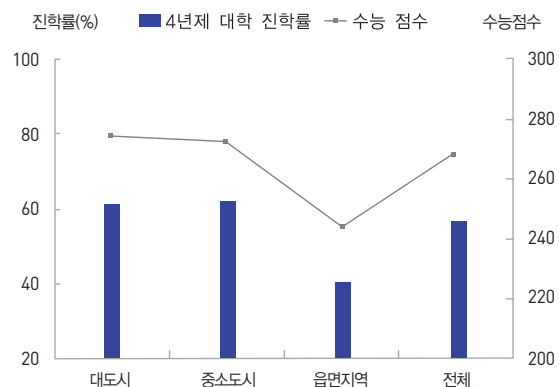
교육기회에서 시작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심화된 교육격차는 교육결과의 국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결과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얻어지는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준거지표로 삼아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관찰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05학년도 수능성적은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의 표준점수의 합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표준점수는 평균 100, 표준편

차 20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Ⅲ-20]에는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도농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수능점수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평균 274.4점 및 272.7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읍면지역은 244.0점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능성적에서의 지역 간 격차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도시지역은 60%를 웃도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인 반면, 읍면지역의 진학률은 40.9%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Ⅲ-20]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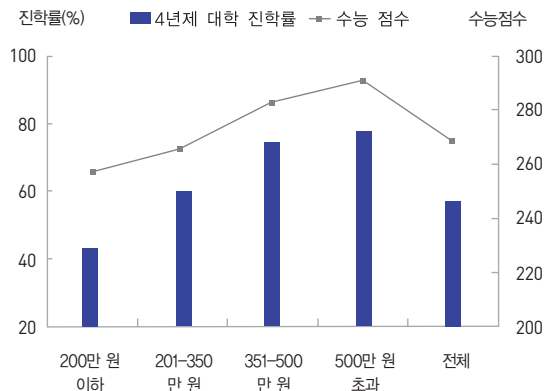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2004~2008.

[그림 Ⅲ-21]은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가정의 소득수준은 교육결과의 격차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능성적의 경우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평균 257.6점을 획득한 반면, 201~350만 원 집단은 266.2점, 351~500만 원 집단은 283.2점, 그리고 500만 원 초

과 고소득층 집단은 291.1점을 얻어, 수능성적이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III-21]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2004-2008.

이 같은 계층 간 교육격차는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서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여타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성과를 보인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1-350만 원 집단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0%를 웃돌고, 351-500만 원 및 500만 원 초과 집단은 각각 74.5%, 77.8%로 7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은 진학률이 43.1%에 그치고 있다. 상술한 결과는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누적된 계층 간 교육격차가 교육결과 단계에서 한결 심화된 양상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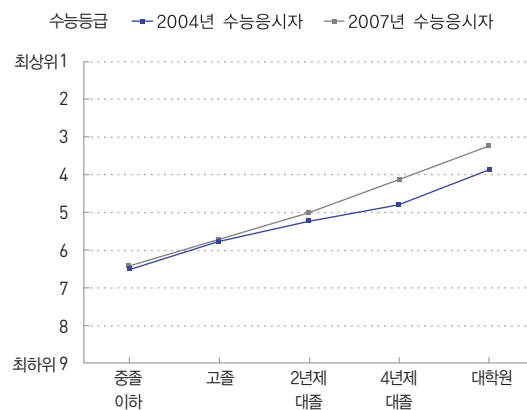
계층 간 교육격차의 추이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앞서 논의한 횡단적 비교와 더불어, 종단적 관점에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 등 계층적 요인에 따라 최근에 교육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그 추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2004년과 2007년의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두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해 수능시험 등급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수능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하는 1등급(최상위권)부터 하위 4%에 해당하는 9등급(최하위권)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었다.

먼저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추이가 정리된 [그림 III-22]를 살펴보면,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격차가 좀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코호트 간 차이는 부모의 고등교육 이수 여부를 경계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 및 고졸인 경우에는 두 코호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2년제 대졸 및 4년제 대졸의 경우에는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학력에 따른 수능등급의 차이가 한층 커진다.

[그림 III-22] 부모학력별 자녀의 수능등급: 2004,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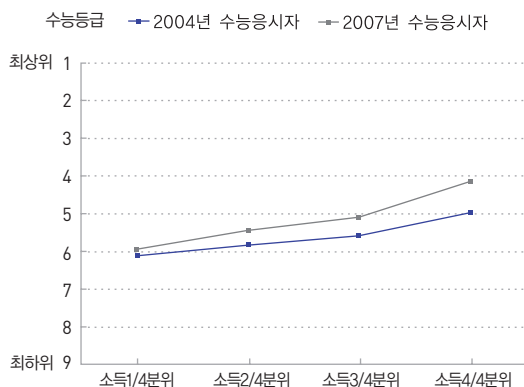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각년도.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의 추이에 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즉 전반적으로 2004년 코호트에 비해 2007년 코호트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수능등급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3). 특히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4/4분위 집단과 여타 집단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분명해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2004년 코호트에서는 소득 3/4분위 학생에 비해 소득 4/4분위 학생들이 0.63등급 더 좋은 성적을 획득한 반면, 2007년 코호트의 경우에는 전자보다 후자가 0.94등급 더 좋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23] 소득수준별 수능등급: 2004,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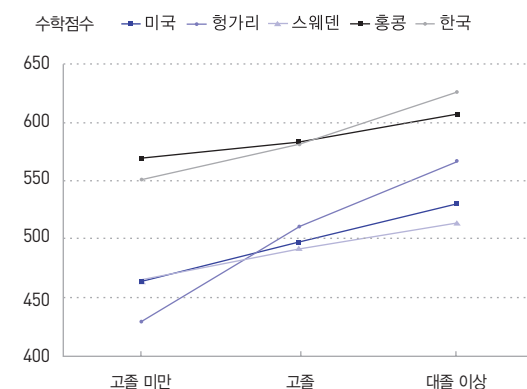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각 년도.

교육격차의 국제비교

한국사회의 교육격차가 어떤 수준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파악하려면, 여타 국가들과 실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7의 수학성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학력별 학업성취 격차를 국제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Ⅲ-24]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Ⅲ-2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2007



출처: IEA, TIMSS, 2007.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가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헝가리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고졸 미만인 집단 간에 무려 약 137.3점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보다는 양호하지만 한국도 미국, 스웨덴, 홍콩에 비해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성취도 차이가 훨씬 더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고졸 미만인 집단 간 학업성취 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66.7점, 스웨덴 49.1점, 홍콩은 38.6점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74.2점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과 대졸 이상인 집단 간에 격차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경계 지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그간 교육을 통해 비교적 활발한 사회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현상들을 두루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반 단계에 걸쳐 소외계층에게 각별한 관

심과 배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유념하여 소외계층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김경근(고려대학교)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요 약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 시간이 더 많아지며, 동시에 하루의 모든 시간대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비율도 높아진다.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일 학습시간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일에는 모든 시간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토요일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우리나라 학교들이 필수 정규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업시수는 만 14세 이하의 중학교까지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나, 고등학교에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높은 편이다.

개인은 태어나서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을 받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한다. 학습시간의 양은 소위 얼마만큼 공부하는가를 나타내는 의미의 지표이나, 개인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고려하면, 과도한 공부는 오히려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역으로 학생들이 적게 공부한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 및 진로개발과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어렵게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은 본연의 의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외에 자아개념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학습시간이 많다는 것은 학습 이외의 경험이 제한되는 현상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실태를 정확히 서술하는 작업은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실태를 세 가지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하나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학교와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의 지난 10년간 추세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다음에 언제 공부하는가를 서술하여 학생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두 가지 내용을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학습시간의 양태를 비교한다. 끝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습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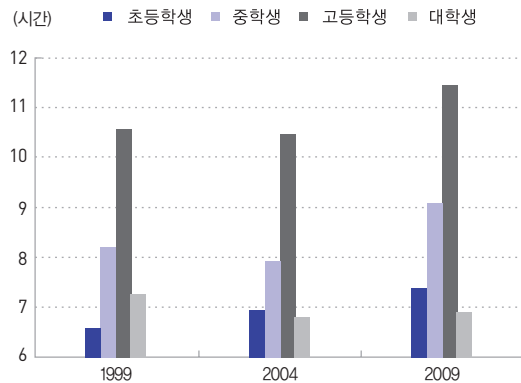
학교급별 학습시간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학교에서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다양한 학교유형이 존재하며, 학교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의 양이나 내용도 학교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시간의 양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Ⅲ-25]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체 학습시간의 요일평균을 학교급별로 산출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변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제시된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과 휴식시간에 학습한 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사교육에서 수강한 시간 등과 개인이 스스로 학습한 시간을 망라하여 합산한 시간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량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주일

을 평균하여 산출한 요일평균 학습시간이다.

[그림 Ⅲ-25] 학교급별 요일평균 총 학습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그림 Ⅲ-25]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요일평균 학습시간은 학교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그 양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이 다른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중학생들의 학습시간도 고등학생들보다는 크게 적으나 초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보다 뚜렷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항은 대학생들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7시간 정도로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2009년의 경우는 초등학생들보다도 적게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요일평균 학습시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동일한 모양으로 200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2004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미약하나마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27분을 학습하여 1주일로 계산하면, 80시간 9분으로

성인의 정규 1주일 근로기준인 40시간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수면과 식사 등의 필수생활시간을 제외하면, 과도한 학습활동을 하고 있고, 여가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학교에서의 정규 학습시간과 학교외 시간이 포함된 것이며, 학생들의 생활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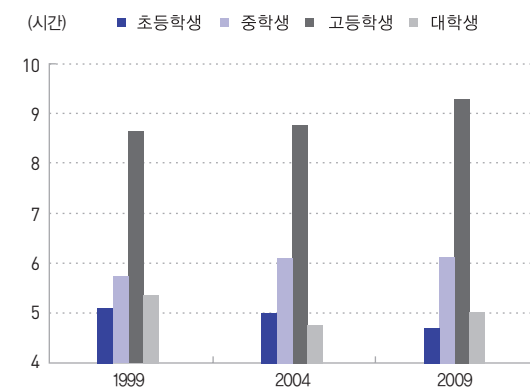
평일 학습시간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교에 등교하며, 초등학생들은 둘째와 넷째 토요일은 등교하지 않으나, 중·고등학생들은 매 토요일에 평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규수업시간을 갖는다. 다음의 [그림 Ⅲ-26]은 학교급별로 지난 10년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학습시간의 양을 요일평균으로 환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Ⅲ-26]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평일 정규학교 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한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한 시간,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학습한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그림 Ⅲ-26]은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이 9시간 내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들로 6시간, 그리고 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5시간 내외로 앞서의 전체 평균 학습시간의 학교급별 차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규수업 학습시간의 변화 추이에서는 각 학교급 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고등학생들은 지난 10년간 약 0.6시간(36분) 증가한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0.4시간(24분) 감소한 정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규수업시수와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업시수가 적은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수업시수가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은 3시간 가까이 차이가 드러나, 전체 학습시간에서의 차이와 비슷하다.

[그림 Ⅲ-26]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학습시간: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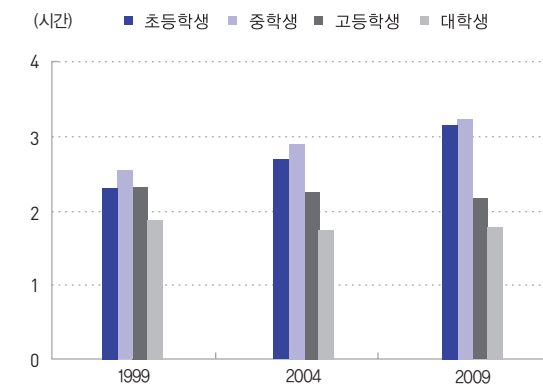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그림 Ⅲ-27]은 학교급별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은 방과 후에 학습한 시간으로 학교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시간 또는 학원에서 수업한 시간, 그리고 스스로 학습한 시간을 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수업 이외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지 알려준다.

[그림 Ⅲ-27]이 보여주고 있는 학교급별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은 정규수업 학습시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갖는 학습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10년 동안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비슷해진 반면에,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초·중학생들의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은 고등학생들보다 1시간 이상, 그리고 대학생들보다는 1시간 30분 정도 많아졌다. 즉,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시간이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보다 더 많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더 많이 학습을 하는 선진국들의 추세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27]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이 같은 현상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9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7.4%이며, 중학생들은 74.3%, 고등학생들은 53.8%였다. [그림 Ⅲ-27]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은 대학생들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정규수업과 더불어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시간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정규수업에서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사운영이 비정상적

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정규수업 외의 학습시간마저 적다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너무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부터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인원을 초과하여, 학업능력과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과다해진 동시에,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하는데 실패하고 학습량을 적게 부과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말 학습시간

1주일을 단위로 생활시간의 분포를 고려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의 부담이 적거나 없는 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은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도 있으나, 여가시간을 가질 기회가 많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주말에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향유할 시간은 제한을 받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주말 학습시간은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대학입시와는 상관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토요일은 1시간 27분 내지 1시간 47분이고, 일요일의 경우는 1시간 32분에서 1시간 44분이다. 따라

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주말의 학습시간에 의하여 가족생활과 여가시간이 제한을 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일부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학생들의 경우는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토요일은 2시간 13분 내지 3시간 6분이고, 일요일은 2시간 28분 내지 2시간 58분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주말 학습시간은 평일의 학습시간보다는 적으나, 가족생활과 여가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 부족, 기대와 현실과의 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아 정체감에 대한 위기, 불안, 갈등, 좌절, 소외 등의 부적응 현상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Ⅲ-28]은 고등학생들의 평일과 토요일의 학습시간을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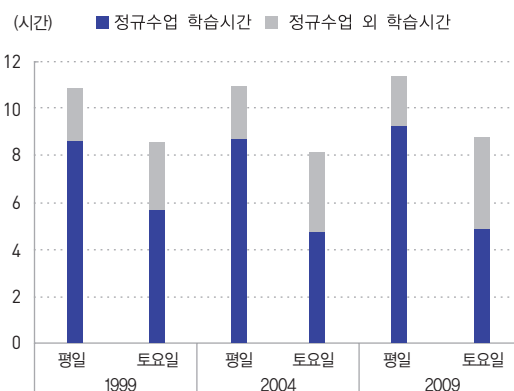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고등학생들의 평균 토요일 학습시간은 정규수업 학습시간이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보다 많다. 이들의 토요일 전체 학습시간은 8시간 13분내지 8시간 48분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주말의 경우도 평일에 준하는 수준에서 학습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학생들의 학습시간 분포는 초·중·고등학생들과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의 정규수업시간이나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서 평일의 학습시간이 중·고등학생들보다 현격하게 적었던 대학생들은 주말의 학습시간에서는 고등학생들 다음으로 많은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학습시간 분포는 거의 동일하며, 평일과 주말의 차

이도 크지 않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전체 학습시간은 각각 7시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갖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시간은 평일보다 각각 1시간 가까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평일에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에서는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반면에, 주말에는 자신의 발전과 진로개발을 위한 학습시간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Ⅲ-28] 고등학생의 평일과 토요일 학습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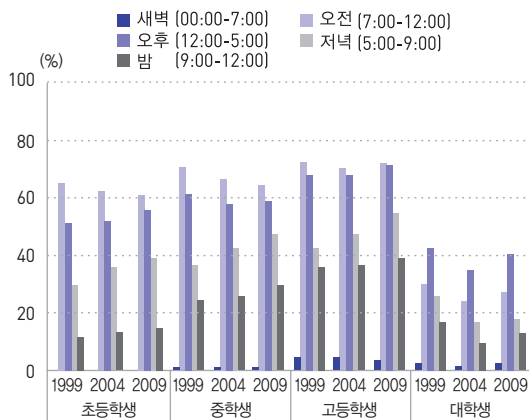
하루 중 학습시간대

학생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공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루 24시간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계청이 조사한 학생들의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누어 각 30분 시간대에서 학습자의 비율을 보고한 것이나, 이 글에서는 30분 단위의 시간을 하루 중의 일정(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시간대에서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자 한다. 다음의 [그림 Ⅲ-29]는 하루 시간대별로 각 급 학교 학생들의 학습참여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Ⅲ-29]에 제시된 하루의 일정 중에서 각 시간대에 학습에 참여한 평균 학생수 비율은 대학교만 제외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에 참여한 학생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벽에서부터 밤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하루의 일정 중에서 새벽 시간대(00:00-07:00)에서만 초등학생들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학습시간을 가지며, 다른 모든 시간대에서 초등학생들보다도 학습시간을 갖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다.

[그림 Ⅲ-29] 평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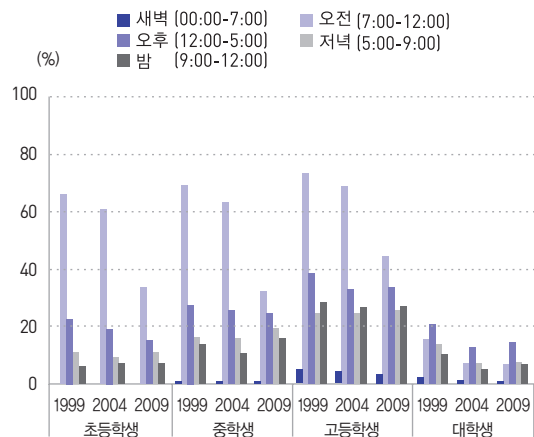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학교급별로 학습시간대별 학습자 비율은 새벽, 오전, 오후까지는 지난 10년간 뚜렷한 패턴이 없이 다소 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녁시간대(05:00-9:00)와 밤시간대(09:00-12:00)의 학습자 비율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도 대학생들의 학습참여자 비율은 예

외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는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방과 후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학생들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학습시간대는 평일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30]은 토요일의 각 시간대에서 학습에 참여한 평균 학생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Ⅲ-30] 토요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이 그림에서 지난 10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오전 시간대와 오후시간대에서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시간대에서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경우,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고등학생들도 65%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는 뚜렷한 패턴이

없이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모든 시간대에서 학습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일요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은 평일이나 토요일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요일의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과는 달리 일요일 오후 이후의 시간대에서 학습자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에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토요일의 동일 시간대와 유사하다. 2009년 현재 오후, 저녁, 밤의 각 시간대에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수 비율은, 초등학생들이 약 10%, 중학생들은 17-19%, 고등학생들은 24-29%였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일요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9.5%에 이른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오전에는 3% 정도이며, 오후 이후로는 7-10% 수준이다. 또한 저녁시간대에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비율은 초등학생들보다 3-5% 포인트 낮고, 다른 모든 시간대에서는 초등학생들과 1% 포인트 내외로 유사하다.

학습시간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령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학습시간은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많다. <표 III-7>은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연구에 자료를 제공한 23개 국

가들의 정규 학습시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습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7>에서 보면, OECD 국가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필수 학습시간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상 요구하는 필수 학습시간은 중학교까지는(만 14세 이하)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국가 순위도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표 III-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국·공립학교 연평균 총 필수 학습시간: 2008

(단위: 국가 순위)

	7-8세	9-11세	12-14세	15세
한국	612 (21/24)	703 (21/24)	867 (17/24)	1,020 (4/21)
핀란드	608 (22/24)	640 (22/24)	777 (21/24)	856 (16/21)
호주	959 (1/24)	959 (2/24)	968 (6/24)	937 (9/21)
영국	893 (6/24)	899 (7/24)	925 (8/24)	950 (8/21)
OECD 평균	759	802	886	902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ag2010>), 2010.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연령대인 15세의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연간 총 필수 학습시간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 부담이 이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보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에서 특이한 사항은 PISA의 교육지표 연구에서 최고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필수 학습시간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매

우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함께 고려하면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수준은 직접 관련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양이 과다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통계는 학교교육과정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시간을 정리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하루 생활 시간에서 학습에 투여하는 전체 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전체 생활시간에서 학습시간은 학교에서의 학습시간과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포함한 전체 학습시간을 고려하면, 이 글의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매우 높다.

〈표 III-8〉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1주일 동안 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수업시간에 국어, 수학, 과학을 학습하는 시간을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교과에서 장시간(2시간 이

상) 정규시간 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수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학생들이 자습을 하거나 숙제를 하는 시간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을 〈표 III-9〉에서 알 수 있다. 국어와 과학 과목에서 장시간(2시간 이상) 숙제 또는 자습을 하는 학생수의 비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수학교과에서만 자습시간이나 숙제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학습시간을 가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시간 숙제를 하거나 자습을 하는 학생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PISA의 다른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나 교과흥미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내재적 학습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미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적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8〉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정규수업 외 학습자 비율: 2006

		(%)	
		한국	OECD평균
국어	2시간 미만	65.9	83.0
	2-4시간	26.2	10.7
	4시간 이상	6.9	4.0
수학	2시간 미만	48.0	80.1
	2-4시간	31.3	12.6
	4시간 이상	19.7	5.1
과학	2시간 미만	78.1	87.0
	2-4시간	18.6	8.1
	4시간 이상	3.3	2.5

출처: OECD, Database-PISA2006(<http://pisa2006.acer.edu.au>).

〈표 III-9〉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자습자 비율: 2006

		(%)	
		한국	OECD평균
국어	2시간 미만	75.0	67.8
	2-4시간	18.1	22.0
	4시간 이상	6.0	8.2
수학	2시간 미만	53.2	63.7
	2-4시간	27.2	24.7
	4시간 이상	18.6	9.6
과학	2시간 미만	79.8	73.5
	2-4시간	14.8	18.0
	4시간 이상	4.4	6.3

출처: OECD, Database-PISA2006(<http://pisa2006.acer.edu.au>).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 박시내 9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 이규용 100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 방하남 106

IV. 노동

Labor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요 약

-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04년 37.0%로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정체 내지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009년 현재 총 57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확대되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측면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며,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기간제와 비기간제로,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및 일일(단기)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 중 파견, 용역, 일일 근로자는 간접고용으로 분류되는데,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비정규 근로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시장 원리로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비정규 근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논의이다. 전자의 관점을 따르자면 비정규직은 시장 논리에 의한 것이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후자는 비정규직이 비자발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근로이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가치지향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많은 논란 끝에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효력이 발휘되는 2009년 7월이 되기 전인 2008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고용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금 조망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총량적 수준에서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직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세부 유형별 비중 추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변화 양상, 특히 고용의 간접성으로 논란이 되는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 일일근로)의 규모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특성 및 기업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어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현황 및 추이를 검토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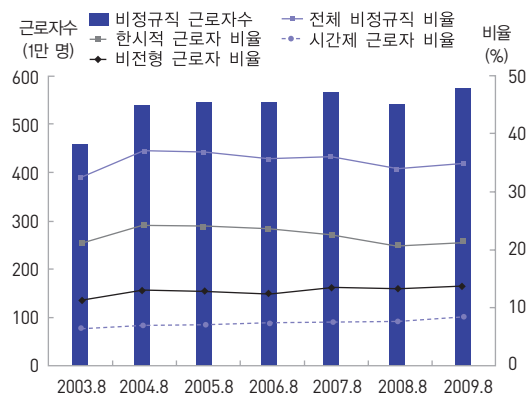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국제비교할 것이다.

비정규직 규모 및 추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04년부터 500만 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5년 548만 명, 2007년 570만 명, 2009년 575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04년 37.0%로 증가한 후 2005년 36.6%, 2009년 34.9%로 2005년 이후 약간 감소하여 왔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21.3%에서 2005년 24.2%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21.3%로 감소하였으나,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 관찰된다. 전자는 6.6%에서 8.7%로, 그리고 후자는 11.9%에서 13.9%로 증가하였다(그림 IV-1).

[그림 IV-1]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¹⁾: 200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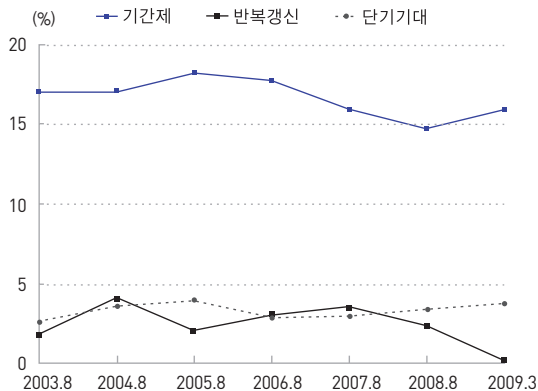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그림 IV-2]와 [그림 IV-3]은 각각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유형별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와 비기간제인 반복갱신과 단기기대로 분류되는데, 기간제는 근로계약을 설정한 근로자이고, 반복갱신은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이며, 단기기대는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전체 비정규직 규모의 변동 추이와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비기간제 중 연속기간 2년 이상인 반복갱신 역시 2007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인데, 이는 2007년 7월에 발효된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단기기대는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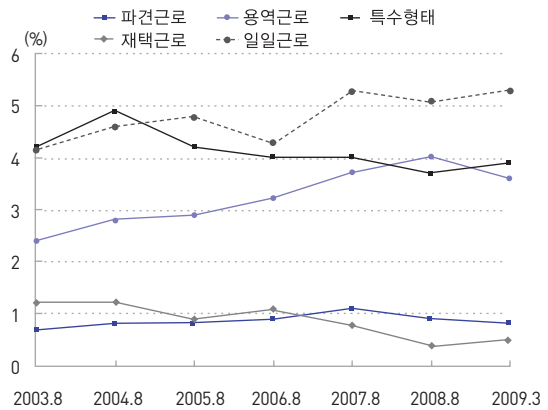
[그림 IV-2] 한시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비전형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일일근로(5.3%)이며, 그 다음은 특수고용(3.9%), 용역근로(3.6%), 파견근로(0.8%), 재택근로(0.4%)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3년부터 비전형 근로

[그림 IV-3] 비전형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자 유형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일근로와 용역근로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특수고용과 재택근로는 감소 추세를 알 수 있다.

위의 관찰로 우리는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와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기간제 및 반복갱신의 감소와 일일근로 및 용역근로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여성과 고령층의 비중이 더 높고, 교육수준은 더 낮은 특성을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다. 한편 연령별로는 시간제 근로자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비전형 근로자는 50대의 비중이 높다.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대졸 이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시간제

와 비전형 근로자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표 IV-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과 산업 분포는 정규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직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특히 비전형 근로자의 기능직 비중은 64.3%로 매우 높은데, 이는 용역근로자의 81.4%와 일일근로자의 86.8%가 기능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건설업과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부문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비전형 근로자는 건설업의 비중이 2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전형 근로의 세부 유형별로 산업 분포는 달리 나타나는데, 용역근로

〈표 IV-1〉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구성비율: 2010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성별					
남자	48.3	26.1	52.5	46.5	62.8
여자	51.7	73.9	47.5	53.5	37.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별					
15-29세	22.6	23.9	9.8	20.4	21.8
30-39세	22.5	16.4	18.9	21.2	32.2
40-49세	21.9	22.8	28.0	24.5	27.9
50-59세	17.4	16.1	25.8	19.4	14.9
60세 이상	15.6	20.9	17.4	14.6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별					
초졸이하	13.9	20.2	17.9	14.6	4.0
중졸	10.3	13.4	16.6	12.4	5.9
고졸	39.0	44.5	45.7	43.1	7.7
대졸이상	36.8	21.9	19.9	30.0	5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 3.

의 94.2%는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근로(재택근로)는 제조업(53.4%)과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34.7%)의 비중이 높으며, 일일근로는 건설업(53.1%)의 비중이 높다(표 IV-2).

기업규모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자.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표 IV-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및 산업별 구성비율: 2010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직업별					
전문·관리직	22.8	17.5	6.2	17.3	27.7
사무직	15.4	7.0	3.2	10.2	25.6
서비스·판매직	15.9	30.5	25.8	23.3	15.1
농림어업직	0.4	0.2	0.6	0.4	0.3
기능직	45.6	44.8	64.3	48.8	3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					
농림어업	1.3	2.0	3.0	2.0	0.5
광공업	0.1	0.0	0.0	0.0	0.2
제조업	12.0	5.6	4.5	9.1	25.3
건설업	6.3	6.0	22.6	12.7	5.8
도소매 음식 숙박업	13.1	31.7	14.4	18.6	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7.7	51.8	42.1	46.8	3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6	2.8	13.4	10.8	1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 3.

〈표 IV-3〉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업규모별 구성비율: 2009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1-4인	19.4	45.4	28.2	25.7	15.6
5-9인	16.9	20.0	21.5	19.5	15.4
10-29인	25.3	20.4	28.4	25.0	21.5
30-99인	19.8	8.7	16.9	17.3	21.2
100인 이상	18.7	5.5	5.1	12.7	2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3.

종사하는 비중(26.3%)이 높고, 비정규직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25.7%)이 높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비중은 45.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I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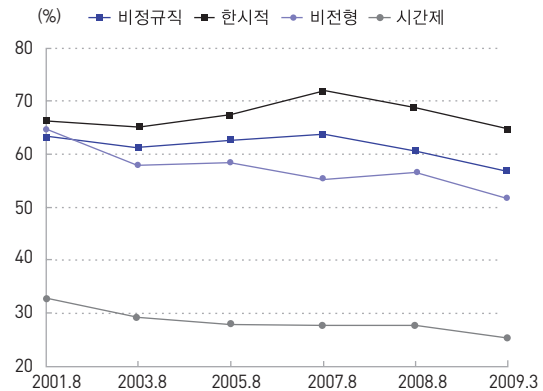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시간제 근로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73.9%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는 근무시간의 탄력성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으며, 학력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낮다. 비정규직의 직업과 산업별 분포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직종 및 업종은 기능직(48.8%), 건설업(12.7%),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46.8%) 등으로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일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2001년 63.5%에서 2005년 62.6%, 2008년 60.9%, 2009년 56.9%로 계속해서 낮아져 왔다(그림 IV-4).

최근으로 올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된 이유는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반면, 비정규직 부문의 신규채용은 저임금 근로자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비정규직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도 작용

[그림 IV-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비율: 2001-2009



주: 1) 2005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산출한 정규직 대비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유형별 임금수준을 정규직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2009년 현재 한시적 근로자는 64.7%, 비전형 근로자는 52.1%, 시간제 근로자는 25.7%로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비전형 근로 중 특수고용(67.2%)과 파견근로(66.1%)의 경우 비정규직 평균을 상회하나 일일근로(40.0%)와 채택근로(25.5%)의 임금수준은 그보다 매우 낮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009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48.1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8시간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7.3시간 적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비전형 근로자는 42.0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22.0시간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표 IV-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정규직과 차이를 보

〈표 IV-4〉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2009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근로시간 (시간)	44.1	22.0	42.0	40.8	48.1
근속기간 (년)	2.2	1.0	1.3	2.0	6.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3.

인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4년으로 2001년 5.2년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으로 2001년 1.7년, 2007년 2.2년으로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 2년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근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임금, 근로 시간 등이 있으나,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역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5일제가 확산되고,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근로복지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부터 보기로 하자.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78.7%이고 비정규직이 37.6%이며, 건강보험은 정규직이 79.5%이고 비정규직이 41.0%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다. 비정규직 유형별 사회보험 적용률은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평균 가입률보다 높은 반면,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준이다(표 IV-5).

〈표 IV-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2009

(%)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국민연금	55.7	6.7	22.6	37.6	78.7
건강보험	60.4	6.9	28.2	41.0	79.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3.

그러나 사회보험의 법·제도적 적용기준상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적용 제외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규직과의 단선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근로복지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차이를 보인다.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 76.3%, 비정규직 34.1%이고, 상여금은 정규직 73.5%, 비정규직 26.5%이며, 시간외 수당은 정규직 55.0%, 비정규직 19.5%로 근로복지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표 IV-6).

한편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이 17.4%이고 비정규직 3.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0.2%, 비전형 근로자는 1.6%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비

〈표 IV-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2009

(%)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퇴직금	50.8	4.2	24.3	34.1	76.3
상여금	39.7	3.9	15.1	26.5	73.5
시간외 수당	28.8	2.5	11.0	19.5	55.0
유급휴가	41.9	2.8	16.0	27.6	67.4
주5일 근로제	48.3	18.6	27.7	37.0	54.0
노조가입률	5.2	0.2	1.6	3.4	17.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3.

정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대상 비율이 정규직보다 낮는데 기인하지만, 어쨌거나 비정규직의 낮은 노조가입률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노조가입률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정규직은 2005년 15.9%에서 2009년 17.4%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05년 4.6%에서 2009년 3.4%로 1.2% 포인트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다. 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은 26.7%인 반면 비정규직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은 62.8%에 이른다(표 IV-7). 즉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전형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일자리 선택 비중은 7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임시직의 자발적 선택 비중이 높은 해외 사례와는 매우 대조되는 결과이다.

〈표 IV-7〉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사유별 구성비율: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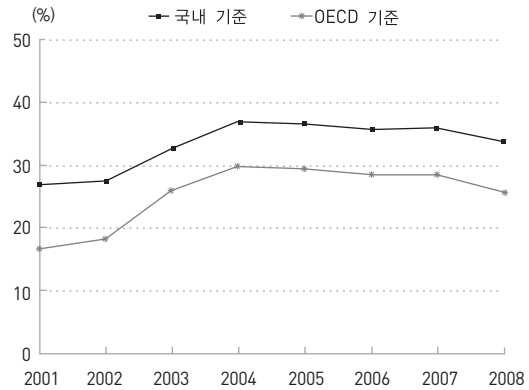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전체	
자발적 사유	46.3	30.8	25.8	37.2	73.4
비자발적 사유	53.8	69.2	74.2	62.8	2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3.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제 기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

[그림 IV-5] 국내와 OECD 기준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2001-200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을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로 보고, 임시직 근로자에 고정기간계약 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 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중 용역 및 특수고용, 가내(재택) 근로자는 국제 기준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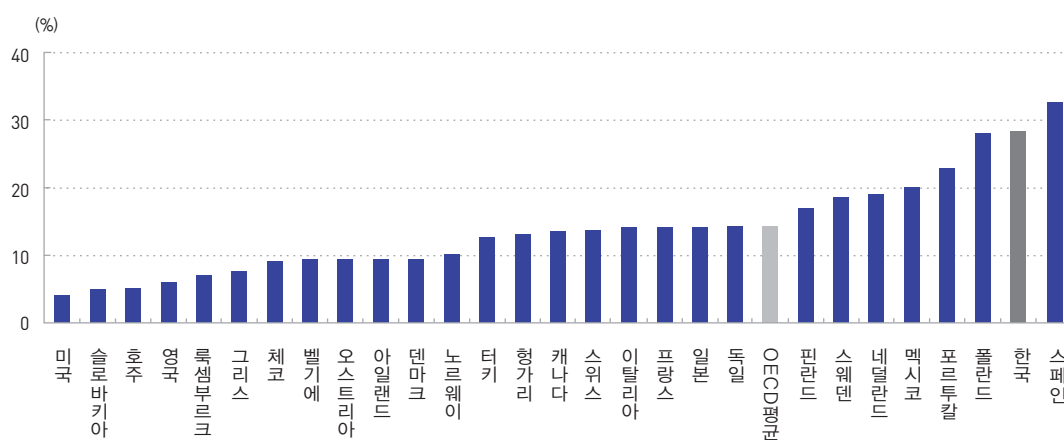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통계를 다시 산출해 보면,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비정규직 비중은 크게 감소한다(그림 IV-5). 국내 기준으로 2008년 비정규직의 비중은 33.8%인데 반해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5.9%로 7.9% 포인트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2005년까지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추이를 보인다는 경향성 측면에서는 두 기준 모두 동일하다.

[그림 IV-6]은 2007년에 OECD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의 임시직 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4.2%인

데 반해 한국은 28.2%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며,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 유일하다. OECD 평균보다 임시직 비중이 낮은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며, 멕시코, 폴란

드 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 2007



출처: 유경준 외, 2009.

참고문헌

- 유경준 외, 2009,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박시내(통계개발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요 약

-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3D 직종에서의 인력부족에 기인한다.
- 2009년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취업자 50만 명, 불법체류자 18만 명을 포함하여 총 68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90% 수준이다.

3D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여 왔다. 3D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따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및 생산성 수준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독일, 베트남, 중동 등에 많은 근로자를 송출하여 국내의 취업기회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적이 있었다. 송출인력의 대부분은 국내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 광부, 건설노동자 등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내국인의 해외 취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외국

인의 국내 취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3D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면서도 3D 직종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표 IV-8〉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초부터 단순기능인력의 부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단순기능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87년부터 외국인이 3D 직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3D 직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증가하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유희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3D 직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2월에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

〈표 IV-8〉 부족인력수와 인력부족률¹⁾: 1990-2003

	전직종			생산 관련 직종		
	현원 (1,000명)	부족인원 (1,000명)	부족률 ²⁾ (%)	현원 (1,000명)	부족인원 (1,000명)	부족률 ²⁾ (%)
1990	4,428	192	4.34	2,420	166	6.85
1991	4,563	250	5.48	2,446	222	9.07
1992	4,615	197	4.26	2,320	157	6.76
1993	4,534	164	3.62	1,964	119	6.04
1994	4,904	175	3.57	2,251	124	5.64
1995	4,929	183	3.71	2,161	125	5.80
1996	5,218	156	2.98	2,212	106	4.80
1997	5,294	129	2.44	2,172	84	3.88
1998	4,892	32	0.65	1,874	20	1.04
1999	4,870	47	0.97	1,716	28	1.63
2000	5,723	72	1.25	1,866	40	2.15
2001	5,926	76	1.27	1,887	37	1.98
2002	6,015	150	2.43	1,892	79	4.20
2003	6,462	141	2.14	2,034	81	3.97

주: 1) 1999년까지는 10인 이상, 2000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04년부터 직종분류를 한국고용직업분류(OES)로 변경하여 생산 관련 직종에 관한 통계를 집계할 수 없음.

2) 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출처: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각 호.

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3D 직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연수제도의 틀 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의 임금에 높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대규모로 이탈하는 사태도 빈발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들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3년 1월에 국내체류 외국인 인력 36만 3천 명 중 불법체류자가 28만 7천 명(79.1%)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적용,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었다.

이후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다. 2002년 12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도입되었는데 이후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는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어 오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으며, 국적동포 취업제도는 2007년에 방문취업제도로 변경되었다.

외국인 인력 추이

〈표 IV-9〉는 주요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전문인력과 단순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인력은 전체 규모로는 크지 않으나 2004년까지 2만여 명 수준에서 2009년에 4만여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회화지도(E-2)가 22,64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정활동(E-7) 8,896명, 예술홍행(E-6) 4,305명, 연구(E-3) 2,066명, 교수(E-1) 2,056명이며 그 외 전문직업(E-5) 536명, 기술지도(E-4) 197명이다.

〈표 IV-9〉 체류자격별 외국인수¹⁾: 2001-2009

	총 체류자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이민자
2001	576,835	7,428	21,710	110,250	25,182
2002	629,006	7,288	21,955	128,229	34,710
2003	678,687	9,708	22,431	291,572	44,416
2004	750,873	9,705	21,729	295,087	57,069
2005	747,467	24,797	24,785	173,549	75,011
2006	910,149	38,649	29,011	231,773	93,786
2007	1,066,273	56,006	33,502	442,677	110,362
2008	1,158,866	71,531	37,304	511,269	122,552
2009	1,168,477	80,985	40,698	511,160	125,087

주: 1)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인력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된 경우는 해당 체류자격에 포함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에 따라 동포인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21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1만 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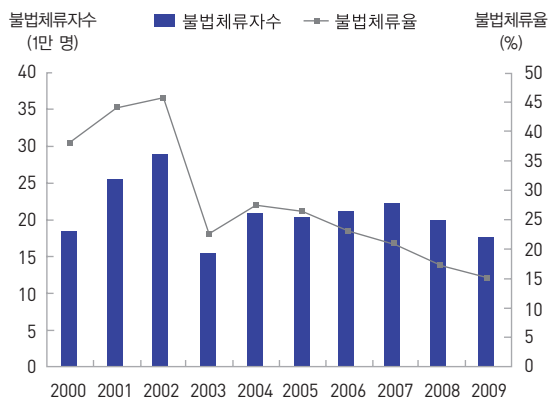
하여 2001년에 비해 4.6배 증가하였다. 여기서의 외국인 인력 통계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불법체류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입국자 중에서도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외국인 인력 규모는 70여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저숙련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수년간은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생산직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1991년에는 외국인 인력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93.4%까지 이르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1994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58.9%까지 하락하였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79.8%를 기록하였다. 2003년 8월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고 2003년 10월에 당시의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합법화함에 따라 2003년 12월에는 전체 외국인 인력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35.5%로 하락하였고, 불법체류인력의 규모도 2002년 말 28만 9천 명에서 15만 4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여만 명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17만 7천여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IV-7]은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대비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총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40%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17.3%, 그리고 2009년에는 15.2%로 낮아졌다.

[그림 IV-7] 불법체류자수와 불법체류율¹⁾: 2000-2009



주: 1)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수÷체류외국인수)×10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외국인 인력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표 IV-10>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전체 종업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평균적으로 15.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27.5%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의존 정도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특성별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비교하면 2004년에는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비율이 높았지만 이후 다른 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여 2009년의 경우 농축산업과 어업은 50%대에 육박하고 있고, 건

설업과 제조업 역시 25% 내외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이 높아 2009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65.5%에 이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004년 1.4%에서 2005년에 3.9%로 상승한 후 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표 IV-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¹⁾: 2004-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종별 건설업	9.7	14.9	17.8	19.6	23.4	24.0
농축산업	24.5	33.1	32.2	39.4	47.4	47.1
어업	-	29.0	37.8	41.2	44.9	48.0
제조업	14.8	22.3	19.5	23.0	28.0	27.8
서비스업	28.0	31.6	29.6	25.5	25.5	22.7
규모별 5인 미만	69.6	63.4	67.5	68.4	70.3	65.5
5-9인	36.0	48.9	53.6	54.2	57.2	51.5
10-29인	19.6	30.1	31.8	34.0	39.8	36.8
30-99인	12.9	17.8	17.7	21.7	27.6	24.7
100-299인	6.3	8.3	8.5	11.3	14.5	12.8
300인 이상	1.4	3.9	4.3	5.0	6.5	4.0
전체	15.5	22.9	20.1	23.2	27.9	27.5

주: 1) 연인원 기준임.

출처: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 패널.

내·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의 비교

내·외국인 인력 간 임금 차이를 그 동안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자. 2003년도에 시행된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10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형태별로 보면 불법취업자(남자 126만 원, 여자 113만 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수취업자(남자 105만 원, 여자 104만 원), 산업연수생(남자 97만 원, 여자 92만 원), 해외투자기업연수생(남자 75만 원, 여자 65만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높는데, 즉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비해서는 82%, 연수생에 비해서는 23.1%, 연수취업자에 비해서는 18.1%, 그리고 불법취업자에 비해서는 7.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1.6% 정도 밖에 높지 않았다.

2008년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력 실태조사가 수행된 바 있는데, 동 조사도 내·외국인 인력 간 임금격차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원이고, 내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약 45만 원 가량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19.7%(충급여기준으로는 16.1%) 낮은 것으로 산출되어 2003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1〉는 같은 조사자료로 내국인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업무량, 생산성, 임금수준, 총 고용비용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근로시간은 외국인 근로자가 101.1%로 약간 길었으나, 업무량은 이보다 낮은 96.1%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은 국내 인력 대비 90.0%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인력의 임금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인력의 87.3%로 조사되었다.

〈표 IV-11〉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평가): 2008

(%)

		근로시간	업무량	생산성	임금수준	총고용비용
규모별	5인 미만	99.4	94.9	88.0	87.0	97.5
	10인 미만	101.9	95.2	91.5	85.2	98.7
	30인 미만	100.8	95.4	88.8	87.6	96.2
	100인 미만	101.5	97.3	91.1	90.0	100.0
	100인 이상	103.9	101.0	93.2	86.8	94.4
전체		101.1	96.1	90.0	87.3	97.5

주: 1) 내국인 근로자를 100으로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8.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요 약

- 한국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직업선택 시 수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앞지르게 되었다.
-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수입을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의 내재적 가치(적성, 보람, 장래성 등)를 더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세대 내 및 세대 간 직업이동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산업사회는 지식경제화와 서비스화라는 거시적 변화의 영향으로 직업구조와 직업구성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선택기준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사회계층 간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인들의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직업구성의 변화 추이

직업선택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직업 현황을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2008년 현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14.9%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자

는 2.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자에서 판매 종사자까지의 화이트칼라가 약 60%이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단순노무 종사자까지의 블루칼라가 약 40%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별로 증감의 변화가 적지 않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림 및 어업 숙련직 종사자가 지금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대비 2005년에는 19.2%, 2008년에는 2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산업화와 더불어 전문가 및 사무직 직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섹터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17.7%, 2008년에는 30.7%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생산의 고도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블루칼라 직업 중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2000년 대비 2008년에 12.3%가 줄어든 반면,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직 종사자는 11.9%가 늘

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직업의 구성과 추이 변화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직업선택과 직업이동에 있어서 제약요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가? 직업선택을 좌우하는 요인들로는 크게 해당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수입), 비물질적(명예, 명성) 보상요인과 내재적 가치(보람, 자아성취, 적성, 흥미 등) 그리고 발전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직업선택 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2000-2008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	2.4	2.6	2.7	2.6	2.5	2.5	2.4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4	16.6	16.7	17.4	18.0	18.4	19.1	19.8	20.1
사무 종사자	11.9	12.4	12.7	14.3	14.1	14.3	14.2	14.1	14.9
서비스 종사자	12.6	12.6	12.8	12.4	12.8	13.0	12.6	12.4	12.3
판매 종사자	13.4	13.6	13.3	12.8	12.2	11.7	11.5	11.3	1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0	9.4	8.9	8.3	7.5	7.5	7.2	6.9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7	12.2	12.2	10.9	10.9	10.7	10.6	10.3	1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0.8	10.7	10.8	11.0	11.2	11.1	11.0	10.9
단순노무 종사자	10.0	9.9	10.2	10.5	10.9	10.8	11.1	11.6	1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009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표 IV-13), 우리나라 국민의 36.3%는 수입을, 30.4%는 직업의 안정성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두 요인이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성이나 흥미, 보람이나 자아성취 등 직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중은 각각 11.3%와 7.4%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도 비중의 양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입 요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외에 남성과 여성 응답자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IV-13〉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¹⁾: 2002-2009 (%)

	2002	2006	2009
명예, 명성	1.7	2.6	3.3
안정성	34.4	32.6	30.4
수입	21.5	31.7	36.3
적성, 흥미	16.4	12.0	11.3
보람, 자아성취	8.2	6.6	7.4
발전성, 장래성	16.1	10.2	7.8
기타, 모름	1.7	4.3	3.5
합계	100.0	100.0	100.0

주: 1) 전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직업선택 시 고려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이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이다. 동일한 설문양식과 응답항목을 사용한 3개 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2년의 경우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5%로 안정성(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

는 31.7%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36.3%로 증가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넘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이라는 시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직업선택 시 직업의 안정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을 경우 비록 다른 요인들(적성, 장래성 등)이 맞지 않더라도 직업을 옮길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조사와 2009년 조사를 비교할 때 직업선택 시 적성 및 흥미나 발전성 및 장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적성과 흥미의 경우는 16.4%에서 11.3%로 감소하였고 발전성과 장래성의 경우는 16.1%에서 7.8%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차이와 추이는 서울시의 「직업선택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서울시민이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2002년도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수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높아진(21.7% → 33.2%) 반면 안정성에 대한 고려는 약간 낮아져(31.4% → 30.0%) 우선 순위가 바뀌었으며, 적성 및 흥미나 발전성 및 장래성에 대한 중요도는 2002년 조사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각각 18.3% → 11.8%, 16.5% → 8.2%) 나타났다.

직업선택 기준의 집단 간 차이

연령집단별 차이

그렇다면 한국인의 직업선택 기준은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표 IV-14〉에 제시된 2009년도

〈표 IV-14〉 연령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¹⁾: 2009

(%)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모름	합계
15-19세	4.8	19.3	24.9	30.1	10.0	9.4	1.5	100.0
20-29세	3.8	27.9	29.0	17.8	9.3	11.1	1.0	100.0
30-39세	2.8	31.8	36.2	11.7	7.9	8.7	1.0	100.0
40-49세	2.8	32.8	39.8	8.3	7.3	7.7	1.3	100.0
50-59세	3.2	33.0	41.4	6.1	6.9	6.0	3.3	100.0
60세 이상	3.6	30.9	39.4	4.7	4.5	4.9	11.9	100.0

주: 1) 전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직업선택 기준의 우선 순위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보상인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적성 및 흥미나 보람 및 자아성취 등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인 15-19세 학령층의 경우 적성과 흥미(30.1%)를 수입(24.9%)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하여 직장경험이 있는 30세 이상 연령계층은 모두 2/3 이상이 직업의 안정성과 수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학력집단별 차이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학력별 차이는 어떠한가? 〈표 IV-15〉에 제시된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을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

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43.4%가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경우 28.9%만이 그러해 두 계층 간에 큰 차이(14.5% 포인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28.6%, 대졸 이상 집단이 31.1%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학력집단 간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8.4%만이 적성 및 흥미나 보람 및 자아성취 등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은 25.2%가 그러해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통해 얻는 보람이나 자아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기준에 있어서 학력집단 간 이러한 차이는 2002년 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과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2002년과 2009년의 조사결과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2002년)에는 최근(2009

〈표 IV-15〉 학력집단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¹⁾: 2002, 2009

(%)

	2002				2009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명예, 명성	2.1	1.9	1.5	1.8	3.0	3.6	2.7	4.2
안정성	43.3	35.6	35.6	27.0	28.6	27.2	31.7	31.1
수입	26.9	22.0	21.4	16.4	43.4	37.5	38.9	28.9
적성, 흥미	7.7	17.3	16.4	23.2	5.4	15.1	10.9	13.2
보람, 자아성취	3.1	6.1	8.5	13.9	3.0	6.2	5.9	12.0
발전성, 잠재성	11.0	15.6	17.9	17.4	4.1	6.5	8.1	9.9
기타, 모름	5.8	1.6	0.6	0.3	12.6	3.9	1.8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년)보다 직업의 안정성을 수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낮을수록 더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2년의 경우 모든 학력계층에서 안정성을 수입보다 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대졸 이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경제사회적 시대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개인과 가계의 수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한층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집단별 차이

그렇다면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직업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직업에는 이미 직업선택의 기

준이 되는 여러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험적으로 직업에 따라서 수입, 안정성, 명예 등 직업이 줄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이 차이가 나며 또한 적성 및 흥미, 보람이나 자아성취, 발전 가능성 등 직업에서 느낄 수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확률 또한 높을 것이다.

〈표 IV-16〉은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직업군 간에 흥미로운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균적으로 수입이 낮은 직군이 그렇지 않은 직군에 비해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수입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9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의 약 26%가 직업선택 시 수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기능노무직의 경우 약 46%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정성 요인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의

〈표 IV-16〉 직업군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¹⁾: 2002, 2009

(%)

	2002					2009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 노무직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 노무직
명예, 명성	2.0	1.1	1.3	2.9	1.2	4.6	3.1	2.3	3.4	2.4
안정성	27.0	31.9	35.8	45.0	38.7	28.7	38.5	28.7	32.7	33.1
수입	16.3	17.9	25.2	23.8	26.0	26.2	30.2	45.4	39.4	45.9
적성, 흥미	22.5	19.0	13.6	7.4	10.9	14.7	9.8	8.6	4.9	6.4
보람, 자아성취	15.0	11.4	6.6	3.5	5.4	14.9	8.1	5.8	3.5	3.6
발전성, 장래성	16.9	18.3	16.6	13.2	16.7	10.3	9.7	8.0	6.6	6.4
기타, 모름	0.2	0.3	0.8	4.2	1.1	0.6	0.6	1.1	9.5	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국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27%, 사무직의 약 32%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반면, 서비스판매직의 약 36%, 기능노무직의 약 39%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직군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직군인 사무직 종사자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수입보다 중요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영향이 특히 사무직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요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적성 및 흥미, 보람이나 자아성취, 장래성 등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비율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9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의 약 40%가 수입이나 안정성 등 외재적 가치보다는 이러한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

고 있는 반면, 사무직의 경우는 약 28%, 기능노무직의 경우는 약 16%만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군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002년의 경우에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차이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직업이동을 흔히 사회(계층)이동(social mobility)이라고 하는데,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신분의 상승과 하락이 주로 직업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은 「사회조사」 사회참여 부문에서 1991년 이래 매 2-4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대 내(자신의 일생 동안) 및 세대 간(부모-자식)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IV-17〉에는 세대 내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분포를 직업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으며 그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능성을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계층인 농림어업집단을 제외하고 보면 기능노무직에서 전문관리직으로 갈수록 세대 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6.7% → 35.6% → 42.5% → 50.5%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6% → 51.4% → 48.8% → 4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집단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대 내 직업계층 이동의 열망이 높을 기능노무직 집단에서는 부정적 인식의 비율(56.6%)이 긍정적 인식의 비율(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간 경제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현재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직업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표 IV-18>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세대 내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능노무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50% 이상이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집단 간의 차이는 세대 내 계층이동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 세대 내 및 세대 간 직업이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가능성 인식에 대한 「사회조사」결과를 그간 한국 사회가 지향해 온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와 복지의 실현’이라는 국가사회적 가치와 목표의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향후 정치와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7> 직업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¹⁾: 2009 (%)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잘 모름	합계
전문관리직	4.5	46.0	32.2	9.3	7.9	100.0
사무직	2.5	40.0	39.6	9.2	8.7	100.0
서비스판매직	2.3	33.3	40.5	10.9	13.0	100.0
농림어업직	1.0	37.6	28.0	12.9	20.4	100.0
기능노무직	1.7	25.0	38.8	17.7	16.7	100.0

주: 1) 가구주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표 IV-18> 직업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¹⁾: 2009 (%)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잘 모름	합계
전문관리직	7.5	50.7	23.7	5.3	12.8	100.0
사무직	5.1	48.7	25.4	5.4	15.4	100.0
서비스판매직	4.4	44.6	26.9	5.9	18.2	100.0
농림어업직	3.6	49.6	18.9	5.0	22.9	100.0
기능노무직	3.2	40.0	26.9	8.0	21.8	100.0

주: 1) 가구주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분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이현승 114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 유경원 123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 이현승 129

한국 국민 구매력의 국제비교 • 정규승 136

V.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30-40대는 50-60대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높고 2007년 경제 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40대 연령의 상대적 소득 지위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 맞벌이 가구소득의 증가 속도는 비맞벌이 가구를 앞서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 가구보다 1.38배 더 많던 것이 2009년에는 1.43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 교육비는 최근으로 오면서 다른 어느 소비 항목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계층 간 교육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2009년 교육비 지출 통계를 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20%의 사람들은 가장 소득이 낮은 20%의 사람들보다 매월 자녀 교육비로 5.6배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 소득 300-399만 원이 사람들이 소득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경계점으로 추정된다. 300만 원 미만의 수입이면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400만 원 이상이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뚜렷이 늘어난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불경기에서 회복한 2000년대 초반에서 2009년까지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또 한 차례 우리 경제를 불황으로 내몰았다. 2010년 현재 기업 이윤은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실업률은 아직 높은 상태이며,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앞날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구의 1/10도 안 되는 대기업의 취업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9/1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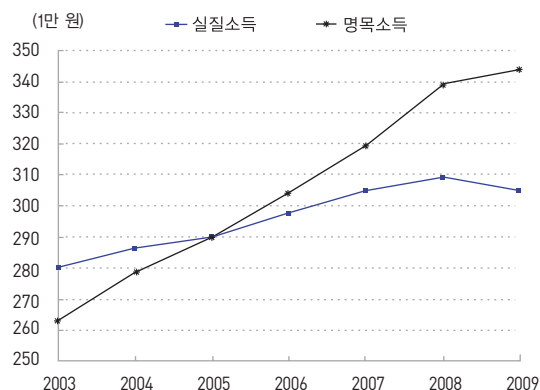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평균적인 가구경제생활의 변화보다는 인구특성별, 계층별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있으며, 어떤 집단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생계는 가구 단위로 꾸려지므로 가구 소득과 소비를 분석단위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 기준에 맞춘 신분류 방식으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2003년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전국적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3년 263만 원에서 2009년 344만 원으로 30.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 8.9% 증가에 불과하며, 복리로 계산했을 때 이는 매년 1%를 약간 상회하는 증가율이다.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7년까지는 실질소득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2009년에는 명목소득만 상승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였다(그림 V-1). 1990년대 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던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2007-2008년의 경제위기로 다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2003-2009년 기간 동안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 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기간별로 각 소득

[그림 V-1] 월평균 가구소득¹⁾: 2003-2009



주: 1) 실질소득은 2005년을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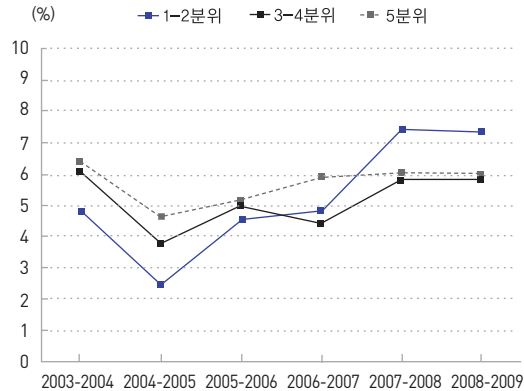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집단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V-2]에서 소득증가율이 모두 2.0%를 넘는 것은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소득계층에서 명목소득이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에 처했던 2007-2008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율도 높았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크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증가율은 가장 낮다.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04-2005년에도 5분위 계층은 명목소득이 4.7% 증가했으나 1분위와 2분위 계층은 그 절반에 불과한 2.4%의 상승에 그쳤다.

부유한 계층의 소득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연간 몇 퍼센트의 증가율 차이라고 해도 이것이 복리로 쌓였을 때 수년 후에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근래에 우려하는 과도한 빈부 격차는 어느 한 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전개되어 온 부익부 빈익빈 경향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2007-2009년은 우리 경제가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인데, [그림 V-2]에서 보면 이 기간

[그림 V-2]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200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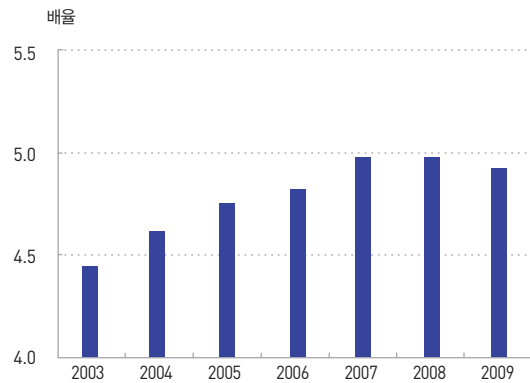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동안 소득이 낮은 1, 2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특히 하계도 다른 모든 계층을 뛰어 넘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공공근로 등의 방식으로 시행된 정부의 지원이 단기간 반짝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율이 계층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결과 2009년의 소득분포는 2003년보다 더 불평등해졌다. 2003년 5분위의 소득은 1분위 소득의 4.4배였으나 2009년에 이 배율은 4.9배로 증가하였다(그림 V-3). 2007년 경제위기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던 추세를 벗어나 2007-2009년 기간 동안 불평등 수준이 정체를 내지 축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근로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정책이 축소된다면 1분위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의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연령과 교육은 소득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V-3] 소득 불평등도¹⁾: 2003-2009

주: 1) 각 년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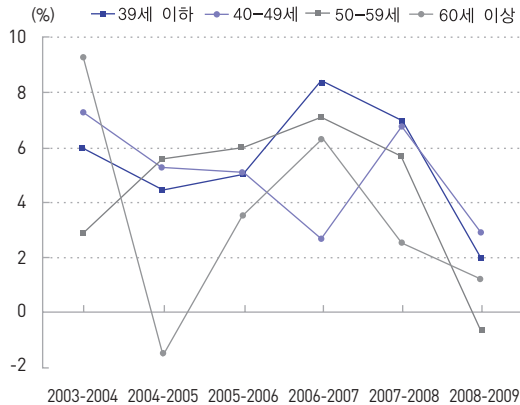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V-4]를 보면 2003-2009년의 기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구소득에 큰 굴곡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2009년을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하였지만 일부 연령대에서는 소득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감소하였다.

60세 이상 연령의 경우 2003년에는 높은 소득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다음 해에는 소득의 절대액이 감소하였으며, 2008-2009년에는 1.2%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60대는 젊은 연령대보다 소득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 연령층에 비교하여 60대 연령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50대는 60세 이상은 물론 40대와 비교해서도 소득증가율이 높으며, 2007년까지는 소득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즉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50대 연령층은 소득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8-2009년에는 소득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었다. 2007-2008년의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층이 바로 50대이다.

[그림 V-4] 가구의 연령별 소득증가율: 200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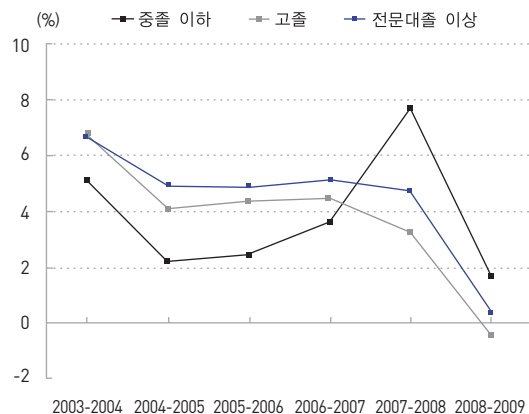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반면 30대와 40대는 이 기간 동안 소득증가율이 높고, 2007-2008년 경제위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이들은 2007-2008년 모든 연령대의 소득이 급속히 감소할 때에도 연간 2% 이상 소득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8-2009년에는 40대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소득의 절대 규모도 적지 않으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상대적 소득 지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40대가 뜨고 50대가 이상이 지는 현상은 1997년 경제위기 때에도 나타났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구조조정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연공서열의 관행 덕분에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던 50대 근로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도 높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증가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교육에 따른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만 2007년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에 약간의 특이 현상이 감지된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

의 사람들의 소득증가율이 경제위기가 난 해에 특이하게 높았던 것이다(그림 V-5). 2007-2008년 기간 중 중학교 졸업자의 가구소득은 연 8%나 상승하였다. 이는 공공부조의 위력을 다시 확인해 준다.

[그림 V-5] 가구의 교육수준별 소득증가율: 200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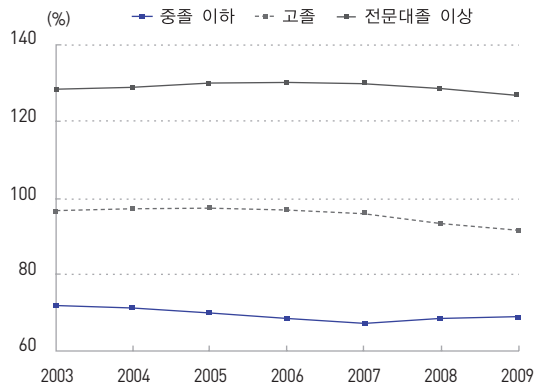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전문대졸 이상자와 고졸자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고졸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절대액이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고졸자는 2008-2009년 기간 중 명목소득이 0.4% 감소하였다. 경제위기가 고졸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각 년도 전체 소득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교육수준별 소득비를 계산해 보면(그림 V-6), 고졸자는 2003년 96.6%에서 2009년 91.9%로 상대적 소득 지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자의 소득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그림 V-6]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¹⁾: 2003-2009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교육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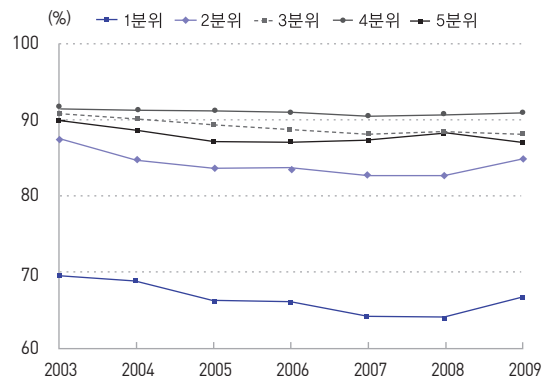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금종사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부유한 계층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재산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친지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정부의 복지급여 등의 이전소득이 생계에 큰 보탬이 된다.

2009년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을 비율로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65.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소득이 21.8%, 이전소득이 8.5%, 재산소득이 0.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V-7]에서는 각 소득계층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따로 떼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V-7]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전 기간 동안 70%를 넘지 못했으며, 더구나 2009년을 제외한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이들의 소득원이 근로와

사업 소득으로부터 이전소득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득은 그간 부의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2009년 이들 계층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조금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와 같이 임시적인 일자리로부터의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3, 4, 5분위 계층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유지한다. 이들의 경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그림 V-7] 소득분위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¹⁾: 2003-2009

주: 1) 각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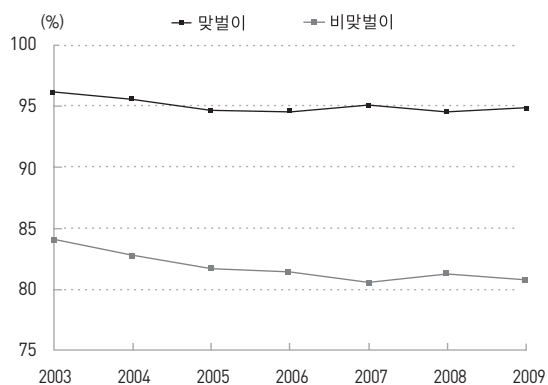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2007년 경제위기 이후에 4, 5분위 계층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80% 후반대로 약간 축소되기는 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늘어나 2009년에는 전체 가구의 1/3을 차지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전체 가구소득이 훨씬 더 많다. 2009년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은 426만 3천 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298만 9천 원보다 42.6%

나 많다. 2003-2009년의 기간 동안 맞벌이 가구소득의 증가 속도는 비맞벌이 가구를 앞서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이 기간에 총소득이 32.5% 증가한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이보다 적은 28.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 가구보다 1.39배 더 많던 것이 2009년에는 1.43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는 소득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 V-8]에서 보듯이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총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높다. 맞벌이 가구는 사업소득으로 2009년에 월 110만 3천 원을 벌며 총소득의 25.9%를 차지한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사업소득은 55만 6천 원으로 총소득의 18.6%에 불과하다.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비중이 맞벌이 가구보다 높다.

[그림 V-8] 맞벌이 여부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¹⁾: 2003-2009



주: 1) 각 가구유형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가구지출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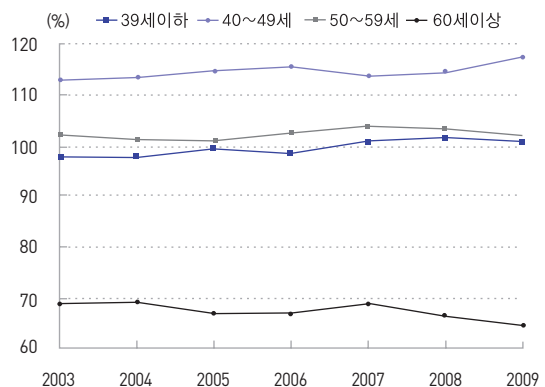
가구지출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

어진다. 소비지출은 생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지출로서 2003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170만 원을 지출하던 것이 2009년 215만 원으로 26.8%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로는 6.4%가 증가한 것이다.

소비지출의 규모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여 2009년 월 25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수준보다 15% 이상 더 지출한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소비지출이 현저히 적어 2009년에 14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림 V-9]에서 보듯이 최근으로 오면서 4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의 상대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의 상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소득과 밀접히 연관되어 움직이는 데, 이는 40대의 소득이 고령자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50대 가구주 가구는 219만 원, 30대 이하 가구는 월 218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전체 평균 수준에 근접하

[그림 V-9] 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¹⁾: 2003-2009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계층의 소비지출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게 지출하였다.

가구지출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각종 사회보험금, 차입금 이자,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 등을 포함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총지출의 20.8%를 차지했던 비소비지출은 그 동안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22.4%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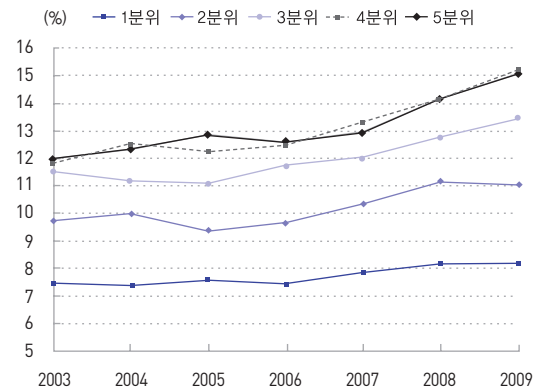
2009년에 소비지출 항목 중 비중이 큰 것 순으로 열거하면, 식료품(13.8%), 교육(13.5%), 음식숙박(13.0%), 교통(12.3%), 주거·수도·광열(9.8%), 의료(6.6%), 통신(6.2%) 등이다. 2003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보건, 교통 항목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식료품, 음식숙박, 통신 등은 비중이 줄었다. 소비지출의 항목별 비중은 생활양식을 반영하므로 짧은 시일 내에 크게 변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교육비는 다른 어느 소비 항목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3년 전체 소비지출 중 11.0%를 차지했던 교육비는 2009년 13.5%로 2.5%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림 V-10]은 소득분위별 교육비의 비중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뚜렷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관되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낮은 소득계층보다는 높은 소득계층의 교육비 비중이 더 높다. 다만 4분위와 5분위 계층 사이에는 교육비의 비중에 차이가 없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승의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3.1% 포인트 상승한 반면, 1분위 계층은 0.7%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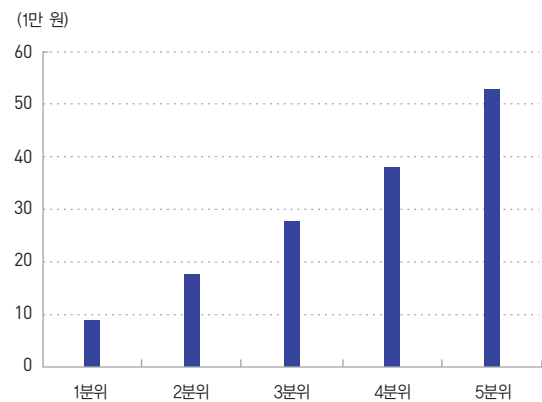
[그림 V-10]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율: 2003-2009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그림 V-11]에서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소득계층은 매월 교육비로 9만 2천 원을 지출하는데,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은 매월 교육비로 5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20%의 사람들은 가장 소득이 낮은 20%의 사람들보다 매월 자녀 교육비로 5.7배나 더 많이 지출한 것이다.

[그림 V-11] 소득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2009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교육이 계층 이동의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 지출 격차는 다음 세대에서도 부모의 계층 지위를 고착시키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으로 오면서 계층 간에 교육비의 상대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소득만족도의 변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2년에 한 번씩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어느 해의 조사에서도 10명의 응답자 중 5명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보통이라고 대답하며 10명 중 단지 1명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

[그림 V-12]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30-39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가장 많이 만족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많다. 20대 또한 자신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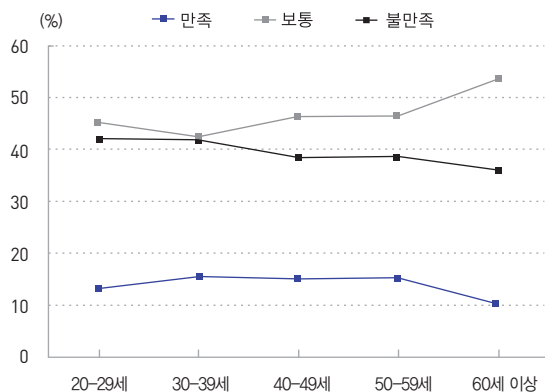
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60대 이상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30대가 다른 연령대와 다른 특징은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과 자신의 소득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 연령대에는 자신의 소득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기는 하지만 직업 경력이 짧으며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에 현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증가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소한다. [그림 V-13]에서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 중 61%가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 중에서는 36%만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에서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의 격차는 두드러진다. 고졸자의 11%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반면, 대졸자 중 이 비율은 20%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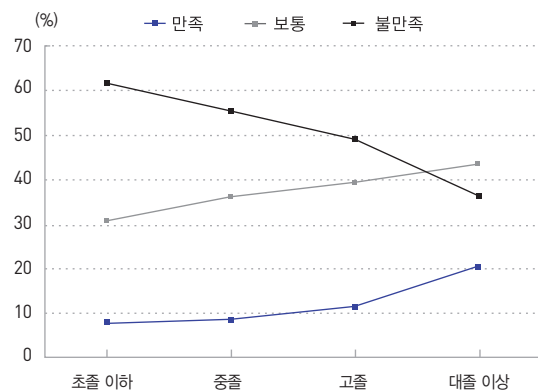
[그림 V-14]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불만족도

[그림 V-12] 연령별 소득만족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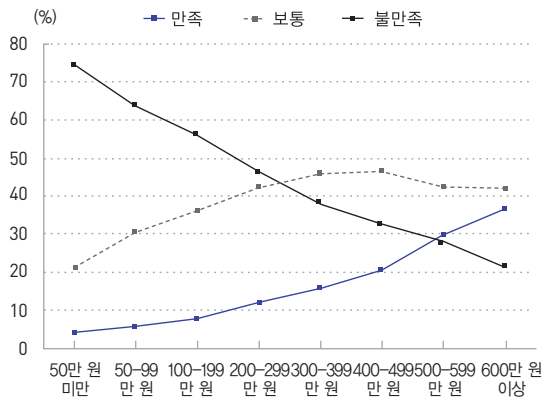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그림 V-13] 교육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그림 V-14] 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는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만족도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소득불만족도가 감소하는 정도에 비해 소득만족도가 상승하는 정도는 그렇게 가파

르지 않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불만족한 느낌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만족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V-14]를 보면 대체로 월소득 200-299만 원까지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반면, 월소득이 300-399만 원을 넘어서면 자신의 소득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불만족한다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만큼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월소득 300-399만 원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계점으로 추정된다. 즉 300만 원 미만의 수입이면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400만 원 이상이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늘어난다.

이현송(한국외국어대학교)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요 약

-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4조 원이고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5조 원에 달하고 있다.
-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가계부채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계층이 전체 부채의 약 6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는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의 수요측면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 등 공급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위기설들이 제기되고 사라졌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라지는 통상적인 위기설과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위기설은 2002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 내지 이와 관련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총량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를 산출하는 데에는 경제 전체, 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로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capital gearing ratio),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ncome ratio)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한 총량개념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소득, 연령 등 가구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총량개념에 입각하여 가계부채를 평가할 경우 어떤 유형의 가구가 건전하고 어떤 유형의 가구가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분포에 따라서는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환능력이 양호한(소득이 높거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계부채는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거시지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입을 할 수 없었던 가구가 소비자금융제도의 발달로 필요한 대출을 얻게 되었을 때 가계는 소비를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경제발전에 대한 순기능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기존 부채보유 가구의 채무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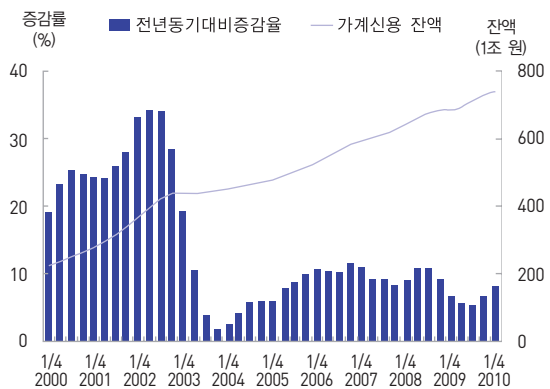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해 본 다음, 가구분포와 소득 및 연령별 분포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부채의 추이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크기는 가계신용자료와 자금순환표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제공한 판매신용의 합(가계대출+판매신용)으로 정의된다. 자금순환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문의 부채를 가계부채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V-15]에서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9년 기간 중 가계신용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00-2002년 중 20-30%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2003-2004년에는 대폭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4조 원(가계대출 692조 원, 판매신용 42조 원)이고,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5조 원에 달하는

[그림 V-15] 가계신용 잔액과 증가율: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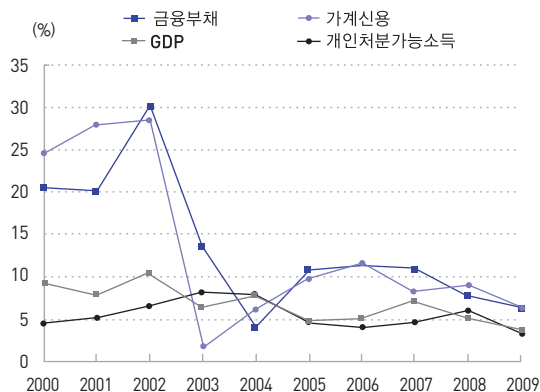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에는 순수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 기업 및 민간 비영리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가계신용에 비해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더 큰데 이는 주로 포괄범위가 상이한데 기인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림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신용카드사태 이후 2003~2004년 기간을 제외하고 개인가처분소득이나 GDP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2004년 이후에도 개인가처분소득과 GDP는 4~6%대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가계신용과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8~11%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16] 가계부채와 소득 증가율: 2000~2009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금융부채는 1993년 SNA 자료 기준이고, 2002년 이전은 1968년 SNA 자료 증가율을 이용함.

3) GDP와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을 이용함.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 결과 <표 V-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2009년 말 현재 그 비율은 143%로 2000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던 2002~2003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비슷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담보가능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0%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표 V-1>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¹⁾: 2000~2009

	금융자산 대비	개인가처분소득 ²⁾ 대비	GDP ²⁾ 대비
2000	37.9	80.6	48.7
2001	40.9	91.9	54.1
2002	46.6	121.7	69.0
2003	45.1	117.8	67.9
2004	44.0	113.7	65.7
2005	43.0	120.4	69.6
2006	44.1	128.8	73.8
2007	43.4	136.4	76.3
2008	47.6	138.8	78.2
2009	43.9	143.0	80.4

주: 1) 상거래신용, 기타 금융자산 부채 등 비이자부 자산 부채는 제외됨. 2002년 이전은 1968년 SNA 자료 기준이고, 2002년 이후는 1993년 SNA 자료 기준임.

2)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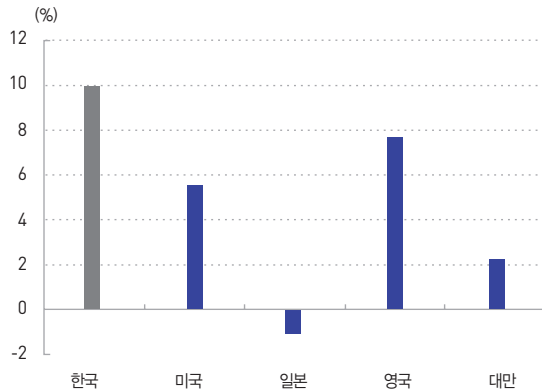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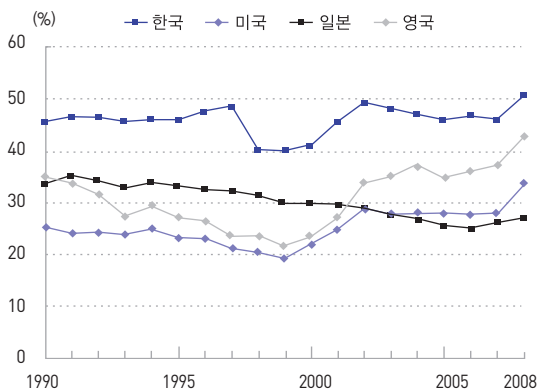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림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2006~2008년)의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은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그림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동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 2006-2008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V-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개인부문 금융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990-2008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가계부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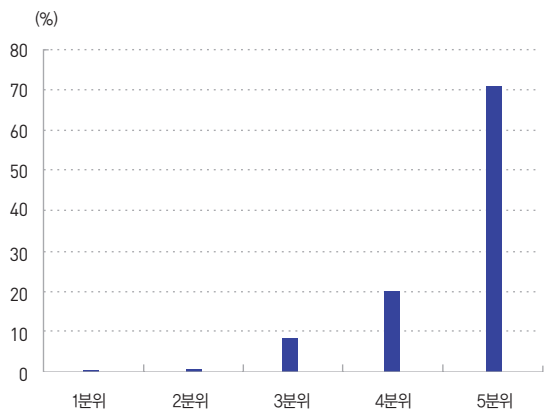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량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는 가계부채의 분포와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

자산조사」 자료²⁾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분포 현황을 부채의 크기, 소득의 크기, 자산의 크기 및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채규모별 분포

먼저 가구 분포를 보면 상당수의 가구가 부채가 없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소액 부채가구와 고액 부채가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분포의 형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 부채가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를 가계부채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하위 60%가 가계부채 총액의 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위 40%가 가계부채 총액의 9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19]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최상위 20%(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총액의 7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 부채가구의 쏠림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19] 부채분위별 부채보유 비율¹⁾: 2006

주: 1) 개별 가구의 부채를 합하여 가계부문 전체 및 소득계층별 부채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부채분위별 보유 비율을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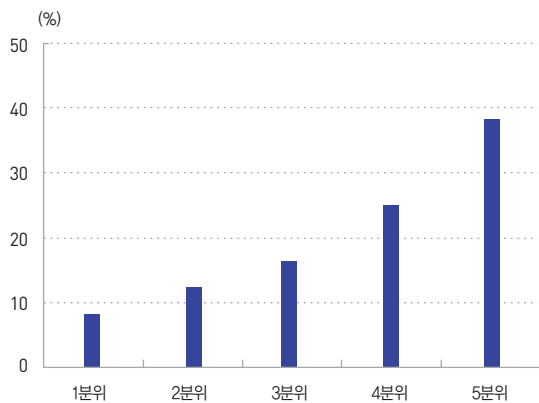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2)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가구의 자산보유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2005년 1년간의 소득이고, 자산은 2006년 5월 현재 기준이다.

소득수준별 분포

가계부채의 분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고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소득계층이란 소득의 크기가 가장 높은 4분위 및 5분위 40% 계층으로 정의된다. [그림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득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 중 63%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저소득(1분위) 계층의 경우 8% 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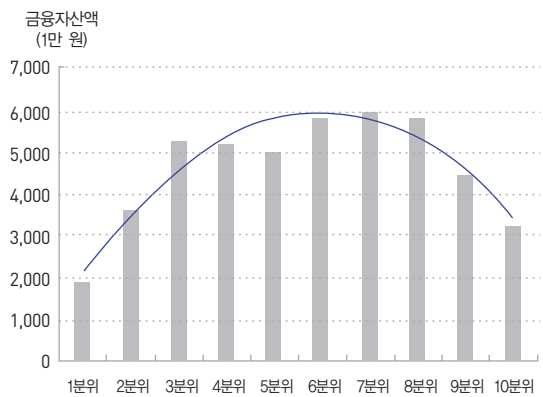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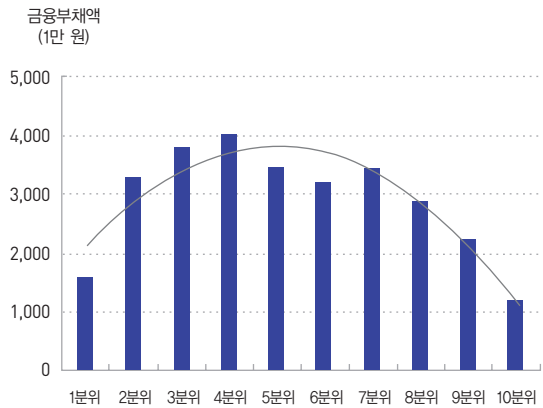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연령별 분포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와 자산 축적은 역U자형의 일생주기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부채와 금융자산³⁾의 축적 패턴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축적의 최고점 시기가 상이한데, 다음 [그림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

[그림 V-21] 연령집단¹⁾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액: 2006



주: 1) 각 분위별 중위연령은 1분위 28세, 2분위 35세, 3분위 40세, 4분위 43세, 5분위 46세, 6분위 49세, 7분위 54세, 8분위 59세, 9분위 65세, 10분위 74세임.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는데, 연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부채도 가장 높다. 그 이후 부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은 은퇴 직전 내지 은퇴 시점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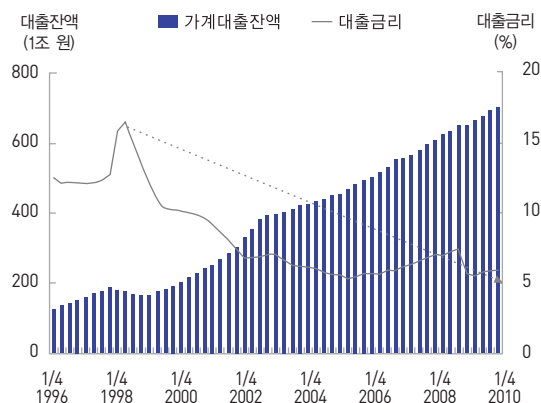
3)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 주식, 채권 및 갯돈 불입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총자산은 금융자산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된 개념이다. 한편 금융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및 사적대출액까지 포함된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

가계부채의 수준이나 변화를 결정하는 데에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모두 작용하기 마련이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그림 V-22]과 [그림 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대, 소비성 신용대출 증가 등의 수요측면과 금융기관의 대출경쟁 등 공급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데 기인한다. 특히 2002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용은 물론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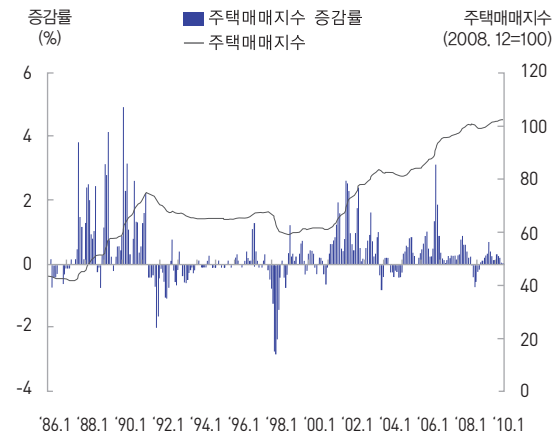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측 요인으로 먼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 확대로 국내 금융기관 간 자산규모 경쟁이 치열해진 점,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작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V-22] 대출금리와 가계대출잔액: 1996~201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림 V-23] 주택매매지수 및 증감률: 1986~2010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또한 가계 입장에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여기에는 금리하락 기조가 지속된 점과 더불어 신용카드 활성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변화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계가 소비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결국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자신용이 활성화됨과 더불어 가계의 자산축적이 주로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상 특징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움직임은 이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 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요 약

- 남성 50-64세의 중 · 고령자는 대부분 수입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50대에는 10명 중 9명이 근로활동을 하며, 60-64세에도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달한다.
- 중 · 고령자 가구소득 중 3/4은 근로활동에서 나온다. 50대는 물론 60-64세에도 가구 경제에서 근로소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취업자는 물론 은퇴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 중 · 고령자 가구 내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도 함께 높아진다. 소득계층을 가르는 요인은 근로소득의 차이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함께 증가하는데, 특히 고교 학력자와 대학교 학력자 간의 소득 격차는 매우 크다.
- 중 · 고령자 가구는 청장년층 가구와 마찬가지로 부유할수록 자녀의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한다.
- 중 · 고령자 가구의 40% 이상은 가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비가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자녀나 친지에게 의존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보편화되면서 50세를 전후하여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보수가 낮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소규모의 자영업을 한다. 그러나 중년기 남성들에게는 재취업도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아직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이다. 이 나이의 남성 가장들 중에는 자식 혹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자식이 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부모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자식도 있다. 또한 자식이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50-64세 남성은 경제활동 연

령에 속하지만 젊은 근로자와는 근로형태가 상당히 다르다. 전업 노동보다는 한 주에 몇 시간만 일을 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도우면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퇴와 은퇴하지 않은 상태의 경계가 뚜렷치 않다. 이 글에서는 50-64세 남성을 연령별로 50-54세, 55-59세, 60-64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별로 은퇴자, 취업자, 비은퇴 실업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은퇴자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이 다른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중 2007년에 수집된 2차 패널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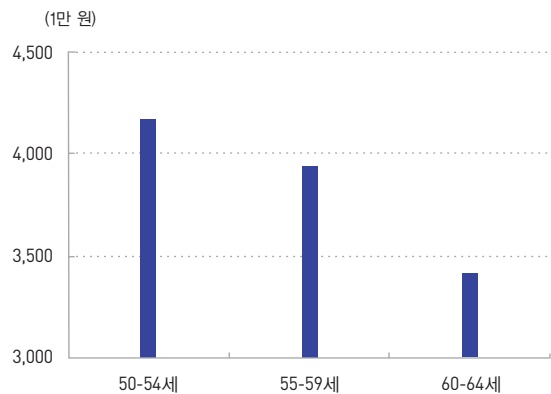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50-64세에 속하는 중·고령자의 대다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50-59세 남성 10명 중 9명(87.1%)과 60-64세 남성 10명 중 7명(68.8%)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로 은퇴자, 취업자, 비은퇴 실업자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및 일시휴직자를 포함하고, 은퇴자는 취업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은퇴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며, 비은퇴 실업자는 은퇴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취업자도 아닌 경우로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그러나 은퇴자 가구의 비율은 중·고령의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낮다. 50-54세에는 2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하고 60-64세가 되어서도 해당 연령대 5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하다. 남성은 60대가 되어서도 5가구 중 4가구 꼴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은 남성 가장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50대 전반에서 50대 후반으로 갈 때보다는 50대에서 60대로 진입하면서 가구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50대 초반 연소득이 4천 만 원을 넘던 것이 60대에 접어들면서 3,412만 원으로 떨어진다(그림 V-24).

[그림 V-24] 중·고령자의 연령별 연가구소득: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중·고령자의 대부분이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것이다. 은퇴자와 취업자 간에는 연가구소득에서 8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비은퇴 실업자는 은퇴자보다 연가구소득에서 350만 원이나 더 낮다. 즉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은퇴를 하지는 못하지만 직업을 구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중·고령자 중에 가장 어렵게 살고 있다.

은퇴를 선택하는 것은 대체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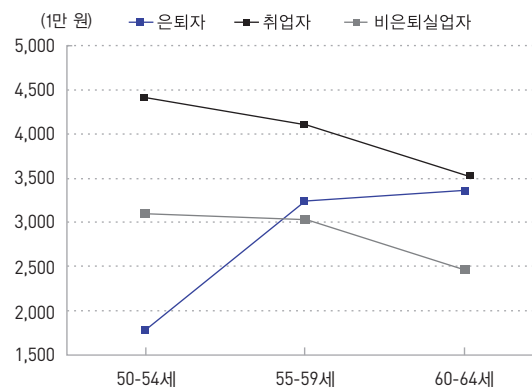
이지만 가족 부양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도 한 이유이다. 50-54세 은퇴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2.9명에 불과한데, 이는 같은 연령대 취업자 가구의 3.7명이나 비은퇴 실업자 가구의 3.4명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이다. 60-64세에도 여전히 은퇴자 가구원수는 취업자 가구원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이하게 은퇴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퇴자, 취업자 및 비은퇴 실업자 가구의 소득을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면(그림 V-25),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50대 초반에는 은퇴자의 가구소득이 가장 적으나 50대 후반으로 갈수록 은퇴자의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취업자의 소득은 감소하여 60-64세에는 두 집단의 소득이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른다. 50대 초반에 은퇴하면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내지는 취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점차 축소된다.

한편 비은퇴 실업자라도 50대 초반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에 은퇴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은퇴자들보다 높은 것이다. 반면 60대에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접지 않으면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비은퇴 실업자는 동년배 사람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서 50-64세의 남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들은 대체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남성 중·고령자

[그림 V-25] 중·고령자의 연령별 및 경제활동상태별 연가구소득: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장애패널조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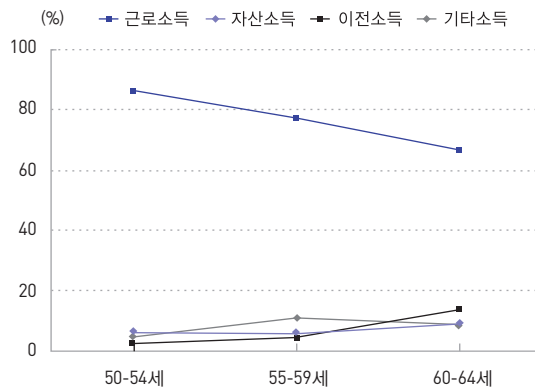
가구 전체 중 성인 자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는 3.5%에 불과하다. 성인 자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중·고령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다. 중·고령자 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823만 원인 반면, 성인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의 연평균 소득은 3,059만 원에 불과하다.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

남성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은 주로 이들의 근로활동에서 나온다. 중·고령자 가구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해 보면 근로소득이 2,906만 원으로 전체 연소득의 3/4(75.6%)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큰 소득원은 퇴직금, 보험금, 유산 등으로 구성된 기타소득으로 356만 원(9.2%)이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270만 원(7.1%)이고 정부의 복지수혜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198만 원(5.2%), 그리고 자식이나 친지로부터 얻는 사적 이전소득이 100만 원(2.6%)을 차지한다.

중·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50-54세에 전체 가구소득의 86.1%에 달했던 근로소득은 60-64세에는 67.4%로 떨어진다. 반면 공공복지 수혜나 혹은 자식과 친지로부터 얻는 이전소득의 규모는 50-54세에는 전체 가구소득의 2.8%에 불과하나 60-64세에는 14.3%로 크게 높아진다(그림 V-26).

[그림 V-26] 중·고령자의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비율¹⁾: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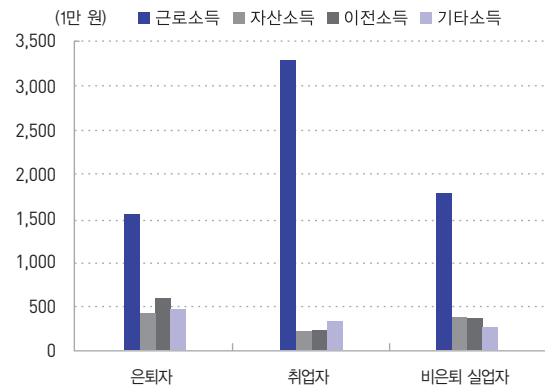


주: 1) 연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소득원에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V-27). 중·고령 취업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은 연 3,287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80.2%에 달한다. 은퇴자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집단의 근로소득은 연 1,550만 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50.9%에 달한다. 물론 점유율로 따질 때 은퇴자의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은 각각 14.4%, 19.4%, 15.4%로 취업자의 2-3배에 달하는 한다.

[그림 V-27]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및 소득원천별 연가구소득: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은퇴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은퇴자가 완전히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인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자영업에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로활동이 비공식 노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자와는 달리 은퇴자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근로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즉 중·고령 은퇴자는 완전히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대다수가 부분적으로나마 일을 하고 있다.

은퇴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즉,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규모는 증가한다. 50대 초반에는 연간 177만 원에 불과하던 자산소득이 50대 후반에는 477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소득의 15.5%를 차지하며, 50대 초반에는 연간 199만 원이던 이전소득이 60대에는 연간 641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20.5%에 달한다. 50대 후반, 특히 60대에 들어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중·고령자 가구의 계층

중·고령자 가구는 소득 면에서 동질적이지 않다. 중·고령자 가구 중 소득 순위 80% 이상인 5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연소득 5,600만 원으로 소득 순위 1분위의 연소득 1,536만 원보다 3.6배 많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인 이상 비농가 전국 가구의 가치분 소득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 지수는 4.92를 기록하였다. 중·고령자 가구는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가구보다는 덜 불평등하지만 여전히 부자와 빈자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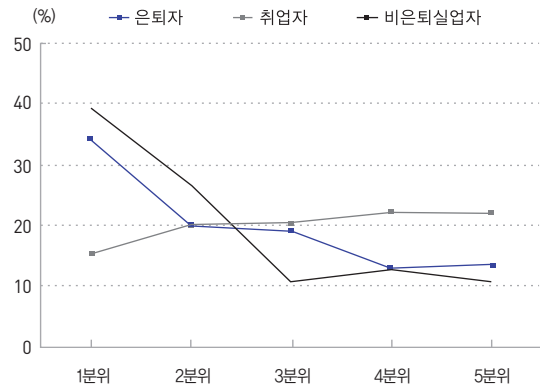
남성 중·고령자 가구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 함께 높아진다. 50대 초반보다는 50대 후반이, 50대 후반보다는 60대 초반이 더 불평등하다. 50-54세 연령대에서 5분위 배율 지수는 3.3이었는데 60-64세 가구에서 이 비율은 3.8로 높아진다.

중·고령자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부유한 가구가 많으며 연령이 높으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다. 50-54세에는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에 절반(50.1%)의 가구가 몰려 있는 반면, 60-64세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분위에 절반이 넘는(51.4%) 가구가 속해 있다.

중·고령 은퇴자, 취업자 및 비은퇴 실업자는 가구 소득 분포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비은퇴 실업자의 2/3 이상은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인 1분위와 2분위에 몰려있다. 은퇴자 가구 중 1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34.3%에 달하는 반면, 취업자 가구 중 1분위 가구의 비율은 15.5%에 불과하다. 한편 가장 부유한 가구인 5분위를 보면 취업자 다섯 중 한 가구(22.0%)가 이 집단에 속하는 반면, 은퇴자 중 이 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그림 V-28).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림 V-28]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소득분위 분포: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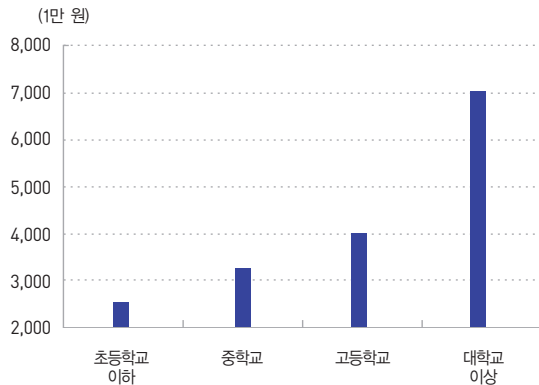
대체로 근로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4분위 계층까지는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분위도 높아지나,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위 계층보다도 오히려 더 낮다. 대신 5분위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기타소득이나 자산소득의 비율이 높다. 가장 부유한 중·고령자 가구의 경우 퇴직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기타 소득과 금융과 부동산 같은 소유 자산으로부터 이식된 자산소득이 주요한 소득원이다.

한편 자식이나 친지로부터의 지원이나 공공 복지שה와 같은 이전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이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1/4에 달한다.

중·고령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가구의 연소득은 2,543만 원으로, 대학교 이상 학력자 가구의 7,025만 원과 비교하여 1/3에 불과하다(그림 V-29). 학력이 높을 경우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이

들은 낮은 나이까지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높은 소득을 거두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반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일찍 은퇴하거나 혹은 낮은 연령에 취업도 은퇴도 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림 V-29] 중·고령자의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그림 V-29]에서 주목할 점은 고등학교 학력자 가구와 대학교 이상 학력자 가구 간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를 다닌 중·고령자 가구의 연소득은 4,008만 원인 반면, 대학교 이상 학력자 가구의 연소득은 7,025만 원에 달한다. 현재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많지 않으므로 이들의 희소성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를 넘어서도 크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가계수지

남성 중·고령자가 속한 가구는 전국 평균 가구보다 가구 규모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전

국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96명이었는데, 남성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원수는 3.16명으로 가구당 0.18명이나 더 많다. 50-64세의 남성 중·고령자 가구 중에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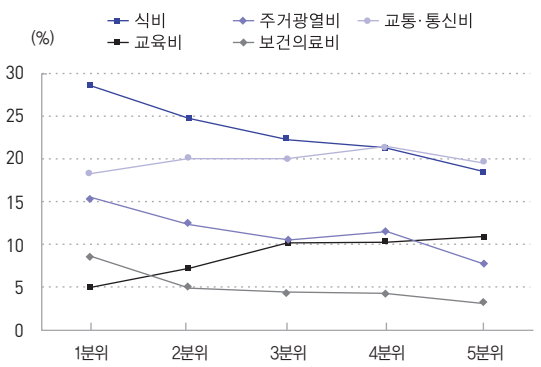
남성 중·고령자 가구는 전국 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지만 지출 규모에서는 후자보다 더 적다. 2007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남성 중·고령자 가구의 월간 총가계지출은 236만 원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 지출액인 258만 원보다 월 22만 원이 적다. 그러나 소비지출만을 살펴보면 남성 중·고령자 가구가 월 208만 원을 지출하여 전국 가구 평균 199만 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남성 중·고령자 가구는 총지출에서 소비지출이 88.2%나 차지하는 반면 전국 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은 77.4%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다. 중·고령자 가구는 젊은 가구와 비교하여 저축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늘리거나 빚을 갚는 데 지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중·고령자의 소비지출은 식비, 교통통신비, 주거광열비, 교육비, 의료비의 다섯 항목이 전체의 2/3 이상(68.1%)을 차지한다. 중·고령자 가구는 식비로 매월 47만 원(22.4%)을 지출하는데, 이는 전국 가구 평균 30만 원(15.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이다. 전국 가구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낮은 항목은 교육비로 중·고령자 가구는 월 18만 원(8.9%)을 지출하는 반면 전국 가구는 월 24만 원(13.5%)을 쓴다. 즉 중·고령자 가구는 젊은 가구보다 자녀 교육에 덜 쓰는 대신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항목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소비지출의 구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비의 비중이 28.1%에 달하며 주거광열비 또한 18.8%로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1분위 계층은 보건의료

비의 비중이 8.9%로 다른 계층보다 매우 높다. 반면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교육비의 비중만 높을 뿐 다른 소비 항목들에서의 비중은 모두 낮다(그림 V-30).

[그림 V-30]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성 비율: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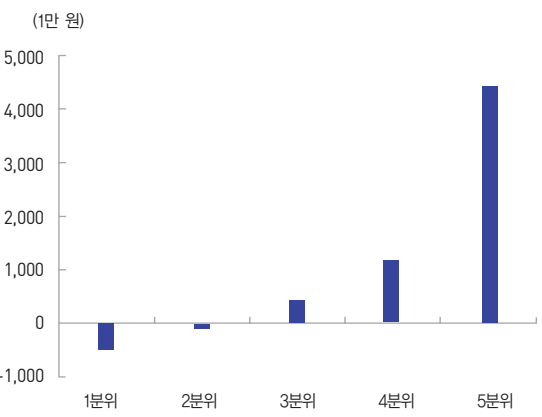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총소득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가계수지에서 두드러진다. 중·고령자 가구 중에서 소득이 적은 1분위와 2분위 계층은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V-31).

중·고령자 가구 셋 중 하나는 지난 1년간 생활비

[그림 V-31]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간 가계수지: 2007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의지하는 수단으로는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또는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며(49%), 다음으로 자녀나 친지에게 빌리거나(17%),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13%),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8%)의 순이다. 즉 남성 50-64세의 중·고령자가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도 자식이나 친지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은 연간 4,445만 원이라는 큰 규모의 가계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현승(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국민 구매력의 국제비교

요 약

- 한국 원화의 시장환율은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 한국의 물가수준은 미국에 비해 최근 3년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빅맥지수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물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원화도 저평가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은 시장환율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7,074달러로 예측되었다. 2007년 최초로 2만 달러를 넘어 21,653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9,162달러로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더 하락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원화로 표시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오히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12만 원, 2,112만 원, 2,181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달러로 표시했을 때는 하락했던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왜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같은 기간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달러당 원화의 시장환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29원, 1,103원, 1,276원으로 상승하면서 원화가 계속 저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했다고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했다고 해야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가 간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에 자주 언급되는 지표가 1인당 국민소득이므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의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고전적인 환율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나라별 물가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물가수준의 차이만을 반영하여 도출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특정상품의 가격을 이용하여 각국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빅맥(Big Mac)지수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물가수준 반영 환율

원화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외국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변동하고 있으며, 하루 중에도 가격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으나 달러로 표시했을 때에는 감소했다. 이를 이해하려면 환율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로 정의되는데, 고전경제학의 의미에서 두 국가 간의 환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각국의 통화로 표시한 가격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질의 운동화를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할 때, 한국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100달러에 판매한다면 미국의 1달러는 1,000원과 교환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환율도 1달러에 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환율이 결정된다면 환율은 각국의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게 되며,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처럼 매일 또는 매시간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환율은 국제무역을 위한 수요 뿐만 아니라 원화와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있어 매 순간마다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환율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을 도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각국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교역상품 및 비교역상품과 서비스 가격들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만약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시장환율로 평가한 1인당 국민소득보다 크다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상대 국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환율이 의미하는 가상의 두 국가 간 물가수준에 비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낮을 때, 시장환율이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은 시장환율로 평가한 1인당 국민소득보다 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시장환율로 평가한 1인당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V-2〉는 2009년 OECD 주요 국가들의 달러 대비 시장환율과 물가반영환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멕시코나 헝가리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환율이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보다 높아 미국보다 물가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반면에 일본이나 덴마크 등은 시장환율이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보다 낮아 미국보다 물가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표 V-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통화의 시장환율¹⁾과 물가수준반영환율²⁾: 2009

(각국 통화/미국 달러)

	시장환율	물가수준 반영환율
멕시코(Peso)	13.514	8.066
한국(Won)	1,276.350	779.284
헝가리(Forint)	202.342	140.041
캐나다(Dollar)	1.143	1.193
호주(Dollar)	1.282	1.481
일본(Yen)	93.570	114.010
덴마크(Krone)	5.361	8.413

주: 1) 한국은 한국은행 자료이고, 나머지 6개국은 IRS 자료임.

2) IMF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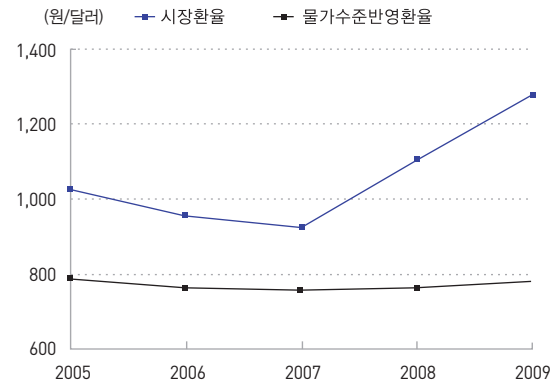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IRS(www.irs.gov);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그림 V-32]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에 대한 시장환율은 최근 3년 연속 상승하여 원화가 달러에 비하여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달러당 757원, 763원, 779원으로 추세는 비슷하지만 상승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은 시장환율에 비해 각각 약 81.5%, 69.1%, 61.1%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물가수준

서울의 물가는 2010년 6월에 국제컨설팅기업인 머서가 발표한 214개 도시들의 해외주재원 생계비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해 2009년 51위에서 급상승했다. 여기서 생계비는 주택, 교통, 식료품 등을 포함한 200여 개의 항목을 포함시켜 산출하였다.

[그림 V-32] 시장환율¹⁾과 물가수준반영환율²⁾: 2005-2009

주: 1) 한국은행 자료임.

2) IMF 자료임.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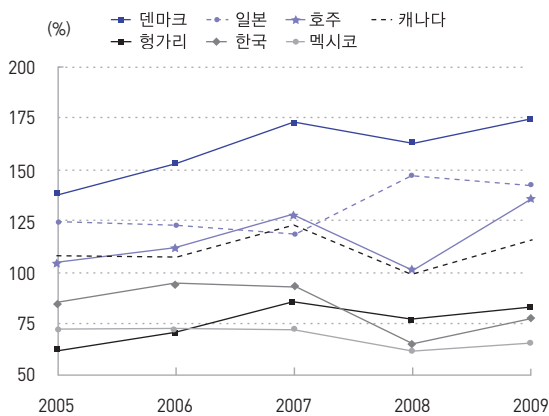
이처럼 특정 부문에 편중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산출한 경우 우리나라의 체감물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된 물가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낮은 이유는 국내 제조업의 발달로 물가 조사에서 가중치가 큰 공산품 가격이 싸고 대표적인 서비스 품목인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및 버스·택시 등 교통비 부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OECD는 매월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과 시장환율을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물가수준을 산정하여 발표한다. [그림 V-33]은 OECD가 발표한 미국을 기준으로 물가수준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비교물가수준을 보면,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이라 할 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6, 95, 93, 66, 78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상승했다가 2007년 소폭으로 하락한

후, 2008년에 가장 낮았다가 2009년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교물가수준은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을 시장환율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그림 V-33]의 비교물가수준은 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의 소요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2009년에 한국에서는 미국가격 대비 78% 수준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비교물가수준¹⁾: 2005-2009



주: 1)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의 물가수준임.

출처: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stat.oecd.org/mei).

그러나 비교물가수준은 시장환율을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시장환율의 변화만으로도 증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에서는 100달러에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에 판매되는 동일한 품질의 운동화가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의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100달러로 구매할 수 있던 것을 한국에서는 200달러가 있어야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가가 비싸진 셈이 되는 것이다.

빅맥지수

물가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나라별로 동질한 품질의 특정 제품의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한 방법이 1986년부터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 발표하고 있는 빅맥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빅맥지수는 나라별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을 시장환율로 환산한 가격이다. 맥도날드 사에서 판매하는 동질한 품질의 빅맥 가격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물가를 평가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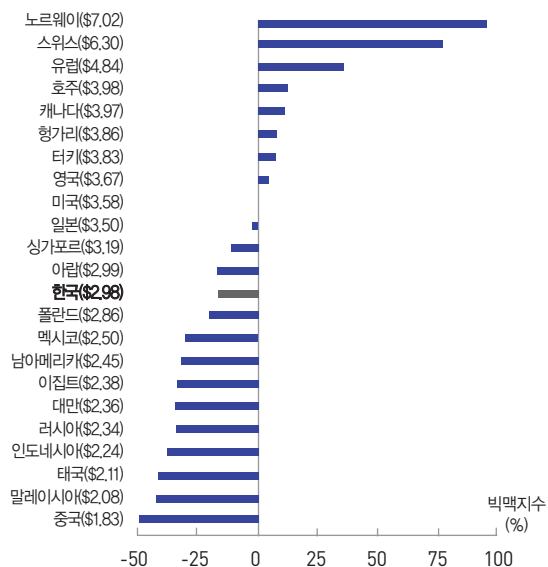
[그림 V-34]는 2010년 1월 5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된 빅맥지수이다. 우리나라의 빅맥가격은 2.98달러로 미국의 빅맥가격인 3.58달러에 비해 8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비교가격 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3.58달러에 판매되는 빅맥이 우리나라에서 3,200원에 판매된다면 빅맥가격을 고려한 적정환율은 894원(3,200원=\$3.58)이 된다. 하지만 당시 시장환율이 달러당 1,141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물가나 환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된다.

하지만 빅맥지수의 문제점도 있다. 빅맥의 조리방법이나 재료에 대해 표준화된 조리방법과 표준화된 재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종사자가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조리방법이 표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료도 나라별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햄버거

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나라별로 상이하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크푸드의 대표 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국가마다 세금, 임대료, 인건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제품으로 취급되는 빅맥 버거의 가격이 시장환율로 환산한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가별 물가나 시장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 커피에서 판매되는 라떼지수, 아이팟지수, 애니콜지수 등이 있다.

[그림 V-34] 빅맥지수¹⁾: 2010



주: 1) 빅맥지수=(국가별 현지 빅맥가격÷미국 빅맥가격)×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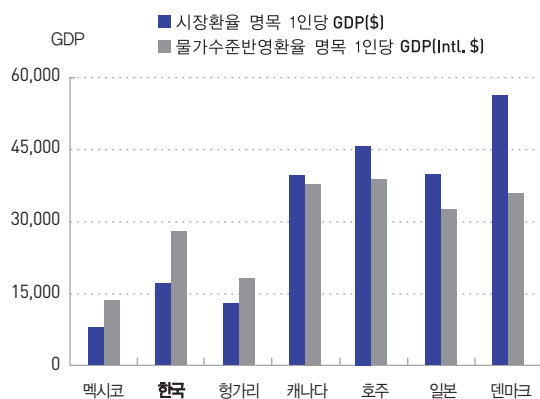
출처: The Economist, Jan(5th), 2010.

국가 간 물가수준 반영 1인당 국민소득

마지막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V-

35]는 2009년 OECD 주요 국가들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명목 GDP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 비교물가수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고 헝가리는 시장환율을 이용한 1인당 명목 국민소득보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크게 나타나 미국에 비해 물가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일본이나 덴마크는 이와 반대로 미국보다 물가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V-3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¹⁾: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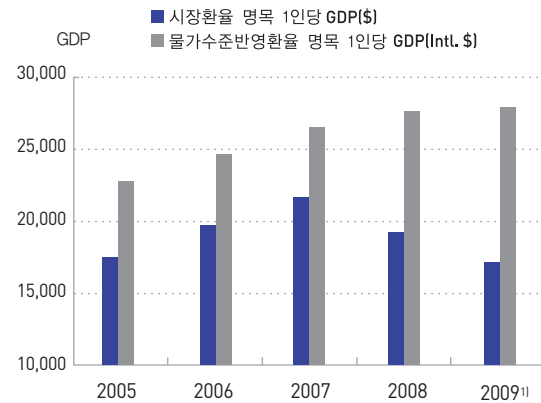
주: 1) 시장환율 GDP의 한국, 일본, 헝가리 자료와 물가수준반영환율 GDP의 멕시코, 한국, 일본, 헝가리, 캐나다 자료는 예측치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구매한다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때 필요한 달러로 표시한 소득이 바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달러를 가지고 구매한다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때 필요한 달러로 표시한 소득이 시장환율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에는 그 날의 시장환율에 따라 필요한 달러로 표시한 소득이 결정되므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된다. 만약에 영국의 평균 가격 수준이 미국의 2배라고 하면, 시장환율로 평가한 영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미국의 2배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수준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영국에서 영국 국민들은 2배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같아지는 것이다.

[그림 V-36] 한국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 2005-2009



주: 1) 2009년 자료는 예측치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그림 V-3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 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413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4년에 21,138달러로 2만 달러를 넘었고, 2007년 26,576달러, 2008년 27,681달러에 이어 2009년에는 27,978달러로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정규승(통계개발원)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서우석 144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 심수진 154

인터넷 중독 실태 • 전종수 162

V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1990년대 이후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고 문화와 여가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여가 생활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문화와 여가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은 1990년대 후반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관람자의 비율 역시 지난 2000년 조사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여가활동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기존 미디어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인쇄신문 구독률은 인터넷신문 이용률의 증가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 여가시간은 1999년 조사에서보다 2004년 조사에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여가비용지출이 증가하면서 여가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여가활동의 중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내관광에 비해 해외관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외래 관광객보다 내국인출국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불경기 이후 이러한 추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지난 1990년대 이래 국민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집계자료와 통계청이 1990년부터 2-4년 주기로 시행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와 여가 부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와 여가의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를 인프라 확충과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환경 조성과 공급 확대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로, 문화향수와 스포츠관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활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대표적

인 경우들이다. 이 고찰을 통해 문화 복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관련 산업의 성장이 실제 개인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셋째로, 정보화와 관련하여 문화와 여가 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와 여가는 정보화의 중요한 동인이면서 동시에 정보화의 영향이 두드러진 분야이다.

넷째로, 여가 시간과 비용 및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시간에서 수행한 여가시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여가활동에서 진행된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관광여행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관광은 국민이 현재보다 더 많이 원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다. 따라서 관광활동의 변화는 삶의 질 향상의 성격과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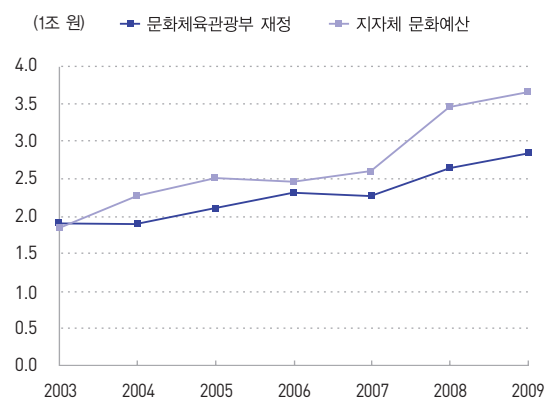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 여가 산업의 성장

1990년대 이후 문화와 여가 부문의 변화를 주도한 요인은 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다양한 문화 여가 상품의 공급이었다. 문화 인프라는 199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충되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공간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문화 인프라의 확충은 일부 민간 경제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것은 정부였다.

정부의 역할은 문화예산의 증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가 발족한 직후인 1991년 문화부문 예산은 당시 정부 재정규모의 0.38%인 1,218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2009년도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조 8,491억 원에 달하고 문화예술 부문

의 예산만 1조 1,27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문화정책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1%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3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넘어섰으며 2009년도에는 총 3조 6,616억 원에 달했다(그림 VI-1). 이와 같은 재정 투자에 힘입어 지방의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 VI-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정¹⁾: 2003~2009



주: 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액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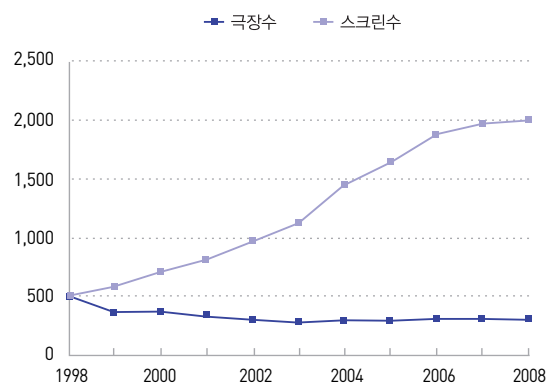
이처럼 비약적으로 증가한 문화 부문의 예산은 문화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진흥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즉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증설 및 운영을 통한 인프라 확충, 각급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되었다.

공연예술의 경우를 보면 문예회관이 2002년에 122개에서 2009년에는 182개까지 늘어났다. 등록공연장의 수도 2002년에 303개에서 2009년에 639개로

증가하였다. 이 중 공공공연장이 397개나 되어 242개인 민간공연장보다 수적으로 더 많았다. 민간공연장의 경우도 시설개선 지원, 행사개최 지원, 할인티켓 사업 등 각종 지원 제도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공연회수가 1991년 4,652회에서 2008년에는 11,515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연분야의 공급 증가는 결국 공연예술 분야의 정책지원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투자에 따른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두드러진 분야는 영화 산업이었다. 1990년대 후반 멀티플렉스의 도입을 기점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화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그림 VI-2).

[그림 VI-2] 극장수와 스크린수: 1998-2008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http://www.kofic.or.kr/cms/59.do>).

문화산업 중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분야로서 게임 산업을 들 수 있다.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6조 5,80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의 게임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8조 7천 억 원까지 성장

하였다가 이후에는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 전년 대비 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성장은 인터넷에 의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에 힘입은 바 크다. 2009년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온라인 게임이 56.4%, PC방이 29.4%로 나타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게임산업 성장의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송, 출판, 콘텐츠, 음원 등의 문화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2000년에 20조 원대였던 문화산업 매출규모가 2008년에는 59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규모면에서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경제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문화산업의 전체 매출규모가 2000년에 GDP 대비 3.6%였는데 2008년에는 GDP 대비 5.7%에 이르게 되었다. <표 VI-1>에서 보듯이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문화산업의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다.

문화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영화산업을 들 수 있다. 제작과 유통 부문의 변화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 등지에서 수학한 젊은 전문인력의 공급, 대자본의 영상산업 진출, 민주화에 따른 작품검열 폐지와 소재 선택의 자유 확대, 멀티플렉스의 확산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질적 성장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 연도

〈표 VI-1〉 문화산업 매출액: 2000-200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만화	-	-	-	0.76	0.50	0.44	0.73	0.76	0.72
출판	2.32	2.43	2.81	14.76	18.92	19.39	19.88	21.60	21.05
음악	0.46	0.46	0.42	1.79	2.13	1.79	2.40	2.36	2.60
게임	2.97	3.05	3.40	3.94	4.32	8.68	7.45	5.14	5.60
영화	1.14	1.29	1.40	2.34	3.02	3.29	3.68	3.20	2.95
애니메이션	0.37	0.34	0.32	0.27	0.27	0.23	0.29	0.31	0.40
방송	4.15	6.17	9.52	7.14	7.77	8.64	9.72	10.53	10.96
광고	5.85	5.30	6.48	7.06	8.03	8.42	9.12	9.43	9.31
캐릭터	3.43	4.12	5.28	4.81	4.22	2.08	4.55	5.12	5.10
기타/에듀테인먼트	-	-	-	1.32	0.88	0.99	0.12	0.16	0.24
합계	20.69	23.16	29.63	44.19	50.06	53.95	57.94	58.61	5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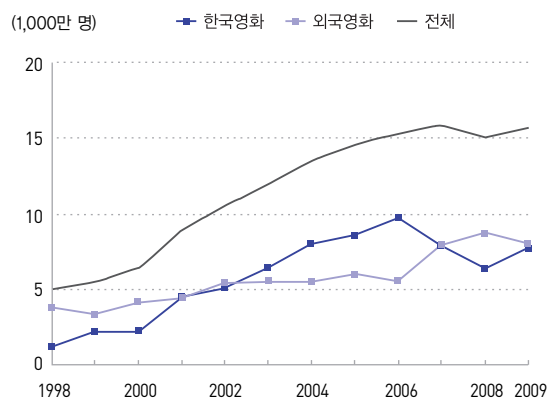
(1조 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 각 년도.

별 편차가 있으나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은 미국 영화산업의 세계 시장 지배에 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산업과 음악산업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을 낳았다.

문화와 여가와 연관되는 산업은 문화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다양한 옥내외 취미 활동, 관광 및 스포츠 등을 포괄하는 여가산업의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71조 3,457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가산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도서관, 영화관, 골프장 등과 같은 여가공간 산업으로서 36조 5,36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가용품산업이 21조 8,947억 원, 여가서비스산업이 12조 9,144억 원의 규모로 추산되었다. 여가산업 중에서 여가용품산업, 특히 스포츠 및 옥외여가활동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

[그림 VI-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수: 199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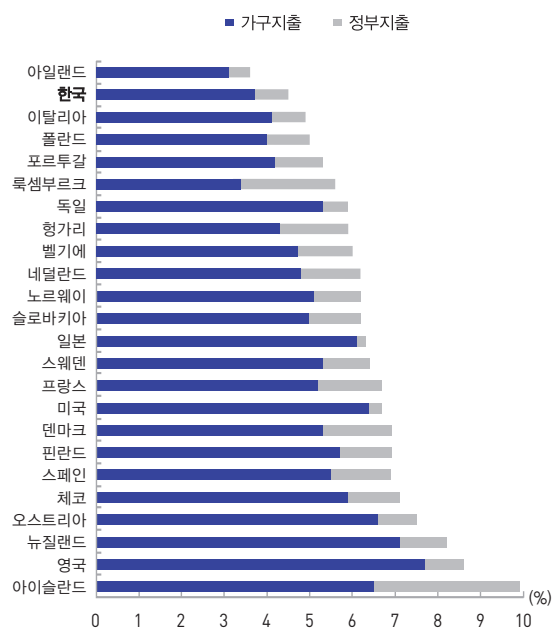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http://www.kofic.or.kr/cms/59.do>).

났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와 여가의 영역에서 정책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가구지출과 정부지출은 전체의 5%를 넘지 못하였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 VI-4).

[그림 VI-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비 지출률¹⁾: 2005



주: 1) GDP 대비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출액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http://lysander.sourceoecd.org/vl=3796737/cl=29/nw=1/rpsv/tact2008>), 2008.

문화향수와 스포츠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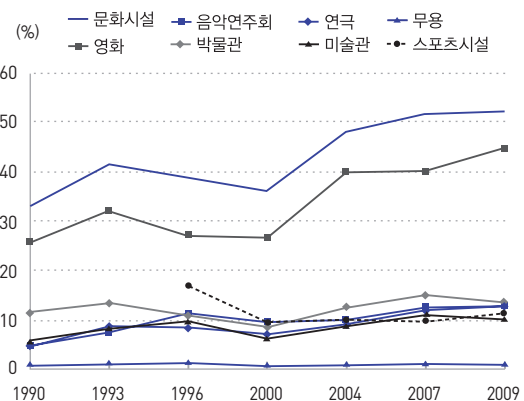
문화여가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통계청은 1990년부터 2-4년 주기로 총 7회에 걸쳐 문화와 여가 부문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관람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관람의 세부 항목에는 음악회, 연

극, 무용,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6개 장르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한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은 2007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9년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은 불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52.4%로 나타났다. 1990년 조사에서 문화예술관람자 비율이 33.4%였던 것을 고려하면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6년과 2000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불경기로 관람비율이 감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불경기 상황에서는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관람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들 중에서 관람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영화였다.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국민의 비율이 2000년까지 30%대 전후였다가 2004년과 2007년에

[그림 VI-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¹⁾: 1990-2009



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공연이나 행사 또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문화시설 항목은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을 1회 이상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는 40%대에 달하였고 2009년에는 44.8%까지 증가하였다. 영화 관객층은 2000년대 들어와서 두터워졌으며 그 저변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문화예술부문 항목들에서도 관람비용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소비자층은 그리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관람의 경우는 최초로 조사된 1996년에는 17.2%였는데 2000년 조사에서 9.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1.3%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미디어의 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터넷 이용의 확산이다.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및 여가에 미친 영향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가 문화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화실태조사」에서 인터넷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복수응답선택 방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자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정보화의 과정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전체의 10% 내외로 추정되는데 2008년에 전체의 약 70%가 되었다(표 VI-2). 이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문화여가활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이용이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OECD 주요 국가들과 인터넷 이용자 홈페이지 구축률을 비교한 2007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36.8%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매체 이용의 변화를 보면 신문을 보는 인구의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독 종류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이신문 구독 비율은 2000년에 97.1%에 달했으나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감

〈표 VI-2〉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1999-200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터넷 이용률	22.4	44.7	56.6	59.4	65.5	70.2	72.8	74.1	75.5	76.5	77.2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¹⁾											
여가활동							78.7	83.4	86.1	92.9	88.4
게임·오락	14.5	21.4									
게임			19.8	44.0	52.5	53.6					
오락			4.3	7.5	19.5	20.8					
동호회			2.2	11.1	7.0	6.7	19.9	17.4	36.5	49.1	43.8
기타	1.1	8.0	13.2	0.8							

주: 1)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문화여가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 2000-2001년은 만 7세 이상 인구, 2002-2005년은 만 6세 이상 인구, 2006년부터는 만 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년도.

〈표 VI-3〉 신문구독률, TV시청률 및 독서율: 1990-2009

	신문구독률			TV 시청률 ¹⁾	독서율
	인쇄신문	인터넷신문	전체		
1990	-	-	66.6	93.9	61.3
1993	-	-	70.5	94.8	64.1
1996	-	-	72.2	95.6	62.6
2000	97.1	20.7	65.1	96.5	59.4
2004	82.8	40.4	63.8	96.4	62.2
2007	73.0	59.8	68.2	95.9	58.9
2009	74.3	73.1	71.4	96.4	62.1

주: 1) 1990-1993년은 지난 1주간, 1996-2004년은 평소, 2007-2009년은 지난 1개월 동안 TV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7-2009년은 TV시청에 케이블TV, 유선방송, 인터넷TV, DMB 시청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소하여 70%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인쇄신문 구독률이 74.3%로 200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 20.7%에 불과했던 인터넷신문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여 2009년 조사에서는 73.1%에 달하게 되었다. 이제 인쇄신문 구독률과 인터넷신문 이용률이 같은 수준이 된 것이다.

TV시청의 경우 시청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시청시간은 2000년대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서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평균 독서권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독서 감소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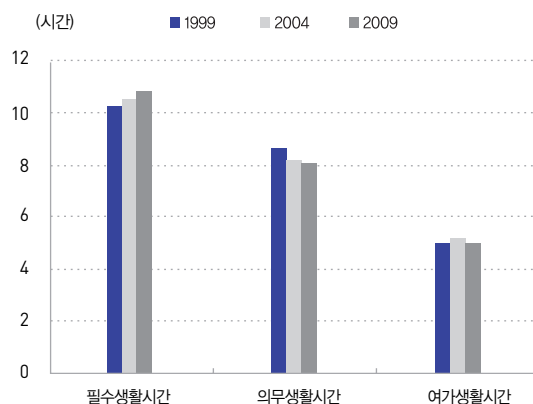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통해 지난 1993년 이래 조사해 온 결과에서도 신문, 라디오, 지상파 TV 등 구매체의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에 비해 케이블TV/위성방송과 함께 인터넷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시간과 비용이다. 먼저 통계청이 3차례(1999년, 2004년, 2009년)에 걸쳐 시행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여가활동시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생활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3분이다.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가시간이 12분이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여가생활시간이 2004년에 비해 12분이 감소한 5시간 1분으로 나타나서 199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주로 필수생활시간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필수생활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0시간 18분에서 2009년 10시간 53분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이나 학업의 시간을 포함하는 의무생활시간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여 1999년 8시간 41분에서 2009년 8시간 7분으로 줄었다(그림 VI-6). 세부항목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필수생활시간 중에서 특히 간식과 음료, 개인위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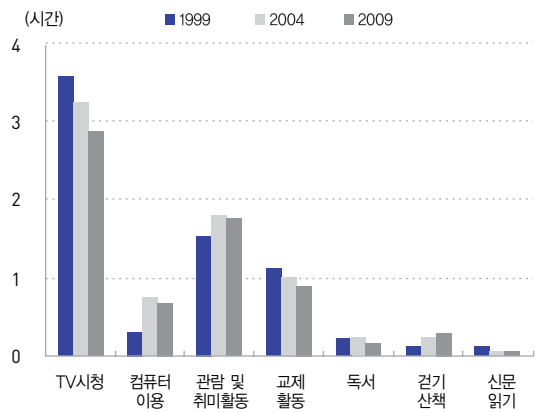
[그림 VI-6] 필수, 의무 및 여가 생활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그림 VI-7]은 여가활동이 활발한 일요일의 여가생활시간을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세 번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관된 변화는 TV시청, 교제활동, 독서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걷기·산책 시간은 늘었다는 것이다. 컴퓨터이용 시간은 2004년 조사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VI-7] 일요일 여가활동시간: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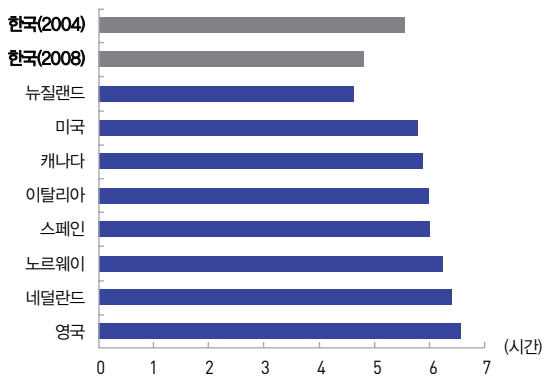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8]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2008 여가백서」에 발표한 국제비교 자료이다.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방법과 항목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가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국가와의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항목 조정을 한 후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의 여가시간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가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짧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OECD의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국가

[그림 VI-8]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평균 여가시간¹⁾



주: 1) 한국의 2004년 자료는 「생활시간조사」, 2008년 자료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이며, 다른 나라의 기준년도는 뉴질랜드의 1999년 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2000년대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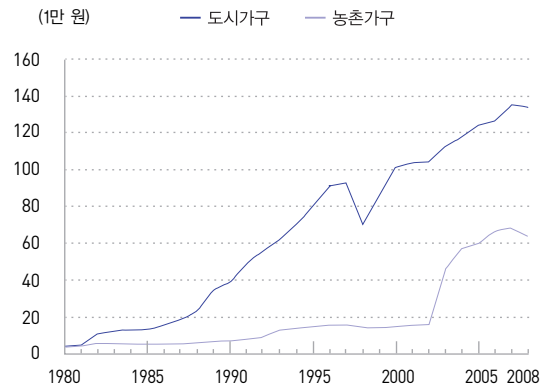
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777시간인데 비해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에 달한다. 1999년에 비해 5년 동안 여가시간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다.

여가활동의 또 다른 제약요인인 비용의 문제를 통계청이 시행한 198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통계」를 수합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자료에서 도시가구와 농촌가구 모두 여가활동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9).

이와 같이 급증한 여가활동비 지출은 여가비용이 여가활동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불만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시간 부족이나 기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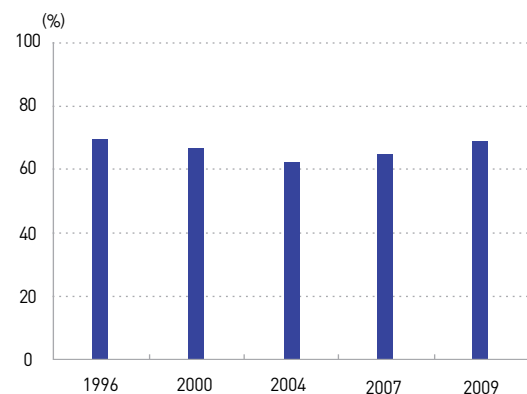
주요 여가활동 지표인 레저시설 이용은 1996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삼림욕장, 놀이공원 등의

[그림 VI-9] 도시와 농촌 가구의 연간 교양오락비 지출액: 1983-200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년도.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1996년에 70%에 가깝다가 2000년과 2004년에 60%선까지 감소하였고 2007년에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6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10).

[그림 VI-10] 레저시설 이용률¹⁾: 199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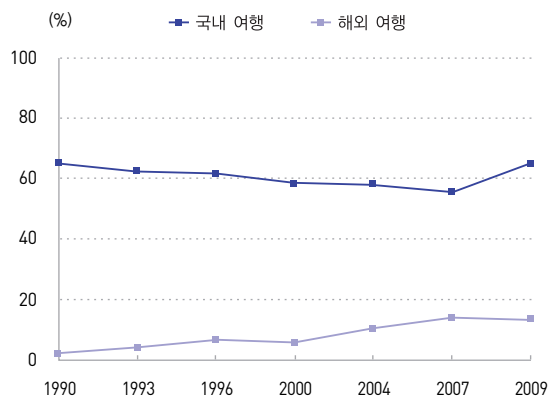
주: 1) 지난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장, 놀이공원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 조사에는 수영장이 추가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관광여행

여가시간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관광여행의 증가이다. 여행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여행자 비율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국내여행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추세의 반전이 나타났다. 2007년에 55.8%까지 감소하였던 국내여행자 비율이 2009년에 64.8%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여행자 비율은 2009년 13.6%로 나타나서 200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11).

[그림 VI-1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¹⁾: 1990-2009

주: 1) 지난 1년간 국내 관광여행과 해외여행을 각각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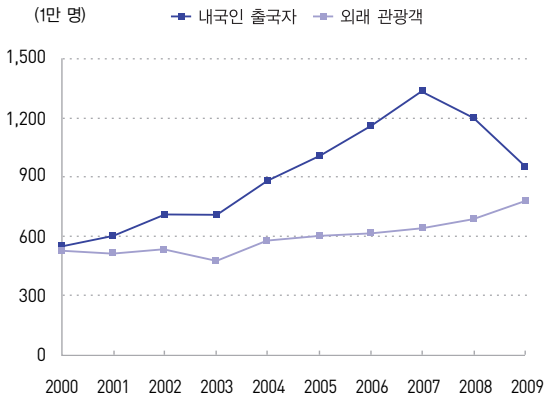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이와 같은 여행의 변화 추세는 출입국자수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관광객 동향과도 연관된다. 1962년 15,18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수가 2009년 780만 명을 넘어섰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 역시 1962년 10,24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1천 만 명을 넘어섰다(그림 VI-12). 이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특히 해외여행자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해외여행자수가 1995년에 외래관광객수를 넘어선 이래 1997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격차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출국자수가 1,160만 명으로 입국자 615만 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내국인의 출국이 크게 줄었다. 반면 외래관광객의 증가는 계속 이어져 해외여행자수와 외래입국자수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림 VI-12] 출입국자수¹⁾: 1990-2009



주: 1) 매달 집계되는 출입국 통계의 연단위 발표 자료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요 약

-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여가생활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음에도 여가시간은 1999년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10대의 여가시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TV시청, 휴식, 교제활동 등의 여가활동은 감소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게임, 스포츠·레저 활동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남자는 여자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여자보다 1시간 가량 더 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 모든 연령대에서 TV시청으로 가장 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TV시청, 교제활동, 휴식 등의 시간이, 10대와 20대에서는 컴퓨터 이용과 게임 참여 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연령별 차이를 보인다.
- 사람들은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자기개발 등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TV시청, 휴식, 가사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거 여가에 대한 개념은 일과 일 사이의 휴식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업무와 여가시간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기계화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었다. 여가생활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됨에 따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소득의 증가는 다양한 여가생활의 수요를 증대시켜 여가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컴퓨터의 대중화로 새로운 여가활동들이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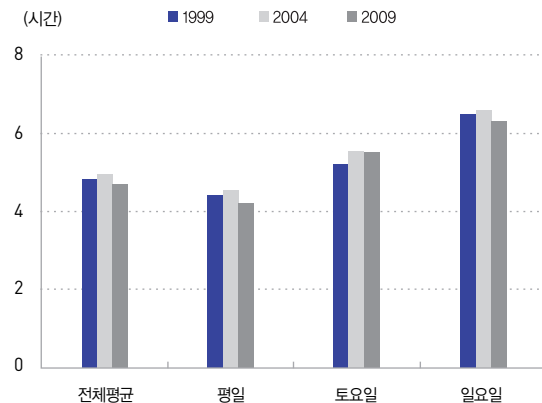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어떠한 활동들로 보내고 있으며, 여가활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특별히 인구집단별

로 여가활동 방법과 여가시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가시간의 감소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확산과 함께 여가생활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가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I-13]은 요일별 1일 평균 여가시간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9년의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42분으로 1999년 대비 7분 정도 감소하였다.

[그림 VI-13] 요일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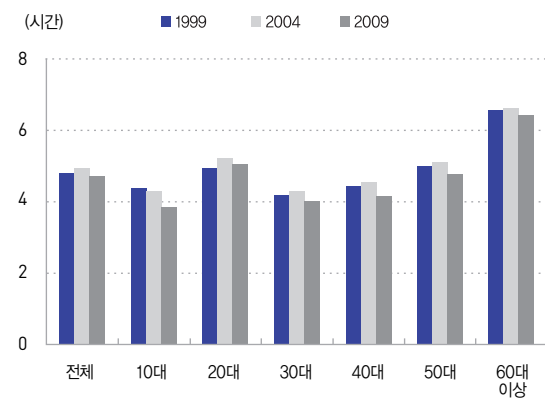
2004년의 여가시간은 199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 와서는 토요일만 제외하고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에만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생활시간을 보면 수면, 식사, 개인위생 등 개인

유지를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생활시간은 1999년과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1999년 10시간 18분에서 2009년 10시간 53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가시간의 감소가 일이나 가사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개인유지 시간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가시간의 감소는 모든 인구집단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먼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고, 10대가 4시간 이하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그림 VI-14). 10대의 경우에는 1999년과 비교하여 여가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여가경험은 이후 생애과정의 여가활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소영 외, 2009).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10대의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0대의 여가활동 시간은 30-40대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후 여가생활을 적절하게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림 VI-14] 연령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전체 시간을 비교해보면,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습시간이 1999년 대비 1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습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시간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별 여가시간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2009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평균 여가시간은 5시간 46분으로 고졸 이상 집단보다 약 50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하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저학력 집단에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VI-15]는 1999년 이후의 교육수준별 여가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 여가시간은 중졸 이하의 경우 1999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고졸 이상에서는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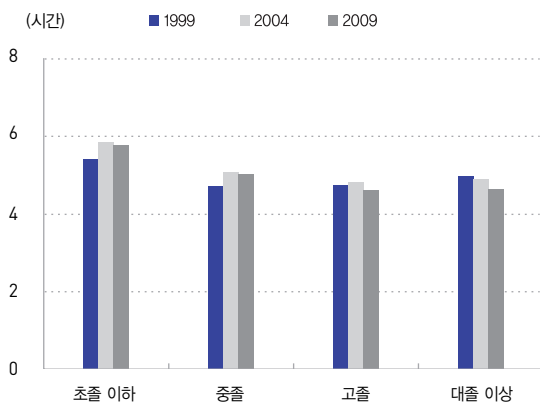
1999년 이후의 교육수준별 전체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증가하였고 일을 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의 증가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일을

하는 시간은 중졸 이하 집단에서 1999년 이후 1시간 이상 감소하여 고졸 이상 집단보다 약 30분 가량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은퇴로 인한 일하는 시간의 감소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별 평균 여가시간을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숙련직의 여가시간이 2009년 4시간 28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서비스·판매직의 여가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의 여가시간의 변화를 보면(그림 VI-16), 관리직 및 전문가 집단과 사무직에서 1999년 이후 여가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어업·숙련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에서는 2004년에 약간 증가하다가 2009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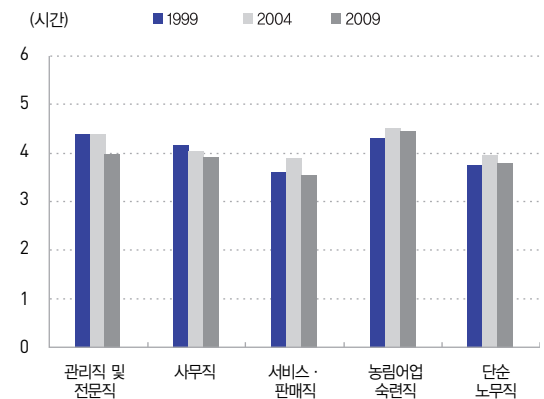
이러한 직업별 여가시간의 차이를 전체 생활시간의 차이로 비교해보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관리 시간은 1999년 이

[그림 VI-15] 교육수준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그림 VI-16] 직업별¹⁾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주: 1) 1999년과 2004년 자료의 경우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전문가와 기술공 및 전문가를 관리자 및 전문가로, 기능원, 기계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단순노무직으로 각각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후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15-20분 증가하였고,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같은 기간 5-10분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사무직보다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가사일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시간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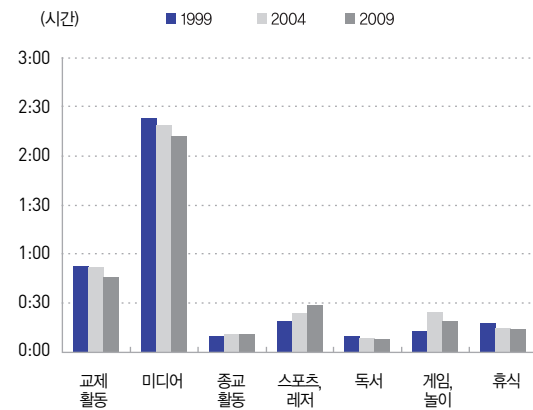
여가활동의 변화

여가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생기고 있으며,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여가활동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VI-17]는 1999년 이후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에 미디어 이용으로 보내는 시간이 2시간 12분으로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2배 이상 긴 편이지만, 10년 전인 1999년보다 10분 이상 감소하였다. 교제활동, 휴식시간 또한 199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스포츠·레저 활동, 게임과 놀이 등의 여가활동 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포츠·레저 활동은 1999년 19분에서 2009년 29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과 2009년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보면, 2004년 이후 휴식, 사교활동으로 여가생활을 보내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활동, 창작적 취미나 자기개발 등의 여가활동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여

[그림 VI-17]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가시간이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스포츠·레저 활동, 게임과 놀이 등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표 VI-4>를 구성해 보았다. 대부분의 세부 여가활동들은 1999년 이후 큰 변화없이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여가활동의 경우 1999년 이후 평균시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 이용 항목에 포함되는 TV시청과 컴퓨터정보이용의 경우

<표 VI-4> 세부 여가활동별¹⁾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1999	2004	2009
TV시청	2시간 5분	1시간 58분	1시간 51분
컴퓨터정보이용(인터넷)	3분	11분	13분
걷기, 산책	6분	11분	13분
게임(컴퓨터, 게임기)	6분	19분	14분
휴식	18분	15분	14분

주: 1) 연간 변화량이 큰 주요 여가활동만 제시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V시청은 1999년 2시간 5분에서 2009년 1시간 51분으로 감소한 반면, 컴퓨터정보이용은 같은 기간에 3분에서 13분으로 증가하였다. 스포츠·레저활동 시간의 증가는 주로 걷기와 산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걷기와 산책은 1999년 6분에서 2009년 13분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컴퓨터나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도 1999년 6분에서 2009년 14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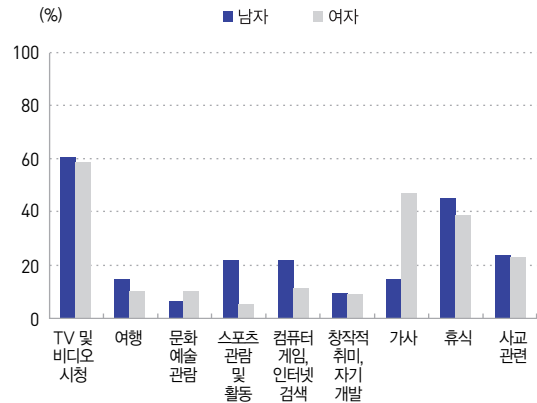
이러한 여가활동 시간의 변화는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주로 TV시청이나 휴식, 교제활동 중심의 여가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컴퓨터 이용과 게임 등의 여가시간의 증가는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증가를, 스포츠·레저활동 시간의 증가는 최근 들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강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 간 여가활동의 차이

[그림 VI-18]은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의 경우 가사의 비율이 2009년 46.8%로 남자의 14.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자는 문화예술 관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포츠 관람·활동의 비율은 남자가 21.9%로 여자보다(5.4%)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또한 남자의 비율이 21.6%로 여자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평균 여가시간에서도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의 2009년 1일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그림 VI-18] 성별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¹⁾: 2009



주: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4시간 54분, 4시간 30분으로 남자가 24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요일의 경우 남자의 여가시간은 6시간 58분인데 비해 여자는 5시간 40분으로 남자의 여가시간이 무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자는 여자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여가를 가사일로 보내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별 생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주말에 가정관리를 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2시간 40분 가량으로 남자보다 2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가사일과 여가시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크지만 과거보다 이러한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가사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에 보내는 평균시간도 여자의 경우 199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남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집단 간 여가활동의 차이

연령대별로 여가활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집단 간 주요 여가활동의 평균시간을 비교해 보았다(표 VI-5). 모든 연령대에서 TV시청이 2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 TV시청이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여가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TV시청, 교제활동, 휴식과 같은 여가활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반면, 최근 들어 정보화 기기의 발달로 증가하는 여가활동인 컴퓨터정보이용이나 게임 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긴 평균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20대에서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10대의 경우 게임 시간이 1시간 9분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났으며, 독서 시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컴퓨터정보이용 시간(39분)과 관람·문화행사참여 시간(13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참여비율이 높아진 스포츠·레저활동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참여 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50대에서 가장 긴 평균시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레저활동 시간은 1999년 이후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레저활동의 세부 항목 통계를 보면 걷기·산책은 40-50대에서, 등산·하이킹은 30-40대에서, 단체 스포츠는 10-20대에서, 드라이브·관광 등은 20-30대에서 참여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이나 교제활동, 휴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레저활동 또한 단체 스포츠나 운동보다는 걷기·산책 등의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반면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스포츠·레저 활동 시간은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고, 컴퓨터 이용이나 게임 등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여가활동과 현실의 차이

지금까지 인구집단별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

〈표 VI-5〉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2009

	교제활동	신문	TV	독서	컴퓨터 정보이용(인터넷)	관람·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레저활동	게임	휴식
10-19세	42분	1분	2시간 31분	19분	21분	5분	37분	1시간 9분	8분
20-29세	58분	2분	2시간 5분	13분	39분	13분	30분	40분	10분
30-39세	47분	3분	2시간 19분	9분	19분	6분	29분	13분	10분
40-49세	47분	5분	2시간 36분	9분	12분	3분	44분	8분	13분
50-59세	58분	5분	2시간 43분	6분	6분	1분	55분	5분	18분
60세 이상	1시간 2분	5분	3시간 31분	4분	1분	1분	49분	2분	29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여가활동이 본인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표 VI-6〉은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여가활동은 TV시청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가사, 사교활동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TV시청은 11.1%에 불과하고, 휴식과 가사도 각각 18.4%와 4.3%에 불과하여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여가활동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여행이 61.2%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 여행을 한 사람의 비율은 12.4%로 실제와 희망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여행, 문화예술관람, 자기개발, 스포츠 활동 등이 높게 나타나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여가활동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도 차이가 있다. 〈표 VI-7〉은 연령대별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연령대에 걸쳐서 여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TV시청, 휴식, 사교활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창작적 취미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19세의 경우 컴퓨터 게임 및 검색을 희망하는 비율이 25.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봉사활동은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은 40대 이하의 전체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개발 활동은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하고 있는 여가활동, 즉 TV시청, 휴식, 교제활동 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활동적인 여가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희망 여가활동의 경향을 볼 때 향후 여가활동에 더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히 고연령층이 은퇴 후 좀 더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젊은 세대의 여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I-6〉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비율: 2009

	TV·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검색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가사	휴식	사교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¹⁾	59.6	12.4	8.3	3.1	10.3	16.2	3.1	6.1	1.6	31.0	42.0	23.5
희망하는 여가활동 ²⁾	11.1	61.2	22.2	7.1	20.3	5.9	14.5	25.7	10.2	4.3	18.4	21.6

주: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

2) 앞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표 VI-7〉 연령별 희망 여가활동 비율¹⁾: 2009

	(%)											
	TV·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검색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가사	휴식	사교
15-19세	14.8	45.8	35.6	9.1	22.5	25.1	20.1	34.9	4.2	0.6	15.7	22.2
20-29세	7.2	65.3	32.8	8.3	23.2	8.8	19.2	42.0	5.9	1.3	14.3	18.2
30-39세	6.7	66.9	29.5	8.6	25.2	5.2	18.7	37.0	8.2	2.4	16.5	14.7
40-49세	7.9	66.2	21.0	8.2	26.7	2.8	14.5	24.1	14.3	4.0	16.6	18.6
50-59세	10.6	63.7	14.6	6.3	17.6	2.8	11.8	15.1	15.8	5.9	18.9	24.9
60세 이상	21.7	50.6	6.6	2.6	6.1	1.6	5.6	5.3	9.2	9.6	27.3	32.6

주: 1) 앞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참고문헌

- 윤소영 외. 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수진(통계개발원)

인터넷 중독 실태

요 약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중독률은 평균 8.5%로 선진국의 약 5%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약 13%로 성인보다 두 배 정도 높으며, 특히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한부모 가정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에 비하여 온라인게임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중독자의 80% 정도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1996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골드버그(Ivan Goldberg)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같은 해 심리학자 영(Kimberly Young)이 인터넷 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충동조절장애(impulsive control disorder)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중독의 준거를 마련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학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충동조절 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사이버섹스 중독(cyber-sexual addiction), 사이버관계 중독(cyber relation-ship addiction), 네트워크 강박증(net compulsions), 정보과몰입(information overload),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 등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임상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미디어 학자들은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해 인터넷 중독, 병리적 인터넷 사용, 컴퓨터 중독, 컴퓨터 매개커뮤니케이션 중독, 컴퓨터 정크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용어를 달리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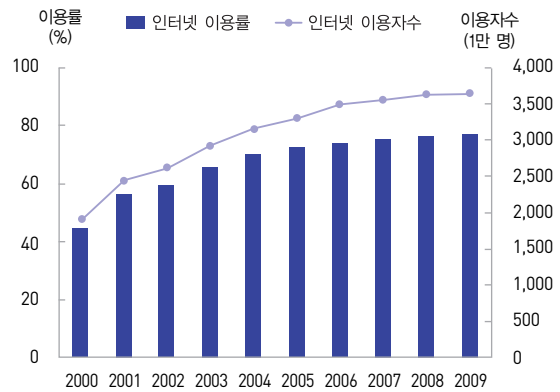
이란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과다하게 인터넷에 의존하여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이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사이버공간과 현실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실태와 중독자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이용과 중독 실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상 인구가 만 7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바뀔 정도로 2000년 이후부터 특히 저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09년 77.2%로 상승하였고 이용자수는 1,904만 명에서 3,65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19).

2009년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6%이고 이용자수는 3,574만 명이며,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1.8%로 이용자수는 84만 명이다.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여가 각

[그림 VI-19]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¹⁾: 2000-2009



주: 1) 2000-2001년까지는 만 7세 이상, 2002-2005년까지는 만 6세 이상, 2006년부터는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년도.

각 82.4%와 71.9%로 남자가 높다. 연령별로는 10대가 99.9%, 20대가 99.7%, 30대가 98.8%로 젊은 층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중독률을 2004년부터 세계 최초로 공식 국가승인 통계로 채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인터넷 중독률이 높아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승인 인터넷 중독률 통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로

<표 VI-8> 인터넷 중독률과 중독자수¹⁾: 2004-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중독률 (%)	중독자수 (1,000명)
청소년 ²⁾	20.3	1,537	15.3	1,170	14.0	980	14.4	1,047	14.3	1,035	12.8	938
성인 ³⁾	8.9	1,691	9.9	1,692	7.0	1,094	6.5	995	6.3	964	6.4	975
전체	14.6	3,228	12.6	2,862	9.2	2,074	9.1	2,042	8.8	1,999	8.5	1,913

주: 1) 청소년은 4점 척도로 구성된 40개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값의 합산 점수로, 성인은 4점 척도로 구성된 20개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값의 합산 점수로 중독 여부를 구분함. 청소년 중독자는 총 160점 중 초등학교생 82점 이상, 중 · 고등학교생 95점 이상인 경우이며, 성인 중독자는 총 80점 중 43점 이상인 경우임.

2) 만 9-19세 인구임.

3) 만 20-39세 인구임.

출처: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각년도.

산출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14.6%에서 2009년 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같은 기간에 인터넷 중독 자수는 323만 명에서 191만 명으로 132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표 VI-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20%대에서 2006년에 14%대로 줄어든 후 몇 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12.8%로 줄어들었으나 성인 인터넷 중독률보다 두 배 정도 높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아직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8.9%에서 2008년 6.3%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에 6.4%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은 인터넷 중독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16.6%로 양부모가정 자녀의 12.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경우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 인터넷 중독 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9).

맞벌이 가구원과 비맞벌이 가구원 간에도 인터넷

중독률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맞벌이 가구원의 인터넷 중독률은 9.9%로 비맞벌이 가구원의 인터넷 중독률 7.3%보다 2.6%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0).

〈표 VI-10〉 맞벌이 여부별 인터넷 중독률: 2009

(%)

	고위험 사용자 ¹⁾	잠재적 위험 사용자 ²⁾	합계
맞벌이가정	1.8	8.1	9.9
비맞벌이가정	1.3	6.0	7.3

주: 1)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생은 총 160점 중 각각 94점 이상과 108점 이상, 성인은 총 80점 중 67점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임.

2)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생은 총 160점 중 각각 82-93점과 95-107점, 성인은 총 80점 중 43점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임.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9.

인터넷 중독자의 인터넷 이용실태

여기에서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과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11〉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자는 정보검색(64.2%), 게임(63.3%), 메신저·채팅(37.1%), 영화·동영상 다운로드(32.7%)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도 주로 정보검색(77.7%)이나 게임(40.3%)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중독자에 비해 게임 목적의 이용 비율이 크게 낮다. 특히 고위험 중독자의 경우,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70%에 가깝다. 이는 게임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일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결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

〈표 VI-9〉 청소년의 가족구성형태별 인터넷 중독률: 2009

(%)

	고위험 사용자 ¹⁾	잠재적 위험 사용자 ²⁾	합계
양부모가정	2.4	10.2	12.6
한부모가정	5.0	11.6	16.6

주: 1) 총 160점 중 초등학교생 94점 이상, 중·고등학생 108점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임.

2) 총 160점 중 초등학교생 82-93점, 중·고등학생 95-107점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임.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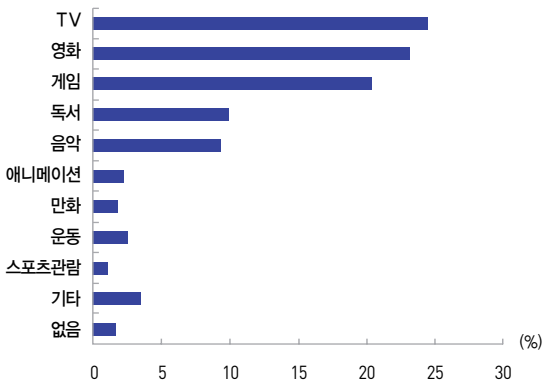
〈표 VI-11〉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 이용목적¹⁾: 2009

	정보 검색	게임	온라인 쇼핑	이메일	메신저· 채팅	영화· 동영상 다운로드	교육· 학습	홈페이지 관리	금융 거래	동호회 활동
일반 사용자	77.7	40.3	32.7	30.0	26.7	26.5	17.7	14.9	11.6	10.5
인터넷 중독자	64.2	63.3	20.3	19.8	37.1	32.7	12.6	17.3	5.7	13.6
고위험 사용자	68.6	69.4	21.3	21.6	30.2	40.3	13.0	12.8	6.9	3.2
잠재적 위험 사용자	63.3	62.1	20.1	19.4	38.6	31.1	12.5	18.3	5.4	15.9
전체	76.6	42.2	31.7	29.1	27.6	27.0	17.3	15.1	11.1	10.8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9.

서」에 의하면 게임(20.4%)은 TV(24.5%), 영화(23.2%)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즐기는 세 가지 여가활동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국민의 51%가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게임플랫폼은 온라인 게임(70%)이며, 선호하는 게임 장르는 롤플레이팅(31%)이다(그림 VI-20).

[그림 VI-20]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0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77.4%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85.6%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2).

성인에 비해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의 85.0%, 중학생의 80.6%, 고등학교의 69.3%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게임이 용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보건복지부(현재는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소 등 전국의 인터넷 중독 상담기관 100여 곳의 2008년 상담건수는 79,438건에 이르며, 이중 게임 중독을 호소한 경우가 66,877건으로 전체 상담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온라인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게임국가들에서도 롤플레이팅게임의 일종인 다중접

〈표 VI-12〉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서비스 이용률: 2009

(%)

	온라인 게임	채팅 및 메신저	동호회카페·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	미니홈피 블로그	성인용 사이트	온라인 도박	휴대전화 ¹⁾
일반 사용자	53.0	44.5	36.0	54.2	36.4	3.2	1.7	32.2
인터넷 중독자	77.4	60.1	41.3	53.1	42.9	11.6	5.3	39.9
고위험 사용자	85.6	50.9	24.9	47.3	29.0	7.9	5.2	31.8
잠재적 위험 사용자	75.7	62.1	44.9	54.4	45.9	12.3	5.3	41.6
전체	55.0	45.9	36.4	54.1	36.9	3.9	2.0	32.8

주: 1)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임.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9.

속온라인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 MMORPG)에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학부모단체들의 게임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게임이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고, MMORPG를 비롯한 온라인게임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이자 소통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제도적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온라인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미국의학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미국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비디오게임 중독을 2012년부터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 정식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여진다.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전한 인터넷이용 문화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의 협력체계를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히 보인다.

전종수(한국정보화진흥원)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최진호 168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 최진호 177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 이창무 183

V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2009년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11.0%, 그리고 신주택보급률로 계산했을 때에도 101.2%로 이제는 일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
- 2009년 한 해 동안 총 38만 2천 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되었는데, 이는 2008년과 더불어 1990년 이래 가장 적은 주택공급수이다.
-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2008년에는 74.6%가 만족하고 있는데 2006년의 79.5%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다.
- 1990년에 비해 2009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하였는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1.9배와 1.3배가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6.2% 하락하였다.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용 승용차는 총 1,255만 대로 1980년의 약 18만 대와 비교하면 67배가 증가하였고,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74대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 문제를 다룬다. 우선 지난 30여 년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어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우리 국민은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주택의 점유형태별로, 그리고 주택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서울, 광역시, 전국으로 구분하여 주택유형별 가격지수로 관찰하고자 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자가용 보유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각 가구의 교통비 지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주택의 수급

주택은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요건의 하나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라서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건설기간의 장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내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

람과의 재산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가고 있으며, 또 내 집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과 그 이외 지역 간의 주택의 가격차가 너무 심해 일부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 상황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표 VII-1>에 지난 40년간의 주택 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적인 방식의 주택보급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2005년부터 산출하기 시작한 신주택보급률도 수록하였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를 비교하여 주택재고의 부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주택수를 일반 가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 주택의 수는 거처의 단위가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표 VII-1>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 1970-2009

	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보급률 ¹⁾ (%)	가구수 ²⁾ (1,000가구)	주택수 ³⁾ (1,000호)	보급률 ¹⁾ (%)
1970	5,576	4,360	78.2	-	-	-
1975	6,367	4,734	74.4	-	-	-
1980	7,470	5,319	71.2	-	-	-
1985	8,751	6,104	69.8	-	-	-
1990	10,167	7,357	72.4	-	-	-
1995	11,133	9,570	86.0	-	-	-
2000	11,928	11,472	96.2	-	-	-
2005	12,491	13,223	105.9	15,887	15,663	98.3
2006	12,634	13,534	107.1	16,105	15,978	99.2
2007	12,760	13,793	108.1	16,364	16,295	99.6
2008	12,891	14,169	109.9	16,619	16,733	100.7
2009	13,025	14,456	111.0	16,862	17,071	101.2

주: 1) 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2) 1인가구를 포함함.
3)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의 거처를 포함함.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데, 예를 들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1채로 취급된다. 또 가구는 친족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가구와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는 제외된다.

이와 같이 오래 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쓰이던 주택과 가구의 정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동안의 주택과 가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구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구개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새로운 주택보급률의 도입 주장에 부응하여 2005년부터는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도 1인가구를 포함시킨 신주택보급률이 함께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주택보급률의 정의에 따라 한국사회의 주택 수급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새롭게 계산된 신주택보급률도 소개하여 검토하려 한다. 2009년 현재 기존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11.0%로서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 한국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1970년에 78.2%였고 1985년에는 69.8%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상승하여 2000년에는 96.2%에 이르렀고 2002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100.6%가 되었다. 그 이후 주택보급률은 해마다 상승해 2005년에는 105.9%, 2008년에는 109.9%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주택보급률

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택보급률 계산에는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주택보급률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신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98.3%로 기존의 주택보급률 105.9%보다는 7.6% 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신주택보급률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06년에는 99.2%, 2008년에는 100.7%로 100%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10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주택보급률의 상승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택사정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는 <표 V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신규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표를 보면 1980년에는 한 해 동안 약 21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실적이 거의 비슷하였고, 실질 GDP에 대한 주택투자액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1980년에 5.5%였다.

〈표 VII-2〉 연간 주택건설 실적: 1980-2009

	공공 (1,000호)	민간 (1,000호)	합계 (1,000호)	주택투자율 ¹⁾ (%)
1980	106	105	212	5.5
1985	132	95	227	4.6
1990	269	481	750	8.8
1995	228	391	619	7.4
2000	140	293	433	4.3
2005	141	323	464	5.1
2009	168	214	382	-

주: 1) GDP 대비 주택투자액 비율임.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주택건설 실적은 1987년까지는 연간 대체로 22만 호에서 28만 호 사이에 머물렀으나 1988년에 41만 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 호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326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65만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투자율도 평균 8%대에 이르러 역대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이처럼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1988년의 올림픽 이후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에 기인한다.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은 1989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활발한 주택건설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다소 주춤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연평균 50만 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주택공급이 늘어나 2002년에 67만 호, 2003년에 59만 호가 공급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47만 호 내외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최근 2007년에는 55만 6천 호가 신규로 공급되어 그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2008년 이후에는 대폭 감소해 2009년에는 38만 2천 호만이 공급되었다.

주거만족도

우리 국민은 전반적인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표 VII-3>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주택의 점유형태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80.5%가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무상 및 기타, 전세, 그리고 보증금 있는 월세의 순으로 주택에 만족하고 있다.

주택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족도가 39.5%에 머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글세의 경우로서 49.8%만이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의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50%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표 VII-3>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8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자가	1.8	17.7	73.1	7.4
전세	3.2	27.6	66.6	2.7
보증금 있는 월세	5.8	30.6	61.3	2.4
보증금 없는 월세	11.1	49.4	38.6	0.9
사글세 ¹⁾	8.0	42.2	48.6	1.2
무상 및 기타	4.8	24.2	66.5	4.4

주: 1) 약정 기간의 총 월세를 계약 시 선불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임.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주택의 형태별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VII-4>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에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74.6%로 2006년의 79.5%에

비해 낮아졌다. 또 주택형태별로도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유형에서 2006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졌다. 2006년에는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86.7%가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74.8%, 그리고 연립주택 거주자의 74.2%가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의 조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기는 하나 82.4%로 하락하였고, 단독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도 두 번째로 높으나 67.6%로 떨어졌다.

〈표 VII-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6, 2008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2006				
단독주택	3.6	21.5	66.2	8.6
아파트	1.4	12.0	75.9	10.8
연립주택	2.9	21.8	68.1	6.1
다세대주택	3.8	25.3	66.1	4.9
전체	2.6	17.9	70.3	9.2
2008				
단독주택	3.6	28.8	65.7	1.9
아파트	1.4	16.2	77.1	5.3
연립주택	3.4	25.4	68.9	2.1
다세대주택	3.3	24.4	70.7	1.5
전체	2.6	22.8	71.2	3.4

출처: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내집 마련의 어려움: 주택가격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택 보유는 손쉬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집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일반인들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져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VII-5〉에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 그리고 전국의 주택가격지수를 주택의 형태별로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각각의 지수 값은 2008년을 10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일관성 있게 하락한 시기여서 1990년과 1995년 두 시점의 지수만 비교하였고,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두 시점에서의 지수만 표시하였다.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에 비해 2009년 현재 아파트 가격은 1.9배가 증가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연립주택으로서 가격이 1.3배 상승하였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0년의 가격지수는 106.2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을 종합해 보면 1990년에 비해 2009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I-5〉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변화를 보면, 그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만 한 것은 아니고 두 차례 하락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주택유형별로 보면 우선 아파트의 경우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일관성 있게 가격이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 추세는 서울을 비

〈표 VII-5〉 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¹⁾: 1990-2009

	서울				6개 광역시 ²⁾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1990	41.2	74.1	76.4	56.0	70.7	124.7	94.8	87.1	54.6	106.2	79.9	71.0
1995	37.0	66.0	69.2	50.2	61.8	113.6	85.7	78.1	50.3	96.9	73.0	64.9
1996	38.6	65.6	69.7	50.9	62.7	112.9	85.6	78.4	52.1	96.7	73.4	65.9
1997	40.6	65.3	70.6	51.9	63.9	111.0	84.9	78.4	54.5	96.1	73.8	67.2
1998	34.6	57.8	60.1	45.1	55.9	97.8	76.6	69.1	47.1	85.4	65.1	58.9
1999	39.0	58.1	59.8	47.6	59.9	96.0	73.5	70.8	51.2	84.1	63.9	60.9
2000	40.6	59.1	61.1	49.0	60.5	93.7	72.7	70.4	51.9	82.9	64.4	61.2
2005	75.4	79.0	74.3	76.0	91.9	95.2	78.5	90.9	84.1	90.7	75.2	84.3
2006	93.6	88.0	84.9	90.3	95.6	97.7	84.3	94.5	95.7	95.3	85.6	94.0
2007	96.9	94.2	92.4	95.2	97.2	99.2	91.3	96.8	97.8	98.0	92.7	97.0
2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9	102.6	103.0	102.5	102.7	102.1	100.3	101.0	101.5	101.6	100.9	101.8	101.5

주: 1) 2008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2)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함.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못한 6대 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인 1997년까지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8년에 다시 급격히 하락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주택가격지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1999년부터는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200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4년에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05년부터는 다시 상승하여 2009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1990년 이래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상승하다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04년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1990년에 41.2였으나 1998

년에 34.6으로 가장 낮았고, 단독주택은 1990년에 74.1이었으나 1998년에 57.8로 최저치로, 그리고 연립주택은 1990년에 76.4였으나 1999년에 59.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1년간 주택가격이 가장 급등했던 해는 2002년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가격지수는 2001년에 48.5였으나 2002년에는 63.4로 급등해 지수 상으로 한 해 동안에 무려 31%나 가격이 폭등했다. 6개 광역시의 경우에도 주택지수가 2001년의 69.5에서 2002년에 81.7로 뛰어 18%가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한 해 동안에 23% 상승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에 다시 한 번 급등하여 24%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

는가? 먼저 자기 집을 구매한 경우든 혹은 전세 등 집을 임차한 경우든 자기 자금이 가장 주요한 주택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다만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29.6%를 차지해 차가의 경우(7.8%)보다 더 많은 금융기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무상 차입도 자가와 차가 각각 8.2%, 9.6%를 차지해 주택자금 조달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었다(표 VII-6).

〈표 VII-6〉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

	자기 자금	금융 기관 대출	부모 친지 무상 차입	개인에게 빌림	기타 ¹⁾	합계
자가	56.7	29.6	8.2	2.3	3.3	100.0
차가	78.6	7.8	9.6	2.0	1.9	100.0

주: 1) 해당 주택을 세놓은 금액, 다른 주택을 세놓은 금액, 금융기관 외 회사보조 등이 포함됨.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한편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별로 주택자금 조달 방법을 비교해 보면 20대와 70세 이후에는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무상대여 비율이 다른

〈표 VII-7〉 연령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

	자기 자금	금융 기관 대출	부모 친지의 무상 지원	개인에게 빌림	기타 ¹⁾	합계
20-29세	48.7	31.8	16.6	2.0	0.8	100.0
30-39세	51.0	36.9	8.9	1.2	2.0	100.0
40-49세	55.8	35.3	5.0	1.0	2.8	100.0
50-59세	57.9	30.4	5.2	2.4	3.8	100.0
60-69세	59.6	24.3	8.3	3.4	4.4	100.0
70세 이상	59.5	17.7	15.5	4.0	3.3	100.0

주: 1) 해당 주택을 세놓은 금액, 다른 주택을 세놓은 금액, 금융기관 외 회사보조 등이 포함됨.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결혼 초기에, 그리고 노령기에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경우는 30대 이후부터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자기자금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한다(표 VII-7).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전국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망의 확충과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9년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표 VII-8〉을 보면, 1980년에는 등록된 자가용 총 대수가 약 18만 대에 불과하여 1가구당 평균 0.02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총 자가용 승용차는 1,255만 대에 달하였다. 이는 1980년의 약 18만 대와 비교하면 7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74를 기록하여 2005년에 0.67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 의하

〈표 VII-8〉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9

	자가용 승용차 대수 (1,000대)	1가구당 대수
1980	179	0.02
1985	449	0.05
1990	1,902	0.17
1995	5,778	0.45
2000	7,798	0.54
2005	10,759	0.67
2009	12,551	0.74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면 우리나라의 일반 가구 중 자가용을 소유한 가구는 61.5%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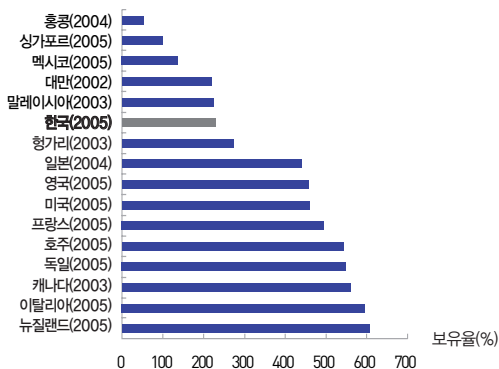
한국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는 1985-1990년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증가율만을 놓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연평균 64.7%나 증가해 그 전 1980-1985년 기간의 30%나, 그 이후 1990-1995년 기간의 40.8%에 비해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추세는 1995년 이후에는 많이 완화되어 1995-2005년 동안에는 연평균 8.6%로, 그리고 최근 2005-2009년에는 4.2%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3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그림 VII-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인구 1,000명당 607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승용차 보유율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호주의 순으로서 이들 국가의 승용차 보유는 인구 1,000명당 500대를 넘는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헝가리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림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홍콩으로 인구 1,000명당 53대를 보이는데, 이는 싱가포르(101대)와 마찬가지로 도시국가로서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승용차 보급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가용 승용차의 획기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

[그림 VII-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2002-2005



주: 1) 인구 1,000명당 보유대수임.

출처: 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2009.

다.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미한 1985년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당 교통비 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전체 지출의 4.6%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통비 지출은 공공교통에 집중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 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1985년에 14,553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월평균 267,686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의 4.6%에서 2008년에는 11.3%로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 규모가 공공교통비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 1995년에는 공공교통비의 2.1배, 2000년에는 2.7배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3.4배로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한국 국민의 일상생활의 통근, 통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2세 이상 된 인구 3,947만 명 중에서 매일 집을 떠

〈표 VII-9〉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1985-2008

	교통비		공공교통		자가용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1985	14,553	4.6	13,131	4.1	1,422	0.4
1990	45,499	6.6	20,880	3.0	24,619	3.6
1995	116,245	9.2	36,987	2.9	79,257	6.3
2000	184,397	11.3	49,940	3.1	134,457	8.2
2005	228,460	10.9	58,200	2.8	170,260	8.1
2006	245,439	11.3	58,952	2.7	186,487	8.6
2007	255,112	11.2	61,045	2.7	194,068	8.6
2008	267,686	11.3	61,442	2.6	206,244	8.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나 다른 곳으로 통근, 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2,4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통근자는 1,793만 명, 그리고 통학 학생은 625만 명이다. 이는 12세 이상 인구의 61.3%에 해당한다.

통근, 통학자가 12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50.3%였으나 2000년에는 63.1%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다소 감소한 61.3%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승용차는 32.3%, 버스는 22.8%로 시간이 흐를수록 승용차의 이용비율은 증가하고 거꾸로 버스의 이용비율은 감소하여 이제는 버스를 대신하여 승용차가 통근자와 통학자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그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표 VII-10〉은 대도시 지역과 전국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도로교통 혼잡비용이란 특별시, 광역시 및 지역 간 도로에서 도로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

〈표 VII-10〉 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 2000-2007

	(10억 원)			
	2000	2005	2006	2007
전국	19,448	23,698	24,621	25,648
서울	4,714	6,019	6,736	7,032
부산	2,661	3,480	3,290	3,480
대구	779	1,185	1,201	1,317
인천	1,305	1,747	1,970	2,022
광주	711	723	841	917
대전	699	1,034	974	1,038
울산	280	377	429	467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각 년도.

로 환산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무려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은 약 7조 원, 부산은 3조 5천 억 원 등으로 대도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2000년에 비해 2007년에는 31.9%가 증가하였다. 또 지역별로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혼잡비용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진호(아주대학교)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요 약

- 한국에서 거주지 이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거 면적의 확대이며, 그 다음으로 내 집 마련, 직장변동, 주택시설 노후 등이다.
- 계층 간에 주거이동의 이유를 비교해 보면 잘 살수록 주거 면적의 확대와 내 집 마련의 비중이 큰 반면, 못 사는 층에게는 소득감소, 주택시설의 노후, 비싼 집세 등의 경제적 이유가 중요해 진다.
- 젊거나 미혼의 가구주는 주로 직장변동이나 교통불편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데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40대 이후의 가구주는 주거면적 확대와 내 집 마련 때문에 주로 이동한다.
- 사람들이 주거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택가격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규모, 주택유형, 교통여건 순이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총 848만 7천 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17.1%에 해당한다. 매년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 6명 중 1명은 어떤 이유로든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이 일어나는 주 이유는 무엇이며, 새 주택을 선택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주거이동의 주 이유를 거주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의 소득별, 가구주의 연령과 혼인상태, 결혼기간별로 분석하여 이동 가구나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서 이동이유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지 이동이유

〈표 VII-11〉은 2006년과 2008년에 실시된 「주거

〈표 VII-11〉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주요 이유: 2006, 2008

2006			2008		
순위	이사이유	%	순위	이사이유	%
1	평수확장	16.4	1	평수확장	18.3
2	내 집 마련을 위해	13.2	2	내 집 마련을 위해	14.5
3	직장변동	11.6	3	직장변동	10.2
4	주택시설 노후	7.9	4	주택시설 노후	7.4
5	소득 감소	6.6	5	교통불편	7.1
6	주변 환경	5.9	6	소득 감소	5.8
7	교통불편	5.2	7	교육여건	5.3
8	독립 및 분가	4.9	8	집세가 비싸서	5.2
9	집세가 비싸서	4.5	9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3.9
10	부모 집과 거리	4.4	10	부모 집과 거리	3.6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현재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 주 이유를 중요한 순으로 10가지만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이유로 든 것은 살고 있는 집이 좁아 주거의 면적을 넓히려는 것이다. 2008년과 2006년 조사에서 각각 18.3%와 16.4%의 응답자들이 주택의 평수확장을 위해 현재의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람들이 이사하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내 집 마련인데 2008년의 경우 14.5%가 내 집을 마련하여 이사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변동, 주택시설 노후의 순서로 거주지 이동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거주지 이동이유로 중요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유가 2006년과 2008년 조사에서 모두 동일한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주거면적 확장, 내 집 마련, 직장 이동, 주택시설 노후 등의 이유가 두 조사 모두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이사하게 되는 이유로는 교통불편, 소득 감소, 교육여건, 비싼 집세, 부모 집과의 거리 등이 있다.

거주지역과 이동이유

〈표 VII-12〉는 현재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 경

〈표 VII-12〉 거주지역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수도권	평수확장	17.1	내집마련	13.8	직장변동	10.3	교통불편	7.0	소득감소	5.9
광역시	평수확장	18.3	내집마련	14.8	직장변동	9.7	교통불편	8.4	시설노후	7.5
도지역	평수확장	20.3	내집마련	15.3	시설노후	10.6	직장변동	10.4	교통불편	6.2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주요한 순서대로 5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우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거주지 이동의 첫째와 둘째 이유는 주거면적 확대와 내 집 마련으로 드러나는데, 첫째 이유인 주거면적 확대와 둘째 이유인 내 집 마련의 비중은 도 지역에서 가장 높고 광역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진다.

거주지 이동을 일으키는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직장변동 때문에, 도 지역에서는 주택시설의 노후가 꼽히고 있는데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교통의 불편도 주요한 주거이동의 이유로 드러나 이들 지역의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계층과 이동이유

이번에는 이동자의 계층적 지위와 주거이동 이유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느 정도는 그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주택점유 형태와 이사이유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 집 마련과 평수확장이 각각 24.7%와 24.1%로서 세 번째 주요 이유인 주택시설 노후의 8.1%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직장변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15.5%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평수확장, 교통불편, 비싼 집세의 순이다.

한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는 직장변동에 이어 소득감소와 비싼 집세가 둘째, 셋째 이유로 드러나 경제적인 이유가 주거 이동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두 집단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의 비중이 각각 40.0%와 29.6%를 점한다. 아울러 이 두 집단에서는 집주인의 나가라는 요청도 각각 11.8%와 12.5%를 점해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을 분명히 보여준다(표 VII-13).

이와 같은 주택점유 지위와 이동이유 간의 상관성은 다음 <표 VII-14>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현 주택으로의 이사이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표를

〈표 VII-13〉 주택점유형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자가	내집마련	24.7	평수확장	24.1	주택시설 노후	8.1	직장변동	6.4	분양주택입주	5.5
전세	직장변동	15.5	평수확장	13.5	교통불편	10.3	집세가비싸서	9.2	소득감소	7.7
유보보증금 월세	직장변동	15.0	소득감소	14.0	집세가비싸서	11.2	교통불편	10.7	평수확장	8.9
무보보증금 월세	소득감소	22.0	집세가비싸서	18.0	집주인요청	11.8	직장변동	11.0	주택시설 노후	4.9
사글세 ¹⁾	집세가비싸서	15.1	소득감소	14.5	직장변동	13.5	집주인요청	12.5	주택시설 노후	9.0
무상 및 기타	직장변동	15.0	부모집거리	14.4	평수확장	11.0	소득감소	8.8	주택시설 노후	6.2

주: 1) 약정 기간의 총 월세를 계약 시 선불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임.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표 VII-14〉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50만 원 이하	평수확장	13.3	소득감소	12.7	내집마련	10.9	주택시설 노후	9.1	집세가 비싸서	8.5
51-93만 원	평수확장	17.2	내집마련	14.5	주택시설 노후	11.2	소득감소	9.5	집세가 비싸서	6.0
94-179만 원	평수확장	15.6	내집마련	12.8	직장변동	10.3	주택시설 노후	8.3	소득감소	7.9
180-250만 원	평수확장	17.4	내집마련	15.2	직장변동	12.0	교통불편	8.0	주택시설 노후	6.9
251-350만 원	평수확장	19.9	내집마련	16.6	직장변동	11.7	교통불편	7.3	교육여건	7.0
350만 원 초과	평수확장	23.2	내집마련	14.8	직장변동	11.6	교육여건	9.6	교통불편	6.9

출처: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보면 먼저 전 소득계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사 이유는 평수확장이다. 다만 평수확장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 초과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23.2%인데 50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13.3%에 불과하다.

〈표 VII-14〉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주거이동의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즉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소득감소, 시설 노후, 집세가 비싸서 등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 인데 비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요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 51-93만 원 계층에서는 26.7%, 그리고 94-179만 원 계층에서는 23.1%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이동이유로 교육여건과 교통불편을 꼽는 비율이 늘어나 350만 원 초과 계층에서는 이 두 요인이 16.5%를 차지하며 251-350만 원 계층에서는 이 비율이 14.3%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득이 179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주요한 이유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거주지 이동의 요인이 계층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특성과 이동이유

가구주의 특성별 이동이유로 먼저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로 하자. 우선 20대와 30대 가구주의 경우 주거이동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직장변동으로 드러나 각각 23.4%와 15.8%의 비중을 보인다. 다만 두 번째 중요한 이유에서 20대는 교통불편(18.1%)을, 30대는 평수확장(15.7%)을 지적해 차이를 드러낸다.

한편 40대와 50대 가구주의 경우는 똑같이 평수확장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직장변동이 각각 주거이동의 첫째, 둘째, 셋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은 40대의 경우는 네 번째 주요 이유가 자녀의 교육여건(9.6%)인 반면 50대 가구주의 경우는 주택시설 노후(7.6%)가 네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평수확장과 내 집 마련 이외에도 주택시설 노후와 소득감소가 주요한 이유로 자리 잡게 되고 70대 이상이 되면 주택시설 노후와 소득감소,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도 주요한 이유로 등장한다(표 VII-15).

다음으로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현 주택으로의 이사이유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경우에는

〈표 VII-15〉 가구주의 연령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20세-29세	직장변동	23.4	교통불편	18.1	평수확장	9.3	집세가비싸서	7.7	주택시설 노후	4.8
30세-39세	직장변동	15.8	평수확장	15.7	내집마련	12.6	교통불편	9.3	교육여건	6.8
40세-49세	평수확장	18.3	내집마련	14.6	직장변동	11.4	교육여건	9.6	교통불편	7.2
50세-59세	평수확장	20.0	내집마련	16.0	직장변동	9.7	주택시설 노후	7.6	교통불편	6.3
60세-69세	평수확장	20.9	내집마련	17.0	주택시설 노후	10.5	소득감소	6.4	직장변동	5.6
70세-79세	평수확장	19.7	내집마련	14.8	주택시설 노후	11.5	소득감소	8.1	부모집거리	4.8
80세 이상	평수확장	15.6	주택시설 노후	12.3	내집마련	11.9	소득감소	8.8	부모집거리	6.9

출처: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주거면적 확대가 이사이유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내 집 마련, 직장변동의 순이다. 반면 미혼 가구주에 있어서는 직장변동이 22.3%로 가장 중요하고 교통불편도 17.2%를 차지하고 있어 유배우 가구주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이동 이유를 나타낸다. 한편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주는 이사이유로 소득감소(15.8%)와 비싼 집세(11.9%)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어 이혼에 따른 경제력의 약화가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VII-16).

마지막으로 가족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가구주의 결혼기간별 이동의 이유를 보기로 하자. 먼저 가족의 형성기인 결혼 후 4년 이하의 가구주인 경우는 이사이유로 직장변동이 가장 중요해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는 주요하

게 나타나지 않는 독립 및 분가도 6.6%를 보인다. 평수확장은 결혼기간이 4년 이상인 모든 가구주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결혼기간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내 집 마련 이유는 결혼 후 8-15년 이상 된 가구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주택시설 노후는 결혼기간이 오래된 집단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아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표 VII-17).

거주지 선택요인

끝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살펴보겠다.

〈표 VII-16〉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배우자 있음	평수확장	20.3	내집마련	16.2	직장변동	10.0	주택시설 노후	7.5	교통불편	6.4
이혼	소득감소	15.8	집세가비싸서	11.9	직장변동	9.7	평수확장	8.8	교통불편	8.1
사별	평수확장	13.9	내집마련	11.4	소득감소	11.4	주택시설 노후	9.3	집세가비싸서	8.5
미혼	직장변동	22.3	교통불편	17.2	집세가비싸서	9.6	평수확장	7.7	소득감소	6.4

출처: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표 VII-17〉 가구주의 결혼기간별 주요 이사이유: 200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이사이유	%
4년 이하	직장변동	17.9	평수확장	15.6	교통불편	11.4	내집마련	11.4	독립 및 분가	6.6
4-8년	평수확장	17.9	직장변동	14.7	내집마련	13.8	교육여건	8.0	교통불편	7.7
8-15년	평수확장	20.6	내집마련	17.4	직장변동	12.8	교통불편	7.0	주택시설 노후	4.9
15-25년	평수확장	19.9	내집마련	16.0	직장변동	10.5	교육여건	9.2	교통불편	6.5
25-36년	평수확장	23.0	내집마련	17.7	주택시설 노후	8.8	직장변동	8.4	교통불편	6.2
36년 초과	평수확장	22.1	내집마련	17.4	주택시설 노후	12.4	소득감소	5.4	직장변동	4.6

출처: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이를 위해서 〈표 VII-18〉에 현재의 주택으로 이사할 당시 고려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람들이 이사할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택가격으로 2006년과 2008년 조사에서 각각 26.6%와 27.5%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번째로 고려하는 주택규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 뒤를 이어 순서대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을 나열해 보면 주택규모와 주택유형으로서 2006년과 2008년 공히 모두 1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여건, 주택내부 시설, 주거환경개선 기대감, 교육여건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과 2008년에 실시된 두 조사 모두에서 7번째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의 순서가 일치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순서가 달라져 2006년에는 유지관리비, 녹지여건, 방의 개수 등의 순서였는데 2008년에는 녹지여건, 방의 개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의 순서로 고려되고 있었다.

〈표 VII-18〉 현재 주택으로 이사 시 주요 고려사항: 2006, 2008

2006			2008		
순위	이사이유	%	순위	이사이유	%
1	주택가격	26.6	1	주택가격	27.5
2	주택규모	15.1	2	주택규모	17.4
3	주택유형	12.3	3	주택유형	11.7
4	교통여건	8.8	4	교통여건	7.5
5	주택내부 시설	6.3	5	주택내부 시설	6.7
6	주거환경개선 기대감	5.0	6	주거환경개선 기대감	4.7
7	교육여건	4.0	7	교육여건	4.4
8	유지관리비	3.5	8	녹지여건	2.8
9	녹지여건	3.4	9	방의 개수	2.7
10	방의 개수	3.1	10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2.6

출처: 국토해양부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08.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요 약

- 2000년대에 주택가격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70%인데 비해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149%로 매우 컸다.
- 2000년대 중후반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대형주택의 가격은 안정화되는데 반하여 소형주택의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2000년대는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 초중반의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택시장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아파트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가격지수가 공표됨으로써 주택시장의 변동에 대한 민감한 영향요인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아파트주택시장의 변동추세와 그 함의를 살펴본다.

최근 주택시장에 있어 점유형태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전반적인 자가거주율의 변화, 그리고 임차가구의 계약유형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의 양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택구입능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소득대비주택가격비(Price to Income Ratio, PIR)의 지표 변화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매매가격 변동의 지역 차이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를 통해 1986년 이후 전국적인 주택가격변동을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1980년

후반 급상승하였고,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2000년대는 또 다시 급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주택가격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4년간 약 58%의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나, 1990년 이후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등 주택공급확대정책으로 안정화되어 10년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8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2000년 이후 가격 급등세로 반전하여 2010년까지 약 67%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 VII-19〉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이전의 주택가격의 변동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나타난 주택시장 가격변동은 지역 간 차이가 극심하였다. 1986년에서 2000년까지 주택가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약 4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서울은 109%의 가격상승이 이뤄졌으나 6대 광역시의 경우는 46%에 불과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수도권 현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가격 상승의 편차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현상으로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기간 중 주택유형별 가격변동의 차별화도 적잖게 발생하였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는 1986년 가격 지수가 51에서 2010년 197로 약 4배에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1.4배와 2.2배에 불과한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 바람직한 주거형태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지수값이 51에서 249로 5배에 가까운 누적 가격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및 주택유형별로 차별화된 가격변동 양상은 주택소유집단 간의 정서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표 VII-19〉 주택가격지수¹⁾: 1986-2010

	서울				6개 광역시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1986	51.1	91.2	76.1	72.5	49.1	82.4	69.2	68.1	51.1	84.4	73.7	69.3
1990	91.5	121.0	117.9	107.4	100.7	123.6	121.0	112.3	94.7	121.9	117.0	108.5
1995	91.1	112.5	113.9	102.9	101.7	119.6	117.4	110.1	96.3	115.9	113.4	105.7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182.9	132.1	120.5	153.1	150.6	100.0	107.5	127.5	160.0	108.0	116.0	136.2
2006	202.4	139.4	127.3	165.9	153.8	101.9	109.8	130.1	169.6	110.5	121.1	142.8
2007	235.3	156.1	147.2	190.9	159.6	103.7	120.7	135.2	186.5	115.7	139.6	156.2
2008	252.6	169.7	164.3	207.4	164.8	105.6	134.4	140.5	194.2	119.9	154.6	164.1
2009	247.0	171.4	164.0	205.2	164.3	104.9	135.6	140.3	191.1	119.3	154.8	162.3
2010	248.7	176.2	169.2	208.7	173.9	106.1	139.9	146.4	196.9	121.2	159.0	166.6

주: 1) 해당년도 7월 가격을 이용하였고, 2000년 7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주택 전세가격 변동 양상

대표적인 임대계약 형태인 전세를 기본으로 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의 변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동반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매매가는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다.

전국 총 주택 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면, <표 VII-20>이 보여주고 있듯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4년간 누적 상승률은 86%로 급등세를 보인다. 이는 해당 기간 매매가의 누적상승률인 5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1980년대 말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라는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주택시장 상황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이후 1990년대는 급증한 주택공급량으로 주택매매가는 -8.8%로 하향안정세를 유

지했고 전세가는 34%의 누적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2000년대는 누적 상승률이 51%로 매매가의 누적 상승률인 66%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의 변동률은 지역 간 편차가 심하지 않고 유사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1986년 40-42 범위인 지수값이 2010년에는 149-155 범위의 지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유형별로는 변동률의 격차를 나타낸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전세가는 1986년에서 2010년 사이에 2.2배의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5.6배의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의 경우는 그 중간으로 3.9배의 상승이 발생하였다.

2000년 이후 아파트만 보면 6대 광역시와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은 각각 71%와 70%로 유사했다.

<표 VII-20> 전세가격지수¹⁾: 1986-2010

	서울				6개 광역시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1986	29.6	56.0	39.1	41.7	34.3	51.4	35.0	41.5	30.2	53.2	36.8	40.1
1990	62.2	93.9	73.4	74.8	70.0	97.0	75.5	80.6	60.6	94.9	71.0	74.5
1995	81.0	102.1	92.5	90.1	85.2	110.5	96.5	94.7	79.8	106.6	90.4	89.8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129.8	107.9	111.1	119.6	141.8	108.3	110.4	127.3	137.0	108.0	112.5	124.7
2006	143.9	109.4	115.9	128.3	147.0	109.1	114.1	130.8	146.2	108.6	117.5	130.7
2007	155.2	117.8	126.4	138.6	152.2	110.6	121.3	135.2	154.4	112.0	127.8	137.8
2008	158.6	127.4	137.2	145.4	155.0	111.9	129.0	138.2	158.0	116.2	137.3	142.5
2009	155.4	126.7	135.4	143.2	155.1	110.9	131.4	138.4	156.4	115.4	136.7	141.2
2010	170.4	132.2	145.6	154.7	170.6	101.7	139.0	148.8	170.0	118.7	144.9	151.0

주: 1) 해당년도 7월 가격을 이용하였고, 2000년 7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그러나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74%와 149%로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상승했고, 이를 버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세가의 상승에 비해 높게 이루어진 원인 중의 하나는 서울에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경우 현재의 이용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자본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아파트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건축 연령에 따른 가격지수를 산정해보면, [그림 VII-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인지되고 있는 1990년대 이전 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1990년 이후 건축 아파트에 비해 2000년 이후 70% 정도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건축 가능 아파트의 급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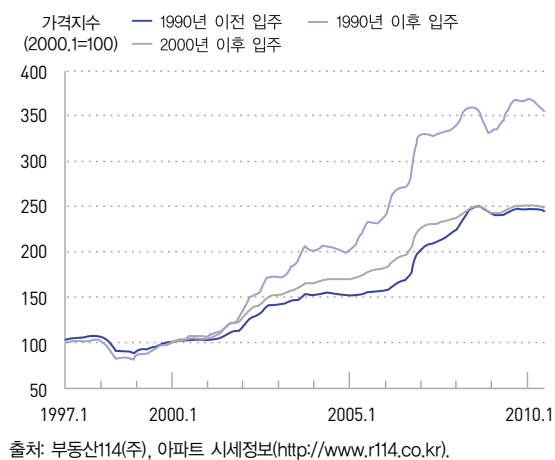
가격상승 추세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인 구매행태를 유도하였고, 이와 관련한 많은 사회적인 논란과 관련 규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실거래가지수로 본 아파트 가격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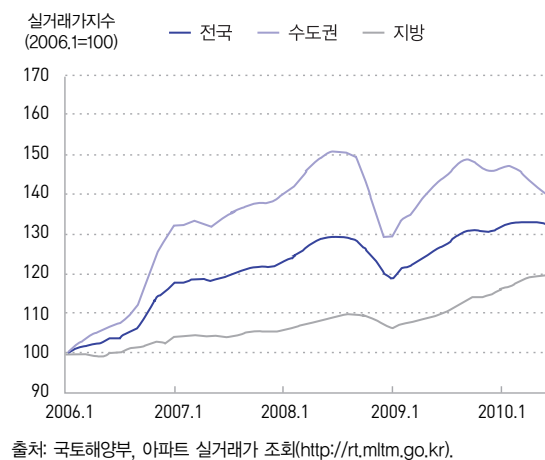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실시되어 그 동안 관측되지 못하였던 실제 거래가격이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2006년 이후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세를 통해 파악되었던 가격변동보다 더 큰 가격변동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수도권 및 지방의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VII-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2006년 1월 이후 누적 가격상승률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은 2006년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중반을 고점으로 금융

[그림 VII-2] 건축연도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¹⁾: 1997-2010



[그림 VII-3]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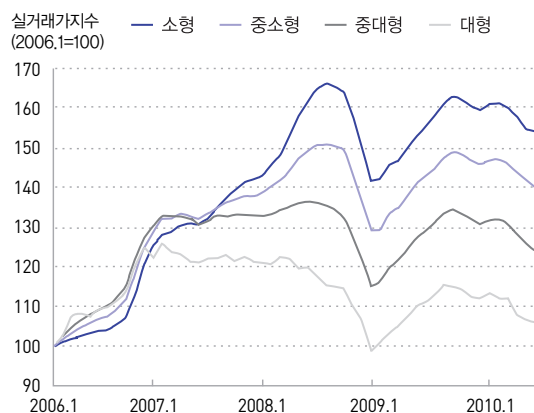
위기의 여파로 20%에 가까운 급락이 이루어졌다가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추세를 보인다. 다만 2009년 9월 수도권에 실시된 주택 담보대출규제의 여파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바뀐 추세는 하락세로 반전된 수도권과 달리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말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그림 VII-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에 도입된 대형 및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정책적 요인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그림 VII-4] 주택규모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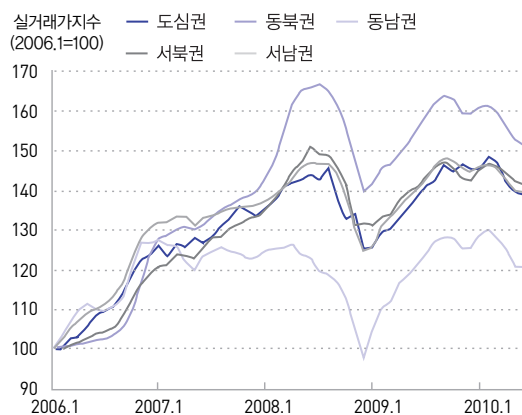


출처: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http://rt.mltm.go.kr>).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택규모별 가격편차는 안정화되어 동반해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I-5]는 항상 관심의 초점이 되는 서울 강남지역(동남권)과 다른 지역의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 동남권의 경우는 2006년 말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노원구, 도봉구 및 강북구를 포함하는 동북권의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급등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각 하부시장의 가격변동이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VII-5] 서울시 생활권별¹⁾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2006-2010



주: 1) 도심권에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에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동남권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에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가 포함됨.
출처: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http://rt.mlt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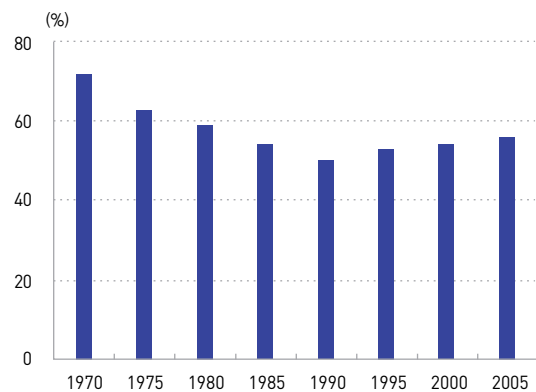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도입된 노무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대형 및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소형 및 비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시키는 풍

선효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고가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대가로 서민들의 저가주택의 가격을 올려놓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택 구입능력과 점유형태의 변화

[그림 VII-6]는 자가거주율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72%에서 50%로 하락하였다가,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56%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가를 소유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분리된 가구를 포함하면 주택보유율은 2005년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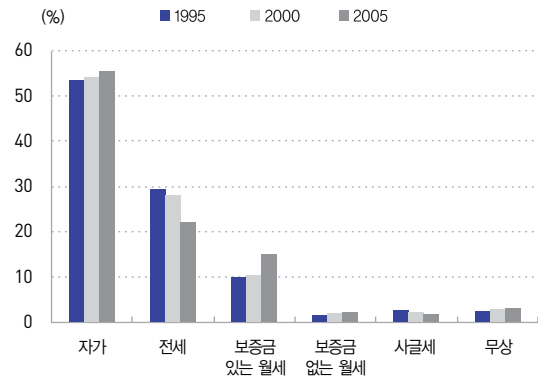
[그림 VII-6] 자가거주율: 1970-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V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전세의 비중은 28%에서 22%로 감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월세의 비

[그림 VII-7]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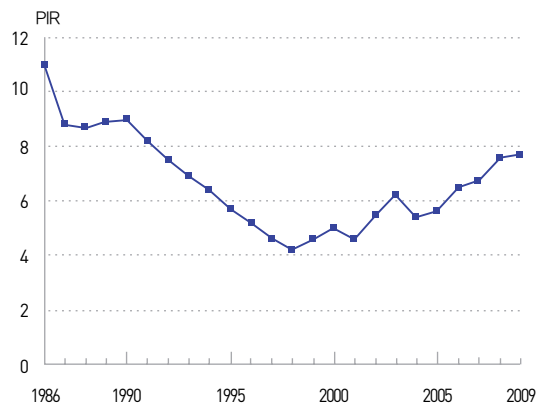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중이 15%에서 19%로 증가하여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엇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매월 운영소득이 발생하는 월세가 선호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국내 주택 임대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주택가격의 변동은 국민의 주택구입능력에 영향을 준다. 주택구입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소득대비주택가격비(Price to Income Ratio, PIR)가 있다. PIR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해당 지역 자가주택의 중위가격을 자가가구의 중위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나, 이용가능한 자료와 계산 주체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산출되는 지표 값의 절대적인 의미는 해석하기가 용이치 않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인 시계열 변화 추세를 잘 보여주는 국민은행 및 그 전신인 주택은행에서 조사한 PIR 자료를 [그림 VII-8]에 제시하였다. 이 PIR은 조사된 연도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구입주택가격의 비를 평균한 값이다.

이 그림에 제시된 시계열 변동 추이를 보면, 1986

[그림 VII-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1986-2009



출처: 국민은행, 「주택금융실태수요조사」, 각 년도.

년 11배 수준이었던 전국 PIR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는 4.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7.7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는 1980년대 말의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기의 수준은 아니나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의 상승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향후 인구노령화로 인한 주택구매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나 여전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창무(한양대학교)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조병희 192

건강불평등 • 조병희 201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 김홍수 208

VIII. 보 건

Health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크게 미달된다. 암, 뇌졸중, 당뇨, 고혈압,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 의료이용의 증가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상태, 건강의식과 행태 및 의료제도와 이용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건강과 질병 영역에서는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하게 된다.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주요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 건강의식과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건강 관련 인식, 태도, 행동을 다룬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행동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셋째,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영역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소들을 다룬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건강보험급여와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또한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강과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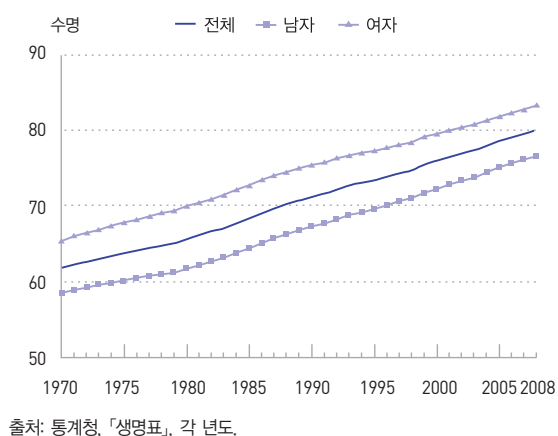
건강은 여러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는 포괄적인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well-being)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건강은 질병 유무를 넘어서서 노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볼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안식을 누리는 상태로 개념화할 수도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의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에 62.3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9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80.1세가 되었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치가 79.1세였는데, 한국은 79.6세로 평균수명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항상 길었다. 1971년에 남자 59세, 여자 66.1세로 약 7세 정도 차이가 났고, 이후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남자 76.5세, 여자 83.3세로 증가하여 남녀 간 수명격차는 6.8세가 되었다. 여성의 수명이 여전히 길지만 그 격차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VIII-1).

[그림 VIII-1] 평균수명: 1970-2008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임신부의 영양·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남녀 간에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위험노출 정도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남자들이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장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평균수명과 함께 인구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수로 계산되는데, 1970년에 45나 되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1년에 10 수준이 되었고 2009년에는 3.2가 되었다. OECD의 2007년 평균치는 4.9였다.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의 수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1995년에 20이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1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OECD 평균인 9.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평균수명이나 영아사망률과 같은 통계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선진국의 평균치 이상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외병상태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정(補正)한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 2009」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1세로 평균수명과 약 8세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질병 등으로 인한 활동제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평균수명의 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건강 상태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 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3년에 42.9%, 2006년 44.6%, 2008년 51.6%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OECD 평균 68.6%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즉 신체적 건강(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은 그만큼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건강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건강불안감은 삶의 불안정성이나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인데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은 20% 내외이고,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유병률이 높다(표 VIII-1).

같은 2주 동안 질병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남녀 평균 와병일수는 0.7일 정도이다.

다음으로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콜레라나

〈표 VIII-1〉 2주간 유병률¹⁾: 1999-2008

	1999	2003	2006	2008
남자	19.1	17.1	16.5	14.9
여자	25.6	24.5	22.4	20.0
전체	22.4	20.8	19.5	17.5

주: 1)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장티푸스와 같이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성 질환의 발생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결핵, 쓰쓰가무시병, 수두, 말라리아, 볼거리, HIV/AIDS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결핵은 1991년에 52,735명이 새로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매년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신규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III-2).

〈표 VIII-2〉 전염병 발생건수: 2005-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결핵	35,269	35,361	34,710	34,157	35,845
쓰쓰가무시병	6,780	6,480	6,022	6,057	4,995
수두	1,934	11,027	20,284	22,849	25,197
말라리아	1,369	2,051	2,227	1,052	1,345
볼거리	1,863	2,089	4,557	4,542	6,399
HIV/AIDS	680	750	744	797	771

출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감시연보」, 각년도.

결핵 감염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하여 결핵 유병률과 발생률이 약 10배 이상 되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수준과 유사하다(표 VIII-3). 세계적으로는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가 3대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병들은 대부분 후진국에서 위력적인 '후진국 병'이다. 우리 사회에 결핵은 물론 말라리아와 에이즈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VIII-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결핵 유병률과 발생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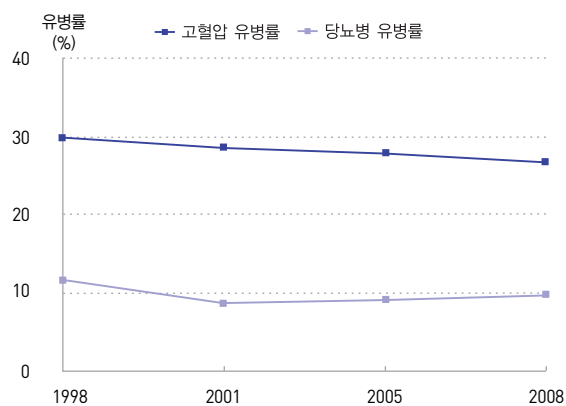
	결핵 유병률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일본	28	21
미국	3	4
독일	5	6
프랑스	11	14
멕시코	23	20
중국	194	98
한국	126	90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 2009, 2009

는 것은 기초적인 공중보건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만성질환 중에서는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이거나 의사의 진단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을 의미하는데, 2005년 9.1%, 2008년 9.7%로 약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로 2005년 28.0%, 2008년 26.9%로 30세 이상 성인의 약 1/4 이상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

[그림 VIII-2]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1998-2008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05년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사망자가 한국은 30.2명으로 일본 5.5명, 독일 16.2명, 프랑스 10.8명 등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암 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수 지표인 암 발생

률이 1999년 21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329.6이 되었다. 한 시점에서 인구 대비 암 환자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08년 현재 2.75%이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VIII-4>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총 사망률은 532에서 49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요 사인은 암이 1위이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111.8에서 142.5로 증가하였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많기는 하지만 138.9에서 109.3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순환기계 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구분되는데, 뇌혈관질환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심장질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VIII-4> 사망원인별 사망률¹⁾: 1995-2009

	1995	2000	2005	2009
신생물(암)	111.8	123.5	135.3	142.5
내분비질환	18.8	24.8	25.5	21.3
순환기질환	138.9	122.7	115.6	109.3
호흡기질환	24.4	33.8	29.2	34.3
소화기질환	39.2	31.2	23.0	21.5
운수사고	38.7	25.3	16.3	14.4
자살	10.8	13.6	24.7	31.0
총 사망률	532.1	517.9	501.0	497.3

주: 1)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9.2에서 21.5로 크게 감소하였다. 질병 이외의 사망원인으로는 운수사고 사망이 38.7에서 14.4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0.8에서 31.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암과 뇌졸중 사망이 OECD 평균

치보다 높고,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은 평균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 추락사, 자살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도 OECD 평균치보다 높다.

건강행태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5.1%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 26.3%가 되었다(표 VIII-5). 2008년 남성 흡연율은 50.8%로 OECD 국가들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30%인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3.2%로 매우 낮는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OECD 국가들의 성인 여성 흡연율은 16~26% 정도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은 흡연율 자체가 높고 이는 대부분 남성들의 높은 흡연율에 기인하고 있다.

성인 음주율은 1995년 63.1%이던 것이 1999년과 2003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73.2%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다시 68.6%로 감소하였다(표 VIII-5).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성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 남성은 82.7% 여성은 55.3%의 음주율을 보였다. 거의 매일 음주하는 사람은 1995년 8.4%에서 2008년 4.9%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 자체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는데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

주하는 고위험 음주율이 20.2%(남성 29.0%, 여성 9.0%)에 달했다. 거의 중독 수준인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율도 14.8%에 달하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

〈표 VIII-5〉 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8

		(%)				
		1995	1999	2003	2006	2008
흡연율	성인	38.4	35.1	29.2	27.3	26.3
	남성	73.0	67.8	56.3	52.2	50.8
음주율	성인	63.1	64.6	64.3	73.2	68.6
	남성	83.0	82.9	80.7	85.9	82.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수가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이 오래된 건강문제라고 한다면 비만은 새로운 건강문제이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의 비만율은 1998년에 26.0%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31.3%가 된 후 이 수준이 유지되면서 2008년에는 31.0%가 되었다(표 VIII-6). 성별로는 남자 35.6%, 여자 26.5%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다. 남자는 40대까지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지만 여자는 60대까지 높아지다가 70대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OECD의 최근 비만율 평균치 48.9%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비만 문제가 덜 심각한 수준이다.

흡연, 음주, 영양섭취는 절제할수록 건강에 기여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운동은 더 강화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태이다. 그런데 운동실천율은 '1회 20분, 주 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들의 비율' 인데 1998년 8.6%에서 2001년 20.4%로 증가하

였다. 2007년에는 이 지표의 기준이 변경되어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로 설정되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은 2007년에 9.9%였고 2008년에는 14.5%가 되었다(표 VIII-6).

스포츠가 아닌 일상의 걷기도 건강증진에 좋은 실천방법이 된다.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08년에 46.9%가 실천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운동은 아침식사하기(76.2%), 적정수면(78.9%)과 함께 국민의 주요 건강관리 수단이 되고 있다.

〈표 VIII-6〉 비만율, 운동실천율 및 걷기실천율: 1998- 2008 (%)

	1998	2001	2005	2007	2008
비만율	26.0	29.2	31.3	31.7	31.0
운동실천율 ¹⁾	8.6	20.4	18.7	9.9	14.5
걷기실천율 ²⁾	-	75.6	60.7	45.7	46.9

주: 1) 2005년까지는 1회 20분, 주 3일 이상 운동한 사람들의 비율이고, 2007년부터는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의료제도의 기본요소는 병원과 의사 같은 의료인력 및 시설의 공급 측면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지출 의료비 등 수요측면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에서 의사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지난 20

여 년간 의사수와 병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약 2-3배 증가하였다. 면허등록 의사수는 1990년에 42,554명에서 2008년에는 95,08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는 의사가 196명, 치과의사가 49명, 그리고 간호사가 508명이다(표 VIII-7).

〈표 VIII-7〉 의료인율¹⁾: 2000-2008

	2000	2005	2008
의사	154	177	196
치과의사	38	45	49
간호사	341	444	508

주: 1)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그런데 면허등록 의사들 중 상당수는 은퇴, 전직, 휴업 등 여러 사유로 의료계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용 의료인력의 측면에서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수와 같은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8년에 면허등록 의사수는 95,088명이지만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75,976명으로 약 80%에 불과하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등록자 대비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활동간호사는 약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부족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조산사만 포함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사나 의료기사 등도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에 준하는 의료인력이다. 의료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사 같은 보조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물리치료사나 임

상병리사 같은 법적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면허등록자가 2000년에 122,331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208,780명으로 증가하여 의료인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를 의료복지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OECD의 활동의사수 평균치는 인구 1,000명당 3.1명이었는데 한국은 1.7명이었다. 즉 의사수가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여기서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의 낙후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서구의 의사들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상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암시한다. 간호인력의 규모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 등 서구유럽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8-10명이다. 반면 한국은 4.2명에 불과하다. 즉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간호서비스가 그만큼 적게 제공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을 받기도 어려우며 간호서비스가 부족하여 간병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 하고 30병상 이하일 경우 의원이라 한다. 1990년대 이후 의료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각급 의료기관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종합병원은 228개소에서 313개소로, 병원은 328개소에서 1,064개소로, 그리고 의원은 10,935개소에서 26,581개소로 증

가하였다(표 VIII-8).

〈표 VIII-8〉 의료기관수: 1990-2008

	1990	1995	2000	2005	2008
종합병원	228	266	285	290	313
병원	328	398	581	794	1,064
의원	10,935	14,343	19,472	25,412	26,58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병원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000년에 6.1개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9.8개가 되었다. 2008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독일 8.2개, 프랑스 6.9개, 한국 7.8개로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에는 병상수의 증가가 의료복지 확대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의료는 각종의 고급 의료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입원진료일 경우에 의료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입원은 의료비를 급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는 병상수는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은 병상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약하고 의료의 시장화 추세로 인하여 병상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상수의 증가는 주요 의료장비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가 17.6대, CT Scanner가 36.8대, Mammograph가 47.3대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같은 의료장비 보유가 각각 5.6대, 7.4대, 9.0대에 불과하다. 국가 간 의료장비 보유는 소득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의료체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한국은 병상

이 많고 고급 의료장비가 많아 의료이용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급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상태는 연평균 1인당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던 것이 2000년에 11.6일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 16.8일이 되었다. 즉 국민 1인당 연 1.7일 입원하고 15.1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OECD 국가에서 연간 인구당 의사방문횟수가 약 6회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국민의 72.2%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의료이용이 보편화된 것이다.

200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암환자와 만성질환자의 88.9%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8.3%가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의료접근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보장의 원칙에 입각할 때 미치료자가 8.3%라는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질병 발생 이후에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질병 발생 이전에 건강검진 같은 예방서비스를 적기에 받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검진은 현재 개인이 자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일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48%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암검진 수검률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8년 현재

42.0%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독감예방주사도 2008년에 28.1%만 접종하였다(표 VIII-9). 그런데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률은 73.6%로 서구 국가들의 50-70%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VIII-9〉 예방서비스 이용률: 1998-2008

	1998	2001	2005	2007	2008
건강검진 수검률	48.9	47.1	47.4	47.9	48.0
암검진 수검률	26.9	28.2	48.8	35.6	42.0
독감예방 접종률	-	-	35.0	28.3	28.1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에 8.1조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61조 원에 달하였다. 인구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의료신기술의 도입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료이용의 빈도가 높은 나라이다. 더욱이 노령화와 함께 노인의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9.9%이다.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 지출의 비중은 31.4%로 인구 비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가 점차 고급화되고 있고 고가의 검사장비 사용이 확산되면서 의료비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는 1990년에 4.2%였는데 2008년에 6.5%에 달하였다. OECD의 평균 국민의료비는 약 9%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아직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그 절대액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한 것으로 각국의 경제수준이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00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비는 1,801달러이다. 프랑스 3,696달러, 독일 3,737달러, 영국 3,129달러, 미국 7,265달러, 일본 2,729달러(2007년) 등으로 주요 OECD 국가들의 약 절반 수준이다. 향후 의료부문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비 또한 빠른 속도로 서구 국가들의 지출수준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의료비 재원 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들은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부담 몫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국

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비율은 36.3%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2008년에는 55.3%에 달하였다(표 VIII-10).

그러나 OECD의 공공부문 부담비율은 평균 약 75% 수준인데 한국은 여기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료비의 구성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약제비의 비중이다. <표 VIII-10>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의 비율은 약 25%였다. OECD 국가들의 약제비 비율이 약 1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약제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사나 먹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료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향후 정책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종합 병원과 병·의원에 대해서 모두 증가하였다.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에 24.5%만이 만족하였으나 2006년 45.2%, 2008년 54.1%로 증가하였다. 병·의원 만족도는 각각 25.4%, 43.5%, 48.7%로 증가하였다. 즉 의료기관 만족도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45.0%)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장시간의 진료 대기(39.9%)와 치료미흡(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08년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큰 구조적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료이용의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VIII-10〉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 지출 및 약제비 비율: 1990-2008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율
1990	4.2	36.3	24.2
1995	3.9	36.2	26.1
2000	4.8	45.5	25.9
2005	5.7	52.1	25.5
2008	6.5	55.3	23.9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0: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0 Countries(<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2010.

조병희(서울대학교)

건강불평등

요 약

- 남녀 간 사망의 불평등은 경제활동 연령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대부터 60대 이전까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훨씬 더 높다. 50대에서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3배나 더 높다.
- 최고학력군 대비 최저학력군의 사망비율은 4.5배에 달하고, 최고수입군 대비 최저수입군의 사망비율은 3.2배에 달한다.
- 질병이환의 불평등에서도 남자의 경우 최고학력군 대비 최저학력군의 불건강 인식비율은 3.7배에 달하고, 최고소득군 대비 최저소득군의 불건강 인식비율도 3.6배에 달한다.
- 남성 흡연율의 경우에 최고학력군 대비 최저학력군의 흡연비율은 2.3배에 달하고 최고 수입군 대비 최저수입군의 흡연비율은 1.9배에 달한다.
- 의료이용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높은 지위 집단보다 더 많이 한다. 단 의료의 질을 고려할 경우에는 높은 지위집단이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삶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듯이 건강상태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을수록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또 사망률도 높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불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건강불평등이라 한다. 건강불평등은 흔히 사망과 질병 이환의 측면에서 연구된다. 그러나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습관에서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고, 의료이용에서의 불평등이 조기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습관 및 의료이용 요인을 건강불평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망의 불평등

사망은 '완전한 불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의 결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사망의 사회적 구조는 통계청이 매년 작성하는 「사망원인통계」에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통계는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사망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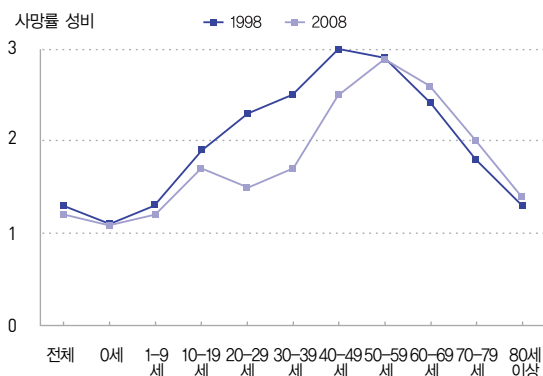
2008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30대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 VIII-3]은 연령별 남녀 간 사망률비를 보여준다. 여기서 성비는 여성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망률 성비가 높다는 것은 남자가 그만큼 초과 사망함을 의미한다. 남녀 간 사망격차는 20대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50대에 정점에 이르러 사망률 성비가 무려 2.9에 이른다. 60세 이후에는 격차가 급속하게 완화되어 남녀 간 사망률이 비슷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이나 2008년 모두 유사하지만 1998년에 비하여 2008년에 20~40대에서 사망률 성비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간 사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경제활동에

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만성적 긴장, 또는 작업현장의 물리적인 위험 등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동안 남성들이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남성들의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남녀 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여서 성과 연령에 따른 사망률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불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사망통계를 연결하여 2003년까지의 사망현황을 추적하여 분석한 강영호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각 연령집단별로 대학 이상 학력자의 사망률을 1로 했을 때 30세 미만 집단에서 고교졸업자는 사망위험이 1.3배 높았고, 중학교 졸업자는 1.4배,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배, 무학자는 2.2배 높았다. 즉 대학졸업자에 비하여 무학자는 2배 이상의 사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학력 간 사망위험의 격차는 경제활동인구인 30~64세 연령집단에서 가장 컸다. 대학졸업자와 무학자 간의 사망위험은 4.5배에 달하였다. 앞서 살펴본 동일 시기의 남녀 간 사망격차보다 더 큰 격차를 보여준다. 반면 65세 이상이 되면 학력 간 격차는 거의 사라진다. 즉 경제활동 시기까지는 성별이나 학력에 의한 건강위험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여 사망불평등이 극심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성별이나 학력에 의한 효과가 더 이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표 VIII-11).

[그림 VIII-3] 연령별 사망률 성비¹⁾: 1998, 2008



주: 1) 사망률 성비=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표 VIII-11〉연령별 학력집단 간 사망비¹⁾: 1998

	30세 미만	30-64세	65세 이상
대학 이상	1.00	1.00	1.00
고등학교 졸업	1.30	1.57	0.91
중학교 졸업	1.42	1.85	0.89
초등학교 졸업	1.71	2.36	1.03
무학	2.21	4.49	1.16

주: 1) 대학 이상 학력집단의 사망률을 1로 했을 때 해당 학력집단의 사망률 비임.

출처: 강영호 · 김혜련, 2006.

같은 방식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망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표 VIII-12〉와 같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이 연구대상 집단을 5등분하여 최고소득을 갖는 1분위의 사망위험을 1로 할 때 30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2분위와 3분위의 사망위험은 1.6으로 커지고, 4분위는 2.3, 최저소득을 갖는 5분위는 2.3의 사망위험을 보였다. 즉 최고소득층에 비해 최저소득층은 약 2.3배 초과사망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고소득층 대 최저소득층의 사망위험의 격차는 30-64세 연령 집단에서는 3.2로 커졌다가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2.0으로 약간 축소된다. 65세 이후에 성별이나 학력

〈표 VIII-12〉연령별 소득집단 간 사망비¹⁾: 1998

	30세 미만	30-64세	65세 이상
1분위(최고)	1.00	1.00	1.00
2분위	1.64	0.96	2.72
3분위	1.64	1.89	1.33
4분위	2.30	2.31	2.36
5분위(최저)	2.29	3.23	1.98

주: 1) 1분위 소득집단(최고 소득집단)의 사망률을 1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사망률비임.

출처: 강영호 · 김혜련, 2006.

에 따른 건강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이 빈약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망위험이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직업별 사망위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VIII-13〉과 같다. 30세 미만 집단에서 상층 및 중간 계층의 사망위험을 1로 했을 때 노동자나 농어민의 사망위험은 약 1.7이었고, 일용직과 같은 하류층은 3.1이 되었다. 30-64세 집단에서는 사망위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상층 및 중간 계층에 비하여 하류층의 사망위험은 4.5배로 커졌다.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로 인하여 직업적 지위에 의한 건강위험의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표 VIII-13〉연령별 직업계층 간 사망비¹⁾: 1998

	30세 미만	30-64세	65세 이상
상층 및 중간계층	1.00	1.00	1.00
노동계층	1.67	2.29	-
농어업계층	1.69	2.58	0.57
하류층	3.06	4.45	1.06
기타	2.76	3.19	1.10

주: 1) 상층 및 중간 계층의 사망률을 1로 했을 때 해당 직업계층의 사망률비임.

출처: 강영호 · 김혜련, 2006.

질병이환의 불평등

현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01년, 2005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로부터 산출된 주관적 건강인식이다. 〈표 VIII-14〉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약 10% 내외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사망률은 남자가

더 높으나 질병이환율은 여자가 더 높은 것이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다.

〈표 VIII-14〉 사회경제적 지위별 주관적 건강인식¹⁾: 2001-2008 (%)

	2001	2005	2008
성별			
남자	62.4	52.9	46.9
여자	55.3	40.8	38.0
교육별수준			
초졸 이하	53.7	20.6	31.3
중졸	53.6	34.5	35.8
고졸	59.7	53.5	44.8
대졸 이상	67.9	59.4	49.3
가구소득별 ²⁾			
하	44.1	29.3	34.1
중하	62.0	47.9	41.9
중상	67.1	54.5	45.4
상	71.2	55.3	48.7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1년과 2005년 자료는 100만 원 이하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자료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성 및 연령집단(5세 단위) 내 4분위로 분류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관되게 발견된다. 2008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건강상태 양호자는 31.3%이지만, 중학교졸업자 35.8%, 고교 졸업자 44.8%, 대학졸업자 49.3%로 증가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인식의 차이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08년의 경우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건강상태 양호자는 34.1%였으나, 중하층

41.9%, 중상층 45.4%, 상층 48.7%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연도별로 건강인식의 절대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시점에서 유행병의 발생 등 여러 상황조건에 기인하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의 의미는 크지 않다.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 대비 가장 낮은 집단의 건강격차가 어느 정도 큰가를 살펴보면 파악하기가 쉽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측면에서는 대학 이상 학력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불건강 인식은 남자 3.7배, 여자 3.1배였다. 직업에서는 비육체노동자(화이트칼라)를 기준으로 할 때, 육체노동자가 불건강을 인식할 확률은 약 2배 내외였다. 무직자 등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최상위 소득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최하위 소득집단의 불건강 인식확률은 약 3.5배였다(표 VIII-15).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최상위 집단에 비하여 최하위 집단은 약 3-3.5배 더 불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I-15〉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불건강인식률비¹⁾: 2005

	대학 이상 대비 초졸 이하	비육체근로자 대비 육체근로자	소득 상위 1분위 대비 소득 하위 5분위
남자	3.73	2.23	3.63
여자	3.06	1.80	3.47

주: 1)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하지 못한 편' 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주관적 불건강 상태'로 구분하여 이들의 학력별, 직업별 및 소득수준별 최상위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최하위 집단의 교차비(odds ratio)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2007.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남자가 29.4%로 여자 26.4%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46.1%나 되지만 학력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대졸 이상 집단은 16.6%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당뇨병 유병률이 17.8%이고, 반면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6.4%였다. 소득수준별 당뇨병 유병률은 최하위 집단이 12.7%이고 최상위 집단이 8.7%였다(표 VIII-16).

현재 한국인의 1위 사망원인인 암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2001년 소득계층별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표 VIII-17), 위암, 간암, 폐암, 등 발생빈도가 높은 암들의 경우에 소득이 높은 상위 1계층에 비해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에는 상위 1계층에 비하여 최하위 의료급여 계층은 발생률이 2배 이상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결장암, 직장암 등은 계층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전체 암을 모두 고려할 때, 암 발생위험은 1계층에 비하여 의료급여 계층이 남자의 경우는 1.7배, 여자의 경우는 1.5배가 높다.

〈표 VIII-16〉 사회경제적 지위별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¹⁾: 2008

	(%)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성별		
남자	29.4	10.8
여자	26.4	9.3
교육별수준		
초졸 이하	46.1	17.8
중졸	34.1	11.3
고졸	20.9	6.8
대졸 이상	16.6	6.4
가구소득별 ²⁾		
하	28.6	12.7
중하	27.8	10.2
중상	27.8	7.9
상	26.1	8.7

주: 1) 만 3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성 및 연령집단(5세 단위) 내 4분위로 분류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표 VIII-17〉 성별 및 소득계층별 암 발생률¹⁾: 2001

	남자						여자					
	1계층 (최상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최하층)	1계층 (최상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최하층)
위암	55.4	52.9	55.8	54.3	59.4	79.3	28.6	25.0	21.9	21.1	19.7	32.9
간암	33.6	33.6	35.8	40.3	45.8	73.0	21.3	23.3	20.6	21.1	21.4	30.1
기관지·폐암	33.6	41.5	44.4	42.6	51.1	61.0	16.2	16.5	18.1	20.3	21.8	32.4
직장암	14.5	13.9	12.3	12.1	11.3	16.1	9.4	8.7	9.8	8.8	10.3	18.2
결장암	14.8	10.7	12.3	9.8	12.0	14.6	8.4	8.9	9.1	9.8	9.3	15.7
전체	226.4	223.4	230.7	228.3	255.1	379.2	149.6	145.9	137.1	137.0	140.1	226.9

주: 1) 암 발생률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인구로 한 인구 10만 명당 암 진단 환자수임. 소득계층은 2001년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세대 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20%부터 하위 20%까지 1-5계층으로 구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6계층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계층별 암 발생, 암 치명률의 불평등 연구, 2005.

건강습관의 불평등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습관들도 순수하게 개인적인 선택이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 건강습관의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면 사회적 지위의 사다리에서 최상위 집단에 비하여 최하위 집단이 얼마나 불건강한지를 파악하면 된다. 이것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구하면 확인이 된다. 흡연을 지표를 사용하여 교차비를 구한 결과(표 VIII-18), 남자의 경우 대학 이상 졸업자의 흡연확률을 1로 할 때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의 흡연확률은 2.3이 된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흡연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흡연에 미치는 학력차이의 영향이 더 커서 초등학교 졸업의 저학력 여성은 대학졸업의 고학력 여성보다 흡연확률이 4배가 된다. 남성의 경우 비육체노동자(화이트칼라)보다 육체노동자의 흡연확률이 2배이고, 최상위 소득자보다 최하위 소득자의 흡연확률도 약 2배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비육체노동자 대비 육체노동자의 흡연확률이 3배가 넘고, 최상위 소득자 대비 최하위 소득자의 흡연확률도 2.7배나 된다. 흡연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표 VIII-18〉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흡연율비¹⁾: 2005

	대학 이상 대비 초졸 이하	비육체근로자 대비 육체근로자	소득 상위 1분위 대비 소득 하위 5분위
남자	2.27	1.96	1.93
여자	4.11	3.16	2.71

주: 1) 평생 5갑 이상 흡연 경험이 있고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흡연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학력별, 직업별 및 소득수준별 최상위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최하위 집단의 교차비(odds ratio)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위식 부문」, 2007.

교육수준이나 직업 또는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최하위자가 건강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최상위자보다 약 2-3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이용의 불평등

건강불평등의 여러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나쁜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의료이용의 경우에는 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게 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부담 비중이 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일상적인 질환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외래서비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병원 입원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8년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의 입원율이 저소득자의 입원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표 VIII-19).

그런데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은 실제 의료서비스가 치료 욕구수준(needs)에 부합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빈곤층이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형평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빈곤층이 상류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더라도 질병이 더 많은 빈곤층의 의료욕구 수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욕구수준을 고려한 형평성 지표로는 van Doorslar와 Wagstaff(2000) 등이 자신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합성한 HIwv Index(Health Inequity Index by van Doorslar and Wagstaff)가 많이 사용된다. 이 지표는 실제 의료이용량과 의료욕구를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의료이용량 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1에서 +1까지 분포되며 실제이용량과 기대이용량이 일치되면 0이 되고 이는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 지수가 부(-)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빈곤층에게 유

리한 상황, 즉 의료이용의 필요성에 비하여 빈곤층이 더 많이 의료이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반대로 부유층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이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VIII-20>에 수록되어 있다.

<표 VIII-20> 의료이용 형평성 지수: 1998-2005

	외래이용	입원	치과이용
1998	-0.1025	-0.0618	0.0039
2001	0.0005	0.0414	-0.0313
2005	-0.0029	-0.0112	0.039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역사 부문」, 2007.

외래이용과 입원의 경우에 1998년과 2005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 빈곤층에 유리하였고, 2001년에는 상류층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치과이용의 경우에는 1998년과 2001년에 상류층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의료의 질과 강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주어 계산할 경우에는 대부분 상류층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경우에 의료의 질과 강도를 고려할 경우에 빈곤층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즉 의료이용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고급의료서비스로 갈수록 상류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이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II-19> 사회경제적 지위별 외래이용률과 연간입원율: 2005, 2008 (%)

	외래이용률 ¹⁾		연간입원율 ²⁾	
	2005	2008	2005	2008
성별				
남자	22.9	24.9	7.7	9.5
여자	30.3	35.1	9.1	12.8
교육별수준				
초졸 이하	33.9	47.5	9.3	14.1
중졸	27.0	32.2	7.9	12.5
고졸	20.7	24.4	8.5	10.0
대졸 이상	19.1	24.9	7.6	10.1
가구소득별 ³⁾				
하	35.3	29.3	10.9	12.0
중하	25.1	31.0	8.8	10.7
중상	24.1	29.0	7.3	11.3
상	23.9	31.2	6.7	10.7
전체	26.6	30.0	8.4	11.2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주 동안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2005년 소득분류는 100만 원 이하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은 월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성 및 연령집단(5세 단위) 내 4분위로 분류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참고문헌

- 강영호 · 김혜련, 2006.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사망추적 결과.” 「대한예방의학회지」 39(2): 115-122.
- van Doorslar, E., A. Wagstaff, et al, 2000. “Equity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Europe and the U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 553-583.

조병희(서울대학교)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요 약

-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이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 3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만성질환자들은 의료이용이 높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삶의 질이 비만성질환자들에 비해 낮다.
- 한국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높은 당뇨병 유병률을 보이나, 당뇨병 관리의 대표적 지표인 철저도인 안저검사율은 낮다.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사회경제 수준 및 보건위생과 영양 상태의 향상 등이 이에 대한 대표적 기여 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와 서구화에 따른 생활양식과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는 고령화를 경험하는 선진국에서처럼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켜왔다.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지는 질환으로, 종종 완치가 어려우며 장기간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는 유전적 소인과 함께 장기간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행태 등이 알려져 있으며, 한번 발병하면 남은 생애동안 질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글은 한국인의 만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의 최근 동향을 살핀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만성질환 유병의 추이, 만성질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수준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만성질환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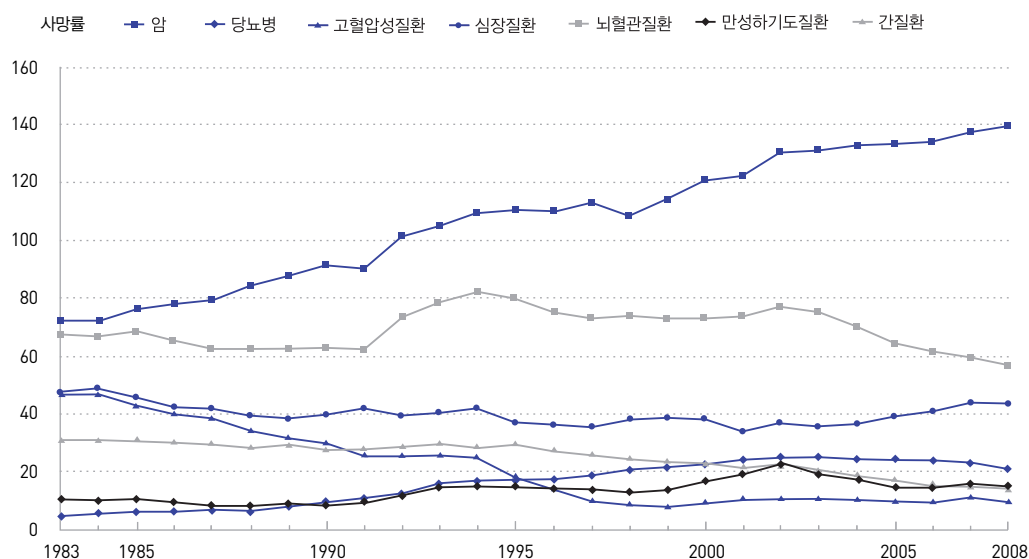
암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지난 사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은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72.1에서 2008년에 139.5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환경오염도 관련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대표적 만성질환인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1990년대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뇌혈관질환과 마찬가지로 순환기계 질환인 고혈압성질환의 의한 사망률 역시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47.3에서 2008년에 9.6으로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심장질

환 사망률의 경우, 고혈압성질환의 사망률에 비해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도 감소하여 왔는데, 이는 1차 예방에 따른 조기발견과 관리, 그리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환경의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간질환의 사망률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당뇨병의 사망률은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그림 VIII-4).

남성과 여성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혈압성질환의 경우 남성의 사망률은 1998년에 인구 10만 명당 7.0에서 2008년에 6.4로 약 8.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사망률은 9.7에서 12.7로 30.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뇨병의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여성(-0.5%)의 감소율은 남성(-1.9%)에 비해 약 1/4에

[그림 VIII-4]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¹⁾: 1983-2008



주: 1)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으나 여성(22.1%)의 사망률의 증가가 남성(4.6%)의 4배 이상이었다(표 VIII-21).

이처럼 만성질환 사망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생리학적 차이와 함께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간에 교육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여성의 직업 선택과 수입 정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은 건

강 관련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성도 남성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사망률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남녀 간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에서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이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인구의 27.9%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골관절염(11.4%)과 당뇨병(10.0%)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뇌졸중(2.0%)과 협심증(2.0%)의 유병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지난 10년간 각각 약 1.7배와 2.5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이들 질환을 가진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관리가 시급한 보건 문제임을 보여준다.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골관절염과 뇌졸중의 유병률이 매우 높았다(표 VIII-22).

〈표 VIII-21〉 성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¹⁾: 1998, 2008

	남자		여자	
	1998	2008	1998	2008
총 사망률	580.5	553.1	457.4	443.0
각종 암	138.6	176.9	78.3	101.9
간질환	39.5	23.3	9.6	5.7
고혈압성질환	7.0	6.4	9.7	12.7
뇌혈관질환	70.4	54.7	76.8	58.3
당뇨병	21.3	20.9	20.6	20.5
만성하기도질환	13.9	18.2	11.4	11.5
심장질환	41.2	43.1	35.7	43.6

주: 1)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표 VIII-2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998-2008

			(%)				
			1998	2001	2005	2007	2008
고혈압	30세 이상		28.9	29.8	28.1	25.1	27.9
	65세 이상		56.1	58.9	55.9	56.6	55.7
당뇨병	30세 이상		11.6	8.9	9.1	9.7	10.0
	65세 이상		18.1	16.6	18.2	18.3	19.7
골관절염	30세 이상		10.8	11.7	13.2	10.5	11.4
	65세 이상		29.4	33.1	40.2	30.2	29.5
뇌졸중	30세 이상		1.2	1.5	2.1	2.3	2.0
	65세 이상		-	-	-	-	7.6
협심증	30세 이상		0.8	1.1	2.4	2.5	2.0
	65세 이상		-	-	-	-	7.9
암	30세 이상		-	-	2.1	2.4	2.8
	65세 이상		-	-	-	-	6.0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만성질환 유병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약간 높은 반면, 골관절염 유병률은 남성(5.6%)에 비해 여성(16.9%)이 3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3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 거주자들의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유병률이 도시의 동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3가지 질환의 유병률이 모두 일관되게 낮아졌다. 30세 이상 성인 중 초졸 이하 학력자들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이 대졸 이상 학력자들보다 거의 3배 정도, 그리고 골관절염 유병률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비슷하게, 소득수준과 만성질환 유병률도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표 VIII-23).

만성질환 유병은 유전적인 요인을 포함한 생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나, 많은 경우 후천적인 생활환경

과 건강행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3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에서 일관되게 높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는 이들 만성질환 유병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의 생활환경의 개선, 그리고 건강증진 교육과 실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만성질환 관리

200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13.6%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정기적 치료를 받는 사람은 88.9%에 그쳤다. 도시 거주자들보다 농촌 거주자들이 6.2% 포인트, 남성보다 여성이 3.6% 포인트 더 많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정기적 치료를 받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30대는 100명 중 약 3명만이 만성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50대에서는 100명 중 약 18명이, 60대 이상에서는 100명 중 약 40명이 만성질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도 50대까지는 꾸준히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6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그 비율이 50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VIII-24).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젊은 성인층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I-

〈표 VIII-2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008

		(%)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성별	남자	29.4	10.8	5.6
	여자	26.4	9.3	16.9
거주지역별	동	26.4	9.9	10.4
	읍·면	33.7	10.3	15.0
교육수준별	초졸이하	46.1	17.8	27.5
	중졸	34.1	11.3	13.7
	고졸	20.9	6.8	5.6
	대졸 이상	16.6	6.4	2.6
소득수준별	하	28.6	12.7	12.0
	중하	27.8	10.2	11.7
	중상	27.8	7.9	10.8
	상	26.1	8.7	10.4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표 VIII-24〉 20세 이상의 만성질환 치료 여부: 2008

		(%)		
		암 또는 만성질환 있음	정기적 치료받음	치료받지 않음 ¹⁾
거주지역별	도시	12.4	88.7	11.3
	농촌	18.8	89.3	10.6
성별	남자	11.8	89.2	10.8
	여자	15.4	88.6	11.4
연령별	30-39 세	3.4	78.4	21.6
	40-49 세	8.2	83.6	16.3
	50-59 세	17.8	91.9	8.0
	60세 이상	39.3	91.2	8.9
전체		13.6	88.9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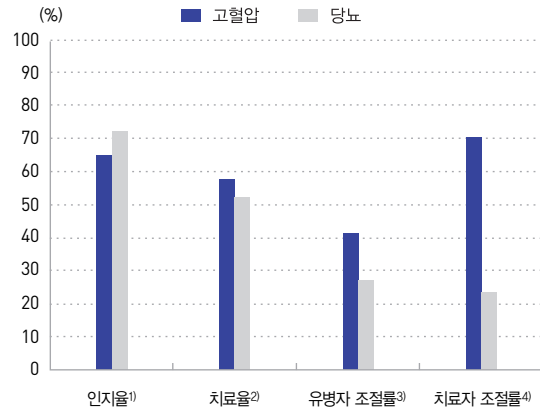
주: 1) "치료를 받고 싶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과 "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5)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관리 현황을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체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중 각각 65.2%, 72.4%만이 자신이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만성질환 모두에서 인지율에 비해 치료율은 더 낮게 나타나, 만성질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도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병자 중 혈압과 당뇨가 효과적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서 50%를 넘지 못하였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혈압 조절률은 70.7%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혈당 조절률은 겨우 23.7%로 나타나, 당뇨와 고혈압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VIII-5]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율: 2008



주: 1)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비율임.

2) 고혈압 유병자 중 혈압강화제를 한 달 동안 매일 또는 20일 이상 복용한 비율과, 당뇨병 유병자 중 혈당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투여한 비율임.

3)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비율과,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비율임.

4) 고혈압 치료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비율과,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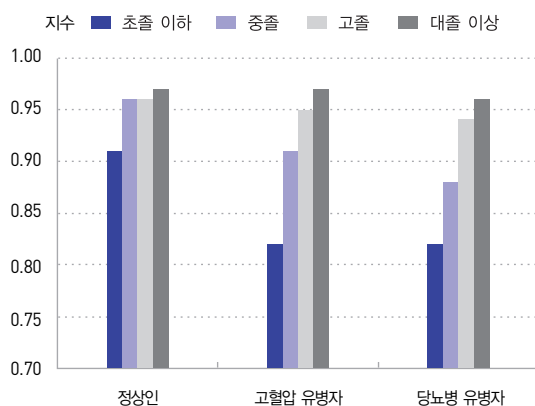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 의료이용

만성질환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질과 의료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VIII-6]은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과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과 만성질환자 모두에서 교육수준과 삶의 질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에 비해 만성질환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상의 학력 집단에 비해 초졸 이하나 중졸 학력 집단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과 만성질환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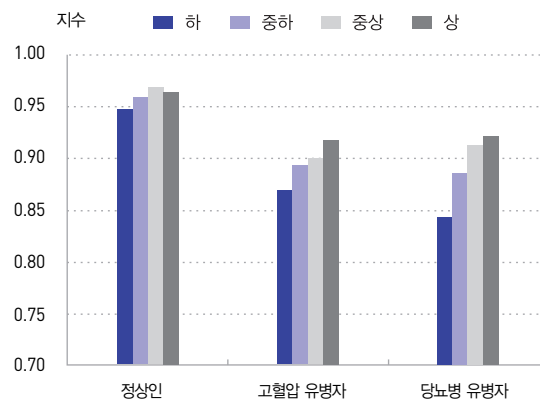
[그림 VIII-6] 교육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¹⁾: 2008



주: 1) 건강 관련 삶의 질 5개 차원을 종합한 지표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그림 VIII-7] 소득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¹⁾: 2008



주: 1) 건강 관련 삶의 질 5개 차원을 종합한 지표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의 질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보 추구나 건강 행태의 변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I-7]은 소득수준별로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수준 [그림 VIII-6]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이한 점은 소득수준이 4분위 중 가장 상층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4분위에 속한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보다도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분명치 않으나, 교육수준과 달리 높은 소득수준은 만성질환자들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설명 가능성은, 이 그림은 연령 보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자가 노인층일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노인층의 삶의 질이 성인층에 비해 낮은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VIII-25〉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만성질환 진료환자수는 약 498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늘어나 약 9.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체 의료기관 진료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진료환자 중 만성질환 진료환자의 비율은 12.2%에서 15.4%로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진료비 역시 2002년 약 1조 원에서 2005년 1조 5천억 원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해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인 8.1%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에 만성질환 진료비의 점유율은 7.8%에서 9.2%로 증가하였다.

〈표 VIII-25〉 만성질환 진료환자수와 진료비: 2002, 2005

	2002	2005	연평균 증가율 (%)
진료환자수			
만성질환자(1,000명)	4,981	6,506	9.3
전체 진료환자(1,000명)	40,693	42,136	1.2
만성질환자 점유율(%)	12.2	15.4	-
진료비			
만성질환 진료비(1억 원)	10,366	15,486	14.3
전체 진료비(1억 원)	132,958	167,906	8.1
만성질환 진료비 점유율(%)	7.8	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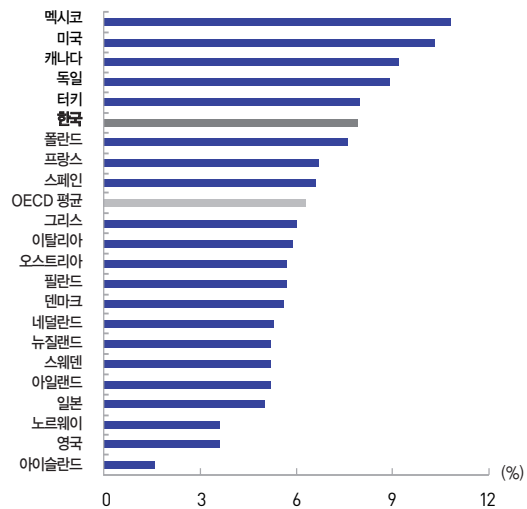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05년 주요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 2006.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 수준의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유병률과 당뇨 관리의 대표적인 지표인 안저검사를 통계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VIII-8]은 국제비교를 위해서 각국 인구의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OECD 주요 국가들의 2010년 추정 당뇨병 유병률이다. 22개 국가들의 평균은 6.3%인데 한국은 8%로, 여섯 번째로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10.8%)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1.6%)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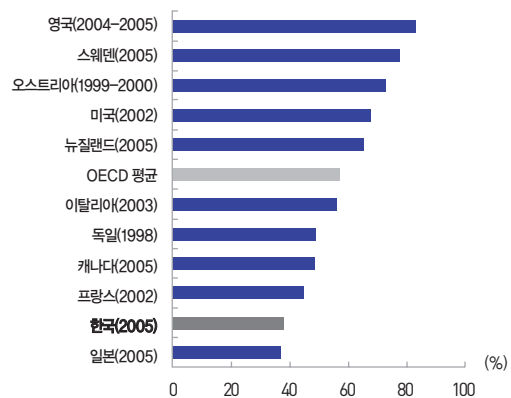
[그림 VIII-9]는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눈 관련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를 수준을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고한 12개 국가들의 안저검사를 평균이 57.3%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8.1%로 일본(37.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안저검사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당뇨

병 환자 중 안저검사를 받는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

[그림 VIII-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유병률¹⁾: 2010

주1): 20-79세 기준이며, 2010년 추정치임.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09, 2009.

[그림 VIII-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환자¹⁾ 안저검사율²⁾: 2005

주: 1) 18-75세 기준임.

2) 안저검사율은 특정 해에 종합적인 눈 검사를 받는 1종 및 2종 당뇨병 환자의 비율임.

출처: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2007.

이 자료는 2005년에 작성된 통계이므로 현재 당뇨병 관리의 질은 이보다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뇨병을 포

함해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향상과 개인 수준의 건강관리 노력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김홍수(서울대학교)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변화 • 이재열 218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 민수홍 227

산업재해의 변화 • 이경용 234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 강성진 241

IX. 사회안전

Social Security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 고도성장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지속가능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지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안전을 빼놓고 말하기 힘들다.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고도성장으로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로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도 안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위험을 낳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위험 및 생태적 위험 등으로 나누었다.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을 자연재난이라고 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인위적 재난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재난으로는 화재, 산업재해,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빈곤과 범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생태적 위험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위험을 뜻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연은 환경오염 등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것이다. 환경오염은 건강에 단기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온도를 올리고, 기상이변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경제활동 모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기보다는 계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재해

해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봄부터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오염물질을 싣고 빈번하게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서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자연재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태풍과 강풍, 그리고 폭우의 피해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장마철에 집중하였던 강수량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집중적인 지역적 호우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시아의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주된 자연현상이다. 지난 2006년의 태풍 예위니아, 2003년의 매미, 2002년의 루사 등은 모두 재산피해액만 수조 원씩을 남긴 초대형 태풍이었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는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이 가장 컸다. 모두 6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270명의 사망자,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그 후에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망자와 이재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2,518억 원의 재산피해에 17명의 사망자, 그리고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그쳤고, 2008년에는 637억 원의 재산피해에 11명의 사망자와 4,6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그쳤으나, 2009년에는 2,988억 원의 재산피해에 13명의 사망자, 그리고 1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표 IX-1).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는 거의 전적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이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는 달리 지진피해가 없다. 아울러 동일한 태풍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관찰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북한에서의 인적, 재산상의 피해는 남한에 비해 거의 100배 정도 크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전략에 의해 크게 증폭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IX-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09

	재산피해액 (100만 원)	사망자수	이재민수
1995	601,152	158	30,408
1996	483,050	77	18,686
1997	190,914	38	6,296
1998	1,582,810	384	30,308
1999	1,219,674	89	26,656
2000	645,451	49	3,665
2001	1,256,168	82	4,165
2002	6,115,292	270	71,204
2003	4,408,241	148	63,133
2004	1,230,436	14	8,814
2005	1,049,839	52	9,914
2006	1,942,984	63	2,883
2007	251,804	17	675
2008	63,703	11	4,627
2009	298,808	13	11,931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기술적 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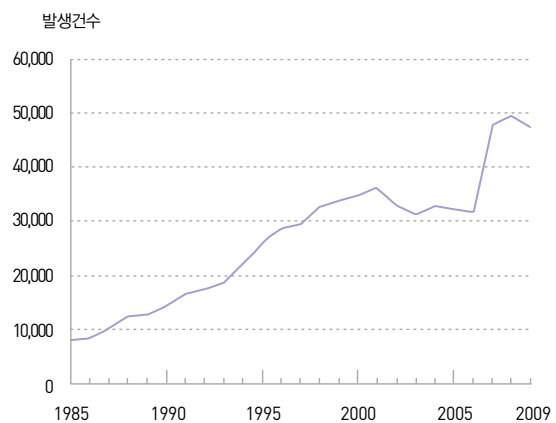
화재

화재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인적재난이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에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섰으며 등락은 있었지만 2009년에는 무려 4만 7천 건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IX-1).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화재가 급증한 이유는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와 생활환경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요인은 빠르게 늘어났으나, 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방화, 담배, 가스, 유류, 불장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81년 이후 200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줄곧 전기화재가 1위, 담뱃불화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방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하였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X-1] 화재 발생건수: 1985-2009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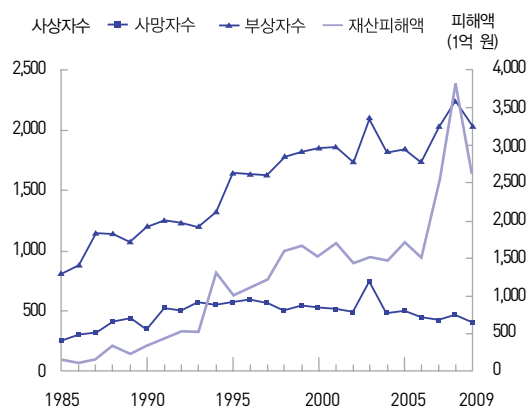
피해종류별로 보면 건축물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이 차량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 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순이었다. 건축물화재로 인한 피해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화재는 일정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건축물과 차량 화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크게 증

가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피해규모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에 다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밀집시설의 증대와 복합구조화 등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해졌으나, 화재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와 관련 기술은 아직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의 화재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수는 2000년 531명에서 2009년 409명으로 23.0%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부상자수는 1,853명에서 2,032명으로 9.7% 증가하였다. 전체 사상자수로는 2.4%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의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재산피해액은 2000년 1,519억 원에서 2009년 2,518억 원으로 65.7%나 증가하였다(그림 IX-2).

[그림 IX-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09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산업재해

한국사회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의 아픔이 존재한다. 초고속 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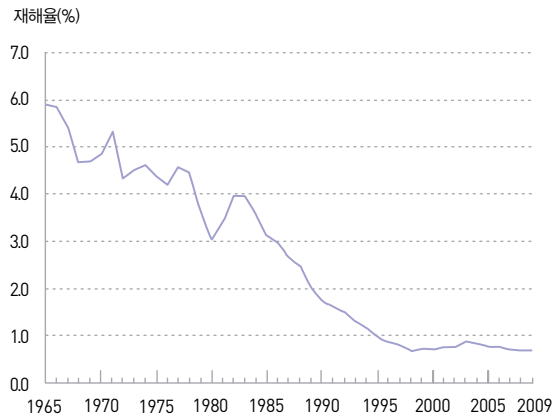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직업병 등을 얻은 재해자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적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에,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자수는 1964년 1,489명에서 시작하여 1984년을 정점으로 157,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1998년에 51,514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95,806명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비 재해자의 비율을 따지는 재해율로 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6%에 가까웠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2009년에는 0.7%로 낮아졌다(그림 IX-3).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수는 1984년의 154,93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9년에는 52,426명으로 줄었으나, 사망자수는 크게 줄지 않고 2,18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형사고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1990년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325명에 이르러 세계 1위 수준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

[그림 IX-3] 산업재해율¹⁾: 1965-2009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838명으로 최악의 시점에 비하면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그 감소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비교 대상이 된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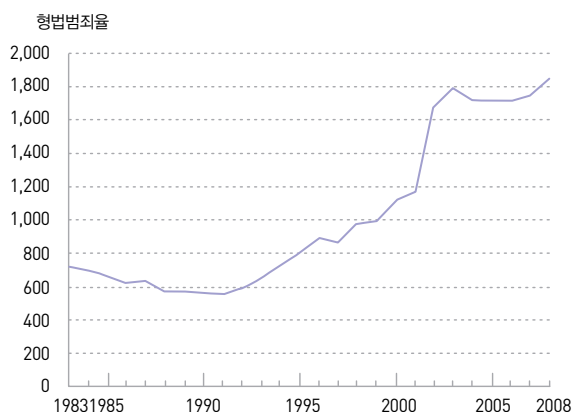
범죄부하량

우리는 최근까지 한국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도시들은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원한관계 없는 무차별적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 역시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게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범죄발생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지난 1983년 이후 형법범죄 건수는 285,846건에서 2008년 897,536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716건에서 거의 2.5배에 가까운 1,84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그림 IX-4). 특이한 것은 절도사건의 경우 1994년 57,219건을 저점으로 198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08년에는 223,26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살인사건도 1983년의 518명에서 2008년에는 1,120건에 달해 동 기간에 두 배가 되었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과 상해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범죄로 인한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는 1996년 12,155건에서 2008년 22,987건으로 무려 1만 건 이상 늘어났다.

[그림 IX-4] 형법범죄율¹⁾: 1983-2008

주: 1)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주요 형법 범죄의 발생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표 IX-2), 한국의 경우 살인범죄 발생률은 2.3건으로 일본의 0.9건에 비해 높지만 영국(2.6건), 독일(2.9건), 프랑스(3.1건), 캐나다(4.2건), 미국(5.6건), 러시아(15.7건) 등에 비해 낮다. 강도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의 발생률은 9.2건으로서 일본의 3.6건에 비해서는 높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폭력사건의 발생률은 가장 높은 편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분쟁이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표 IX-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주요 형법범죄율¹⁾: 2007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체
한국	2.3	9.2	18.1	440.4	611.6	1,082.0
미국	5.6	147.6	30.0	3,264.0	283.8	3,730.0
일본	0.9	3.6	1.4	1,119.0	57.1	1,182.0
영국	2.6	156.7	21.5	4,367.0	413.4	4,961.0
프랑스	3.1	163.5	16.0	2,821.0	462.3	3,465.0
독일	2.9	64.4	9.1	3,116.0	636.5	3,829.0
캐나다	4.2	89.8	65.0	2,252.0	718.5	3,130.0
러시아	15.7	31.9	5.0	1,313.0	148.5	1,514.0
평균	4.7	83.3	20.8	2,336.0	416.4	2,862.0

주: 1)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출처: 경찰청, 「2007년도 주요국 치안지표 비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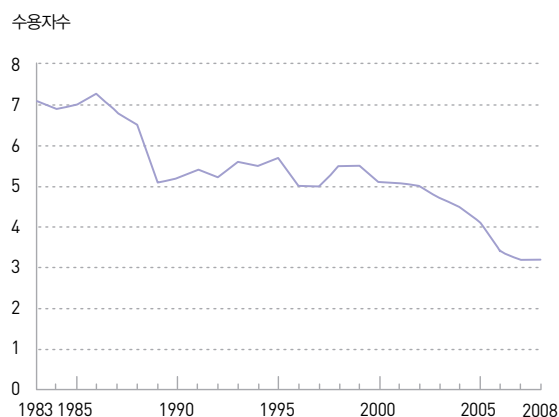
범죄방지 및 경찰력

경찰관수는 1970년 총 43,00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99,554명으로 39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50명에서 498명으로 감소하였다. 총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를 의미하는 검거율은 2006년 86.3%로

최저를 기록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89.7%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1999년에 9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74.9%가 되었다. 같은 기간 중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1999년 7만 5천 원에서 2008년 14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경찰인력과 치안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정능력을 살펴보면 1983년에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2천 명이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6만 8천 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2007년에는 4만 6천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132명 수준에서 96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수용능력이 늘어난 데는 그동안 교도관의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이 7명 수준에서 3.2명대로 떨어진 것이 큰 기여를 하였다(그림 IX-5).

〔그림 IX-5〕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 1983-2008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환경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것을 생태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라고 한다. 이 지수에 따르면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은 1인당 1.8ha인데 선진국은 이 기준을 25% 가량 초과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에서는 극심한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들이 뿌리 채 뽑히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제한된 생태자원의 급속한 훼손과 소멸은 우리 세대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환경가치를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심각한 세대 간 정의구현의 실패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협이 된다.

국가의 환경수준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을 거쳤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훼손되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환경오염문제는 1960년 초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오염이 최고점에 달했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보전정책이 세워졌고 환경예산도 증가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만, 각국의 환경개선 정도를 수치로 말해주는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는 2010년 현재 94위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 환경의 변화와 현황을 환경압력, 환경상태 및 환경관리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압력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다양한 기체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화합 등이 있지만 그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유발물질이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 장기간에 걸쳐 기후변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은 GDP로는 세계 12위(구매력 환산 GDP로는 세계 14위)이면서 에너지소비는 10위, 석유소비는 7위, 전력소비는 10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9위인 상태이다. 에너지 관련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GDP 대비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2007년 현재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는 6억 2천 만 톤이며, 그 중 3,630만 톤은 산림 등에 의해 다시 흡수되어 5억 8,370만 톤이 순배출된다(표 IX-3). 이 중에서 84.7%인 5억 254만 톤이 에너지 부문에서

〈표 IX-3〉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 1990-2007

(100만 tCO₂)

	배출원(A)					흡수원 (B)	순 배출량 (A-B)
	에너지	산업 공정	농업 축산	폐기물	계		
1990	247.8	19.9	15.2	22.5	305.4	-23.7	281.6
1995	372.2	47.1	22.4	19.5	461.2	-21.2	440.0
2000	438.8	58.3	20.6	16.7	534.4	-37.2	497.1
2005	498.9	64.8	18.2	14.7	596.7	-32.0	564.7
2006	505.9	63.7	17.5	15.6	602.6	-32.3	570.3
2007	525.4	60.9	18.4	15.3	620.0	-36.3	583.7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www. keei.re.kr).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환부문(35.5%)이다. 그 다음으로 산업부문(31.3%)과 수송부문(19.8%)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므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와 온실기체 배출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이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온실기체 배출량 중 88.8%에 이른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양인데 에너지 소비 증가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6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86톤으로 OECD 평균인 10.93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990년 5.35톤에 비해 84.3%가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평균 2.9% 증가하였다.

환경상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아황산가스는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

무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오염도가 가장 심했던 서울시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SO₂)기준으로 1980년 0.094ppm에서 1999년 0.008ppm으로 대폭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주요 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연간 환경기준치(0.02ppm)를 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들어와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WHO 권고기준(0.019ppm)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산화질소와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가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오존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 모두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 광주, 울산 등은 서울보다 오존농도가 높다. 그러나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의 수질오염도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영산강은 3급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등 수질개선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강 팔당유역과 금강 대청댐 유역은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 팔당댐 지점의 수질오염도는 1985년 1.4mg/l, 1990년 1mg/l, 2000년 1.4mg/l, 2005년 1.1mg/l, 2008년 1.3mg/l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영산강 하류지역인 나주는 1990년 6.7mg/l, 1995년 7.0mg/l로 4급수로 악화되었는데, 2000년 6.5mg/l, 2005년 5.3mg/l, 2008년 4.9mg/l로 3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IX-4).

〈표 IX-4〉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8

		(BOD(mg/l))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한강	팔당댐	1.4	1.0	1.3	1.4	1.1	1.3
	노량진	4.7	3.4	3.8	2.7	3.1	4.3
낙동강	고령	8.5	5.4	7.3	4.3	2.9	3.1
	물금	3.7	3.0	5.1	2.7	2.6	2.4
금강	대청댐	1.1	1.7	1.2	1.0	1.1	1.0
	공주	2.6	3.2	4.8	2.6	2.8	2.9
영산강	나주	5.2	6.7	7.0	6.5	5.3	4.9
	담양	-	-	1.5	1.4	1.5	1.5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환경오염 방지노력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정책과 제도, 그리고 환경예산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한 바 있다. 정부의 총예산 가운데 환경예산은 1992년 1.37%에서 1995년 2.05%, 2000년 2.32%로 증가하였다(표 IX-5). 그러나 2000년 이후 감소하여 2008년 현재 1.87%를 차지하고 있다. GDP 중 환경오염방지 지출은 1992년 0.26%에서 1998년 0.6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0년 0.57%, 2008년 0.39%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은 28만 5천 원이었으나 2004년 33만 5천 원, 2007년 40만 3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2년 2.0%에서 2007년 2.3%로 증가하였다(표 IX-6).

최근 들어 불기 시작한 녹색성장 바람은 기존의 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성장 대신 환경친화적이며 탄소발생을 줄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전략으로 각광

〈표 IX-5〉 환경예산 및 환경오염방지지출 비율: 1992-2008 (%)

	정부 총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율	GDP 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비율
1992	1.37	0.26
1995	2.05	0.51
1998	2.24	0.66
2000	2.32	0.57
2003	2.12	0.47
2008	1.87	0.39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표 IX-6〉 환경보호 지출액과 지출비율: 2002-2007 (%)

	환경보호 지출액 (1억 원)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 (1,000원)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액 비율(%)
2002	135,794	285	2.0
2003	147,414	308	2.0
2004	160,836	335	2.1
2005	176,306	366	2.2
2007	210,852	403	2.3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어떻게 환경과 성장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지 주목된다.

이재열(서울대학교)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요 약

-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 이후 지난 9년간 아동학대는 전체적으로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가운데 방임과 중박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뒤를 이은 정서학대는 지난 9년간 6.8배 증가하여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신고건수는 2000년 이후 지난 10년 사이에 1.7배 증가하였고, 15세 이하 여자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세는 더 높아서 같은 기간 3.9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 여자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같은 기간 8배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아동실종은 지난 4년간 1.3배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지난 10년간 60.8% 감소하였다.

인생의 초기단계인 아동기는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파장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들의 보호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의 학대 경험은 이것이 초래하는 크고 장기적인 해악에 비추어보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 되겠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가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학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다음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조두순 사건 이후로 비슷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만 김길태, 김수철, 장안동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딸아이를 조바심치며 기다리고 있고, 경찰은 급기야 ‘아동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최근에 국민들의 두려움을 급증시킨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도 그 실태와 변화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아동실종과 어린이 안전 사고의 실태와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정의가 법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료마다 아동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시된 각 표에 포함된 아동의 연령을 명시하였다.

아동학대

〈표 IX-7〉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이 표에 제시된 발생건수는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전화건수 중에서 보호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건수를 의미한다.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1년에 2,105건에서 2009년에는 5,685건으로 2.7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언론에서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방임과 중복학대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임은 2001년에 672건에서 2009년에는 2,025건으로 3배 증가하였고,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는 같은 기간 중에 623건에서 2,238건으로 3.6배 증가하여 방임보다 조금 더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정서학대는 2001년에 114건 발생하던 것이 2009년에는 778건으로 6.8배로 9년간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증가를 보인 유형은 성학대

〈표 IX-7〉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¹⁾: 2001-2009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합계
2001	476	114	86	672	134	623	2,105
2002	254	184	65	814	212	949	2,478
2003	347	207	134	965	113	1,155	2,921
2004	364	350	177	1,367	125	1,508	3,891
2005	423	512	206	1,635	147	1,710	4,633
2006	439	604	249	2,035	76	1,799	5,202
2007	473	589	266	2,107	59	2,087	5,581
2008	422	683	284	2,237	57	1,895	5,578
2009	338	778	274	2,025	32	2,238	5,685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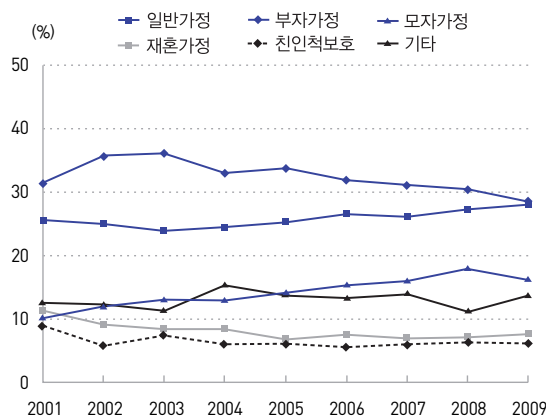
었다. 학대유형 가운데 가장 변화가 적은 것이 신체학대로 2001년에 476건에서 2009년에는 338건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중에서 그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아동을 내 버리고 돌보지 않는 유기로 같은 기간 76%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중에서 피해아동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유기, 성학대, 신체학대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 유형 가운데 유기와 신체학대는 지난 9년간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성학대는 3.2배 증가하여 감소와 증가가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아동학대가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최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북학대가 어떤 유형의 학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중북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유형별 발생건수에서는 중북학대를 구분했을 때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북학대가 상당 부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북학대의 구성유형을 고려하면, 심각한 형태의 학대유형 중에서 유기를 제외한 성학대와 신체학대가 지난 9년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아동학대가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IX-6]을 보면, 아동학대의 1/4 정도만 친부모로 구성된 일반(온전)가정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3/4 정도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가정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그림 IX-6]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유형별 구성비율: 2001-2009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많이 발생하였다. 부자가정은 2001년에 전체 아동학대의 31.4%를 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28.4%로 감소하였다. 한편 모자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2001년에 10.3%에서 2008년에는 17.9%까지 높아졌다가 2009년에 16.2%로 소폭 감소하였다.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2001년의 11.3%에서 2009년에는 7.6%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고, 친인척보호 가정도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나는 것인가? [그림 IX-7]은 2009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83.3%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등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각각 4.0%와 2.8%이고 타인에 의한 학대는 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 관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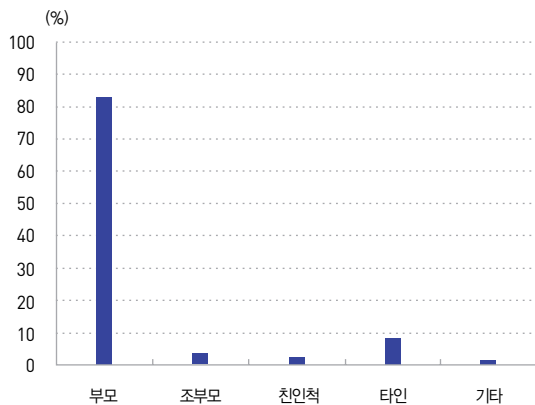
성되는 중요한 인생 초기에 일회적이기 보다 반복적으로 학대가 생겨나기 쉽고 특정한 형태의 학대가 배타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여러 학대가 같이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해악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성장한 이후까지도 그 해악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9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거의 매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4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어떤 부모가 학대를 저지르기 쉽고 동시에 어떤 아동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일까? 먼저 아동학대자의 특징을 <표 IX-8>을 통해 알아보면, 아동학대자는 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방법을 모르고(31.6%),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24.0%), 중독 및 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13.3%)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아동폭력이 주로 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는 경제적인 책임과 가사책임을 배우자의 도움 없이 모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대적 반응을 보이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계부나 계모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의 애정 없는 훈육시도가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피해아동은 적응·행동의 문제(40.5%), 정

[그림 IX-7] 아동학대 피해자¹⁾의 가족관계별 구성비율: 2009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표 IX-8>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징¹⁾: 2009

가해자 특징	%	피해아동 특징	%
양육태도 및 방법 인지 부족	31.6	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	28.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4.0	적응 및 행동 문제	40.5
가족 및 종교 문제	10.0	발달 및 신체건강 문제	9.8
중독 및 질환 문제	13.3	장애	2.0
성격 및 기질 문제	9.4	특성 없음	11.6
어릴 적 학대 경험 및 폭력성	6.3	기타	7.2
성 문제	1.2	합계	100.0
원치 않는 아이	0.8		
기타	1.8		
파악 안 됨	1.6		
합계	100.0		

주: 1) 18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서·정신건강의 문제(28.9%), 발달·신체건강의 문제(9.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응·행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가출, 거짓말, 도벽 등 청소년 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27.9%, 학습문제 6.7%, 학교 부적응 5.9%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정신건강의 문제로는 주의산만 5.7%, 불안 4.7% 등이 포함되며, 발달·신체건강의 문제에는 위생문제 4.0%와 언어문제 2.6%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아동들은 이처럼 행동상의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문제나 아동의 문제가 상대방을 자극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어느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아동의 비행이 부모의 학대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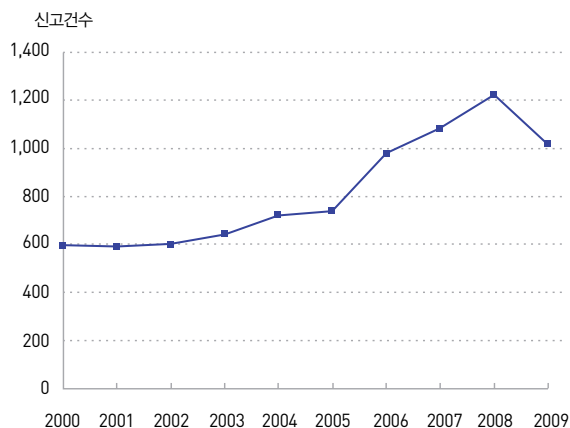
아동성폭력

최근에 들어 아동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의 두려움이 높아졌다. 그 결과 자녀의 등하교 길에 부모가 동행하는 등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자녀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등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어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마저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아동 성폭행 사건들을 면밀히 보면, 김길태가 성폭행하고 피살한 예비여중생, 김수철이 학교에서 납치하여 성폭행한 8세 여아, 장안동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하

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림 IX-8]은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건 신고건수에 대한 경찰청 자료를 보여준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건은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 595건이던 신고건수가 2009년에는 1,017건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00여 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 1,220건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에 1,017건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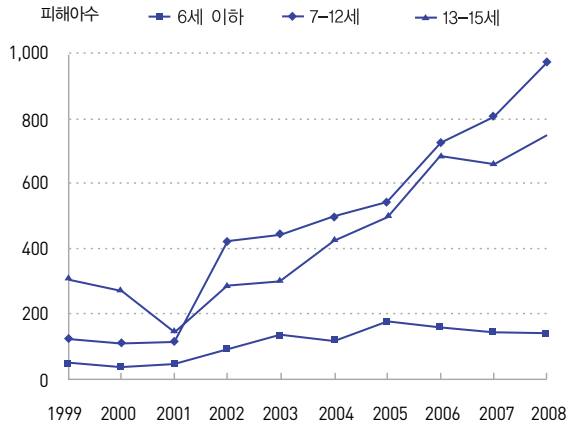
[그림 IX-8] 아동성폭력 신고건수¹⁾: 2000-2009



주: 1) 13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연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연령 변화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을 6세 이하, 7-12세, 13-15세로 나누되,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자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5세 이하의 여자 피해아동수를 살펴보았다. [그림 IX-9]를 통해서 15세 이하 여아 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1999년에 482명에서 2008년에는 1,865명으로 3.9배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나누

[그림 IX-9] 연령별 여자 성폭력 피해아동수¹⁾: 1999-2008

주: 1) 15세 이하 여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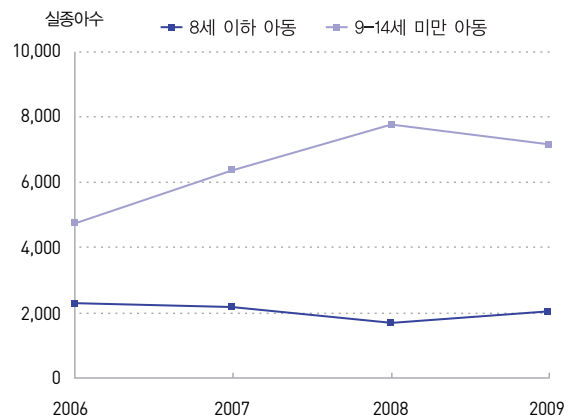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어 보면, 6세 이하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10년 사이에 2.8배 증가하였고, 7-12세 여자 아동의 피해는 같은 기간 8배 증가하였으며, 13-15세 여자 아동은 2.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7-12세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증가하여 이들이 15세 이하 여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동실종 및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아동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아동실종과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다. 실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보호자의 방임이나 납치에 의한 가해자의 성적 학대 등이 실종과 관련될 수 있다.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도 보호자의 방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동실종을 [그림 IX-10]에서 보면, 14세 미만의 아동실종이 2006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모두 7,064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했던 것이 2009년에는 9,240명으로 1.3배 증가하였다.

[그림 IX-10] 연령별 실종아동수¹⁾: 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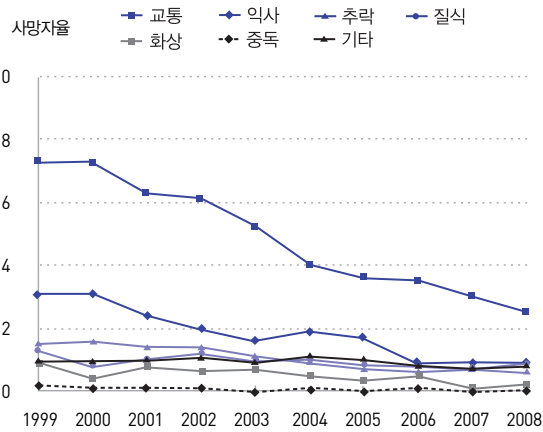
주: 1) 14세 미만 아동 기준임.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실종아동을 8세 이하 아동과 9-13세 아동으로 나누어 보면 두 집단 간에 서로 상반된 경향이 관찰된다. 8세 이하의 실종사건은 4년 사이에 10% 감소한 데 반해 9-13세 아동의 실종은 같은 기간 1.5배 증가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 실종사건의 증감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자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수를 나타내는 사망자율을 사용하였다. 지난 10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줄어 들었다.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1999년에 15.3명에서 2008년에는 6명으로

[그림 IX-11] 안전사고 유형별 아동 사망자율¹⁾: 1999-2008



주: 1) 사망자율=(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인구수) ×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60.8%나 감소하였다. 사고유형별로 아동 사망자율을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익사가 높았다. 추락과 질식의 사망자율은 2004년을 기점으로 자리바꿈을 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추락의 사망자율이 조금 더 높던 것이 2004년 이후로는 질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IX-11).

앞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2001년부터 8년간 3.3배 증가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에 방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수홍(경기대학교)

산업재해의 변화

요 약

- 산업재해율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2000년대에는 0.7%대에서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40대 이상 인구와 여성의 산업재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산재예방 정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업종들에서 손상부상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비중은 감소하였다.
-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감기거나 끼는 협착재해는 감소한 반면,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전도재해와 추락재해는 증가하였다.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은 항상 위험에 대한 도전을 전제로 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막대한 물질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변화는 산업재해의 절대 규모와 재해율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 절대 규모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산업재해율은 일정 규모의 근로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아졌다면 위험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산업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특성, 그리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산업과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설비와 도구 등의 물체에 부딪치는 것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형태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산업재해의 변화

산업재해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는 재해자수가 증가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수준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식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신고한 산업재해 사례를 통합하여 산출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산업재해통계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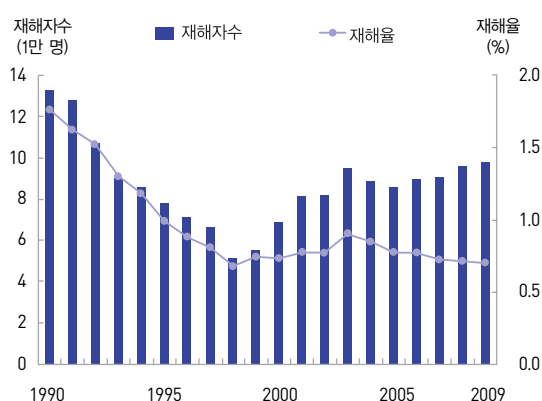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이르

러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산재예방 사업이 시작되면서 산업재해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림 IX-1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수는 1990년에 132,893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78,034명, 그리고 2000년에는 68,9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는 85,411명, 2009년에는 97,821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규모를 고려한 산업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 1.76%였으며 1995년에 0.99%, 그리고 2000년에는 0.7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산업재해율이 0.7%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1년 1,551명에서 2007년 1,383명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1,400명대로 다소 증가하였다.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은 2000년 1.49에

[그림 IX-12]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¹⁾: 199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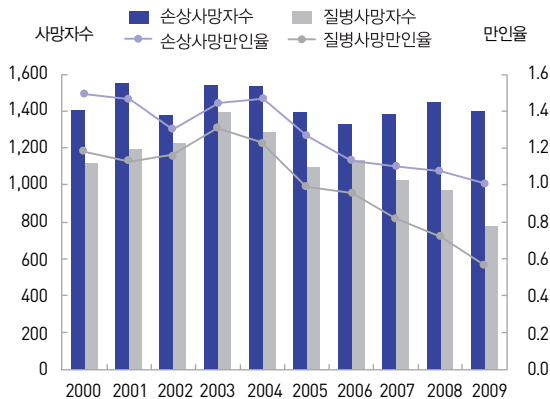


주: 1) 재해율=(산업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년도.

서 2009년 1.01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X-13).

[그림 IX-13]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¹⁾: 2000-2009



주: 1) 사망률=(산업재해사망자수÷전체 근로자수)×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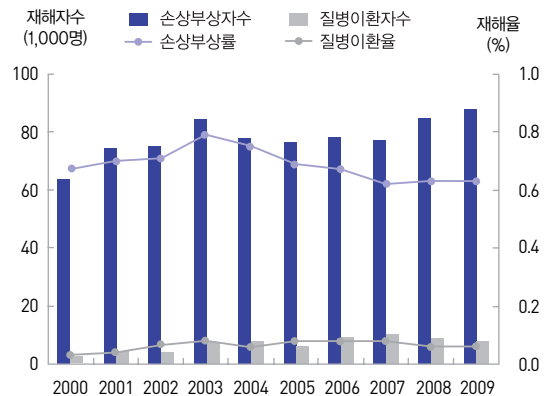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갖게 된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상부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규모는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업무상 손상부상률은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업무상 질병이환율은 0.04%에서 0.08%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왔다(그림 IX-14).

산업재해 피해자의 특성

최근 한국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해 노동력 구조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인구특성별로 산업재해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를 분명하게 관찰하려면 근로자의 인구집단별 산업재해율을 산출하여

[그림 IX-14] 비사망 산업재해수와 재해율¹⁾: 2000-2009



주: 1) 재해율=(산업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재해자 구성비율로만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성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표 IX-9),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상부상자의 경우 2000년에는 남자가 86.8%, 여자가 13.2%였으나 2009년에는 남자가 79.9%, 여자가 20.1%로 남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손상사망의 경우에는 성별 구성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업무상 질병이환의 성별 구성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남자의 비율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비율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상부상의 경우, 30대 이하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업무상 손상사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이환의 경우에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40-50대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무상 질병사망에서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60대 이상의 비

〈표 IX-9〉 산업재해자의 성별 구성비율: 2000-2009

(%)

	손상부상자		손상사망자		질병이환자		질병사망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86.8	13.2	96.7	3.3	83.3	16.7	93.3	6.7
2001	85.5	14.5	96.0	4.0	83.5	16.5	94.2	5.8
2002	85.8	14.2	96.1	3.9	84.4	15.6	92.3	7.7
2003	85.3	14.7	96.3	3.7	86.1	13.9	94.0	6.0
2004	84.8	15.2	96.1	3.9	85.6	14.4	93.5	6.5
2005	83.0	17.0	94.9	5.1	86.1	13.9	93.3	6.7
2006	82.8	17.2	96.2	3.8	83.2	16.8	92.5	7.5
2007	82.7	17.3	95.5	4.5	81.5	18.5	94.1	5.9
2008	82.1	17.9	96.1	3.9	81.1	18.9	94.4	5.6
2009	79.9	20.1	96.1	3.9	77.6	22.4	95.5	4.5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X-10).

산업재해 발생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산업 영역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작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1차 산업 심의 산업구조가 19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이 증

〈표 IX-10〉 산업재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2009

(%)

	손상부상자			손상사망자			질병이환자			질병사망자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2000	47.9	45.6	6.5	41.3	47.9	10.7	30.7	58.0	11.3	12.4	63.6	24.0
2001	45.2	46.8	8.0	38.2	50.5	11.3	28.3	55.5	16.1	15.9	62.1	22.1
2002	42.3	48.6	9.1	30.0	54.9	15.1	27.7	56.5	15.8	12.3	62.8	24.9
2003	41.5	48.9	9.5	32.2	52.8	15.1	34.6	52.0	13.4	12.7	63.3	24.0
2004	40.9	49.8	9.3	33.8	50.2	15.9	28.2	53.2	18.6	12.6	59.7	27.7
2005	40.6	50.3	9.1	31.3	54.9	13.8	25.4	53.8	20.8	12.0	57.9	30.1
2006	38.2	51.9	9.9	27.9	57.5	14.6	37.4	48.8	13.7	9.5	61.6	28.8
2007	35.9	53.3	10.8	27.3	55.0	17.7	38.2	48.0	13.8	10.7	59.0	30.3
2008	34.2	54.1	11.7	25.6	59.0	15.3	38.4	49.3	12.2	11.2	58.7	30.1
2009	31.5	54.7	13.8	25.6	55.5	19.0	35.6	49.3	15.1	10.0	57.7	32.3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가하고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재해율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IX-11), 손상 부상률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손상사망률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광업·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손상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질병이환율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질병사망률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관리가 잘되며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9년에 손상부상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2%에서 0.97%로 감소하였으며, 50인 이상에는 0.40%에서 0.25%로 감소하였다. 50인 미만 사

업장은 2000년 대비 2009년에 5% 정도 감소하였으나, 50인 이상은 37% 정도나 감소한 것이다. 손상사망률의 경우에도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나, 2000년 대비 감소율은 각각 약 35%와 40%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질병이환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증가하였으며, 50인 이상에서는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질병사망률은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 감소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59%로 더 크게 나타났다(표 IX-12).

산업재해 발생 특성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사고의 유형은 전통적으

〈표 IX-11〉 산업별 재해율¹⁾과 사망률²⁾: 2000-2009

	손상부상률(%)					손상사망만인율					질병이환율(%)					질병사망만인율				
	광업 농림 어업	제 조 업	건 설 업	운수 창고 통신	기타 서비스 업	광업 농림 어업	제 조 업	건 설 업	운수 창고 통신	기타 서비스 업	광업 농림 어업	제 조 업	건 설 업	운수 창고 통신	기타 서비스 업	광업 농림 어업	제 조 업	건 설 업	운수 창고 통신	기타 서비스 업
2000	1.72	1.14	0.58	0.78	0.33	7.83	1.60	2.46	2.04	0.56	0.09	0.05	0.01	0.05	0.02	34.3	0.95	0.35	1.50	0.85
2001	1.36	1.12	0.66	0.78	0.41	7.88	1.54	2.42	2.32	0.56	0.45	0.07	0.01	0.05	0.03	27.9	0.90	0.37	1.67	0.82
2002	1.05	1.13	0.70	0.67	0.43	5.27	1.27	2.10	1.80	0.57	0.37	0.07	0.01	0.04	0.02	25.5	0.98	0.39	1.29	0.93
2003	1.31	1.23	0.83	0.78	0.48	5.96	1.46	2.46	1.79	0.63	0.65	0.16	0.01	0.06	0.04	31.9	1.15	0.48	1.45	0.95
2004	1.36	1.12	0.90	0.69	0.45	6.36	1.32	3.34	1.77	0.59	1.22	0.14	0.01	0.06	0.03	33.1	0.98	0.63	1.47	0.78
2005	1.32	1.05	0.72	0.64	0.45	3.38	1.33	2.55	1.57	0.58	1.14	0.10	0.01	0.04	0.02	30.5	0.81	0.40	1.18	0.55
2006	1.53	1.03	0.67	0.65	0.45	3.01	1.31	2.19	1.40	0.46	0.93	0.14	0.02	0.08	0.05	38.2	0.72	0.36	0.89	0.53
2007	1.56	0.94	0.62	0.58	0.43	3.75	1.27	1.93	1.53	0.48	0.79	0.14	0.03	0.08	0.06	33.4	0.69	0.31	0.85	0.42
2008	1.94	1.01	0.60	0.59	0.43	3.30	1.31	1.88	1.62	0.43	0.57	0.13	0.02	0.05	0.05	32.8	0.64	0.24	0.98	0.35
2009	2.81	0.92	0.61	0.55	0.47	4.35	1.23	1.74	1.43	0.44	0.53	0.10	0.02	0.05	0.05	28.4	0.53	0.15	0.44	0.23

주: 1) 재해율=(산업별 재해자수÷산업별 근로자수)×100.

2) 사망률=(산업별 재해사망자수÷산업별 근로자수)×10,0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표 IX-12〉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¹⁾과 사망률²⁾: 2000-2009

	손상부상률(%)		손상사망만인율		질병이환율(%)		질병사망만인율	
	50인 미만	5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2000	1.02	0.40	2.08	1.04	0.03	0.03	1.11	1.22
2001	1.09	0.37	2.13	0.90	0.04	0.05	1.06	1.19
2002	1.05	0.37	1.82	0.79	0.03	0.05	1.10	1.22
2003	1.16	0.43	1.97	0.92	0.05	0.10	1.17	1.45
2004	1.11	0.40	1.96	1.00	0.05	0.10	1.10	1.35
2005	1.10	0.34	1.79	0.81	0.04	0.07	0.93	1.04
2006	1.03	0.31	1.58	0.70	0.08	0.08	0.82	1.09
2007	0.95	0.26	1.50	0.69	0.10	0.07	0.73	0.91
2008	0.96	0.26	1.41	0.70	0.08	0.05	0.60	0.86
2009	0.97	0.25	1.35	0.62	0.07	0.04	0.45	0.69

주: 1) 재해율=(사업장별 재해자수÷사업장별 근로자수)×100.

2) 사망률=(사업장별 재해사망자수÷사업장별 근로자수)×10,0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로 떨어짐(추락), 넘어짐(전도), 부딪힘(충돌), 날아온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감김끼임(협착) 등이 있으며, 사업장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및 그 외의 유형 등으로 구분해서 알아보았다. 사례수가 적은 유형은 모두 기타로 통합하였다.

업무상 손상부상자의 사고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2009년도의 경우 전도이며 두 번째는 협착 그리고 추락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도와 추락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무상 손상사망자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로 나타났다(표 IX-13).

〈표 IX-13〉 손상재해자의 사고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

	손상부상자							손상사망자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협착	사업장 외 교통 사고	기타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협착	사업장 외 교통 사고	기타
2000	12.2	17.7	10.4	8.9	28.6	4.1	17.9	27.6	4.5	4.2	6.1	9.8	17.9	29.8
2001	12.6	19.7	10.7	9.3	25.2	3.7	18.8	30.2	4.2	3.7	7.9	10.9	15.5	27.6
2002	13.8	18.2	11.3	10.0	24.0	2.6	20.0	34.2	5.0	5.0	6.0	10.5	11.0	28.4
2003	14.5	19.3	12.0	9.6	22.7	2.9	19.0	36.6	5.2	4.1	7.2	9.2	11.5	26.2
2004	14.2	19.3	11.9	9.3	22.1	2.9	20.2	37.6	3.9	4.0	6.7	8.7	12.6	26.5
2005	13.6	19.6	11.8	8.3	21.5	2.8	22.4	30.0	5.1	5.8	5.6	10.5	12.2	30.7
2006	14.4	20.8	13.8	8.4	21.1	3.5	18.1	32.7	3.7	7.8	6.8	11.4	12.9	24.6
2007	14.8	21.0	15.7	8.4	20.4	3.8	16.0	31.1	3.6	6.3	6.6	11.1	13.9	27.4
2008	16.1	21.9	8.6	10.2	18.0	5.5	19.6	32.7	6.9	3.8	7.1	7.3	17.6	24.5
2009	15.0	22.9	9.6	9.4	18.3	5.6	19.2	32.7	6.8	5.1	6.2	8.9	17.6	22.7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표 IX-14〉 질병재해자의 질병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

	질병이환자			질병사망자		
	직업병 (진폐 제외)	진폐	작업 관련성 질병	직업병 (진폐 제외)	진폐	작업 관련성 질병
2000	15.2	2.2	82.6	2.1	33.3	64.6
2001	12.6	12.7	74.7	2.7	32.0	65.3
2002	9.9	12.6	77.5	1.7	31.5	66.8
2003	7.2	11.2	81.6	2.1	32.6	65.3
2004	6.6	19.3	74.1	1.9	32.7	65.4
2005	7.9	24.4	67.7	2.6	39.3	58.2
2006	5.7	12.4	81.9	3.2	43.5	53.3
2007	6.1	9.4	84.5	3.7	43.2	53.1
2008	5.4	8.2	86.4	3.8	43.7	52.5
2009	8.9	7.6	83.4	4.4	50.9	44.7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표 IX-14〉는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질병사망자의 경우 전통적인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병, 그리고 진폐 등의 질병유형에 따라 구성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병은 주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진폐는 장기간에 걸쳐 분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 광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진단을 받은 진폐 환자의 경우 과거 석탄 광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진폐의 경우도 전통적인 직업병에 포함되지만, 최근에는 석탄 광업 사업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므로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여 재해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진폐를 제외한 직업병에서 질병이환자의 구성비율은 2002년에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진폐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관련성 질병은 질병이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로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직업병으로 인한 질병사망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진폐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작업 관련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경용(산업안전보건연구원)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요 약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세계 배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순위는 10위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다양한 환경 지표상으로 볼 때 한국의 환경상황은 낮은 순위에 있다.
- 한국의 친환경 녹색기술 수준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50-70%에 접근해 있어 기존의 IT 산업이나 제조업의 축적된 기술을 잘 이용하면 선진국 수준에 빠른 기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기업들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빠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긴박하게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단기적 수단에서 더 나아가 녹색기술 확보라는 근본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녹색성장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주력산업의 녹색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비용, 기존 산업에서의 비용발생 등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의 환경지표를 국제비교를

통해 개관해 보고, 정부가 어떤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 환경지표의 국제비교

지구온난화, 극한 및 극서 등의 기후변화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부터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주요 환경지표를 가지고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1인당 전기소비량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X-15>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각국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보면 2009년 기준 4.7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로 OECD 30개국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순위보다 더 높은 11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에너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에너지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1인당 전기소비량(8,833.4KWh)도 OECD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에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친환경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의 시장가격으로

<표 IX-1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소비량: 2009

	1인당 에너지소비량 ¹⁾ (TOE)	1인당 전기소비량 (KWh)	1인당 GDP ²⁾ (US 1,000\$)
아이슬란드	17.3	50,969	33.1
룩셈부르크	7.8	14,357	61.8
캐나다	7.5	16,003	30.9
미국	7.1	12,917	37.7
핀란드	6.2	15,063	29.3
호주	6.1	10,608	32.3
노르웨이	5.5	23,726	40.1
벨기에	5.2	7,882	29.8
한국	4.7	8,833	23.9
스웨덴	4.7	13,707	30.8
네덜란드	4.7	6,793	32.1
체코	4.2	6,137	19.9
뉴질랜드	4.2	9,248	23.2
프랑스	3.9	7,512	26.9
오스트리아	3.9	7,943	32.3
OECD 평균	4.3	8,068	26.9

주: 1) 에너지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으로 환산한 값임.

2) 2000년 미국 1,000달러 기준임.

출처: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2010 Edition*, 2010.

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OECD 주요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특이한 사실은 OECD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비 OECD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IX-16).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07년 1.7%로 증가하였다. 이산화탄소의 절대배출량 면에서는 중국이나

〈표 IX-16〉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1990-2007 (%)

	1990	1995	2000	2005	2007	증가율 ¹⁾
중국	10.7	13.9	13.1	18.8	21.0	170.6
미국	23.2	23.5	24.2	21.3	19.9	18.6
러시아연방	10.4	7.3	6.4	5.6	5.5	-27.2
인도	2.8	3.6	4.2	4.2	4.6	124.7
일본	5.1	5.3	5.0	4.5	4.3	16.1
독일	4.5	4.0	3.5	3.0	2.8	-16.0
캐나다	2.1	2.1	2.3	2.0	2.0	32.5
영국	2.6	2.4	2.2	2.0	1.8	-5.4
한국	1.1	1.7	1.8	1.7	1.7	113.1
이란	0.8	1.1	1.3	1.5	1.6	165.8
OECD 평균	52.8	53.1	53.2	47.6	44.9	17.4
비OECD 평균	44.3	43.8	43.4	48.9	51.6	60.7

주: 1) 1990-2007년 기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임.

출처: IEA,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2010 Edition, 2010.

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례로, 1990년 대비 2007년 배출량이 113% 증가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증가율에 비해서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느리지만 이 두 국가는 최근 10%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환경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주요 환경 관련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미국 예일·컬럼비아 대학에서 제공하는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의 2005년 발표를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146개국 중 122위였다. 이는 2002년(142개국 대상)의 136위에 비해 14위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환경지속성지수 대신 발표되고 있는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를 보면, 2010년 분석대상 163개국 중 94위를 차지하여 2008년 순위에 비해 오히려 43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영국의 신경경제재단(NEF)에서 생태발자국을 핵심요소로 가정하여 작성 발표하고 있는 지구행복지표(Happy Planet Index, HPI)를 보면, 분석대상 국가 143개국 중 68위로 나타나 환경과 연계된 행복지수가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된 순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작성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을 보아도 2009년 현재 대상국가 124개국 중에서 89위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40위 정도라고 볼 때,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의 우리나라 순위가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된 순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 배경은 기후변화에 있다. 기후변화란 단순히 지구온난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관찰되는 극한이나 극서 같은 이상 기상기온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지나친 배출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인류의 경제발전 욕구에 의한 화석연료의 지나친 소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억제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인류의 경제성장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정체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인류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선진국 중심의 다양한 기후변화·에너지 대책이고 한국의 경우 녹색성장(green growth)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같은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에너지소비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녹색기술이 개발되거나 근본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배출되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집중적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27대 녹색기술 분야를 발표하였다(표 IX-17). 정부의 녹색기술 육성 기본전략은 먼저

실리콘계 태양전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지능형 전력망의 첨단계측시스템 등에 2012년까지 집중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한 다음, 연료전기·전기차, 2차 전지 등에 집중투자를 하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등에는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녹색기술은 세계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균적으로 볼 때 한국의 녹색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기술 분야 가운데 환경보건,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환경복원 등 사후처리 분야의 기술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선진국 대비 약 57%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송부문, 전력 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하는 고효율 부문은 선진국의 63%,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과 핵융합 등의 기술은 61%,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의 예측 기술은 6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표 IX-17〉 한국 정부의 27대 중점 녹색기술 투자계획

투자유형	녹색기술 형태	녹색기술
단기집중투자	단기간 보급을 통해 시장진입이 필요한 기술	실리콘계 태양전지, 조명용 LED, 개량형 경수로, 고효율·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 등)
중기집중투자	중기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우위 선점이 필요한 기술	고효율·저공해 차량(전기·연료 장치 등), 가상현실 그린 프로세스, 2차 전지, NON-CO ₂ 처리, 수계수질 관리, 대체수자원 확보, 폐기물 절감
장기집중투자	세계적인 선도기술로의 육성이 필요한 기술	고속로, 핵융합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친환경 식물성장, IGCC, 유해물질,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 영향 평가·적응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원천 확보가 필요한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바이오 에너지, 지능형 교통물류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자료.

친환경 산업의 발전 전망: 국내 녹색산업 투자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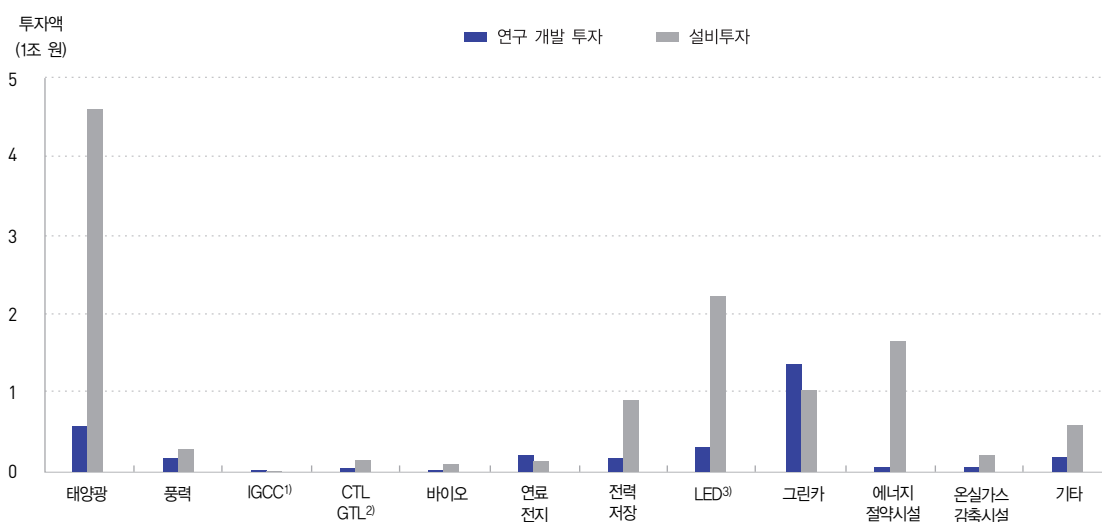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세계 투자는 2004년 650억 달러에서 2008년 2,810억 달러로 거의 4.5배가 증가하여 이 부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재무 투자가 2004년 190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였으나, 2009년에는 1,190억 달러로 약 4배가 증가하여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3%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2009년 세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풍력발전이 670억 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태양열에 240억 달러, 바이오매스에 11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풍력, 바이오매스 및 해양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투자유인의 감소로 이

해하기 보다는 전세계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각국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기능에서는 공급 유인이 없을 정도로 발전생산원가가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생산원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시장에 의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 및 공급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30대 기업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의 30대 기업의 2008-2010년 기간 동안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그림 IX-15]와 같다. 이들이 [그림 IX-15]에서 보여 주고 있는 산업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R&D) 투자

[그림 IX-15]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액: 2008-2010



주: 1) IGCC는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약자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을 지칭함.

2) CTL은 Coal to Liquids의 약자로 석탄액화기술을 지칭하며, GTL은 Gas to Liquids의 약자로 가스액화기술을 지칭함.

3) LED는 Light-Emitting Diode의 약자로 발광다이오드를 지칭함.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자료.

총액은 3조 2천 억 원이고 설비 투자 총액은 11조 9천 억 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74.5%이다.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8천 억 원 정도이고 설비 투자 총액은 약 5조 1천 억 원이다. 이 기간 중의 청정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연평균으로 볼 때 약 24.9%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연구개발 투자 총액이 약 2천 억 원이고 설비 투자 총액이 3천 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70%에 이르렀다. 반면에 바이오 분야는 오히려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13.9%의 투자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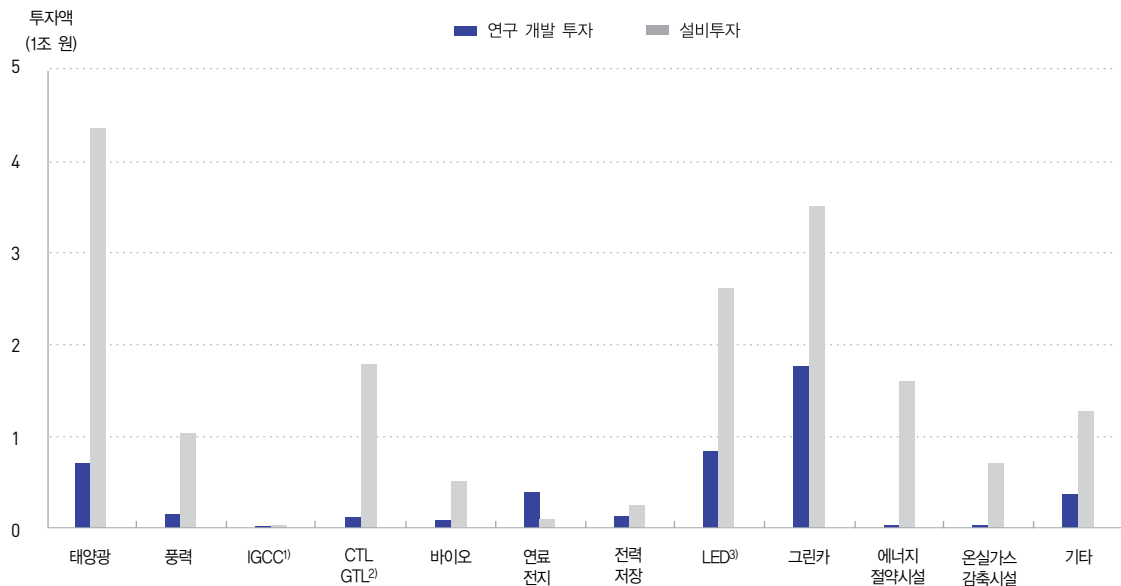
같은 기간 중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57.7%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LED

분야는 연평균 1,100.5%가 증가하여 어느 산업보다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린카 분야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액과 설비 투자액은 각각 11조 4천 억 원과 1조 원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313.3%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저감분야를 보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57.9%가 증가하였다.

[그림 IX-16]은 같은 30대 기업의 녹색산업 투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기업의 2011-2013년 기간 투자 계획을 보면, 연구개발 투자 총액이 4조 6천 억 원이고 설비 투자 총액이 17조 8천 억 원이다. 이는 과거 3년 동안의 총 투자액 15조 1천 억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많은 액수이다.

분야별로 보면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림 IX-16]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예상액: 2011-2013



주: 1) IGCC는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약자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을 지칭함.

2) CTL은 Coal to Liquids의 약자로 석탄액화기술을 지칭하며, GTL은 Gas to Liquids의 약자로 가스액화기술을 지칭함.

3) LED는 Light-Emitting Diode의 약자로 발광다이오드를 지칭함.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자료.

투자 총액이 약 8조 8천 억 원으로 과거 3년 동안의 투자총액 약 6조 원에 비해 거의 3조 원 가량이 증가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 풍력과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의 경우를 보면 과거 3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여 약 4조 3천 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투자가 약 3조 8천 억 원으로 증가하여 과거 3년간의 투자액인 약 1조 1천 억 원에 비해 거의 4배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린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거 3년간의 투자액이 약 2조 4천 억 원이었으나 앞으로 3년간은 약 5조 3천 억 원이 투자되어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분야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년간의 투자액인 약 2조 원에서 3천 억 원 정도가 증가한 약 2조 3천 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성진(고려대학교)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장덕진	250
사회적 신뢰의 수준 • 장덕진	26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 김병로	266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 이희길	273

X.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선거참여와 사회단체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변화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자원봉사참여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후원금 기부는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서 늘어나고 있다.
- 일반인들은 자신은 법을 잘 지키나 다른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질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작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으며, 불법시위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계층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 대인신뢰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제도신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의 재생산 기제, 그리고 사법제도와 같은 게임규칙의 적용에 대한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해체나 갈등의 반대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의 정도를 사회참여, 법질서, 불평등 및 신뢰를 포함하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사회참여이다. 사회구성원 중 일부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거참여,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나도 규칙을 지키지 않을 동기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질서가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과 타인의 준법정신 평가, 공공질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갈등의 첨예한 형태인 불법시위 발생건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불평등이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심각한 저해요소가 된다. 이를 사회이동, 빈부격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신뢰는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덕적 자원이다. 여기서는 대인신뢰와 기관신뢰의 추이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참여

선거참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투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에는 7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1992년 71.9%, 19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08년 총선 투표율은 46.1%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 대비 2.9% 상승하였고, 최근 15년간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내서 투표율의 하락 추세가 계속

적으로 일어날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20-30대 젊은 층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이러한 투표율 상승을 주로 견인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단체참여

사회단체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공공의 이슈에 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사회단체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사회자본은 그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키워나가고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단체참여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까지 23.1%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00년 대에는 40% 전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50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사회단체참여율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아서 사회단체참여를 통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X-1).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친목 및 사교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기에 종교단체와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를 합하면 대략 90%선을 차지하게 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단체나 공공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익단체, 혹은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는 1% 혹은 그 이하에 머물고 있다(그림 X-1).

이러한 추세는 1999년이나 10년 후인 2009년에도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사회단체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단체참여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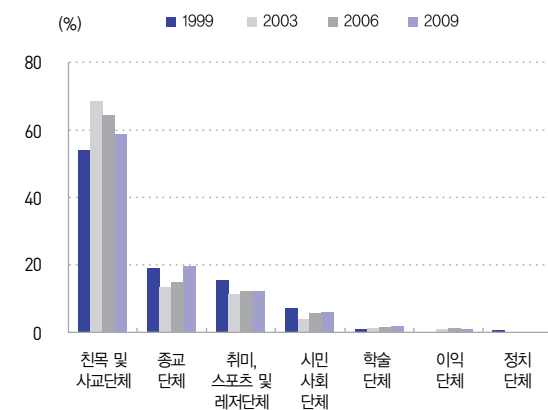
〈표 X-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¹⁾: 1999-2009

	1999	2003	2006	2009
(%)				
성별				
남자	28.3	48.2	41.0	42.0
여자	18.3	41.6	36.6	37.6
연령별				
20대 미만	11.5	23.7	19.3	22.0
20대	22.6	41.4	32.7	35.6
30대	26.3	47.1	39.4	40.3
40대	31.0	53.7	47.2	48.8
50대	27.5	54.9	48.7	49.7
60대 이상	13.5	37.1	34.6	32.0
교육수준별				
초졸이하	10.5	34.5	29.9	27.1
중졸	16.3	38.5	32.3	30.7
고졸	26.2	45.8	39.6	39.1
대학교 이상	38.7	55.2	46.9	51.1
직업별				
전문·관리직	45.0	59.0	51.6	55.5
사무직	32.0	52.8	44.2	51.3
서비스·판매직	22.6	46.0	40.2	42.8
농어업직	18.4	48.9	47.3	45.0
기능·노무직	21.6	46.4	38.8	39.0
전체	23.1	44.8	38.8	39.8

주: 1)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X-1] 사회단체참여자의 주 활동 단체: 1999-200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자원봉사와 기부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연 인원 140여 만 명이 참여한 전국민의 열성적인 방재자원봉사활동은 전세계에 큰 인상을 주었다. 피해 지역의 공동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게 된 것은 이런 대규모의 자원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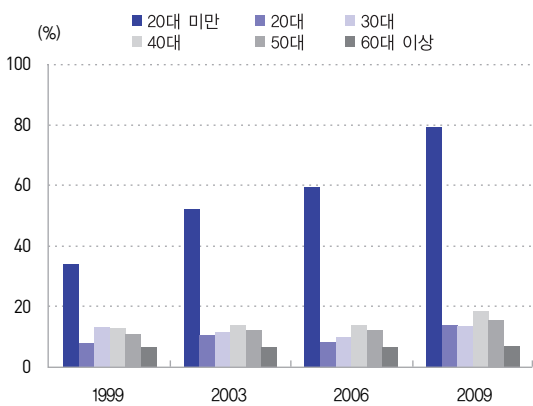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인구의 백분율인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1999년에서 2006년까지 13-14%선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9년에는 19.3%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할 때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가 43.7%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환경보전과 범죄예방(25.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16.1%), 자녀교육 관련 봉사(12.1%) 순이고, 국가 및 지역행사에서의 자원봉사(11.3%)와 재해지역돕기(11.3%)가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최근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증가가 인구 전체에 의해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X-2]에서 잘 나타나듯이 연령대별로 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가파른 증가는 20대 미만 인구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학입학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는 현실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단체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고학력자나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대학 이상 학력자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18.4%인 반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율은 15.0%이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19.5%인 반면 농어업 종사자의 참여율은 14.5%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X-2]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¹⁾: 1999-2009



주: 1)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기부)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31.6%가 기부를 했고, 2009년에는 미미하나마 증가하여서 32.3%가 기부를 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후원방법들의 복수응답에서 빈도는 사회복지단체(39.7%), 언론기관(29.5%), 종교단체(23.2%), 직장(16.8%),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15.9%) 순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후원활동은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입시생들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자원봉사활동참여율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인 40대를 중심으로 30대와 50대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후원활동참여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직업별로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후원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X-2).

〈표 X-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¹⁾: 2006, 2009

	2006	2009
성별		
남자	34.3	34.2
여자	29.1	30.4
연령별		
20대 미만	15.3	19.4
20대	19.2	23.2
30대	36.3	38.4
40대	42.2	42.9
50대	39.3	38.9
60대 이상	26.7	21.5
교육수준별		
초졸이하	21.7	16.5
중졸	25.6	23.7
고졸	30.7	29.1
대학교 이상	42.9	48.1
직업별		
전문·관리직	48.5	54.8
사무직	43.0	51.0
서비스·판매직	33.0	33.9
농어업직	30.2	27.8
기능·노무직	31.3	29.0
전체	31.6	32.3

주: 1)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법질서

준법정신

준법정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가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타인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평가는 18.2%에 이르는 반면 본인

이 그렇다는 평가는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이 법을 잘 지킨다는 평가는 26.0%인 반면 본인이 그렇다는 평가는 56.9%에 이른다. 이러한 평가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별 차이 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조사(1997, 2001, 2005)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 간의 차이를 전적으로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순적 태도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것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한국종합사회조사」, 2009)에 대해 ‘매우 평등’에서 ‘매우 불평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된 문항을 ‘평등하다’, ‘그저 그렇다’, ‘불평등하다’로 묶어서 비교해보면, 응답자의 46.2%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7.8%, 평등하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하다. 법집행의 평등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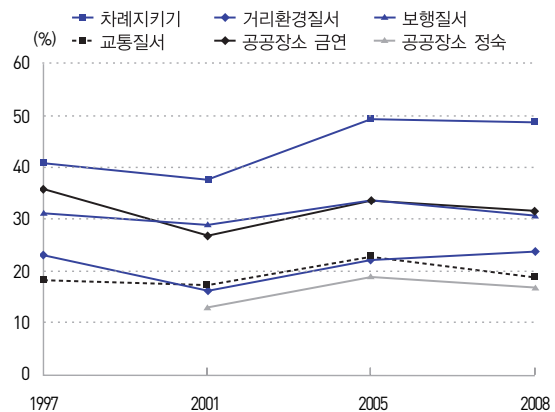
법집행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보면 성별로는 남성(48.4%)이 여성(44.1%)에 비해 조금 더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40대(50.0%)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20대 이하(41.5%)에 비해 8.5% 포인트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학력 소지자(53.3%)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보고 대학교 이상(44.9%)이 가장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54.4%)에서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400-499만원(43.8%)

에서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집단일수록 법집행을 더 불평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질서

공공질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작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차례(순서)지키기의 경우를 보면 “비교적 잘 지킨다”와 “아주 잘 지킨다”를 합친 긍정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01년의 37.6%에 비해 2008년에는 48.7%로 11.1%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긍정응답 비율을 보면 공공장소 금연(31.6%)과 보행질서(30.9%)가 차례지키기의 뒤를 잇고 있으며, 거리환경질서(23.9%), 교통질서(18.9%), 공공장소 정숙(17.1%)의 순서이다(그림 X-3).

[그림 X-3]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 1997-2008



주: 1) “비교적 잘 지킨다” 또는 “아주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불법시위

집회와 결사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징표이고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사회자본이다. 그러나

불법시위는 사회발전 내지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불법폭력시위 현황을 발생률과 경찰 부상자수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면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인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의 시위는 여전히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연평균 불법폭력시위는 1997년까지는 연간 500~800건 정도였는데, 1998년 이후에는 100건 내외로 줄었고, 2004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표 X-3).

〈표 X-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9

	전체집회 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부상 경찰관수
1993	6,390	267	1,080
1994	8,753	588	2,128
1995	6,857	809	1,203
1996	6,510	811	1,882
1997	6,179	664	1,016
1998	7,684	67	166
1999	11,750	129	484
2000	13,012	105	582
2001	13,083	215	673
2002	10,165	118	287
2003	11,837	134	749
2004	11,338	91	621
2005	11,036	77	893
2006	10,368	62	817
2007	11,904	64	202
2008	13,406	89	577
2009	14,384	45	510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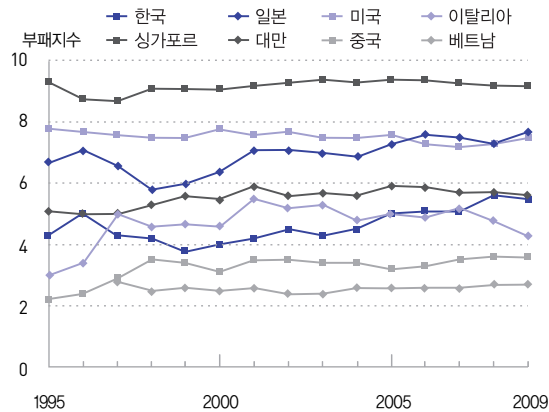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부상 경찰관수도 1990년대 초반 1천 명이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2009년에는 500명 남짓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있는 현상에 유념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부패지수와 공공기관 청렴도

낮은 신뢰와 투명성의 결여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정부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외환위기 이후에 미약하나마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결과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를 발표하는데, 이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된다. CPI 국가 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외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국가별 점수는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CPI 점수는 10점 만점에 5.5점이고 국가 순위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에 머물고 있다(그림 X-4).

한 연구(차문중, 2007)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OECD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졌다면 최소 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법치주의의 확립과 준법정신은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해 준다고 한다. 고신뢰 사회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X-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¹⁾: 1995-2009

주: 1)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산출한 지수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2010.

그러므로 투명성과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재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이 가진 기능 중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의 원천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자면,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공공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동성, 즉 사회심리적 역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계층귀속감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하겠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계층귀속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2009년에 상층 2.7%, 중간층 54.9%, 하층 42.4%로 나타났는데, 1999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 포인트 증가하였고, 중간층은 변함이 없으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4.0%에서 42.4%로 1.6% 포인트 감소하였다(표 X-4).

〈표 X-4〉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09

(%)

	상층	중간층	하층
1999	1.1	54.9	44.0
2003	1.4	56.2	42.4
2006	1.5	53.4	45.2
2009	2.7	54.9	42.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역능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식세대의 역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이동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계층에 따른 역능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6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다른 변화들도 관찰된다. 특히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층은 2006년에는 58.0%만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2009년에는 74.2%가 높다고 응답하여 무려 16.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중층의 경우에도 34.6%에서 45.1%로 높아졌다. 하지만 하층은 18.2%에서 21.0%로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불과 3년 사이에 계층 간 희망의 격차가 한층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의 증가는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그 상대적 차이는 본인의 경우에 비해 줄어든다(표 X-5, 표 X-6).

〈표 X-5〉 주관적 계층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

	2006			2009		
	높음	낮음	잘모름	높음	낮음	잘모름
상층	58.0	30.1	11.9	74.2	20.2	5.6
중층	34.6	43.7	21.6	45.1	43.3	11.5
하층	18.2	50.8	31.1	21.0	56.0	23.0
전체	27.5	46.7	25.7	35.7	48.1	16.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표 X-6〉 주관적 계층별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

	2006			2009		
	높음	낮음	잘모름	높음	낮음	잘모름
상층	60.0	22.7	17.3	74.5	18.9	6.6
중층	46.0	28.0	26.0	56.7	27.3	16.0
하층	32.0	30.3	37.7	35.9	36.0	28.0
전체	39.9	29.0	31.2	48.4	30.8	20.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빈부격차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다소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합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46.8%인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55.3%를 차지한다. 비슷한 경향은 소득별로도 관찰되는데,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0%에 이른다. 반면 400-499만 원인 경우 41.1%이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48.6%에 머무른다. 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사회통합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 X-7〉 연령 및 소득수준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2009 (%)

	매우 평등	다소 평등	그렇지 않다	다소 불평등	매우 불평등	합계
연령별						
20대 이하	0.7	11.7	32.3	43.3	12.0	100.0
30대	1.0	11.9	37.2	38.2	11.7	100.0
40대	0.5	15.2	37.8	34.7	11.8	100.0
50대	1.8	13.8	37.9	35.3	11.2	100.0
60대 이상	4.2	18.0	31.0	32.6	14.2	100.0
가구소득별						
100만 원 미만	2.0	14.0	30.0	38.0	16.0	100.0
100-199만 원	1.5	14.3	28.6	40.4	15.3	100.0
200-299만 원	1.5	12.7	38.2	33.8	13.8	100.0
300-399만 원	1.8	12.4	34.5	40.4	10.9	100.0
400-499만 원	1.8	16.6	40.6	30.0	11.1	100.0
500만 원 이상	0.7	13.5	37.2	38.9	9.7	100.0
전체	1.5	13.9	35.4	37.0	12.2	100.0

주: 1)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중합사회조사」, 2009.

차별대우

성, 연령, 인종, 교육수준 등에서 구분되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 또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차별대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수준 평가는 2005년 평균 3.13에서 2009년 평균 3.11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수준 평가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은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전혀 없다”에서 “매우 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이다. 통계치는 “전혀 없다”를 1점, “별로 없다”를 2점, “조금 심하다”를 3점, “심하다”를 4점, “매우 심하다”를 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이므로 값이 클수록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영역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차별수준 평가는 성, 연령, 장애유무, 교육수준 등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X-8〉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은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보험 계약시 장애인의 과반수(55.6%)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급 학교 입학이나 전학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6.9%)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유치원(26.9%)이나 초등학교(26.1%)로 갈수록 차별을 겪는 비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일단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또래 학생들로부터(48.9%) 혹은 심지어 교사로부터(18.9%) 겪는 차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X-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률¹⁾: 2008

차별 상황	%	차별 상황	%
입학 및 전학 시		취업시	35.0
유치원(보육시설)	26.9	직장생활 시	
초등학교	26.1	소득	20.8
중학교	19.4	동료와의 관계	13.1
고등학교	16.8	승진	9.1
대학교	6.9	운전면허 취득 시	11.8
학교생활 시		보험제도 계약 시	55.6
교사로부터	18.9	의료기관 이용 시	3.3
또래학생으로부터	48.9	정보통신 이용 시	0.4
학부모로부터	8.4	지역사회 생활 시	20.6
결혼 시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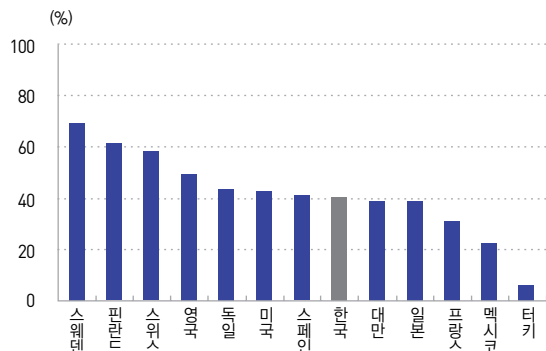
주: 1) 전체 장애인 중 각 상황에서 현재의 장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8.

사회신뢰

대인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2008년의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사람들의 비율은 40.3%인데, 이는 비교대상이 된 34개국 중에서 순위로는 중간인 17번째이지만 전체 평균인 41.1%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비교대상을 OECD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하위권에 속한다(그림 X-5).

[그림 X-5]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¹⁾: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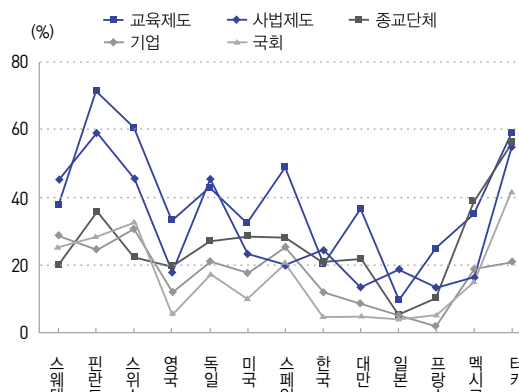
주: 1)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8: Religion
III Data File v.1.0, 2010.

기관신뢰

한국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인신뢰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신뢰의 평균이 40.3%인데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보다 훨씬 더 낮다. 가장 낮은 국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4.8%, 가장 높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도 24.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X-6]은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그림 X-6).

[그림 X-6]에서 국가들은 대인신뢰가 높은 국가들로부터 낮은 국가들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대인신뢰가 매우 높은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림 X-6]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¹⁾: 2008

주: 1) "귀하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상당히 신뢰한다" 또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8: Religion
III Data File v.1.0, 2010.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일반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질서의 근간이자 경쟁의 규칙을 공정하게 감독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가 그 다음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멕시코나 터키와 같이 일반신뢰가 아주 낮은 국가들에서 기관신뢰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제도에라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뢰가 있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173: 1-12.

사회적 신뢰의 수준

요 약

- 한국의 일반신뢰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사회제도별 기관신뢰의 수준은 일반신뢰보다 한층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사법기관의 경우에도 한국은 비교대상 34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의 기관신뢰 수준은 25위에서 32위 수준에 머문다.
- 국제비교 자료에서 일반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늘리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주요 대안들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정치적, 정책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말로 신뢰는 사회의 윤희유와도 같은 구실을 한다. 또한 신뢰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일반인과 주요 기관으로 나누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신뢰

한국의 일반신뢰 수준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최근에는 세계적 평균보다 낮은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X-7]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료가 가용한 34개국의 일반신뢰 수준을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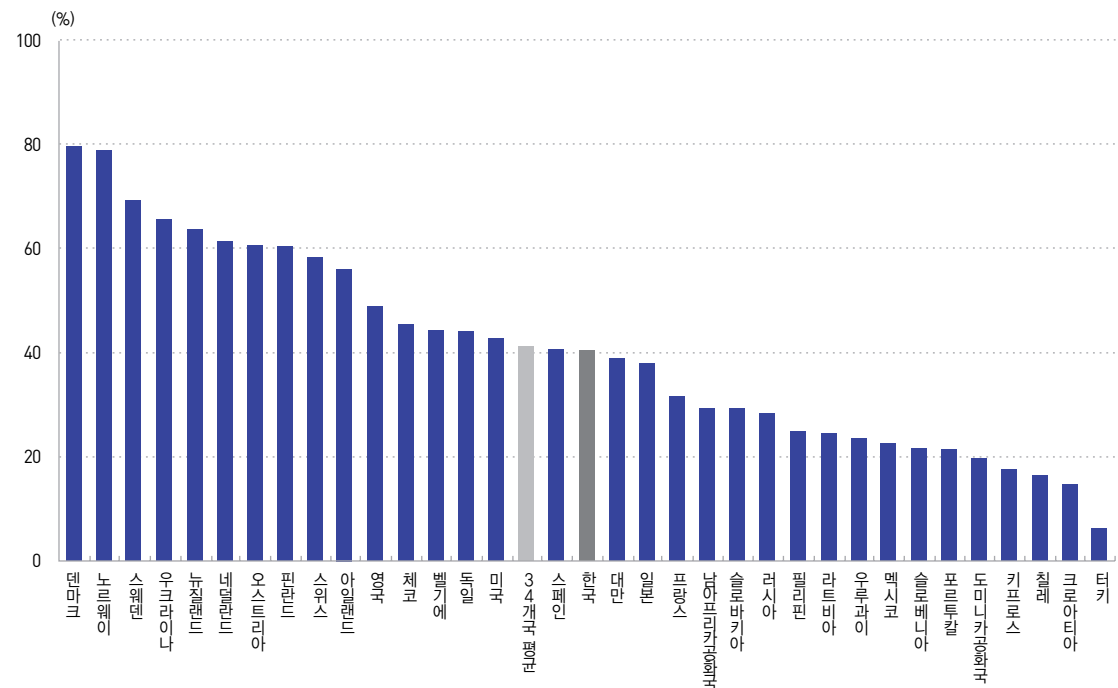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한국은 40.3%로 34개 국가들 중 17번째에 위치해 있으며, 34개국 평균인 41.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신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열과 장덕진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신뢰의 수준은 비선형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Yee and Chang, 2009). 예를 들어 투명성과 일반신뢰의 관계를 보면, 투명성이 아주 낮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반신뢰의 수준이 그다지 낮지 않는데 비해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신뢰는 더 낮아지다가 투명성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일반신뢰의 수준도 따라서 매우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U자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

한국은 전형적으로 중간 정도의 투명성과 낮은 신

뢰가 결합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이고, 한국보다 투명성이 낮은 이란, 중국,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의 일반신뢰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반면 투명성이 아주 높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일반신뢰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점차로 투명성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나 사회적 상층부의 비리와 부패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투명성의 절대적 수준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수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비리와 부패가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림 X-7]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¹⁾: 2008



주: 1)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8: Religion III Data File v.1.0, 2010.

기관신뢰

일반신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관신뢰이다. 기관신뢰는 단순히 특정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떠나서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여러 제도(institutions)를 신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아야 소용없다고 생

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며,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 X-9>는 앞에서 비교대상이 되었던 34개 국가의 국회, 기업, 종교단체,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5개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고 각 영역에서의 순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일반신뢰에

<표 X-9>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¹⁾: 2008

(%)

국회		기업		종교단체		사법기관		교육기관	
필리핀	48.0	남아프리카공화국	47.4	필리핀	77.0	덴마크	68.3	남아프리카공화국	73.9
터키	41.7	필리핀	44.6	남아프리카공화국	74.9	노르웨이	66.1	필리핀	71.9
키프로스	41.5	키프로스	38.0	터키	56.3	핀란드	59.1	핀란드	71.3
노르웨이	40.5	도미니카공화국	34.4	키프로스	45.3	키프로스	59.0	벨기에	71.2
덴마크	40.1	덴마크	31.8	우크라이나	44.3	터키	54.9	우르과이	67.4
남아프리카공화국	34.8	스위스	30.8	도미니카공화국	39.2	오스트리아	46.2	슬로베니아	66.0
스위스	32.7	노르웨이	30.0	멕시코	38.7	스위스	45.6	키프로스	64.2
핀란드	28.6	스웨덴	28.7	러시아	38.6	스웨덴	45.3	스위스	60.7
도미니카공화국	27.5	벨기에	26.0	칠레	36.2	독일	45.3	터키	59.1
슬로바키아	26.3	라트비아	25.8	핀란드	36.0	필리핀	45.0	덴마크	58.4
스웨덴	25.0	스페인	25.4	라트비아	34.0	남아프리카공화국	40.2	도미니카공화국	53.3
스페인	21.0	핀란드	24.7	슬로바키아	33.4	네덜란드	35.6	노르웨이	52.8
오스트리아	18.5	오스트리아	24.4	34개국 평균	31.6	우르과이	32.3	슬로바키아	51.3
우르과이	18.0	네덜란드	23.3	포르투갈	30.3	도미니카공화국	29.4	오스트리아	50.5
34개국 평균	17.9	우르과이	23.0	덴마크	29.8	34개국 평균	28.8	아일랜드	50.0
독일	17.8	슬로바키아	23.0	노르웨이	28.9	슬로베니아	25.3	스페인	48.9
멕시코	15.5	34개국 평균	21.5	미국	28.6	한국	24.7	러시아	47.2
러시아	14.4	독일	21.1	스페인	28.1	미국	23.3	라트비아	47.1
네덜란드	13.1	터키	21.1	우르과이	27.9	아일랜드	21.1	34개국 평균	46.0
아일랜드	12.6	뉴질랜드	20.4	독일	27.0	슬로바키아	21.0	체코	45.9
슬로베니아	12.0	멕시코	18.9	아일랜드	26.5	뉴질랜드	20.7	독일	43.0
미국	10.1	아일랜드	18.2	스위스	22.4	스페인	20.2	네덜란드	39.7
포르투갈	9.5	슬로베니아	17.8	크로아티아	22.2	일본	18.9	스웨덴	38.0
칠레	8.6	미국	17.7	대만	22.0	벨기에	18.7	대만	36.8
벨기에	8.5	칠레	16.5	오스트리아	21.8	영국	18.2	포르투갈	35.4
뉴질랜드	7.5	한국	12.2	네덜란드	21.6	멕시코	16.3	멕시코	35.2
영국	5.8	영국	12.1	슬로베니아	20.9	라트비아	15.4	영국	33.3
프랑스	5.3	우크라이나	10.2	뉴질랜드	20.9	러시아	13.8	미국	32.4
대만	5.2	러시아	9.4	한국	20.5	프랑스	13.5	우크라이나	32.3
한국	4.8	포르투갈	9.2	스웨덴	20.0	대만	13.4	뉴질랜드	31.8
일본	4.1	체코	9.0	영국	19.7	체코	10.5	크로아티아	27.6
체코	4.0	대만	8.6	체코	14.2	포르투갈	10.2	프랑스	24.9
우크라이나	3.3	일본	5.2	벨기에	13.1	칠레	9.8	한국	20.4
크로아티아	2.9	크로아티아	4.8	프랑스	10.1	우크라이나	6.6	칠레	19.4
라트비아	1.9	프랑스	1.9	일본	5.5	크로아티아	5.1	일본	9.6

주: 1) "귀하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상당히 신뢰한다" 또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8: Religion III Data File v.1.0, 2010.

비추어 보아도 기관신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8%에 불과하며, 이는 비교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29위에 해당한다. 입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입법부에 대한 이처럼 낮은 신뢰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12.2%로 34개 국가 중 25위에 머문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부와 더불어 경제적 삶의 기본 터전인 기업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로서 응답자의 24.7%가 신뢰한다고 대답하여 순위로는 16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것도 34개 국가 전체 평균인 28.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밖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는 20.4%로 32위에 머물러서, 우리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식에 대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학입시가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고, 공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는 자리에 웬만한 부모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이 들어서 있으며,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과 명문교 진학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 또한 20.5%, 순위로는 28위에 머물러서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 그리고 위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뢰회복을 위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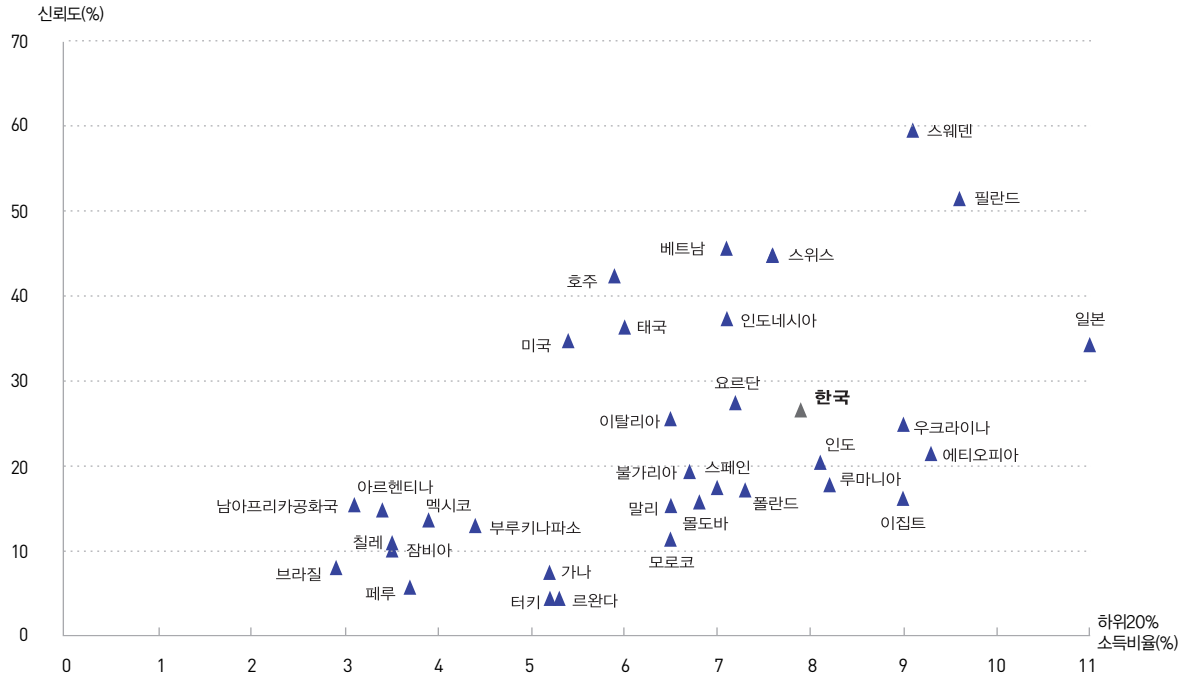
신뢰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일까. [그림 X-8]은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준다. 소득 하위 20%가 그 사회의 전체 소득 중 얼마만큼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을 비교해보면, [그림 X-8]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뚜렷한 패턴이 관찰된다. 즉 하위 20%의 소득이 높을수록 신뢰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신뢰가 분배정의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인 것처럼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통합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분배는 신뢰라는 사회통합의 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에 발표한 「경제사회발전종합지표」 자료를 중심으로 신뢰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요 변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피어슨 단순상관계수임): 조직참여율(0.710), 정부효과성(0.589), 부패인식지수(0.589), 여성고용률(0.546), 법치지수(0.515), 교육지출(0.512), 고등교육 이수율(0.497), 노동생산성(0.453), 다문화지수(0.392), 노조조직률(0.336) 등.

이 변수들의 목록은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쉽게 조직과 결사를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양을 늘리고, 정부효과성을 높이고 부패를 일소하며,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집단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사회의 재생산 기제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공공부문의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하고, 나와 다른

[그림 X-8] 하위 20%의 소득비율과 일반신뢰의 관계: 2005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2005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사람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의 기틀을 만듦과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록들 중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비교해보면 신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3위를 차지한 고등교육이수율이지만, 공적 교육지출은 28위에 머물고 있어서 순전히 민간부문의 지출에 의한 성취였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음을 감안할 때 공적 교육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OECD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한 GDP 수준이었을 때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나라는 프랑스(1997년)와 미국(1983년) 뿐이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조직률은 GDP 8,700달러였던 터키의 2003년 수준과 비슷하고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국가들은 물론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영미모델 국가들보다도 낮다.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에 앞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과 비슷한 GDP 수준에서 한국보다 조직 참여율이 낮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신뢰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GDP 수

준에서 한국보다 정부효과성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2006년)와 이탈리아(1994년) 뿐이었다. 시민사회 지원과 더불어 정부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 또한 한국 2007년의 법치 수준을 체크는 1998년(GDP 14,225달러), 헝가리는 2002년(GDP 13,387달러)에 이미 달

성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늘리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Jaeyeol Yee and Dukjin Chang. 2009. "Transparency, a Key Factor to Improve Social Cohesion: A Review of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cial Quality Research."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59-275.

장덕진(서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요 약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의 정착 성패는 한민족의 통합 수준을 가늠해 보는 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실태는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해 한국사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무조건 수용이 아닌 선택적 수용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매우 높으나 사회적 거리감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계 의식도 형성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적응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한국 전체의 4배이고 심신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국자가 증가한다면 취업경쟁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를 지칭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이다. 탈북자가 일반적으로 북한체제를 탈출한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이주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단순히 북한의 국경을 벗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체제를 떠난다는 정치적 의미로서의 탈북과 자신들의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모국을 떠난다는 사회경제적 의미로서의 이주를 동시에 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보겠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이주했다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의 이주와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의 국내입국과 성공적 정착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 통합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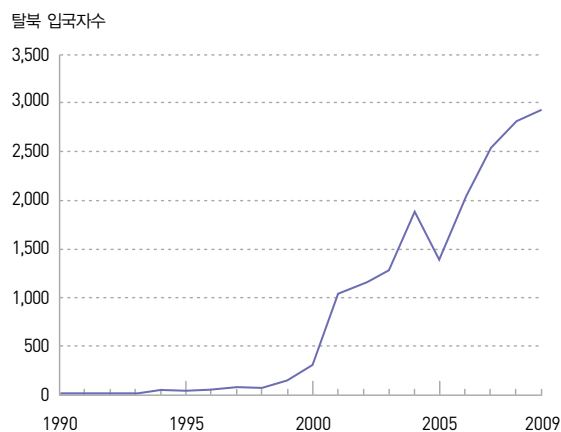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탈북자의 입국 현황을 개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자 국내입국 현황

탈북자의 국내입국은 6.25 동란 이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두 자리 수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2001년부터는 천 명 단위로 급증하여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추이를 보면, [그림 X-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에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으로 늘어나 2010년 6월 현재 약 1만 9천 명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동기, 연령,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탈북자들의 약 70%가 중국의 연변지역과 인접한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점이다. 탈북자의 특성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함경북도 69.1%, 함경남도 9.1%, 양강도 5.7%, 평양 4.7% 등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등 중국과 인접한 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그림 X-9] 탈북 입국자수: 1990-200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다. 또한 여성이 약 77-78%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성별로 보면 2000년까지는 남성이 많았는데, 2001년부터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77.2%로 최근에 이룰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22.2%, 30대 41.6%, 40대 27.8%, 50대 8.4%로 3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자가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대 14.6%, 대학교 10.0%로 북한 전체 주민의 평균 교육수준과 비슷하다. 혼인상태는 미혼 30.8%, 결혼 34.0%, 동거 5.8%, 이혼 11.2%, 별거 11.4%, 사별 6.8%로 나타났다. 이들의 현재 종교는 기독교 42.8%, 천주교 2.6%, 불교 2.2%, 무종교 52.4%로 기독교가 많은 편이다. 이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과정에서 조선족 교회나 한국인 선교사 등 기독교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 입국자의 해외체류기간을 보면, 제3국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32.0%, 1년 내지 4년 이하가 23.6%, 4년 내지 8년 이하가 19.0%, 8년 이상이 26.1%이다.

사실 탈북자가 모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등 여러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국내입국 탈북자도 중국, 캐나다 등 해외로 다시 이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영국의 탈북자 망명수용정책에 고무되어 해외이주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으로 이동한 탈북자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가 가장 많았던 1990년대 후반에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현재 중국에는 3-5만 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로 입국한 1만 9천 명 보다 많은 숫자이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게 되는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는 배출요인과 북한체제 외부에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배출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가족의 해체, 잘못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을 들 수 있고, 흡인요인으로는 정보접촉을 통한 비교의식의 생성,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 중국에서의 돈벌이,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탈북가족의 기획탈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중 탈북자의 국내입국은 한국의 탈북자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수용성 및 지원에 대한 태도

한국정부의 탈북자 국내수용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가를 보면(표 X-10), 연도

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90%가 수용에 찬성하고 10%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의 국내수용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 의견은 높지 않은 편이나, 무조건 수용 의견이 다소 감소하고 선택적 수용 의견이 많아지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07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에 52.0%에서 43.6%로 줄어든 반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동안에 37.2%에서 47.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수용 반대 의견 역시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에 있다.

〈표 X-10〉 탈북자 국내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0

	(%)		
	무조건 수용	선택적 수용	수용 반대
2007	52.0	37.2	10.8
2008	43.6	46.4	9.6
2009	46.6	43.1	10.3
2010	43.6	47.9	7.8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연도.

이에 근거해 보면, 한국인의 탈북자 수용성은 매우 높은 편이나 점차적으로 무조건 수용이 아닌 선택적 수용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경계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데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이며, 최근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증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45.1%에서 55.7%로 증가하였다.

친근감과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42.5%였다. 이는 2007-2009년과 비교할 때 약간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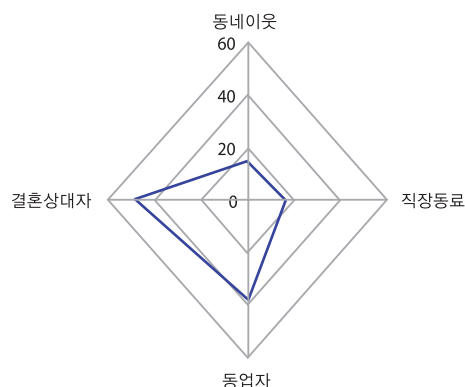
친근감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의 유형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동네 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거리감이고, 다른 하나는 동업자나 결혼상대자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리감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그림 X-10),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의 거리감은 약 15%로 적은 반면,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로서의 거리감은 40-50%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를 맺는 데에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9.3%로 과반수 가까이 나타났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직장동료로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9.8%로 과반수에 가까우며, 꺼린다는 응답은 16.1%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 매년 조사결과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38.1%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27.9%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앞선 동네이웃, 직장동료와 같은 일반적 관계 맺기와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 맺기에서도 사업동업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린다는 응답이 48.6%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8.7%,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에 못 미치는 22.7%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는 2007-2009년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X-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0



주: 1)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 직장동료, 동업자 또는 결혼상대자로서 꺼린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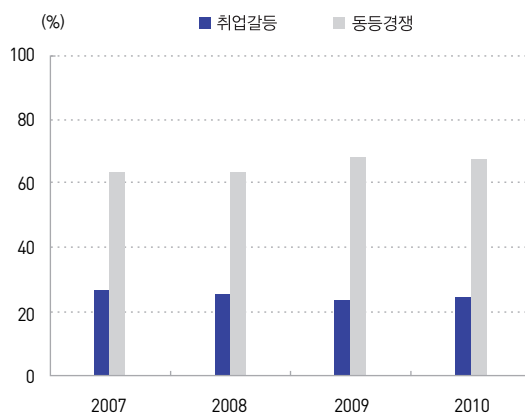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2010.

한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이해관계의 갈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4.5%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5.5%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2007-2009년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6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탈북자들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7-2009년도 응답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그림 X-11).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동의하는 의견보다 세 배가량 더 많은 점을 상기해 보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경쟁력 있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편이나 막상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해 직장동료로 만나게 됐을 때에는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X-11] 북한이탈주민과의 취업갈등¹⁾ 및 자유경쟁²⁾에 대한 의견: 2007-2010



주: 1)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나자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방향을 기존의 '보호정착 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용교육을 받고 일반사회로 나온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되 기본금은 축소하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1인 가족의 경우 주거지원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이며, 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고 실제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 최고 2,14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전국 53개소에 달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또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까지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지원으로 생계급여 지원(1인 기준 월 37만 원)과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문제도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하여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 또는 입학할 지원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는 48.6%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4%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13.7%로 한국 전체의 실업률 3.2%보다 4배나 높으며, 2008년에 비해서도 4.2% 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1%이고 여성이 43.1%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4%로 가장 높

고 학생이 많은 10대가 4.0%로 가장 낮다. 실업률은 남성이 15.5%, 여성이 12.6%로 오히려 남성이 더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자 37.1%, 경기도 거주자 22.7%, 인천 거주자 8.9% 등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68.7%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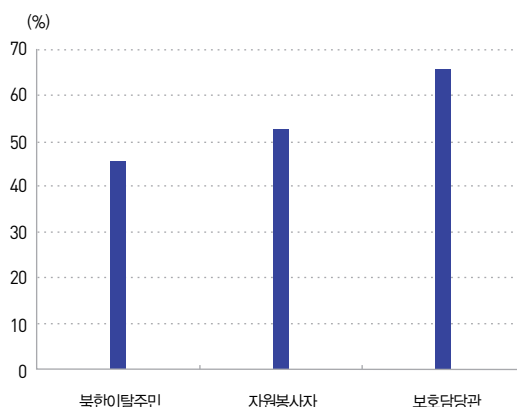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코리아 드림’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의 절반 정도는 남한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절반 정도(56%)의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생활에서 상당한 심리적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며 살고 있다. “그래도 연변의 조선족들보다는 더 따뜻한 동포애로 맞아주겠지”라는 기대는 깨지고,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보다 못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좌절되는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는 의견을 제외하면 한국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6.7%로 매우 적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와는 달리 객관적 적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45.5%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를 지켜보는 자원봉사자와 정부 보호담당관의 경우, 52.9%와 66.0%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그림 X-12).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거나(37.7%)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다(22.6%)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자신들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38.6%), 그리고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22.8%)을 꼽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X-1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도 평가: 2003



주: 1)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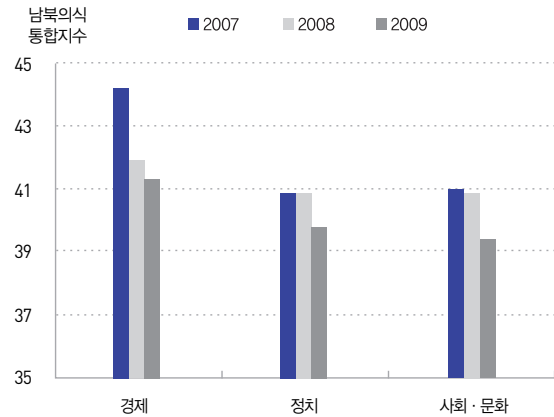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0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의 의식통합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남북의식통합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간의 상호공존의식, 동질감, 신뢰도, 포용성, 인지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남북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2009년의 남북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에서 120.5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48.2%이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간의 의식통합 수준은 48.2%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통합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간의 공존의식과 동질감, 인지도, 신뢰도, 포용성 등 의식통합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식통합 수준은 남북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7년 126.1점, 2008년 123.7점, 2009년 120.5점으로 계속 하락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간의 통합수준은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겨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이 아직은 북한이탈주민을 동네 이웃이나 직장동료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2-3만 명 또는 4-5만 명 정도까지는 취업경쟁으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의 통합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대목이다.

영역별로 보면 정치의식이나 경제문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의식통합수준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반응도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2009년 남북의식통합지수를 보면,

[그림 X-13] 남북의식통합지수¹⁾: 2007-2009



주: 1)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별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간의 의식통합 정도를 측정한 점수임.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정치의식 39.8점, 경제문제 41.3점, 사회문화 분야 39.4점으로 계산되었다. 또 경제문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의식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북한주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더 크고 한국인에게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이타적 행위 : 기부와 자원봉사

요 약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세제지원 등에 힘입어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기부금 규모나 기부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부활동이 1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한 단계이다.
- 2000년 이전에는 법인 기부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 개인 기부가 더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6:4의 비율로 안정화되었다.
- 기부와 유사하게 자원봉사자의 수와 참여율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저조해 자원봉사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친인척에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되지만, 불특정 타인에 대한 자선적 기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리 친숙한 문화가 아니었다. 이타주의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이다. 교환의 호혜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타인에게 행하는 이타적 행위는 사회통합의 핵심지표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good society) 측정의 한 지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이타적 행위인 기부와 자원봉사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사회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이타적 행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

기부에 대한 통계는 조세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기부

금 규모를 정확히 제공해 주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국세청의 세무자료¹⁾를 통해 기부금의 규모를 살펴보자.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총 기부액은 1997년 2조 5,500억 원에서 2008년 9조 5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표 X-11). 기부는 개인 기부와 법인 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 기부금과 그 구성비는 1997년 9,500억 원과 37.3%에서 2008년 5조 6,700억 원과 62.7%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법인 기부는 1997년 1조 6,000억 원에서 2008년 3조 3,800억 원으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62.7%에서 37.3%로 감소하였다. 이는 개인 기부가 법인 기부보다 많은 선진국의 양상과 비슷해지는 변화이다. 2000년 이전에는 기업 기부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약 6:4 정도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개인 기부문화의 확산은 각종 홍보와 세

제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규모와 함께 기부참여율과 기부의 정기성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특정 시기에 1회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기부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인 15세 가구원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비율은 2006년 31.6%에서 2009년 32.3%로 0.7% 포인트 증가하였고, 기부참여 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도 4.7회에서 5.6회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부참여율과 기부횟수의 증가로 세무자료에서도 개인 기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연간 평균 기부횟수는 1.8회에 불과하다.

기부참여 행태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부참여율은 2009년에 남자(34.2%)가 여자(30.4%)보다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표 X-12).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50만 원 미만 11.4%, 200-300만 원 32.3%, 600만 원 이상 50.4%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집단에 따라서도 사무직(51.0%) 및 전문관리직(54.8%) 종사자는 참여율이 높은 반면 농어업(27.8%) 및 기능노무직(29.0%)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부횟수도 기부참여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기부인구의 1인당 평균 기부횟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직업별로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각각 7.1회와 6.5회로 기능노무직과 농어업직의 5.0회와 2.8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횟수도 많아져 50만 원 미만 3.4회, 200-300만

〈표 X-11〉 개인 및 법인의 기부액: 1997-2008

(1조 원 () 안은 %)						
	개인		법인		전체	
1997	0.95	[37.3]	1.60	[62.7]	2.55	[100.0]
1998	0.85	[37.0]	1.45	[63.0]	2.30	[100.0]
1999	0.85	[29.3]	2.05	[70.7]	2.90	[100.0]
2000	2.23	[50.1]	2.22	[49.9]	4.45	[100.0]
2001	2.98	[63.8]	1.69	[36.2]	4.67	[100.0]
2003	3.74	[63.4]	2.16	[36.6]	5.90	[100.0]
2005	4.34	[60.9]	2.79	[39.1]	7.13	[100.0]
2007	5.43	[62.1]	3.33	[37.9]	8.76	[100.0]
2008	5.67	[62.7]	3.38	[37.3]	9.05	[100.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1) 국세청 세무자료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기부금의 규모로서 신고누락, 기부단체의 부담, 과다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실제 기부금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금과 상속·증여 과정에서 기부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기부는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손원익, 2010).

〈표 X-12〉 성별 및 학력별 기부참여율과 후원경로: 2006, 2009

(%)

		기부 참여율 ¹⁾	후원경로 ²⁾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 기관	사회복지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기타
2006		31.6	11.9	28.8	43.3	21.3	15.3	1.8
2009		32.3	15.9	29.5	39.7	23.2	16.8	2.9
성별	남자	34.2	16.6	25.7	44.1	19.4	21.5	3.0
	여자	30.4	15.0	33.5	35.0	27.3	11.6	2.8
학력별	초졸 이하	16.5	11.2	21.4	49.3	19.6	2.8	5.5
	중졸	23.7	13.7	30.0	39.7	19.2	5.2	10.2
	고졸	29.1	15.3	34.1	38.0	23.4	12.5	2.2
	대졸 이상	48.1	17.6	27.4	39.3	24.6	24.9	1.3

주: 1) 지난 1년 동안 기부금(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비율임.

2) 중복응답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원 4.8회, 600만 원 이상 8.9회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높고 종사상 지위가 높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기부참여율이 높고 기부횟수도 많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부금의 후원경로(복수응답)는 사회복지단체(39.7%)가 가장 높았고, 언론기관(29.5%), 종교단체(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기부횟수에서는, 기타를 제외하면 종교단체(5.6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상자 직접 기부(5.1회), 직장(4.4회), 사회복지단체(4.0회), 언론기관(3.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단체는 교인들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정기적 기부가 자리 잡은 반면, 대상자 직접 기부나 언론기관 기부 횟수가 높은 것은 아직은 우리 사회의 기부가 1회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인의 기부 현황을 보면 기부금 공제를 신청

〈표 X-13〉 성별 및 학력별 기부횟수: 2006, 2009

		후원경로별 기부횟수						기부인구 1인당 평균 기부횟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평균 기부횟수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 기관	사회복지 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2006		5.0	3.5	3.0	5.1	4.2	2.6	4.7	1.5
2009		5.1	3.2	4.0	5.6	4.4	6.1	5.6	1.8
성별	남자	4.8	3.2	3.6	5.7	4.4	2.7	5.4	1.8
	여자	5.4	3.2	4.5	5.6	4.3	9.8	5.8	1.8
학력별	초졸 이하	2.4	3.5	1.5	4.4	3.3	2.4	2.8	0.5
	중졸	3.5	3.3	2.5	4.4	2.5	6.9	4.1	1.0
	고졸	5.1	3.0	3.5	5.6	4.2	9.1	5.2	1.5
	대졸 이상	5.6	3.3	5.2	6.0	4.6	3.5	6.6	3.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한 기업의 수는 2005년 33만 3천 개에서 2008년 39만 8천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총 기부금 공제액도 2005년 2조 4,702억 원에서 2008년 3조 3,78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 기업당 평균 기부금 또한 2005년 741만 원에서 2008년 848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 특성별로는 2008년 현재 일반법인이 수는 적지만 중소기업보다 총 기부금액이 크고, 상장여부에 따라서는 비상장기업의 총액이 크지만 기업당 평균 기부금액은 상장기업(9억 원)이 비상장기업(450만 원)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X-14). 즉, 개인기부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

기부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와 연간 1회(4시간 이상)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세 이상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6년 5.7%에서 2009년 10.2%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에서 제시된 등록 자원봉사자는 2002년 13만 명에서 2006년 129만 명, 2009년에는 32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 중 활동 자원봉사자도 2002년 7만 명에서 2006년 52만 명, 2009년에는 10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그림 X-14).

자원봉사의 증가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09년 조사에서 지난 15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

〈표 X-14〉 법인체의 종류별 및 상장여부별 기부액¹⁾: 200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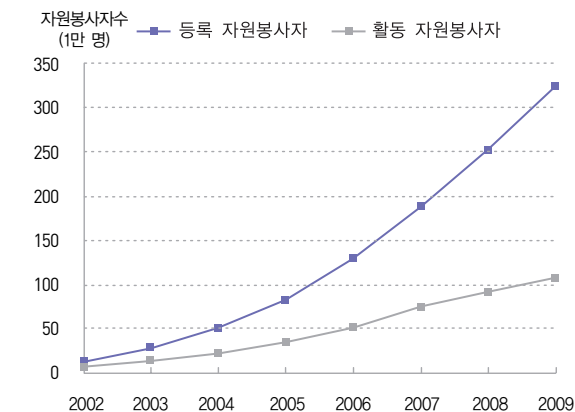
	신고 법인수	기부액(100만 원)				기업당 평균기부액 ²⁾ (1만 원)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합계	
2005	333,313	380,991	1,036,945	1,052,330	2,470,266	741
2006	352,647	403,534	1,263,670	1,128,418	2,795,622	793
2007	372,141	833,498	1,139,910	1,351,670	3,325,078	893
2008	398,331	841,681	1,001,506	1,535,378	3,378,565	848
법인규모별						
일반법인	80,300	745,880	963,705	1,218,334	2,927,919	3,646
중소기업	318,031	95,801	37,801	317,044	450,646	142
상장여부별						
상장법인	1,749	365,198	547,426	668,214	1,580,838	90,385
비상장법인	396,582	476,483	454,080	867,164	1,797,727	453

주: 1)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계상 금액임.

2) 기업당 평균 기부액=기부액 합계÷신고 법인수.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그림 X-14] 등록 및 활동 자원봉사자수: 2002-2009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각 년도.

람의 비율은 19.3%로 2006년 14.3% 보다 5.0% 포인트 증가하였다(표 X-15). 자원봉사 참여자가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참여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조사방법과

연령대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의 26.2%나 호주의 34.0%에 비해 우리는 19.3%로 저조한 편이다.

2009년 「사회조사」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연령대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10대의 참여율(79.8%)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18.6%), 50대(15.5%)이며, 60세 이상의 참여율(7.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대의 높은 참여율은 중·고등학생들의 의무적 활동으로 강제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²⁾. 기부참여율과 유사하게 종사상 지위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참여율도 높았다. 농어업직(14.5%)이나 기능노무직(10.0%)에 비해 전문관리직(19.5%)과 사무직(19.4%)의 참여율이 높았고, 소득에 따라서도 50만 원 미만 11.3%, 200-300만 원 19.9%, 600만 원 이상 30.1%로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서도 실제로 자원봉사활동

〈표 X-15〉 성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¹⁾: 2006, 2009

		봉사활동분야 ²⁾						(%)
		참여율 ¹⁾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해지역 시설복구	기타 (무료상담)
2006		14.3	26.7	11.3	10.6	48.5	6.8	12.3
2009		19.3	25.4	11.3	12.1	43.7	11.3	16.1
성별	남자	19.3	31.7	12.4	4.8	40.1	16.2	16.9
	여자	19.3	19.4	10.2	19.1	47.1	6.6	15.3
연령별	15-19세	79.8	32.0	13.4	2.2	46.0	4.6	20.2
	20-29세	13.9	11.4	14.1	6.4	54.2	20.1	14.9
	30-39세	13.6	16.7	8.9	36.1	36.9	12.8	8.6
	40-49세	18.6	20.1	10.1	22.4	42.4	13.7	13.5
	50-59세	15.5	31.1	9.2	4.4	43.6	15.5	16.8
	60세 이상	7.0	40.8	8.4	4.6	32.5	11.9	19.6

주: 1)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임.

2) 중복 응답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2) 국세청 세무자료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기부금의 규모로서 신고누락, 기부단체의 부담, 과다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실제 기부금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금과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기부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기부는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손원익, 2010).

참여자는 학생(48.8%) 및 주부(13.4%)가 주축을 이루고, 다음으로 사무직(10.6%)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졸자의 참여율이 42.4%로 18.4%에 불과한 대졸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학력집단보다 뚜렷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집단의 참여율이 27.9%인 반면에 불만족하는 경우 13.8%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나 기부(삶에 대한 만족하는 경우 기부참여율 49.5%, 불만족하는 경우 기부참여율 22.4%) 모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 행위는 건강한 사회의 지표임과 동시에 건강한 삶의 지표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 손원익. 2010.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10-05). 한국조사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2010.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10-05). 한국조사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를 보면, 활동자원봉사자의 평균 봉사시간이 20시간 18분(연 5.6회)이고 매월 1회 이상(4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는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아 부정기적인 행사성 봉사활동 참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활동이 43.7%이고, 환경보전 · 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활동이 25.4%로 그 영역이 편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기적인 1회성 참여가 빈번하고 내용적으로도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세경, 2010).

이희길(통계개발원)

용어해설



용어해설

1. 인구

고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임.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노인부양인구비: 부양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피부양 노인인구(65세 이상)임.

대체수준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임. 이 수치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양도 하지 위해서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수임.

유배우율: 인구 100명당 현재 혼인상태에 있는 인구임.

유배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이상자녀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하며,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임.

이혼숙려제도: 협의이혼신청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유예기간은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자녀 양육 합의를 위해 자

녀가 있을시 3개월, 자녀가 없을시 1개월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인구성장률: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가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임.

$$\text{연평균 인구성장률} = n \sqrt[n]{\frac{\text{비교년도}}{\text{해당년도}}} - 1 \times 100$$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할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임.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t=15}^{49} (\text{ASFR})_t}{1,000}$$

II.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임.

1인 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재(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재(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국제결혼: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 간의 결혼.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노인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살고 있는 가구임.

다문화가정: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함.

보육시설: 어린이를 보호하며 기르는 곳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 가정보육, 부모협동, 민간보육 시설 등으로 구분됨. 국·공립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시설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은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을 말함.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임.

비친족가구: 비친족 관계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여성 취업 및 실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아존중감: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을 의미함.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친족가구: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가구원수}}{\text{총일반가구수}}$$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III. 교육

고교평준화정책: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그 주요 방법으로 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구매력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내재적 학습동기: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학습의 준비 또는 일련의 학습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동기 중 학습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흥미나 관심, 혹은 자기만족감 등에서 비롯된 학습동기를 말함. 이러한 학습동기에 대한 보상은 실력향상, 자기통제의 느낌, 자기만족 혹은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뿌듯함 등이 있음.

유아교육: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아교육 및 유아아(乳幼兒)교육을 통틀어 유아교육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음.

유치원 취학률: 4-5세 인구수(추계연앙인구)에 대한 유치원 취학자의 비율임. 유치원은 국·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포함함.

$$\text{유치원 취학률(\%)} = \frac{\text{유치원 아동수}}{\text{4-5세 인구}} \times 100$$

자립형 사립고: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함.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의함. 시·도교육감의 추천 후,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정·통보를 받은 학교임.

자율형 사립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

계 법령 제·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형태를 말함.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코호트(cohort): 사회과학분야에서 코호트는 특정의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함.

특수목적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에 대한 교육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해당 교육단계의 연간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 총액)를 해당 단계의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IV.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

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허가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정부는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 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단위로 파악하여 산출함.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파업참가자수} \times \frac{\text{파업시간}}{\text{1일근로시간(8시간)}}$$

노조조직률: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유효한 지표임.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임.

방문취업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국내 무연고동포들의 입국을 허용하며 이들의 취업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복수노조: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해 별도 노조를 결성했을 때, 이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함.

비정규 근로자: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됨.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상용근로자: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균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

임시근로자: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고용계약미설정자의 경우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 중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직업이동: 직업집단 또는 직업을 가진 개인이 사회계층 체계를 통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함.

V. 소득과 소비

1인당 명목 GDP: 한 국가의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그 해의 평균 인구로 나눈 값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 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계신용: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됨.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구매력: 보통 화폐의 구매력을 말하는 것으로 화폐 1단위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수량을 의미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의 총액을 말함.

물가수준반영환율: 교역국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환율로서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이라고도 함. 명목환율을 교역상대국의 상대적인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임.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지출: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임.

시장환율: 각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결정된 환율임.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자금순환표: 생산활동의 결과, 경제 각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비와 투자에 얼마가 쓰이고 여기에 남은 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금융시장에 흘러들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만든 표임.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료 등이 해당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계하여 산출함.

VI. 문화와 여가

게임플랫폼: 게임이 실행되는 공간 또는 매체를 의미함.

교양오락비: 문화생활비의 하나로서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을 포함함.

다중접속온라인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 MMORPG): 다수가 동시에 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게임.

롤플레이잉게임: 게임 이용자가 게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역할을 맡아 직접 수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컴퓨터 게임.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이라고도 하며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주차장·식당·카페·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지칭함.

미니홈피: 미니홈페이지(mini homepage)의 줄임말로 개인 인터넷 공간임.

블로그: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함.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개

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임.

에듀테인먼트: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오락성을 가미하여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함.

인터넷 이용률: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임.

충동조절장애: 본능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기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의 한 유형임.

VII. 주거와 교통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추계가구로 나눈 수치임.

$$1인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 \frac{\text{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text{추계인구}}$$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임.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

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도로교통 혼잡비용: 도로에서 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소득대비주택가격비(Price to Income Ratio, PIR): 대출 없이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가주택의 중위가격을 자가 가구의 중위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함.

신주택보급률: 기존의 주택보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급률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2006년 1월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 아파트 가격이며, 국토해양부가 집계하여 발표함. 중개업소의 호가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주택가격지수와 달리 실거래가지수는 아파트 매매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산출됨.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자가거주율: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text{자가거주율(\%)} = \frac{\text{자가점유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전세가격지수: 주택 전세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전세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 전세가격이며,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시점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 주택가격이며,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함.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임.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주택보유율: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임.

주택투자율: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text{주택투자율(\%)} = \frac{\text{주택투자액}}{\text{실질 GDP}} \times 100$$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인구임.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인구임.

VIII. 보건

골관절염: 관절의 연골층이 손상되어 뼈들 간의 마찰

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질환임.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수치임.

뇌졸중: 상당 기간 지속되는 뇌기능 장애로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로 인해 뇌의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포함함.

당화혈색소: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판단하고 감시하는 지표로 사용됨.

쓰쓰가무시병: 오리엔티아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발병 시 급격한 발열로 시작하여 5일경에 발진이 출현함.

안저검사: 암실에서 검안경으로 눈바닥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눈병 외에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진단과 경과 판정에 활용됨.

외병일수: 유병자가 최근 2주일 중 질병으로 만나절 이상 누워 있었던 일수임.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수의 비율임.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이 비율임.

질병발생률(incid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로 발생한 환자수의 비율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

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혈당강하제: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약의 일종임.

CT Scanner(Computerized Tomography Scanner): 컴퓨터를 이용한 인체 횡단면 촬영장비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됨.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말하며, 결국에는 에이즈(AIDS)로 진행하게 됨.

Mammograph: 유방암 검진에 사용되는 X-레이 촬영장비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 방식으로 신체 내 장기구조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촬영장비임.

IX. 사회안전

과불화탄소(PFCs):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₂) 및 메탄(CH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녹색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와 함께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메탄(CH₄):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서 가연성, 공기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서 연료용으로 쓰임.

몬순형 기후: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을 향하여 약 반년의 주기로 변화하여 부는 계절풍에 의한 기후로 인도, 동남 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열대해양기단의 내습에 의하여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대륙기단의 내습으로 날씨가 춥고 맑은 날이 많음.

생태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로서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한 것임.

수소불화탄소(HFCs):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

수질오염도: 수질오염(water pollution)이란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아동학대: 아동을 신체적으로 가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포함함.

아산화질소(N_2O):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을 가진 무색의 기체로서 수술 시 흡입마취제로 사용됨. 지구온난화에 이산화탄소(CO_2)의 230배에 달하는 영향을 미침.

아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농도: 오존은 나쁜 냄새를 없애거나 소독하는데 활용되며 대기 중에 적당량의 오존은 유익함. 오존의 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눈과 코를 자극해 두통과 불안감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시력 감소나 호흡기 자극, 폐기능 저하를 유발함. 환경기준에 따른 오존농도 허용치는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임.

온실기체: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의미함.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등이 있음.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임.

육불화황(SF_6):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1960년대부터 절연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이산화탄소(CO_2),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임.

직업관련성 질병: 이전에 앓고 있던 질병에 일과 관련된 요인이 더해져 그 정도가 심해진 질병.

직업병: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직업의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생기는 질병.

진폐: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질로서 햇빛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오존을 생성함.

환경보호지출액: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지출한 금액임.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세계경제포럼(WWF)에서 2006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로서 정부의 노력으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세계경제포럼(WWF)에서 2001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로서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한

경과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 kcal임.

X. 사회통합

고등교육이수율: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기관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정부, 의회, 공적 기관 등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기부금 공제: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에서 기부금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남북통합지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남북간 통합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개발한 지수로서 2007년부터 발표해오고 있음.

다문화지수: 사회의 관용성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다문화주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임. 이 지수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됨.

대인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법치지수: 한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 소유권보호 현황, 정부관료의 법적 책임 정도,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종합하여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함.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평가한 것임.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을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인증하고 관리함.

사회이동: 한 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을 모두 포함함.

사회자본: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스칸디나비아모델: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그린란드, 패로군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사회경제적 모델로서 개인의 자율성 강화, 기본 인권의 보편적 보장 및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둔 혼합시장경제의 특수한 수용형태임. 특히 경제활동참여의 최대화, 양성평등, 포괄적이고 평등한 복

지혜택의 적용, 재분배 촉진, 확대재정정책의 자유로운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국가 모델들과 구별됨.

주관적 계층귀속감: 사회조사에서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등 6개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한 응답자의 계층 소속 의식임.

피어슨 상관계수: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의 선형적 연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통계치임. 이 통계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은 두 변수가 정(+)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었음을 의미하고, 0은 선형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1은 두 변수가 부(-)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었음을 의미함.

2008년, 2009년 보고서의 부문별 논문 주제

부문	2008년 논문주제	2009년 논문주제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교육의 경제적 성과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청년층 노동시장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노사관계의 변화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소득원천별 구성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자산의 분포와 구성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문화예술 향유실태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여가생활과 만족도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주거 빈곤 가구 실태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나이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자살의 급증과 원인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복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증가하는 '흉악범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친환경 소비성향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격차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정치와 사회 참여 가치와 이념 갈등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석현호(한국사회과학자료원)

공동연구자 : 김두섭 (한양대학교)

장덕진 (서울대학교)

박시내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연구보조원 : 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윤옥진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연구수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협력기관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